

2020 재정사업 심층평가 「전자정부지원사업」

2020. 9.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고길곤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동연구진]

김찬우 교수 금강대학교 공공정책학부

송효진 연구위원 창원시정연구원

윤 건 교수 한신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연백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탁현우 부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황성수 교수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연구원]

이시영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목 차

I. 서론	1
1.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가. 심층평가 필요성의 검토	1
나. 심층평가의 목적	5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6
가. 평가의 범위	6
나. 평가의 방법	7
II. 전자정부지원사업 환경분석	9
1.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현황	9
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개요	9
나. 전자정부 법령 변화	12
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체계 및 절차	15
라.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내용 및 성과	19
2. 정보화 예산 현황 및 특성 분석	22
III. 법·제도 및 계획 분석	32
1. 국가정보화사업과 전자정부지원사업 비교	32
가. 국가정보화사업의 개념	32
나. 정보화사업 추진체계	34
다. 평가체계	36
라. 국가정보화사업과 전자정부사업 및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비교	38
2. 전자정부지원사업 유관계획간의 정합성	46
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관계획 검토	46
나. 전자정부지원사업과 상위 유관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50
3.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사업 유형의 변화	55

IV. 유사중복성 분석 61

1. 유사중복성 검토의 기준 61
2.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기반한 유사중복성 검토 71
3. 사업특성에 따른 유사중복성 검토 78
4. 전자정부지원사업 유형 및 현황 82
 - 가. 전자정부지원사업 유형별 사업의 연도별 변화 83
 - 나.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사업 유형과 관련한 쟁점 86
5. 전자정부지원사업 유사중복성 검토의 종합 및 제언 90
 - 가. 유사중복성 검토의 종합 90
 - 나. 유사중복성 관련 정책제언 91

V. 성과관리 분석 96

1. 성과지표의 타당성 96
 - 가. 성과지표의 의의 96
 - 나.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지표 99
 - 다. 정보화사업 성과지표의 검토 102
 - 라.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지표의 진단 107
 - 마.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지표의 개선전략 117
2. 성과보고서를 활용한 효율성 분석 120
 - 가.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관리 DB의 구축 120
 - 나. 성과지표별 달성률 연도별 변화 124
 - 다. 전자정부지원사업 종합적인 성과분석 134
 - 라. 성과지표 달성률 하위 10개 사업 분석 136
 - 마. 확률변경분석을 활용한 효율성 평가 143

VI. 종합 및 정책제언 147

1. 평가결과의 종합 147
 - 가. 쟁점1: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사업 유형 재정립 필요성 147
 - 나. 쟁점2: 유사중복성 검토의 실효성 제고 151
 - 다. 쟁점3: 전략적 성과관리 활용의 필요성 153
2. 정책제언 157
 - 가.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유사사업의 개념정의 명확화 157

나.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사업 유형 구체화 및 차별화	159
다. 전자정부지원사업 적합 대상사업 유형 체크리스트	162
라.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사업 기준의 법령상 근거마련	166
마. 유사중복 사전심사 실효성 제고	168
바. 전략적 성과관리 필요	169

참고문헌	172
-------------------	------------

부록	175
-----------------	------------

부록1 연도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현황	175
부록2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유형별 현황	193
부록3 사업 목적에 따른 유사중복 가능성 사례	195
부록4 사업 내용에 따른 유사중복 가능성 사례	201
부록5 전자정부지원사업 중 유사중복성 해결 권고 대상사업(2010~2020)	203
부록6 전자정부지원사업 유사중복성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2010~2020)	207
부록7 전자정부지원사업 이용자만족도 정의	247
부록8 전자정부지원사업 대표사례	251
부록9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지원사업 사례	255
부록10 전자정부지원사업 심층평가 인터뷰 결과	293

표 목차

표 1-1.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연혁	2
표 1-2.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 평가결과	4
표 1-3. 전자정부지원사업 평가틀 및 평가내용	8
표 2-1. 전자정부지원사업과 부처 정보화사업 비교	11
표 2-2. 전자정부법 주요 개정연혁	13
표 2-3. 전자정부지원사업 참여자 수행업무	17
표 2-4. 2010년~2020년 전자정부지원사업 부처별 사업수	20
표 2-5. 정보화사업 적용대상 유형	22
표 2-6. 정보화사업 현황 비교	23
표 2-7. 2020년 정보화사업 중 10년 이상 지속사업의 내용 및 예산	27
표 2-8. 2017년 기준 폐기 및 통폐합 대상 시스템 수 대비 조치현황	31
표 3-1. 역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추진현황	33
표 3-2. 정보화 추진체계 경과	34
표 3-3. 행정관리 역량평가 정보화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37
표 3-4. 정보화사업·전자정부사업·전자정부지원사업 비교	42
표 3-5. 정보화사업 및 전자정부사업 등의 정의	44
표 3-6. 최근 3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관계획과의 연계 현황	52
표 3-7.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유형의 변화	56
표 4-1. 행정학에서 유사중복의 의미	62
표 4-2. 유사중복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기준	63
표 4-3.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사업 유사중복 검토 가이드	65
표 4-4. 전자정부지원사업 유사중복성 검토 기준	66
표 4-5. 전자정부지원사업 유사중복성 관련 법적 기준	68
표 4-6.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 및 심의항목	69
표 4-7. 유사중복성 해결 권고에 대한 조치결과 및 반영여부(예시)	70
표 4-8. 유사중복 사례 유형	72
표 4-9. 유사중복 가능성이 높은 전자정부지원사업과 그 유형	77
표 4-10. 전자정부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연도별 사업의 수	83
표 4-11. 전자정부지원사업 ISP 및 구축사업의 사업비 현황	84
표 4-12. 다수 시스템 용·복합 사업 중 단일 부처의 시스템 용·복합 사업 예시	87
표 4-13. 정보보호 유형으로 분류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예시	88
표 4-14. 첨단기술 시범도입 및 적용확산 유형의 사업 예시	89
표 4-15. 전자정부지원사업 차별화를 위한 대상사업 유형 변경(안)	92

표 4-16. 기획재정부의 ISP 최종산출물에 대한 검토	93
표 4-17. ISP 검토를 위한 주요 구성항목 및 내용	95
표 5-1. 성과지표의 발굴 및 선정 기준	97
표 5-2.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구분	98
표 5-3. 성과정보에 따른 지표 구분	98
표 5-4.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지표의 변경	100
표 5-5. 20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표	101
표 5-6. 전자정부 성과관리 점검을 위한 측정영역	103
표 5-7. 전자정부사업과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비교	106
표 5-8. 20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이용자수 정의	108
표 5-9. 20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이용건수 지표 정의	109
표 5-10. 20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 고유지표 정의	110
표 5-11.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적용된 성과지표 예시	114
표 5-12.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보고서 발간 현황	120
표 5-13.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지표의 연도별 변화	122
표 5-14.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분야별 구분	123
표 5-15. 성과지표별 달성률 기술통계	124
표 5-16. 연도별 공통지표(관리지표+운영지표)의 달성여부	130
표 5-17.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형별 고유지표 pool	132
표 5-18. 관리지표1(예산투입의 적정성) 하위 사업	136
표 5-19. 관리지표2(사업관리의 적절성) 하위 10개 사업	137
표 5-20. 관리지표3(시스템 운영의 적시성) 하위 10개 사업	138
표 5-21. 운영지표1(이용자 만족도) 하위 10개 사업	139
표 5-22. 운영지표2(이용자수/이용률) 하위 10개 사업	140
표 5-23. 운영지표3(이용건수) 하위 10개 사업	141
표 5-24. 성과저조 사업 중 사업비 총액이 높은 사업	142
표 5-25.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144
표 5-26. SFA에 근거한 전자정부지원사업 효율성 분석(2010-2017)	145
표 6-1. 전자정부지원사업과 유사사업과의 개념적 혼돈	147
표 6-2. 정보화사업, 전자정부사업,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비교	148
표 6-3. 유사중복 사례 유형(<표 4-8>과 같음)	152
표 6-4.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유형 검토	160
표 6-5. 전자정부지원사업 차별화를 위한 대상사업 유형(안)	162
표 6-6.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사업지속기간(ISP 포함)	164
표 6-7.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고유지표 우수 및 미흡사례 예시	171

그림 목차

그림 1-1. 전자정부지원사업 주관기관 현황(2010-2020)	2
그림 1-2. 프로그램 예산체계 상 전자정부지원사업	6
그림 2-1. 전자정부법 관련 법령 정비내역	14
그림 2-2.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체계	15
그림 2-3.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절차	18
그림 2-4.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 및 사업수 추이(단위: 억원, 개)	21
그림 2-5. 정보화사업의 예산 추이(단위: T=조원)	24
그림 2-6. 7개 상위 예산 부처별 정보화사업 예산 추세(단위: B=10억원) ..	25
그림 2-7. 2020년 정보화사업의 지속년수의 빈도와 예산규모 (단위: B=10억원) ..	26
그림 2-8. 2020년 부처별 정보화사업 수와 평균 지속 연수	26
그림 2-9. 연도별 운영사업과 비운영사업의 사업수	30
그림 2-10. 운영사업과 비운영사업의 지속년수 및 예산 규모(단위: B=10억원) ..	31
그림 3-1. 정보화사업 및 전자정부사업 등의 범위(안)	45
그림 3-2.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49
그림 3-3. 2018년 전후 지원대상 분야 비교	55
그림 3-4.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 유형(2018년 이후)	57
그림 3-5.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분야(유형)별 총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58
그림 3-6.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분야(유형)별 사업수의 연도별 변화	59
그림 4-1. 유사와 중복의 차이	62
그림 4-2.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중복·연계 검토 절차	64
그림 4-3. 전자정부지원사업 중 유사중복성 의견 있는 사업 변화 추이(단위, 건수, %) ..	75
그림 4-4. 전자정부지원사업과 정보화사업 간 참여 부처 비교(단위: 건수, %) ..	79
그림 4-5. 연차사업의 추이(2015~2019)	80
그림 4-6. ISP 추진 및 검토 절차	93
그림 5-1.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의	97
그림 5-2. 전자정부 성과관리 분야 정부업무 평가지표	102
그림 5-3. 전자정부 성과관리 대상사업	104
그림 5-4. 전자정부 성과관리 중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측정 모델	104
그림 5-5.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개요	105
그림 5-6. 전자정부지원사업 평가모델	117
그림 5-7. 사업단계별 종합적 성과관리(안)	119
그림 5-8. 관리지표1(예산투입의 적정성) 달성률의 연도별 변화	125

그림 5-9. 관리지표2(사업관리 적절성) 달성률의 연도별 변화	125
그림 5-10. 관리지표3(시스템운영의 적시성) 달성률의 연도별 변화	126
그림 5-11. 운영지표1(이용자 만족도) 달성률의 연도별 변화	127
그림 5-12. 운영지표2(이용자수/이용률) 달성률의 연도별 변화	128
그림 5-13. 운영지표3(이용건 수) 달성률의 연도별 변화	129
그림 5-14. 전자정부지원사업 공통지표에 대한 연도별 미달사업 비중 ...	131
그림 5-15.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지표의 연도별 변화	134
그림 5-16. 커널 밀도함수를 이용한 효율성 점수의 분포(반정규분포 가정) ...	146
그림 6-1. 정보화사업 및 전자정부사업 등의 범위(안)	157
그림 6-2. 정부입법 절차	166
그림 6-3. 사업단계별 종합적 성과관리	170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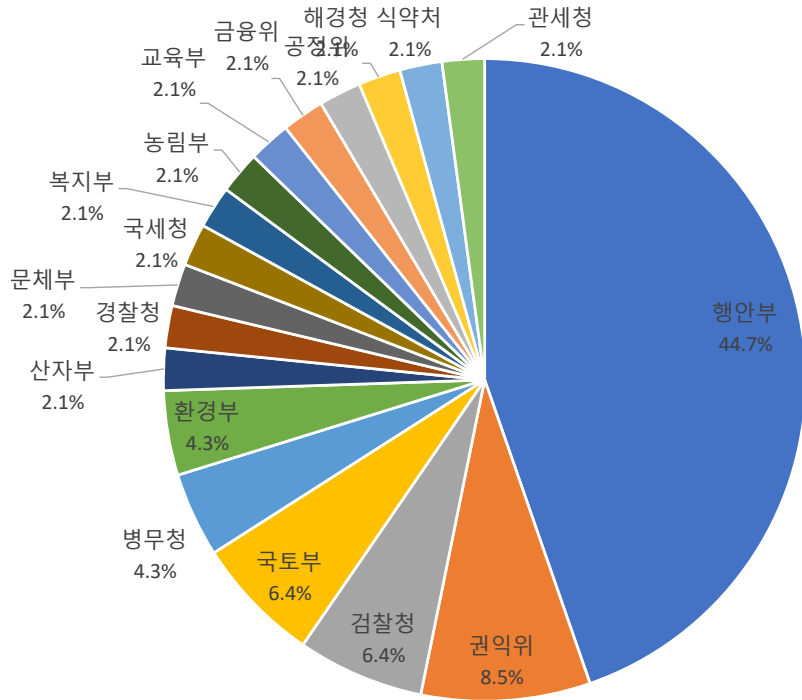
1.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심층평가 필요성의 검토

-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은 물론, 운영과 성과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¹⁾
- 전자정부지원사업 심층평가는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유형 중 개별사업 심층평가에 해당
 - 개별사업 심층평가의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4조제1호)
- 또한, 부처 간 유사중복의 가능성, 향후 지속적인 재정지출 필요성, 객관적인 성과검증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할 필요(「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5조제5항)
- (부처 간 유사중복 가능성)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다부처 활용 공통인프라 구축, 범정부 정책적용, 국정과제, 정보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예산배분의 유사중복에 대한 검토가 중요
-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로 대상사업 적합성 여부의 검토와 함께,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0조제3항)
- 실제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주관기관 현황을 살펴보면(<그림 1-1>), 다양한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개별 부처의 정보화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1)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3조

그림 1-1. 전자정부지원사업 주관기관 현황(2010-2020)



출처: 행정안전부의 2018~2020 정보화예산요구서(각 연도)를 바탕으로 재구성

□ (지속적인 재정지출 예상)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지난 20년간 2조 3,50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표 1-1>), 향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으로 지속적인 재정지출이 예상됨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연혁을 2001년부터 살펴보면, 각 정부별 연평균 938억원에서 1,757억원 수준으로 20년 이상 재정이 투입된 사업임

표 1-1.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연혁

구분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기간	2001-2002	2003-2007	2008-2012	2013-2017	2018-현재
추진 목표	정부업무와 대면서비스의 전자적 처리	다수 부처 서비스 연계,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일 잘하는 지식정부, 행정서비스 연계 통합	정보개방, 공유, 협업, 유능한 정부	열린혁신기반을 조성하는 지능형 정부 구현
예산	2,219억원 (연평균 1,109억)	8,786억 (연평균 1,757억)	6,736억 (연평균 1,347억)	5,243억 (연평균 1,049억)	약 2,814억 (연평균 938억)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정보화예산 요구서 및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 향후 국가정보화, 전자정부, 지능형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등 유관 상위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예상되므로, 이들 상위계획과 전자정부지원사업간 연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객관적인 성과검증 부재)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검증은 최근 10년간 부재한 상황
-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2009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전자정부지원사업 평가」가 유일하며, 결과를 정리하면 <표 1-2>와 같음
 - 국회예산정책처 평가보고서는 ‘계획-운영-성과’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선정, 예산집행, 추진체계, 성과평가로 다시 세분됨
 - 해당 보고서의 평가결과 및 제언에 따라 추진체계에 ‘사업조정위원회’가 추가되고, 성과평가에서 성과관리지침이 마련되었음

표 1-2.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 평가결과

평가 단계	평가항목	평가결과
사업 계획	사업선정의 객관성과 타당성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에 의해 사업이 선정되고 있는가? - 전자정부지원사업 협의회 심의 시 선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계획서 검토항목에 기대효과 또는 경제성 분석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사업 집행	예산집행의 효율성	집행잔액이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는가? - 낙찰차액, 이자수입, 정산 시의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신규정책과제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추진체계	추진체계의 유인구조가 적절한가? - 사업의 특성과 추진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유인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제3의 기구가 사업의 선정과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사업 성과	성과평가	성과분석 및 환류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 「전자정부법」에 성과분석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성과목표가 제시되고 있는가? - 성과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단순한 실적만으로 성과를 발표하고 있어 성과에 대한 정보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성과목표 혹은 성과계획서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09). 「전자정부지원사업 평가」.

- 이상의 논의에 따라,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수행목적에 맞추어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를 중심으로 사업선정 및 유사중복성, 예산편성, 성과 관리를 중심으로 심층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나. 심층평가의 목적

-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유관계획과의 연계성, 예산현황 분석, 정보화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 성과관리 및 성과분석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 본 심층평가는 기존 평가보고서(국회예산정책처, 2009)와 같이 ‘계획-집행-성과’의 틀을 유지하되, 정보화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 및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보고서의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추가적 평가를 수행함
- 이를 통해,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핵심 목적인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의 재정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의 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 첫째, 국가정보화,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지능형정부 등 유관 중장기계획을 분석하여, 전자정부지원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 둘째,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포함한 중앙부처의 정보화사업 예산의 현황분석
 - 셋째, 전자정부지원사업과 정보화사업 간의 유사중복 가능성 평가
 - 넷째,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과관리지침에 따른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성과에 기반한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성과관리 방안 검토
 - 다섯째,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사업별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개별사업의 성과달성도 평가

2. 평가의 범위 및 방법

가. 평가의 범위

□ 전자정부지원사업²⁾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기관 등의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됨³⁾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성 제고라는 사업목적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 공통인프라, 다수 부처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및 전자정부 정책적용 등을 목적으로 수행함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프로그램 사업 중 ‘전자정부실행기반마련(정보화)’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인 ‘전자정부지원(정보화)’에 해당(<그림 1-2>)

- 2020년의 경우, 전자정부지원(정보화)으로 19건의 내역사업이 추진 중

그림 1-2. 프로그램 예산체계 상 전자정부지원사업

일부 : 일반정부, 지방자치분권, 국민안전 구현			
비행 : 국민이 주안 되는 정부, 사회 대응형, 안전한 나라 실현			
전략목표 1 국민주도의 미래지향적 성장동력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민생활 향상을 도모한다.	전략목표 2 지자체별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혁신을 지원한다.	전략목표 3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유산 발굴·활용을 지원한다.	전략목표 4 장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유산의 선별·보존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1-1 국민주도의 사회적 혁신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프로그램목표 1-2 지자체별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1-3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유산 발굴·활용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1-4 장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유산의 선별·보존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2-1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프로그램목표 2-2 지자체별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2-3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유산 발굴·활용을 지원한다.	프로그램목표 2-4 장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유산의 선별·보존을 지원한다.

구분	사업명	예산액(천원)
(1) 전자정부실행기반마련(정보화)		
(2) 정보자원관리기반확충(정보화)		
(3) 행정정보지원및관리조정(정보화)		
(4) 공공서비스스기술훈출촉진(정보화)		
(5) 미래전자정부추진(정보화)		
(6) 국제사회전자정부선도국가위상강화(정보화)		
(7) 지역정보화지원(정보화)		
(8) 정보화마을활성화(정보화)		
(9) 정보보호체계강화(정보화)		
(10) 전자정부성과평가강화(정보화)		
(11) 개인정보보호강화		
(12)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13) 기타		
(14)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선험터신축		
(15)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		

번호	사업명	예산액(천원)
1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제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	6,311 (243)
2	공공서비스 개발 공유 인프라시스템 구축	5,769 (214)
3	전자정부 실행기반 운영지원 구축	3,668 (139)
4	차세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2,522 (94)
5	국가정보관리원 센터운영 구축사업(운영지원)	2,473 (92)
6	행정부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4,873 (183)
7	다자간 고차원 융합서비스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666 (25)
8	부처별지자체 운영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4,536 (171)
9	세종시 2020년 하반기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8,047 (304)
10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4,788 (181)
11	행정안전부 주관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반 구축	10,023 (378)
12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847 (31)
13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13,370 (500)
14	행정안전부 주관의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1,434 (53)
15	행정안전부 주관의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5,746 (214)
16	행정안전부 주관의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13,346 (497)
17	스마트 정보관리원 기반의 원스톱 서비스 구축	839 (31)
18	국가정보관리원 운영	7,160 (267)
19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7,929 (294)

출처: 행정안전부 (2019). 2020 행정안전부 성과계획서를 재구성

□ 본 연구의 평가대상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이며, 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수행완료된 사업으로(계속사업 포함) 377개의 내역사업을 대상으로 함⁴⁾

2) 「전자정부법」 제64조

3)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의미(「전자정부법」 제2조)하며, 이를 통해,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전자정부법」 제1조)

나. 평가의 방법

- 평가의 주요 쟁점을 ‘계획-운영-성과’의 틀에 따라 구조화하고, 개별 쟁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음
- (계획)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정책환경 및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가?
 - 유관 중장기계획 간 정합성을 평가하고, 계획과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연계성 검토
- (운영)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예산은 필요한 사업에 배분되고 있는가?
 -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포함한 중앙부처의 정보화사업 예산의 현황분석을 통해 정보화사업 예산배분의 시사점 도출
- (운영)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사업선정 시 유사중복성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 전자정부지원사업과 정보화사업 간 유사중복 가능성을 검토하여, 예산 심사 시 유사중복 검토를 위한 기준 제언⁵⁾
- (운영)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체계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 추진체계상 이해관계자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정량분석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사업수행의 문제점을 도출⁶⁾
- (성과)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성과지표의 설정 및 측정, 성과정보 도출, 환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사업종료 이후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후속 관리 및 역할, 성과점검 방식 및 제도의 적절성 등 확인

4)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우 분리발주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 이를 고려하여 사업관리번호가 부여된 분리발주사업 기준으로는 961개에 해당함

5)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내용과 난이도, 전문기술 측면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과 개별 부처 정보화사업에 차이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음

6)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검토보고서(2018)에 따르면 타 부처 소관의 국정과제 및 사회현안 과제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 등에 있어 행정안전위원회가 아닌 동 과제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에 보고 절차를 거쳐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성과)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과점검보고서에 기반한 메타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표 1-3. 전자정부지원사업 평가틀 및 평가내용

평가 단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및 방법론	평가대상
계획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p>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정책환경 및 중장기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 중장기계획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전자정부 기본계획」, 「지능형정부 기본계획」,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분석 	전자정부 지원사업
운영	예산배분의 적정성	<p>전자정부지원사업의 예산은 필요한 사업에 배분되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0년 간 중앙부처 정보화예산의 변화를 분석하여,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배분의 시사점 도출 	정보화사업 (세부사업) 및 전자정부 지원사업
	유사중복 가능성	<p>전자정부지원사업의 사업선정은 유사중복성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부처의 '정보화사업'과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사중복 가능성 분석 - 전자정부지원사업 간 유사중복 가능성 분석 - 유사중복성 해결 권고의 실효성 분석 	정보화사업 (세부사업) 및 전자정부 지원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p>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체계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총괄부처), 한국정보화진흥원(전문기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주관기관), 사업조정위원회,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검토 	전자정부 지원사업
성과	성과관리 타당성	<p>전자정부지원사업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의 지표설정, 측정, 성과정보 도출, 환류의 적정성 분석 - 성과관리가 중장기적인 시계(時界)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 	전자정부 지원사업
	효율성 평가	<p>전자정부지원사업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달성여부에 대한 메타분석 	전자정부 지원사업

II. 전자정부지원사업 환경분석

1.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현황

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개요

- 이하에서는 평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개요 및 현황을 살펴봄
- 전자정부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화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형 정부를 뜻함
 - 전자정부는 행정서비스체계를 일원화하고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부업무와 대민서비스의 전자적 처리에 있음⁷⁾
 - 전자정부는 단순히 정보기술에 의하여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장 및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 및 권력적 변화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⁸⁾
-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의미
 - 전자정부법은 제정 이후 전자정부의 고도화에 발맞추어 개정을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발전되었으며, 전자정부 정책 및 사업 추진의 핵심적인 인프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⁹⁾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자정부법」 제6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기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7) 전자정부특별위원회(2003). 전자정부백서. p.102

8) 정충식(2008). 2018 전자정부론: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론. 서울: 서울경제경영.

9) 행정안전부(2017). 전자정부50년사.

- 전자정부법 제64조에서는 전자정부사업(동조 1항)과 전자정부지원사업(동조 2항 및 3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전자정부사업과 뚜렷한 구분이 어려움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정보화사업 중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관리 지침상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포괄함¹⁰⁾
 -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인프라 조성사업, 첨단기술을 시범 도입하거나 적용을 확산하는 사업,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수 시스템에 일시 지원을 하는 사업,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등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된 ‘정보화촉진지원사업’이 정부조직법 개편 등에 따라 2003년 종료되고, 2004년부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 정보화사업이 대상
- 첫째, 여러 부처 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공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정보자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둘째,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개선 등 정보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 셋째, 정보화의 우선순위 및 파급효과가 크나 추진 여건 등이 마련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사업

10)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조

표 2-1. 전자정부지원사업과 부처 정보화사업 비교

구분	예산 확보	사업 내용	사업 난이도	전문기술지원
전자정부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 다부처 연계·통합 - 공통기반 구축	높음	정보화진흥원의 기술지원
부처 정보화사업	각 부처	- 부처 고유업무	낮음~중간	자체 역량에 의존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egov.nia.or.kr/EgovBizIntro.do>

나. 전자정부 법령 변화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법적인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동 사업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음

- 전자정부법 제정 배경
 - 1990년대 말 전자정부가 국가의 주요 정책 의제로 등장하면서 학계, 정부 등 각계에서는 「전자정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됨

 - 기존의 「정보화촉진기본법」(1995년 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전자정부 정책과 사업을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필요

 - 특히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에 ‘전자정부의 구현’을 포함하여, 이후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전자정부법」의 입법추진이 가속화됨

 - 2001년 제정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원칙’, ‘행정관리의 전자화’,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문서업무의 감축’, ‘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등이 주요 내용임

 - 2017년까지 크게 5차례 일부 및 전면개정작업이 있었고, 이 중 현재의 명칭인 「전자정부법」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제2차 개정이며, 정보화 관련 법률 간소화 및 통폐합은 제3차 개정에서 이루어졌음

표 2-2. 전자정부법 주요 개정연혁

구분	주요내용
1차 개정 (‘03. 6. 15. 시행) <일부개정>	행정전자서명(GPKI)개념 도입 전자적 확인을 통한 각종 구비서류 감축 규정
2차 개정 (‘07. 1. 3. 시행) <일부개정>	법 제명을 “전자정부법”으로 개정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 전자정부 보안체계 강화 전자정부 추진여건 강화 *전자정부지원사업 법적근거 마련 - 제45조2(전자정부사업의 지원) - 제45조3(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 신설
3차 개정 (‘10. 5. 5. 시행) <전부개정>	정보화관련 법률 간소화 및 통·폐합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하고,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 도입 등을 전자정부법에 통합 전자정부법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각종 공사, 공단 등)까지 확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4차 개정 (‘14. 7. 29. 시행) <일부개정>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상호연계·통합 및 정보의 공유 빅데이터 활용 및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 전자정부 보안대책 강화
5차 개정 (‘17. 10. 24. 시행) <일부개정>	전자정부의 날 제정

자료 : 행정안전부. (2017). 전자정부 50년사

-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유사·중복법제를 정비하였음
-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정보통신부의 기능 중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전자서명, 정보보안 등 정보화 관련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였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화 관련 총 9개의 법률을 5개로 통·폐합하였고, 2010년 5월 아래 그림과 같이 전면개정되었음

그림 2-1. 전자정부법 관련 법령 정비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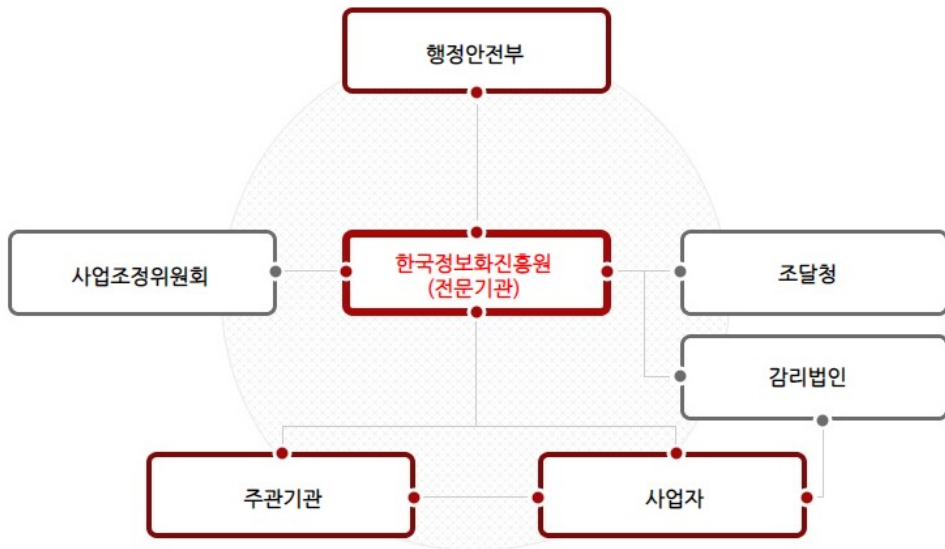


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체계 및 절차

1)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체계

-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확보 및 관리를 총괄하고,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사업자 선정지원, 사업관리 및 감리실시, 사업수행 시 필요한 행정 및 기술지원을 실시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각 부처가 고유업무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 정보화사업과 달리 행정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여러 부처가 정보를 연계·통합하고 다부처가 공동활용하는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등 사업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수의 구성원이 추진체계에 포함되어 있음
- 사업조정위원회는 수립된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여 추진과제를 확정하며 감리법인은 해당 사업의 요구사항 준수여부 확인, 설계·구축의 적정성 등 정보시스템 감리를 실시함

그림 2-2.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체계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egov.nia.or.kr/EgovBizIntro.do>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체계는 전자정부법과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¹¹⁾ 운영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총괄 및 사업관리, 사업자는 사업수행,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
 - 사업조정위원회는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의
 - 감리법인은 정보시스템 개발 감리, 요구사항 준수여부 확인 및 변경관리를 담당
 - 조달청은 사업입찰 및 계약관리를 담당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참여자 임무는 <표 2-3>과 같음

11) 전자정부법 제71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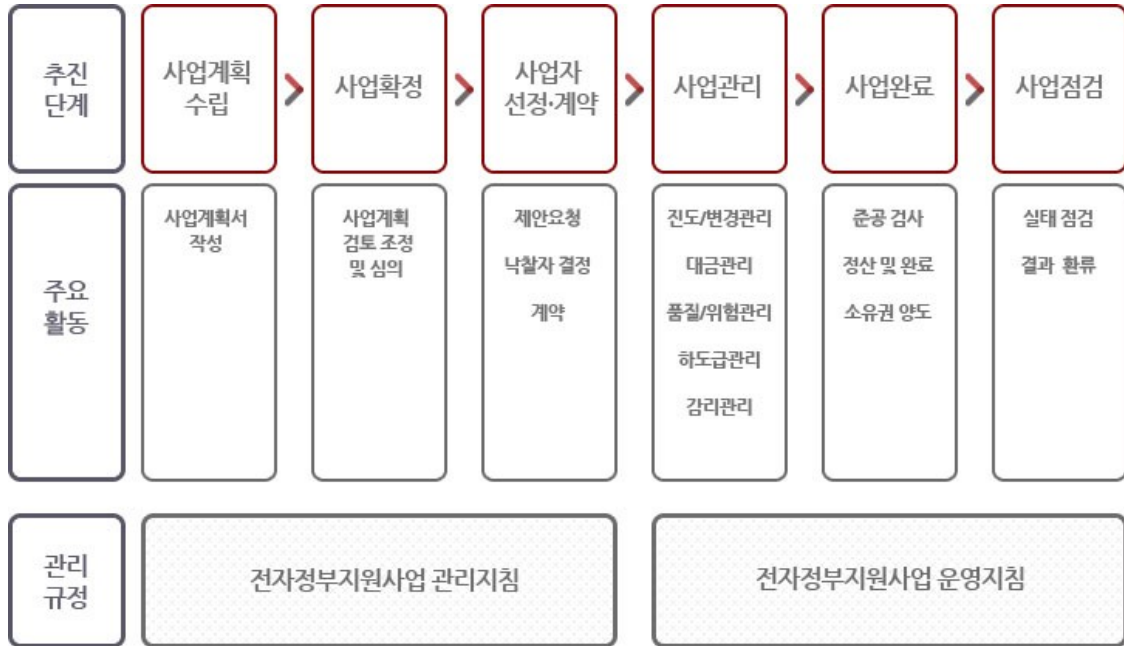
표 2-3. 전자정부지원사업 참여자 수행업무

구분	수행업무
행정안전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2. 지원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3.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4. 사업계획 및 지원예산 규모의 확정 5. 전문기관의 지정 및 감독 6. 예산의 확보 및 출연
전문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 대상사업 발굴, 지원사업과제제안서 검토 2. 사업계획서 검토·조정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4. 사업관리 5. 감리 시행 및 검사참여·인수 6. 양도 및 운영평가 7. 개발된 서비스의 보급·확산 지원 8. 출연한 예산의 집행 및 회계처리 9. 사업의 성과분석 10. 그 밖에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주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 수립 2. 제안요청서 작성 3. 사업관리 및 검사 4. 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추진여건 조성 5.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관리 6.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 사업종료 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계획 수립 2. 시스템 관리·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 3. 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 4. 개발된 서비스의 보급·확산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업무
사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2.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3. 시험운영 및 그 기간 동안의 안전성 보장 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사업조정위원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사업과제제안서 검토 2.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3. 성과지표 및 정의서 변경 4. 그 밖에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료 : 행정안전부(2020).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절차는 전자정부법과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기반하여 운용하고, 실제 사업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01호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운영지침에 따라 추진됨

그림 2-3.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절차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egov.nia.or.kr/EgovBizIntro.do>

라.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내용 및 성과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자정부 11대 과제,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 정부3.0 과제 등 각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한 정보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총 583개 사업이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국민편의 서비스, 경제활성화 및 사회안전 강화, 행정효율화 분야 등의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에 총 2조 5,798억 원의 예산이 투입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자정부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민원24, 홈택스, 행정정보 공동이용, 디지털예산회계, 정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대부분의 우리나라 주요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해왔음¹²⁾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혁신, 편리한 대국민서비스, 행정효율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단일 부처만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다부처 연계·통합 사업들을 지원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제공하는 역할 수행
 - 대규모 전자정부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능력 제고 등을 통한 전자정부 해외수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기업 참여 제한 등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중소 전문기업의 보호 및 육성 등에도 기여하였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함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부처별 사업수를 연구의 범위인 2010년~2020년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2-4>와 같음

12) 행정안전부. (2017). 전자정부50년사. p.125

- 행정안전부가 169개(44.8%)로 가장 많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12개(3.2%), 법무부, 외교부, 환경부가 각각 9개(2.4%) 등으로 분포되어 있음

표 2-4. 2010년~2020년 전자정부지원사업 부처별 사업수

기관명	사업수(개)	비율(%)	기관명	사업수(개)	비율(%)
행정안전부 ²	169	44.8	농림축산식품부	5	1.3
공동 ¹	33	8.8	법제처	4	1.1
국민권익위원회	12	3.2	공정거래위원회	4	1.1
국토교통부	12	3.2	병무청	3	0.8
기타 ³	10	2.7	식품의약품안전처	3	0.8
법무부	9	2.4	기획재정부	3	0.8
외교부	9	2.4	국가보훈처	3	0.8
환경부	9	2.4	교육부	3	0.8
조달청	8	2.1	고용노동부	3	0.8
소방청	8	2.1	문화체육관광부	3	0.8
산림청	8	2.1	해양경찰청	2	0.5
해양수산부	7	1.9	경찰청	2	0.5
산업통상자원부	7	1.9	보건복지부	1	0.3
통계청	6	1.6	농촌진흥청	1	0.3
금융위원회	5	1.3	관세청	1	0.3
중소벤처기업부	5	1.3	여성가족부	1	0.3
국가인권위원회	5	1.3	문화재청	1	0.3
기상청	5	1.3	대검찰청	1	0.3
경찰청	5	1.3	통일부	1	0.3
			총합계	377	100

주1 : 공동은 2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경우를 의미

주2 :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기록원 등 부처 소속 및 산하기관은 상위기관에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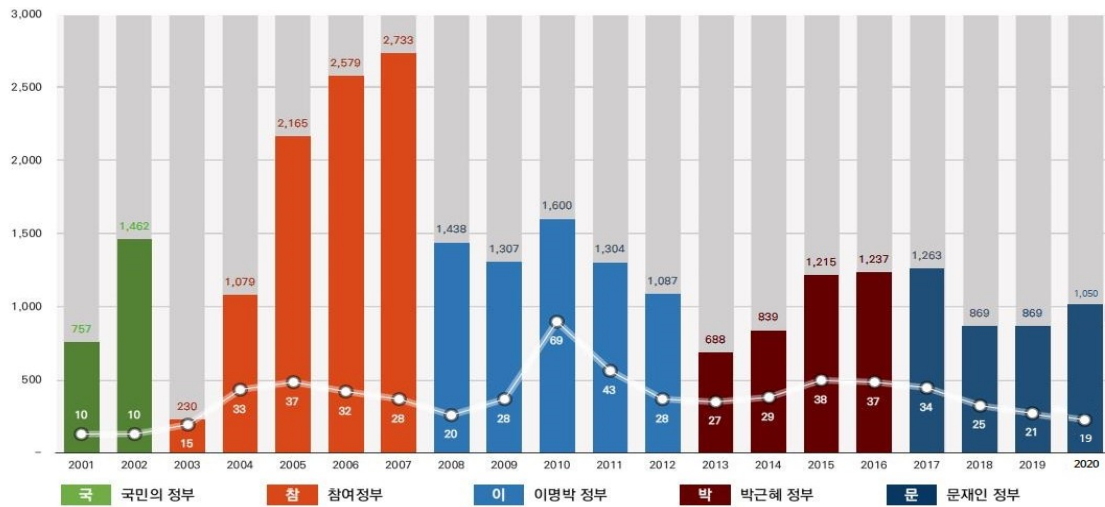
주3 : 대통령비서실, 국회사무처 및 각종 위원회를 기타로 분류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수와 예산규모를 연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2-4>와 같음
- 연도별로 2010년 60개에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5년 이후 2020년 현재 19개로 축소되었음
- 2011년 이후로 줄어들었던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은 2016년과 2017년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발표시기에 다시 증가하였지만,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다가 2020년도에 1,050억원으로 예산이 다시 증가(그림 2-4)¹³⁾

- 정부 초기에 발표되는 정부계획에 따라 BPR/ISP를 선행하고 그 다음 해부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구축사업이 진행되는 정보화사업의 life cycle에 따라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림 2-4.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 및 사업수 추이(단위: 억원, 개)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지원사업. <http://egov.nia.or.kr/EgovBizIntro.do#>

13) 본 보고서 표 1-1의 정부구분은 행정안전부 2020년 정보화예산 요구서 및 성과계획서에 따라 문재인 전부를 2018년부터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림 2-4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지원사업 모바일홈 (<http://egov.nia.or.kr>)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정부 시기 구분을 2017년부터로 정의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자료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정보화 예산 현황 및 특성 분석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정보화사업에 포함되므로, 전체 정보화사업의 예산 변화 속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예산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포함한 중앙부처의 최근 10년간 정보화사업 예산의 현황을 분석하여,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쟁점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법적 정의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에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정보화사업 예산을 파악하는 것은 기관마다 다르다는 점임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상의 정보화사업 적용대상 유형

표 2-5. 정보화사업 적용대상 유형

구분	세부 내용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 하기 위한 사업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입비 및 임차료, 정보시스템 개발비 및 컨설팅 비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경비 등으로 구성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정보화 관련 표준화, 기술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전파관리, ICT산업 기반조성,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강화 등
기타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전자정부법」 등

자료: 기획재정부

- 국회예산정책처(2020: 269)¹⁴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2019년 본예산 기준 정보화사업 규모도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준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4) 국회예산정책처. (2020). 2020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II. p.269.

표 2-6. 정보화사업 현황 비교

구분		기획재정부 집계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재집계	과기정통부 집계 기준
2019 예산	부처 수	51개	52개	55개
	사업 수	437개 세부사업	461개 세부사업	2,308개 내역사업
	예산액	3조 6,060억원	4조 744억원	4조 6,339억원
2020 예산	부처 수	51개	52개	55개
	사업 수	442개 세부사업	474개 세부사업	2,743개 내역사업
	예산액	3조 8,736억원	4조 4,036억원	6조 6,969억원

주: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부처 검토를 거쳐 재집계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기준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각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화사업 수의 집계 방식에 차이가 존재

- 기획재정부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만 분류하는 데 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역사업을 중심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세부사업은 정보화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내역사업은 정보화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정보화사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임
- 예를 들어 본 심층평가의 대상인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사업을 1개로 산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사업을 2개로 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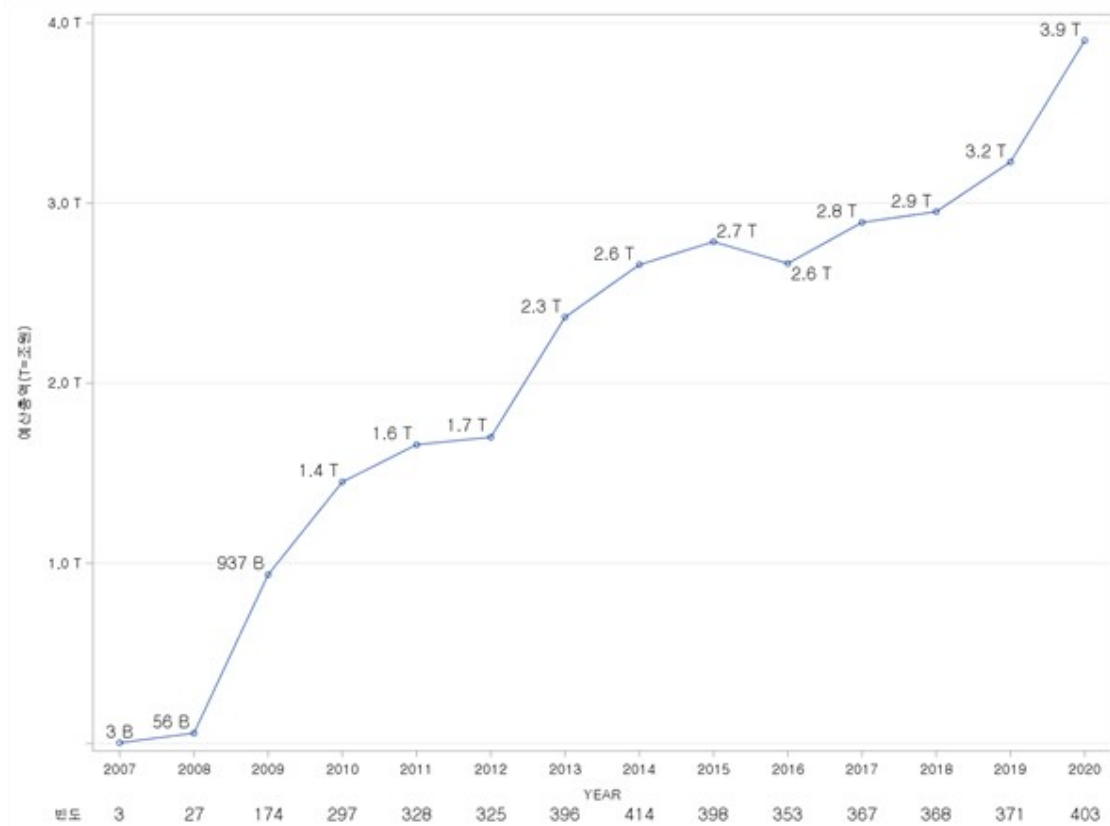
○ 결과적으로 2019년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집계 기준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의 수가 2,308개로 기획재정부의 437개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음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의 상세재정통계 DB를 활용하여 정보화 예산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2-5>와 같음¹⁵⁾

○ 그림과 같이 정보화 예산은 2012년 약 1.7조 규모에서 2020년 3.9조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5) 열린재정 자료에서의 정보화사업은 세부사업 중 “(정보화)”로 명시된 사업을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하듯이 정보화사업이 정확히 분류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예정처 보고서 상으로는 2020년의 경우 442개 사업에 대해 3조 8,736억원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열린재정 자료의 경우는 402개 사업에 대해 약 3조 9천억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본 분석의 목적이 추세 분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열린재정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음

그림 2-5. 정보화사업의 예산 추이(단위: T=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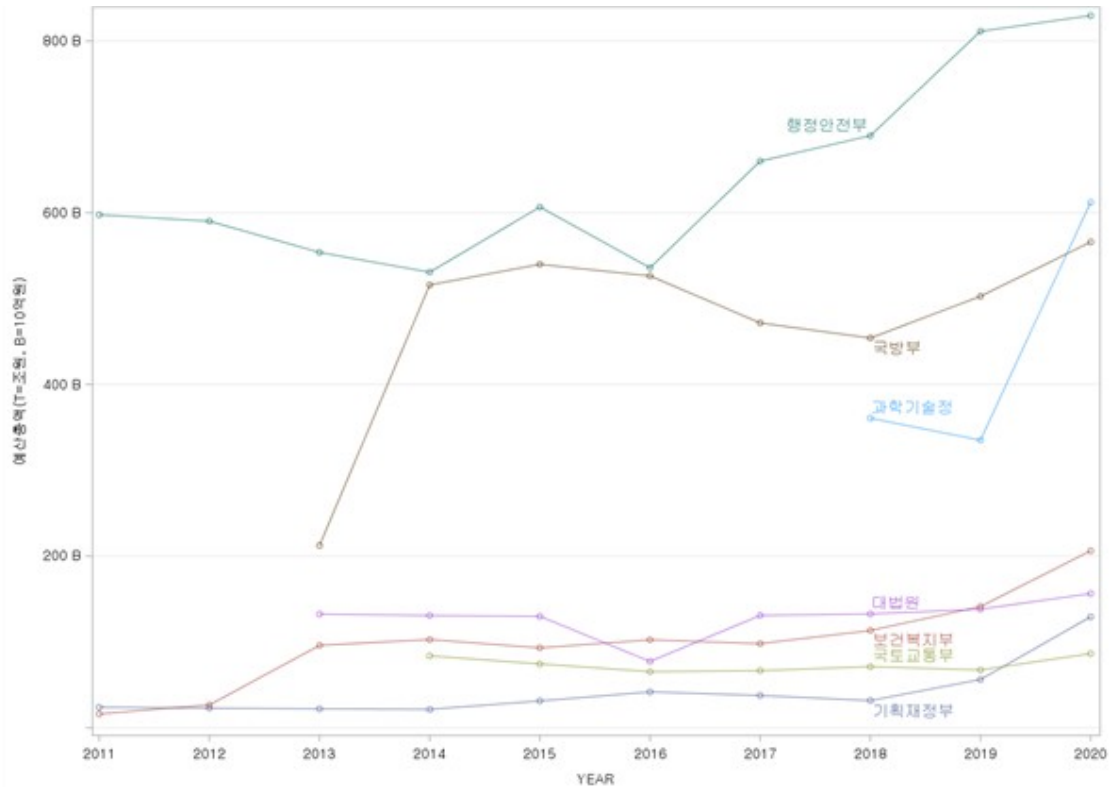


주: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부사업 수준에서 ‘(정보화)’ 로 분류되는 사업을 정보화사업으로 정의하고 분석함

□ 세부사업 단위의 정보화사업의 부처별 예산의 추세를 보면 <그림 2-6>과 같음

-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의 추세를 보면 행정안전부가 2020년 현재 8,000 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가장 많고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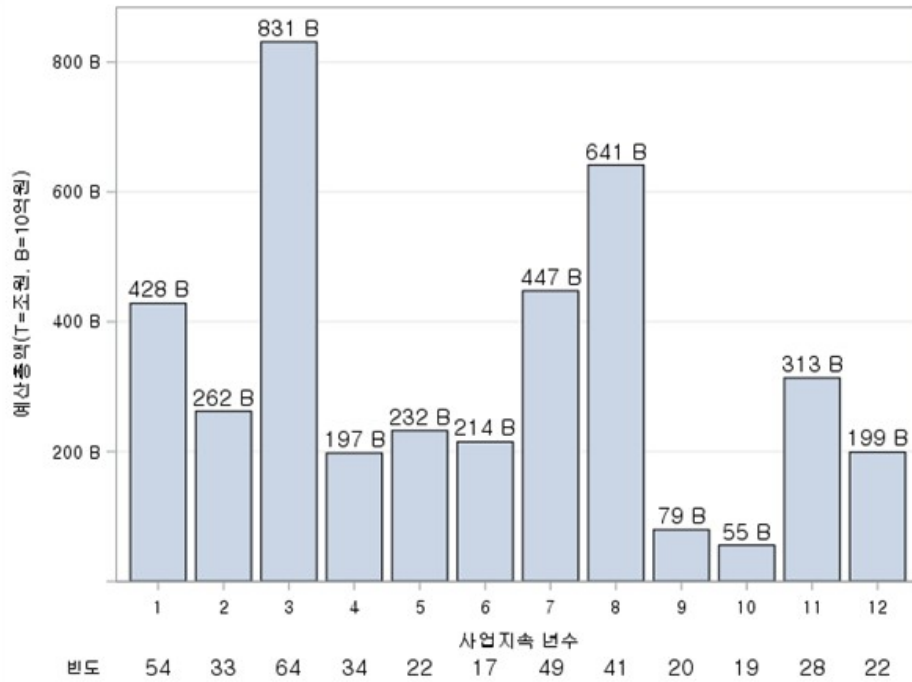
그림 2-6. 7개 상위 예산 부처별 정보화사업 예산 추세(단위: B=10억원)



주: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부사업 수준에서 ‘(정보화)’로 분류되는 사업을 정보화사업으로 정의하고 분석하였으며, 현재의 정부조직도 상의 부처명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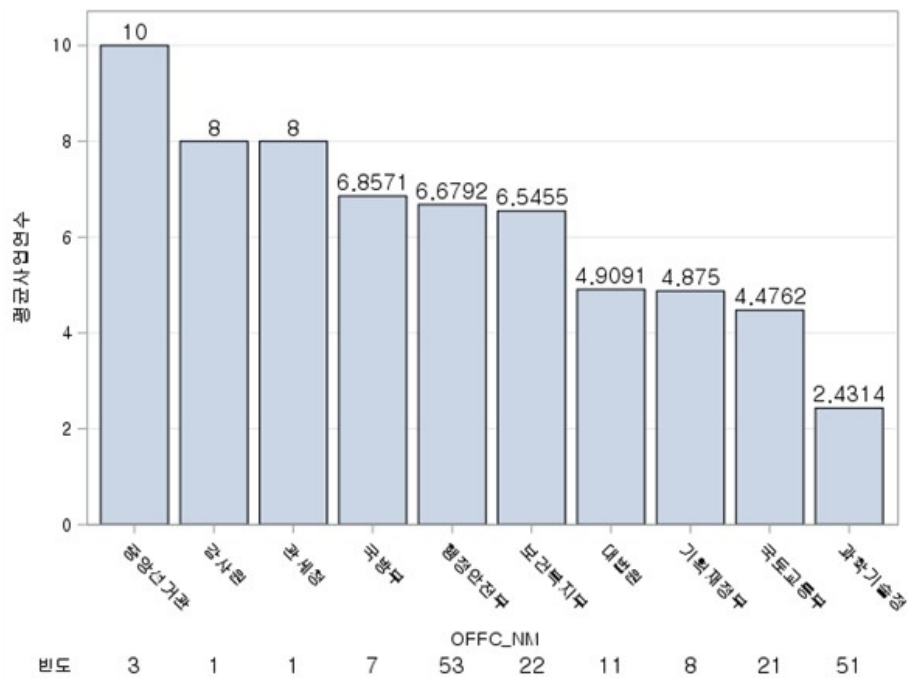
- 현재 중앙행정기관을 기준으로, 정보화사업들의 연속성을 살펴보면 2020년 세부사업만을 살펴보더라도 상당수가 6년 이상이 된 사업들이며 특히 8년 정도 진행된 사업 예산만 41개 사업의 6,410억 원에 달하고 있음

그림 2-7. 2020년 정보화사업의 지속년수의 빈도와 예산규모 (단위: B=10억원)



□ 2020년도 정보화사업의 세부사업의 부처별 평균 지속 연수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경우 각각 6.7년 및 6.5년에 달함

그림 2-8. 2020년 부처별 정보화사업 수와 평균 지속 연수



□ 10년 이상 지속 사업 중 상당 부분은 운영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행정업무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이는 일반 행정운영 예산으로 간주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표 2-7. 2020년 정보화사업 중 10년 이상 지속사업의 내용 및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천원)
경찰청 교통행정전산화(정보화)	2,157,000	산림청 산림과학원정보화(정보화)	1,683,000
경찰청 전산운영경비(정보화)	3,409,000	산림청 산림자원정보화(정보화)	10,716,000
경찰청 형사사법업무전산화(정보화)	2,663,000	조달청 조달정보화(정보화)	28,565,000
고용노동부 근복지금(신용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148,000	중앙선거관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5,603,000
고용노동부 근복지금(중소계정) 정보화경비(정보화)	334,000	중앙선거관 투개표선진화(정보화)	697,000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정보화운영(정보화)	781,000	통계청 S-GIS DB구축(정보화)	4,183,000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	15,344,000	통계청 통계DB통합및포털서비스 (정보화)	9,748,000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6,397,000	통일부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593,000
고용노동부 임금채권 정보화경비(정보화)	341,000	통일부 사이버통일교육센터운영(정보화)	475,000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정보화)	5,172,000	통일부 통일업무정보화(정보화)	3,787,000
국세청 국세행정 전산화(정보화)	100,000,000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유출및오남용방지(정보화)	8,963,000
금융위원회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9,321,000	행정안전부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	968,000
기상청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정보화)	1,526,000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서비스정보화추진(정보화)	382,000
기상청 기상연구시스템(정보화)	192,000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6,242,000
기상청 기상용슈퍼컴운영(정보화)	27,171,000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4,545,000

사업	예산	사업	예산(천원)
기상청 수치예보시스템 개선(정보화)	661,000	행정안전부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4,366,000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정보화(정보화)	3,226,000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정보화)	108,000,000
문화체육관광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1,214,000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	15,207,000
문화체육관광 국악원정보시스템 환경구축(정보화)	2,107,000	행정안전부 정보자원관리지원(정보화)	4,331,000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위원회경영(정보화)	1,063,000	행정안전부 정부기능분류시스템운영(정보화)	1,038,000
문화체육관광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정보화)	6,203,00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센터및전산망운영 (정보화)	1,617,000
문화체육관광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구축 (정보화)	4,662,000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노후장비통합구축 (정보화)	80,349,000
문화체육관광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정보화)	654,000	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화추진(정보화)	25,184,000
문화체육관광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정보화)	984,000	행정안전부 지자체기능분류모델시스템운영 (정보화)	189,000
문화체육관광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606,000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1,812,000
문화체육관광 영화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559,000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3,603,000
문화체육관광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2,695,000	환경부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구 축운영(정보화)	2,664,000
문화체육관광 정책포털 시스템 운영(정보화)	2,947,000	환경부 국토환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3,847,000
문화체육관광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1,394,000	환경부 물환경정책시스템구축(정보화)	1,052,000
문화체육관광 한국정책방송원 전산운영경비(정보화)	598,000	환경부 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	2,848,000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정보화(정보화)	231,000	환경부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구축 (정보화)	1,22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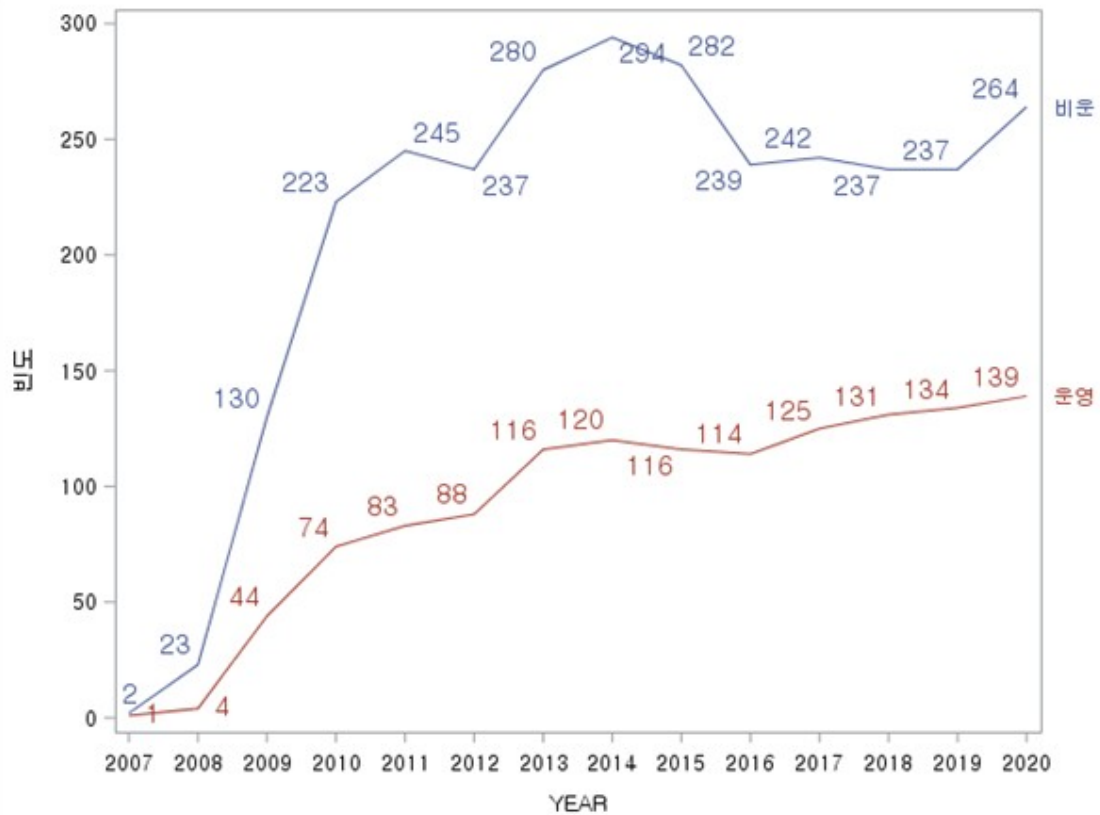
사업	예산	사업	예산(천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구 축(정보화)	7,940,000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정보화시스템운영 (정보화)	403,000
보건복지부 부내행정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정보화)	2,577,000	환경부 환경연구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1,933,00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570,000	환경부 환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2,927,000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정보화)	608,000		

주: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가 작성함.

□ 정보화사업 중의 상당수는 기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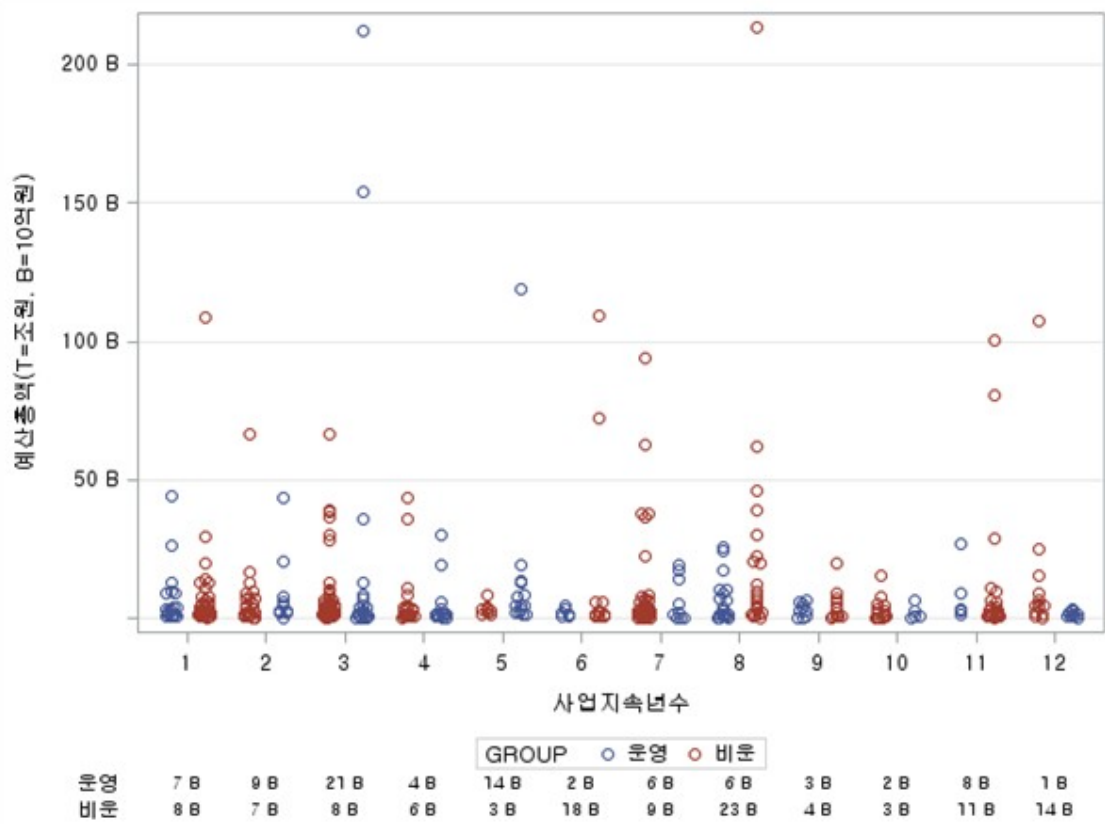
- 세부사업 이름 중에서 ‘운영’ 을 포함한 사업의 연도별 빈도를 나타낸 결과는 <그림 2-9>와 같음
- 2020년의 경우 운영사업이 139개에 달함. 실제로는 운영이라는 단어를 세부사업명에 포함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운영사업인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9. 연도별 운영사업과 비운영사업의 사업수



- 운영사업과 비운영사업의 예산 규모를 보더라도 사업별로 편차가 클 뿐 아니라 운영사업의 평균 예산도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일부 사업은 운영사업의 예산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운영사업비 발생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각 부처가 운영하는 각종 시스템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며, 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운영시스템 통합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운영시스템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을 통해 유지, 개선필요, 고도화, 통폐합, 폐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3년 이상 운영된 시스템은 매년 운영성과측정이 요구됨

그림 2-10. 운영사업과 비운영사업의 지속년수 및 예산 규모(단위: B=10억원)



□ 결국 정보화사업의 수와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정보화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지속되면 신규사업의 가능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 스스로 매년 성과측정을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폐기 또는 통폐합이 필요한 시스템을 확정하고 있으며, 그 이행결과도 확인하고 있음

표 2-8. 2017년 기준 폐기 및 통폐합 대상 시스템 수 대비 조치현황

구분	계	조치완료				조치예정
		소계	유지	통폐합	폐기	
2017년	320개	293개	32개	142개	119개	27개

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 정보화사업 성과보고서.

Ⅲ. 법·제도 및 계획 분석

1. 국가정보화사업과 전자정부지원사업 비교

- 국가정보화사업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분야의 정보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가정보화사업은 전자정부, 행정정보화 등의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어 개념의 혼란 문제가 있음¹⁶⁾
 - 그 이유는 첫째, 국가정보화사업과 전자정부사업은 영역의 중복 및 추진 주체의 다기화로 인한 업무영역의 혼선, 둘째, 전자정부의 업무분야의 급속한 팽창, 셋째, 빠른 기술변화로 인한 부처 간 경쟁이 있음¹⁷⁾

가. 국가정보화사업의 개념

- 국가정보화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말함¹⁸⁾
 -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를 신설(1994년)하고 국가정보화를 추진하였으며,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현 국가정보화기본법)하고 정보화촉진기금을 마련
 - 정보화 초기 단계에 정부가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장기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정보기술의 선도적인 이용자로서 정부가 초기 정보화 수요를 창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

16) 정충식(2009). 국가정보화 추진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추진체계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2(4). p.59.

17) 소영진(2003). 전자정부 구축사업 추진체계의 딜레마와 극복방안: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0(2). p.39.

18)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중앙행정기관(입·사법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 시도, 228개 시·군·구)는 2018년 말에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에 따라 2019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마련
 - 2019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규모는 총 5조 7,393억원이며, 2018년 대비 4,422억원(8.4%) 증가
 - 중앙행정기관은 4조 6,339억원, 지방자치단체는 1조 1,054억원을 투자

표 3-1. 역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추진현황

단계	구분	수립년도	계획	기간	비전
기반 마련	1차	1996.6.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1996-2000	201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실현
	2차	1999.3.	Cyber Korea 21	1999-2002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
분야별 고도화	3차	2002.4.	e-Korea Vision 2006	2002-2006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
	3차 (개정)	2003.12.	Broadband IT Korean Vision 2007	2003-2007	Broadband IT Korea 건설
	3차 (연동)	2006.5.	u-Korea 기본계획	2006-2010	세계 최고 수준의 u-인프라 위에 세계 최초의 u-사회 실현을 통해 선진 한국 건설에 기여
연계·통합	4차	2008.1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06-2012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 구현
	4차 (수정)	2012.3.			
융합·확산	5차	2013.1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13-2017	국민행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 한국 실현
초연결 지능화	6차	2018.1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18-2022	지능화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나. 정보화사업 추진체계

- 현재 국가정보화 관련 정책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여러 기관이 협의와 조정을 통해 결정 및 추진
- 국가정보화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하되, 부문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전파, 방송 부문을,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등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을 담당

표 3-2. 정보화 추진체계 경과

구분	전두환/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추진 체계	전산망조정 위원회	정보화 추진 위원회	정보화 추진 위원회	정보화 추진 위원회	국가 정보화 전략 위원회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정보통신전 략위원회 4차산업혁 명위원회
			전자정부 특별 위원회	전자정부 전문 위원회 (전자정부 특별 위원회)		정부3.0 추진위원회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전자정부 추진위원회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전자정부 추진위원회
주요 법령	전산망 이용촉진과 보급확장에 관한법률 (1986)	정보화 촉진 기본법 (1995)	전자정부 법(2001)	전자정부 법(2007)	국가 정보화 기본법 (2009)	정보통신 진흥및융합 활성화등에 관한특별법 (2014)	국가정보화 기본법전부 개정법률안 상정(2018)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 상정(2019)
전담 부처	체신부	정보 통신부	정보 통신부	정보 통신부, 행정 자치부	행정 안전부	미래창조과 학부, 행정 자치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등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

- 이와 별도로 대통령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등으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두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다수 부처가 관련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을 추진

- 또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함께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 협의 등을 위해 부처와 시·도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운영

- 국가정보화 전략과 정보화 예산 간의 연계를 위해 정보화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국가정보화를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정보화예산협의회를 구성·운영 중

다. 평가체계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정보화 분야를 평가하는 체계는 두 갈래로 진행
 -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정보화 분야 행정관리역량 평가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정보화사업 대상의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있고, 정보화 평가결과는 정보화 분야 제도개선과 차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
-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 실시하는 3개의 정부 업무 자체 평가 중 하나로, 각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수립한 조직, 인사, 정보화 분야 평가지표를 자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자기 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 2012년부터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관리역량평가를 자체평가로 편입해 매년 시행
 - 추진목적은 각 중앙행정기관장 책임 하에 기관의 정보화 관리 등 행정관리 역량 수준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정책·예산 등에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
 - 정보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전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부처의 정보화 추진현황 및 역량에 대한 진단 및 점검을 통한 정보화 성과 창출기반 강화에 있음
 - 추진내용은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화관리부문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 작성으로, 중앙행정기관 정보화관리부문 평가지표별 자체평가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 평가 시기는 사업년도의 차년도 1~3월 중 실시하고 평가대상기간은 해당연도 1~12월까지임
 - 평가지표는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 사이버 안전수준 강화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의 표와 같은 측정방법과 배점으로 구성

표 3-3. 행정관리 역량평가 정보화 부문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유능한 전자정부 구현 (20점)	① 전자정부 성과관리 추진	14점
	가. 정보자원관리 수준	3점
	나. 단계별 성과관리 이행수준	7점
	다. 중복투자 예방	4점
	② 웹사이트 운영관리 효율화	6점
	가. 웹 호환성·접근성 수준	3점
나.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율	3점	
사이버 안전수준 강화 (15점)	① 개인정보보호 수준	4점
	②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4점
	③ 사이버보안관리 수준	6점
	④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결과	1점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전자정부 평가,
<https://www.mois.go.kr/frt/sub/a06/b04/egovEstimation/screen.do>

-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해 각 부처가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사업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등 재정 운용 과정에 환류하는 제도로 자율평가 제도는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4대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2005년에 도입되었음
- ‘심층평가’는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여 원활한 사업목적의 달성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도출하는 평가제도(「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3조)

라. 국가정보화사업과 전자정부사업 및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비교

- 국가정보화는 전자정부, 행정정보화 등의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구분이 어려워 개념의 혼란 문제가 있음
 -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과정은 주요 행정업무에 대한 전산화에서 시작되었고, 이후의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추진 과정도 주무 부처의 변경, 추진체계의 잦은 변화의 결과로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성격을 내포함
-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사업 및 전자정부사업은 이원적으로 관리되면서, 사업 진행단계별 정보화사업이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사업의 결과와 성과의 환류 체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¹⁹⁾
 - 국가정보화 기획기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예산의 편성 및 심의는 기획재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업추진체계가 분절화되어 있음
 - 국가정보화 관련 성과평가, 전자정부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국가정보화 기획 및 예산과정에서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다는 평가
- 국가정보화사업과 전자정부 추진과정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국가정보화”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화를 추진하거나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화를 통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전자정부법에서의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의미함

19) 엄석진(2018). 국가정보화사업 거버넌스 분석을 통한 예산효율화 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연구용역보고서.

-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정보화 추진’ 과 전자정부법에서 정의하는 ‘업무 전자화’ 는 행위자가 정부로 동일하고,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함
- 국가정보화 개념의 혼란 원인을 첫째, 업무영역이 범정부적, 둘째, 정보화 관련 업무 분야의 급속한 성장, 셋째, 빠른 기술변화에서 찾을 수 있음(소영진, 2003; 정충식, 2009; 배영 외, 2009; 엄석진, 2018)
 - 첫째, 국가정보화사업은 범위가 넓고 영역이 전 부처에 걸쳐있는 범정부·다부처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 효과적인 조정체계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부처 간의 업무영역이 혼재되어 있음
 - 둘째, 정보화 관련 업무 분야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어 주무부처에 의한 관할 영역이 정해지지 않은 업무영역에서 부처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 셋째,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하여 업무영역의 조정상태가 새로운 사업 분야의 등장으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갈등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간의 개념상 혼란이 존재하나, 근거법령에 따라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전자정부사업의 하위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1995년부터 시행되었던 ‘정보화촉진지원사업’ 이 2004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종료되고 ‘전자정부지원사업’ 으로 추진되었음
 -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여된 것은 전자정부법이 개정된 2007년으로, 이때 현재 전자정부법 제64조에 다음과 같이 근거 조문을 두고 있음

<전자정부법>

-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자정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78조에서 지원사업의 선정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지침의 형태로 수립하도록 하였고,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 지침에서 범정부 공통인프라, 다수 시스템 융·복합 등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영역을 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전자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2.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3. 제도적·기술적 실현가능성
 4.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체계, 대상과제의 선정 방법,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의 보안, 감리 및 성능 개선, 긴급한 사업의 추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전자정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화사업 중에서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사업
 - 나. 첨단기술을 시범도입하거나 적용을 확산하는 사업
 - 다.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라.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수 시스템에 일시 지원을 하는 사업
 - 마.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바.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 사. 가목부터 바목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사회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다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총 예산은 지원사업 예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2. 삭제
3. "전문기관"이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주관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집행잔액"이란 사업대상 및 범위의 조정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사업 발주를 통해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의미한다.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자정부법 제64조에 명시된 ‘전자정부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전자정부사업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
-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호)에서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의를 다시 시도하고 있음
 - 동 지침에서는 성과관리 대상으로서의 정보화사업을 정의하면서 전자정부사업과 지역정보화사업의 총체로서 이해하고 있음
 - 하지만, 동 지침에서의 정의가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의 정보화의 개념, 전자정부법에서의 전자정부의 개념과 혼란을 발생시킬 여지가 존재함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사업"이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행정업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정보화사업"이란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말한다.

이하생략

□ 다음의 표는 정보화사업, 전자정부사업, 전자정부지원사업을 근거계획, 예산, 사업계획, 심의 및 조정, 사업집행으로 구분하였음

표 3-4. 정보화사업·전자정부사업·전자정부지원사업 비교

구분	근거(법령)	예산확보	사업계획작성	심의·조정	사업집행
정보화사업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국가정보화 기본법)	각 부처	각 부처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각 부처
전자정부사업	전자정부 기본계획 (전자정부법)	각 부처	각 부처	전자정부 추진위원회	각 부처
전자정부 지원사업	전자정부 기본계획 (전자정부법)	행정안전부	각 부처	행정안전부·사업조정위원회	각 부처·전문기관

- 정보화사업과 전자정부사업은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심의·조정 위원회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사업집행 단계는 유사함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우는 예산확보와 심의·조정 기능을 행정안전부가 전적으로 수행하는 점이 다름
- 이상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개념적 정의와 운영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국가정보화(사업), 전자정부(사업), 전자정부지원(사업) 등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와 실무수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이 정보화사업, 전자정부사업,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역정보화사업이 각각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전자정부법,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등 근거법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나, 개념상 혼란이 존재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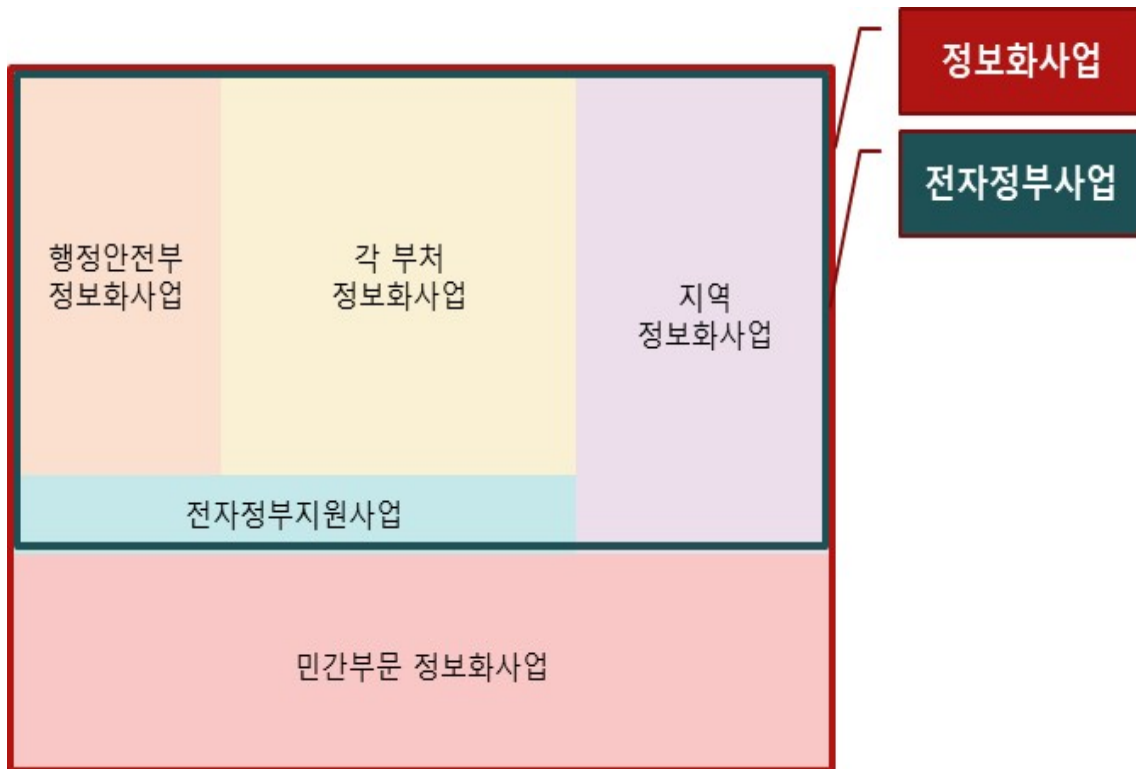
표 3-5. 정보화사업 및 전자정부사업 등의 정의

구분	정의
정보화사업	<p>‘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p> <p>* ‘정보화’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화를 추진하는 사업의 의미로 ‘정보화사업’이라는 용어 사용</p> <hr/> <p>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 *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입비 및 임차료, 정보시스템 개발비 및 건설당 비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경비 등으로 구성 ○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 정보화 관련 표준화, 기술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전파관리, ICT산업 기반조성,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강화 등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정보화 유형으로 등록된 세부사업
전자정부사업	<p>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전자정부법 제64조 1항)</p> <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행정업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는 모든 사업(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 1항)</p>
전자정부지원사업	<p>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 (전자정부법 제64조 3항)</p>
지역정보화사업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전자정부법 제65조)</p>

- 통상적으로 정보화사업은 전자정부사업 등 공공 및 민간부문 정보화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정보화사업이라고도 하며, 전자정부사업,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역정보화사업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추진주체 및 수혜대상 등에 따라 구분
- 정보화사업과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각 부처의 정보화사업, 그리고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법적·실무적 차원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
 - 정보화사업을 크게 민간과 공공으로 나누고, 공공분야의 정보화사업을 적용 범위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과 지역정보화사업으로 구분

- 전자정부사업은 행안부 정보화사업과 각 부처 정보화사업을 포함하며,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이들 각각에 포함되는 형태로 정의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예산 기준으로는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에 포함되나, 사업 기준으로는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과 각 부처 정보화사업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

그림 3-1. 정보화사업 및 전자정부사업 등의 범위(안)



- 또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운영방식이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기획재정부가 선정된 과제에 대해 예산을 심의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산효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사업선정 및 집행, 성과평가 결과의 투명한 공개, 성과에 따른 예산연계 등이 제안될 수 있음

2. 전자정부지원사업과 유관계획 간의 정합성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관계획은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지능형정부 기본계획」, 「디지털 정부혁신 기본계획」 등이 있음
- 이들 계획은 서로 다른 시기에 수립되어 전자정부에 대한 계획 수립 당시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으며, 유관계획의 내용분석을 통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 설정이 가능할 것임

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관계획 검토

1)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2016)

-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은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5개년 중장기계획으로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Enjoy your e-Government) 구현’을 목표로 함
-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UN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으나, 모바일, 부처 간 경계 없는 업무 연계와 통합, 전자정부를 통한 산업 육성과 발전 등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평가
- 복잡한 사회현안이 증가하고, 정부 3.0 추진에 따른 행정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전자정부 패러다임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이를 촉진하는 전자정부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이 반영
- 동 계획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기업·시민단체·개인이 협업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기반으로 정부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네 가지 추진방향을 설정
 - 목표: 효율성/투명성 → 지속가능한 발전
 - 주체: 행정분야 민관협력 → 정치·사회분야 파트너십 확산
 - 서비스: 분절화된 맞춤형 서비스 → 통합된 개인화 서비스
 - 핵심수단: PC·인터넷 중심 → 지능정보기술 중심

- 전자정부 비전과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서비스 Re-디자인, 인지·예측기반의 지능행정 실현, 산업과 상생하는 전자정부 신생태계 조성, 신뢰기반 미래형 인프라 확충, 글로벌 전자정부 질서주도 등의 5대 ENJOY 전략 제시

2)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2017)

- 언제 어디서나 현명하게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을 수립·발표

- 디지털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결합으로 행정의 합리성과 과학성 제고 및 지역·계층·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자정부 추진방향 탐색 필요성 증가

- 기존 전자정부가 On-line에 기반한 서비스 구현이 중심이 되었다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합리적 판단을 지원해 주고, 세세한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어디서나 전자정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자 추진방향 전환

- 지능형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중심으로 정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며,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을 실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상생의 사회를 만드는 디지털 新정부를 지향

- 이를 위해 6개의 핵심가치(공정, 투명, 유연, 신뢰, 창의, 포용)를 바탕으로 “스스로 진화하는 WISE 정부”라는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목표(W.I.S.E.)를 추구

- 목표 1: 마음을 보살피는 정부(Wonderful mind-caring Gov.)
- 목표 2: 사전에 해결하는 정부(Innovative problem-solving Gov.)
- 목표 3: 가치를 공유하는 정부(Sustainable Value-Sharing Gov.)
- 목표 4: 안전을 지켜주는 정부(Enhanced safety-keeping Gov.)

- 새로운 지능형 전자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현명하게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발돋움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의 추진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기술수준 및 행정여건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10대 사업으로 중점 추진
 - 각 정부기관의 지능형 정부 구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체계의 측면에서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산하에 지능형 정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협력 계획수립 및 혁신과제를 발굴 및 추진
- 둘째, 중장기 과제는 지능형 전자정부 재설계 및 핵심과제를 발굴·추진
 - 구체적으로 지능형기술·ICT환경 기반의 행정프로세스, 전자정부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재설계를 추진
 - 이를 위하여 전자정부 재설계 ISP 추진예산을 확보 및 지능형 정부 핵심과제 선정 및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로드맵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사업 추진
- 이와 함께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내부 및 공공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정부 지원체계, 규제개선 등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일괄적으로 정비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하여 임베디드 SW 등 기술수준이 낮은 지능형 기술에 대한 R&D 집중투자 유도

3)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2019)

- 공공부문 ICT 활용현황 및 문제점 검토를 바탕으로, 관계부처(행안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복지부, 권익위, 국정원 등) 협의와 민간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을 마련
- 우리나라는 국가적 초고속 정보통신망 투자와 적극적인 공공정보화사업 추진에 힘입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 표출
- 축적된 행정데이터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연계 및 활용이 미흡하고, 부처 단위로 단절된 서비스, 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와 기반이 부족
 - 서비스 부문에서는 국민과 최종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혁신이 미흡
 - 데이터 부문에서 기관별로 축적하고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와

활용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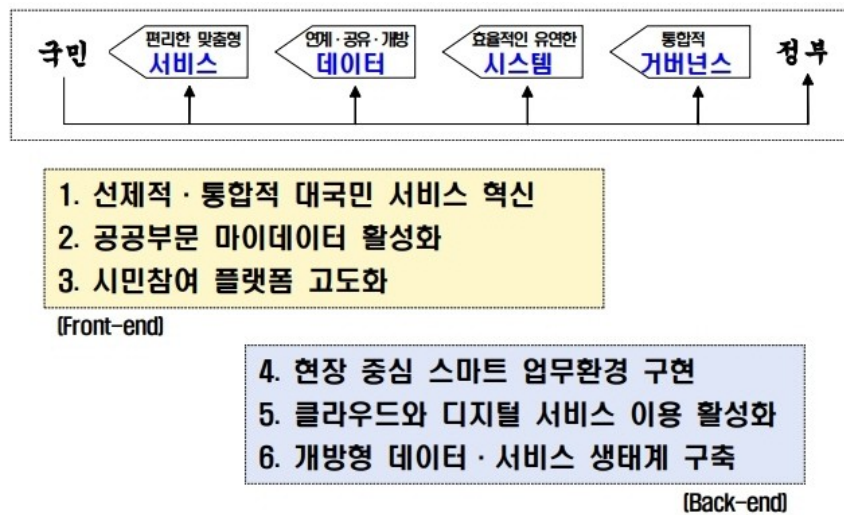
- 시스템 부문에서 디지털 신기술의 적기 도입과 활용이 곤란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없고, 구체적 전략도 부재하다는 내부평가²⁰⁾

- 디지털 전환을 위한 부처 간 협업 등 추진체계, 즉 거버넌스가 취약하다는 평가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은 6대 우선 추진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낡은 체제를 극복할 계기를 마련하고, 중장기 관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2020년 수립할 예정

그림 3-2.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9).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 디지털 전환에 맞춘 디지털 정부 전환을 위해 행정안전부도 디지털정부국으로 개편(2020.03).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과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등 데이터 정책 강조가 특징임

4)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2020)²¹⁾

□ 코로나19 위기를 디지털 정부혁신 가속화의 계기로 삼아 우리나라가 세계선

20) 관계부처합동(2019).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21) 관계부처합동(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당초계획보다 진전된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수립

○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라는 비전하에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함(’ 19.10.29. 국무회의 보고)

○ 최근 코로나19로 행정·교육·산업 등 사회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하여 디지털 전환 가속화 요구가 증대하였음

○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디지털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을 추진 중임

□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중심과제로 포함하고 있음

○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활용,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확산, 전자증명서 발급과 디지털 거래 활성화,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을 추진

○ 맞춤형 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민비서·민원상담365 도입, 맞춤형 수혜 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확충, 범정부 통합콜센터 구축을 추진

○ 데이터 활용과 민·관협력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공공서비스 민간개방 및 협력,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 전환, 위기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

○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IoT 재난안전체계구축, 5G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AI 기반 사이버보안 강화, 포용적 디지털환경 조성, 공무원 디지털역량 제고를 추진

나. 전자정부지원사업과 상위 유관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1) 기술과 행정수요의 변화 반영

□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유관계획과 정합성을 가지려면, 최근의 기술변화와 행정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 AI,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기술변화와 시민의 정치 참여, 애자일(Agile) 정부 등 행정수요의 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수

○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디지털정부로의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혁신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이 궤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정보화사업과 더불어 다 부처를 아우르는 정보화사업의 연계와 조정이 필요

- 이는 앞서 살펴본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과 일치하는 방향

○ 대표적인 정보화사업 관련 계획인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은 기술 및 정책환경 변화를 잘 반영하여 수립되었으나,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

2)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방향성에 맞는 전자정부지원사업 방향성 조정

□ 디지털혁신(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할 디지털 정부계획에 맞춘 디지털 정부국으로의 개편,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국정과제 방향성을 고려한 세부사업선정 고려가 필요

○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3년에 4대 분야, 10대 아젠다 및 31대 과제로 구성된 전자정부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07년까지 5년간 총 8,788억원을 들여 전자정부사업들을 추진

- 이때 구축된 전자정부 시스템들은 이후 국가정보화 및 정부 3.0 정책의 집중 추진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고도화 사업, 디지털에

산회계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

- 광화문 1번가, 국민생각함 등의 플랫폼구축을 통한 시민의 정치참여, 정책제안을 확장
- 이들 사업은 플랫폼 간의 연계와 융합을 통해 더욱 발전이 가능하며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등은 전자정부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로 평가

○ 최근 3년 동안 수행된 전자정부지원사업과 상기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이 절반 이상의 사업이 상위계획과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앞서 검토한 주요 정보화 관련 상위계획들의 변화가 자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기본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라는 고유한 성격을 잘 유지한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표 3-6. 최근 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유관계획과의 연계 현황

연도	사업명	전자정부 2020	지능형 정부	국정 과제	디지털 정부혁신
	소 계	19개	5개	15개	6개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 구축	○			○
	공통기반시스템 운영환경 구조진단 및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ISP				
	차세대 전자정부 표준플랫폼 체계 구축 ISP	○		○	○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	○	○	
	전자인증 프레임워크 구축(3단계)	○	○		○
'18년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4차)	○			
	전자민원서류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ISP	○	○	○	○
	지능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재설계 ISP	○	○	○	○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1차)	○	○		
	국가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재외공관 스마트 영사민원 포털시스템 구축	○		○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	○			

연도	사업명	전자정부 2020	지능형 정부	국정 과제	디지털 정부혁신
	행정서비스 통합 제공	○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면개편 ISP 수립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ISP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
	전자기록관리고도화 BPR/ISP			○	
	고향사랑기부제시스템 구축 ISP			○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		○	
	데이터기반의 통합 자원봉사 서비스 구현 ISP			○	
	주민참여 활성화위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고도화 BPR/ISP			○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1단계)	○		○	
	민·관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 BPR/ISP	○		○	
	전자정부 웹사이트 보안성 강화			○	
	전자정부 웹사이트 본인확인확인절차 편의성 제고			○	
	소 계	11개	4개	10개	5개
'19년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1차)	○		○	○
	국가 기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지문정보 포함)	○			○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 확대 구축	○			○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1차)	○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1차)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센터 구축 ISP				
	클라우드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1차)	○	○	○	○
	인공지능기반 병무민원신청시스템 구축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		○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2차)		○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시스템 구축(2차)	○		○	
	부패방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		○	
CIQ 정보공유시스템 전면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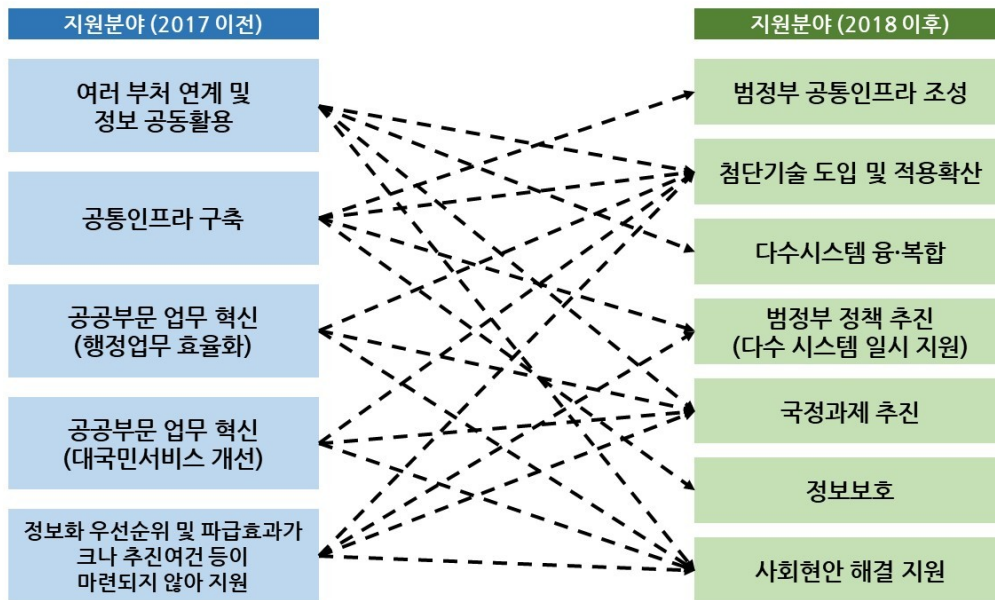
연도	사업명	전자정부 2020	지능형 정부	국정 과제	디지털 정부혁신
	인공지능 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	○	○	
	전자정부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	○		○
	비밀관리시스템 고도화				
	데이터기반의 통합자원봉사 서비스 구축			○	
	청와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구축			○	
	국가 폐기물 안전처리 감시체계 구축				
'20년	소 계	10개	4개	9개	8개
	클라우드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2차)	○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2차)	○		○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2차)	○		○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2차)				
	국가기준정보 관리체계 3차 구축(지문정보 포함)	○			○
	범정부 민원상담 365 서비스 구축	○	○	○	○
	디지털 고지 수납 통합서비스 공통기반 구축 ISP				○
	부패방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3단계)	○		○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시스템 구축(3차)	○		○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	○	○	○	○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구축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BPR/ISP				○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디지털증거통합분석 플랫폼 개발				
	인공지능기반 병무민원신청시스템 구축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3차 구축	○	○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2차)	○	○	○	○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원스톱 부동산 거래 체계 구축 BPR/SP				○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	
	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 관리체계 구축				

출처.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3.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사업 유형의 변화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사업 유형은 전자정부법 제64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의하고 있음
- 대상사업 유형은 부분적 수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8년의 변경은 지원분야의 다변화 혹은 확장이 이루어졌음(<그림 3-3> 참조)

그림 3-3. 2018년 전후 지원대상 분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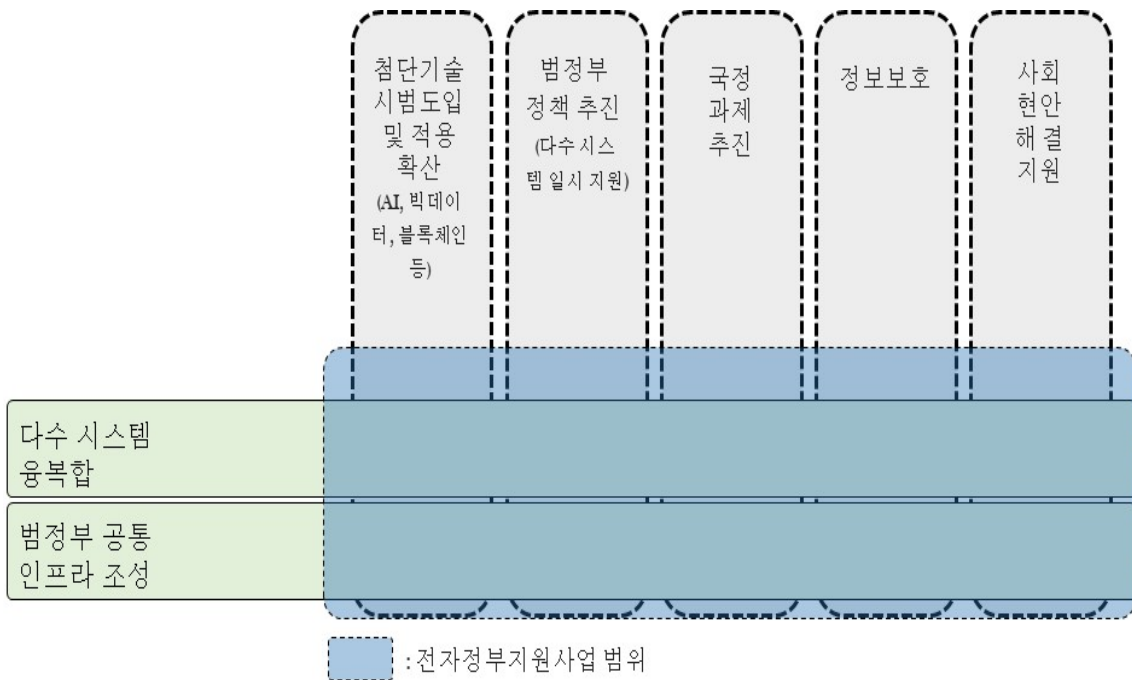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크게 4번의 변화가 있었음(<표 3-7> 참조)

표 3-7.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유형의 변화

시기	내용	비고
2008.8.14. 제정	<p>가. 여러 부처 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공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정보자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p> <p>나.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개선 등 정보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p> <p>다. 정보화의 우선순위 및 파급효과가 크나 추진여건 등이 마련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사업</p>	<p>- 다부처 연계 공통인프라, 행정업무 효율화 및 공공부문 업무혁신, 추진여건이 부재한 중요 정보화사업</p>
2015.2.7. 일부개정	<p>가. 여러 부처 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공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정보자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p> <p>나.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개선 등 정보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p> <p>다. 정보화의 우선순위 및 파급효과가 크나 추진여건 등이 마련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사업</p> <p>라.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에 따른 정부3.0추진위원회(이하 "정부3.0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정부3.0 핵심사업"</p>	<p>- 정부3.0 핵심사업 추가</p>
2017.8.25. 일부개정	<p>가. 여러 부처 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공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정보자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p> <p>나.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개선 등 정보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p> <p>다. 정보화의 우선순위 및 파급효과가 크나 추진여건 등이 마련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사업</p>	<p>- 정부3.0 핵심사업 삭제</p>
2018.4.25. 일부개정	<p>가.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사업</p> <p>나. 첨단기술을 시범도입하거나 적용을 확산하는 사업</p> <p>다.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p> <p>라.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수 시스템에 일시 지원을 하는 사업</p> <p>마.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바.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p> <p>사. 가목부터 바목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사회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다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총예산은 지원사업 예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p>	<p>- 첨단기술 시범도입 및 적용 확산, 다수 시스템 일시지원, 국정과제, 정보보호, 사회현안해결 지원 등 구체화 및 추가</p>

- 2008년 제정된 관리지침은 다부처 연계 공통인프라, 행정업무 효율화 및 공공부문 업무혁신, 추진여건이 부재한 중요 정보화사업으로 유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후 2015년 정부3.0 핵심사업이 포함되었다가 2017년 삭제됨
- 2018년 사업유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으며, 현재의 유형인 다수 부처 범정부 공통인프라 조성, 첨단기술 시범도입 및 적용확산, 다수 시스템 융·복합, 범정부 다수 시스템 일시지원, 국정과제 추진, 정보보호, 사회현안 해결 지원 등이 포함되며 사업의 범위 및 내용이 구체화되고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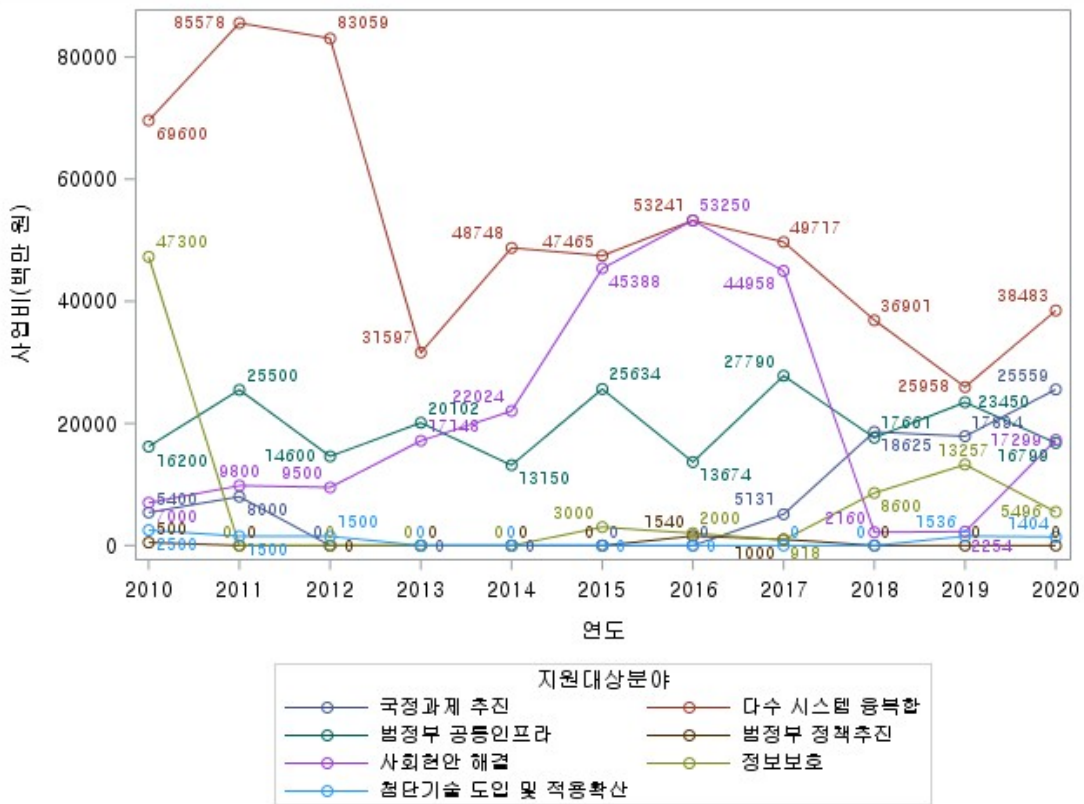
그림 3-4.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 유형(2018년 이후)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조의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사업 유형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을 유형별 예산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3-5>와 같음²²⁾

22) 전자정부지원 대상사업의 유형은 2018년 이후 국정과제나 정보보호와 같은 유형이 추가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여 2018년 이전 사업도 2018년 이후 사업과 동일한 유형으로 재분류한 뒤, 분석하였음

그림 3-5.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 분야(유형)별 총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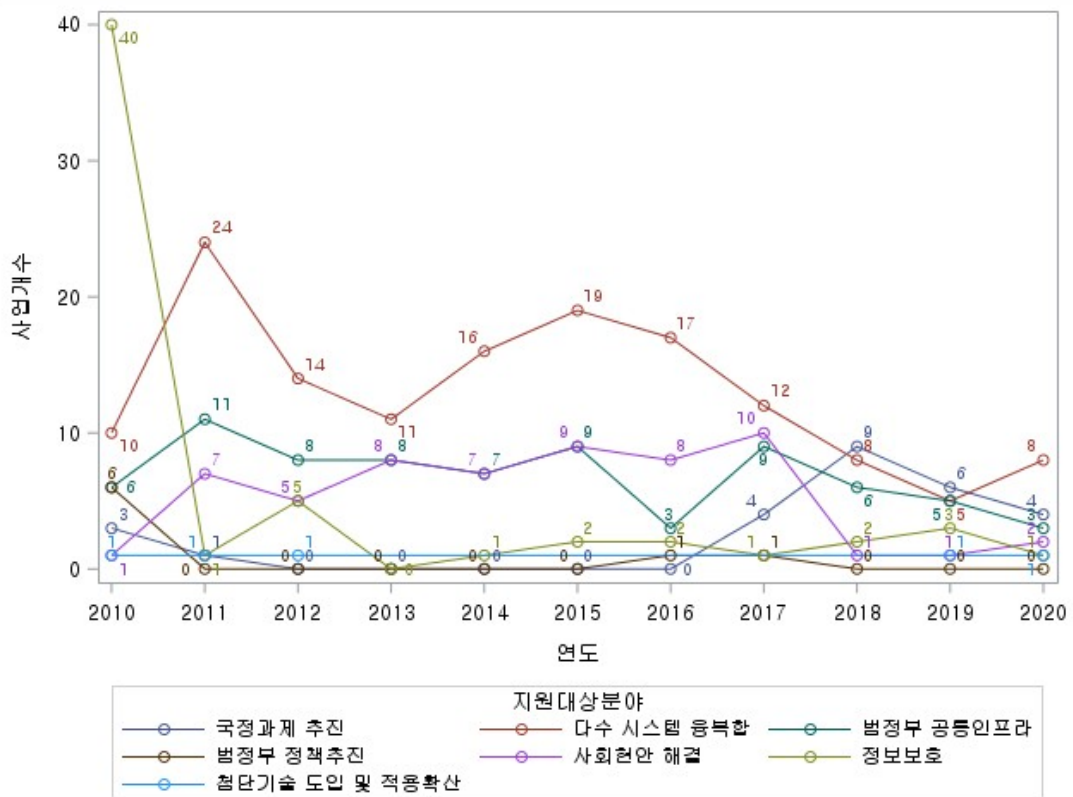


- 추진사업 수와 총사업비 모두 다수 시스템 융·복합과 범정부 공동인프라가 대다수를 차지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개별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과 달리 다수 시스템의 융·복합과 범정부 공동인프라 등 다자 간의 조정과 협력이 필요한 전자정부사업에 특화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다수 시스템 융·복합이 가장 높은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사회현안 해결 유형의 사업이 크게 증가했다가 급감
 - 다수 부처 활용 범정부 공동인프라 구축, 다수 시스템 융·복합, 범정부 정책에 따른 다수 시스템 일시 지원 등을 통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
 - 전자정부에 첨단기술을 시범 도입하거나 적용을 확산하여 행정 혁신 및 대국민·기업 서비스 개선
 - 국정과제 및 사회현안 관련 핵심 전자정부 과제 추진하여 국정 운영지원

- 한편, 2018년 이후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액되었고, 역시 범정부 공통인프라 조성, 다수 시스템 용·복합이 이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다수를 차지함
- 즉 다수 시스템 용·복합과 범정부 공통인프라 조성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이 중점을 이루어 왔다고 판단되며, 도입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방향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그림 3-6.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 분야(유형)별 사업수의 연도별 변화



- 사업명을 기준으로 주제어를 살펴보면, 시스템 구축, 고도화, ISP, 재설계 등 새로운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재구축 또는 고도화에 많은 예산이 할당
- 최근 2년 동안은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기반의 사업이 전격적으로 다수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능형 정부 구현이라는 상위 목표와 계획 정합성이 높음

- 또한, 정보화 초기에 구축된 다수의 정보시스템이 재구축이나 차세대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옮겨가는 것이 낭비를 막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다수임
- 그러나 부처 할거주의(대표적인 사례가 복지부의 행복e음, 복지로 등과 여타 시스템과의 비연계) 등으로 인하여 통합 클라우드 구축 및 이전이 어려운 문제로 예상됨
- 전자정부지원사업 초기의 계획 수립 및 추진은 절차, 업무 추진 과정, 범정부 형식의 다부처 사업에 중점을 두어 전자정부사업과 차별화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IV. 유사중복성 분석

1. 유사중복성 검토의 기준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사중복 검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전자정부지원사업 간의 유사중복과 전자정부지원사업과 개별 부처의 정보화사업과의 유사중복을 검토하여, 사업 간 유사중복의 검토를 통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제시
 - 특히, 정보화사업과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사중복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의 모호성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에 활용할 수 있음
- 유사중복 연구방법
 - 유사중복의 의미
 - 사전적으로 유사는 “서로 비슷함”, 중복은 “거듭하거나 겹침”을 의미
 - 중복은 시간적으로는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는 동일한 두 개의 대상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²³⁾
 -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중복의 표면적 의미에는 동일성이 전제되어 있음
 -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유사 개념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중복과는 차이가 있음
 - 그러나 두 개념을 성질로 이해하여 복수 대상의 유사성의 정도, 중복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두 개념을 적용한 결과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실익이 없음
 - 정부의 기능이나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는 행정학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 행정학이나 정책학에서 중복(duplication)은 가외성(redundancy) 논의의 핵심을 이루는데 가외성은 이중 브레이크와 같은 안전장치나 일부 동일한 기능을 남겨 놓는 신경망에서와 같이 정책의 신뢰성, 적응력을 높이고, Type I 오류(잘못된 정책 수행 오류)를 낮추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예산 낭비, 부처 갈등이나 정책 비일관성으로 인

23) 표준국어대사전(ko.dict.naver.com, 검색일: 2020년 5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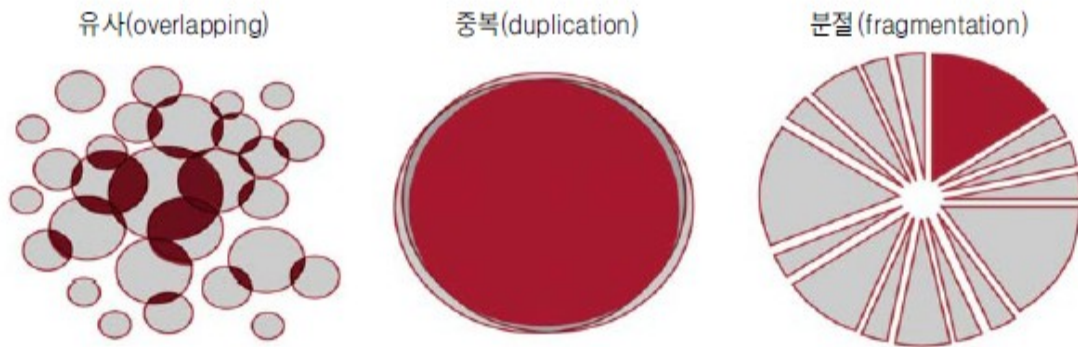
한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됨(윤건, 2013: 280-282)²⁴⁾

표 4-1. 행정학에서 유사중복의 의미

구분	내용
유사	여러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유사한 목표를 갖거나 유사한 활동이나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혹은 유사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인체에서 몇 개의 소화기관이 함께 소화기능을 담당하거나, 서로 배타적 기능을 수행하기보다 각각에 일부 다른 기능을 남겨두어 수행하도록 하는 신경망과 유사
중복	두 개 이상의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동일한 활동을 하거나 동일한 수혜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중 브레이크의 경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개의 브레이크가 있는데 이는 안전장치의 역할 수행. 프로그램의 유사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임

자료: 지은정(2015: 233) 발췌

그림 4-1. 유사와 중복의 차이



자료: 미국 감사원(GAO)(2015: 2), 지은정(2015: 233) 재인용 발췌

- 유사중복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므로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유사중복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일반적으로 유사중복은 기능 중심의 조직화와 기능 수행자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부처 이익 극대화 원리, 그로 인한 비협력적 조직문화와 의사소통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윤건, 2013: 282-283) 원천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유사중복이 원천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유사중복의 문제를 점

24) 윤건 (2013). 공공기관 간 기능 중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279-312.

근할 때는 완전한 해결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해결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유사중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것이 악성인지 여부, 정도가 심각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함

○ 유사중복성 판단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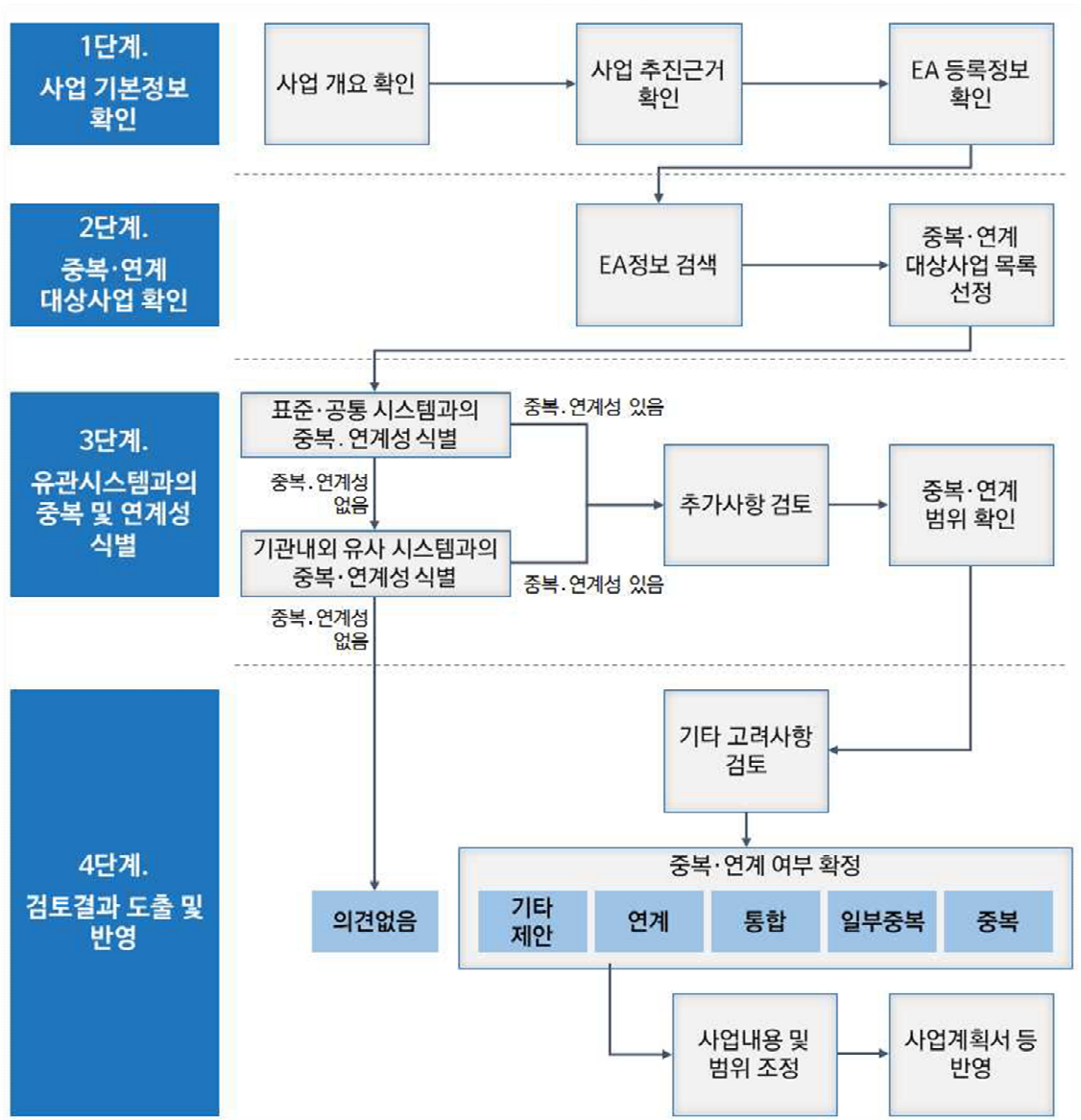
-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유사중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대부분 목적, 대상, 내용 등을 기준으로 유사중복성을 판단
-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지역정보화사업이 타 정보시스템과 중복·연계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가이드를 마련해 두고 있음

표 4-2. 유사중복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기준

구분	기준
GAO(2015)	정책목표, 정책대상, 사업내용
김주섭 외(2007)	정책대상, 욕구, 수혜대상
이성근 외(2009)	사업목적, 사업수단
강신욱 외(2011) 원종학 외(2011)	욕구, 급여대상, 사업내용
주무현 외(2014)	정책목표, 정책대상, 수혜대상, 전달체계, 근로시간, 주요업무
강혜규(2015)	사업목적, 정책대상, 급여내용, 전달체계
본 연구	정책대상, 활동내용

자료: 지은정(2015: 242) 발취

그림 4-2.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중복·연계 검토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2019: 5)²⁵⁾ 발취

- 행정안전부는 정보화사업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의 목적과 대상, 내용 등의 동일성을 파악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범정부EA(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를 활용하여 행정서비스, 업무기능, 데이터, 수요자 동일성 등을 파악
 - 행정서비스: SRM(Service Reference Model, 서비스참조모형)을 참조하여 대국민서비스는 레벨3, 정부내 지원서비스는 레벨2로 검색하여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시스템 확인

25) 행정안전부. (2019). 정보화사업 중복·연계 검토 가이드.

- 업무기능: BRM(Business Reference Model, 정부업무기능 분류체계)를 참조하여 업무 중 기능으로 검색하여 동일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 및 시스템 확인
- 데이터: DRM(Data Reference Model, 데이터참조모형)을 참조하여 레벨 5로 검색하여 동일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확인
- 수요자: 수요자 2레벨로 검색하여 동일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시스템 확인

○ 이를 전반적으로 비교하여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제1유형은 네 가지 측면이 모두 동일한 사업 유형으로 중복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함

표 4-3.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사업 유사중복 검토 가이드

유형	행정 서비스	데이터	수요자	업무 기능	점검기준
1	○	○	○	○	중복가능성 매우 높음
2	○	○	X	○	중복가능성 및 통합/연계 가능성 높음
3	○	X	○	○	중복가능성 및 수요자 관점의 통합/연계 가능성 높음
4	X	○	○	○	중복가능성 및 데이터 공동활용 가능성 높음
5	○	X	X	X	통합/연계 가능성 있음
6	X	○		○	데이터 공동활용 가능성 있음
7	X	X	○	○	수요자 관점의 통합/연계 가능성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2018: 22)²⁶⁾ 발췌

□ 본 연구에서의 전자정부지원사업 유사중복성 검토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사업 유사중복성 검토 가이드를 본 연구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이러한 검토 가이드를 적용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면, 전자

26) 행정안전부. (2018). 범정부 EA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유사중복 검토 가이드.

정부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임

- 대안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목적과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의 모호성 관점의 유사중복성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
 - 유사중복의 의미를 같은 목적과 내용을 가진 사업이 정보화사업으로 추진될 수도 있고,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도 추진될 수 있는 모호성으로 정의하고자 함
 - 우선 사업의 목적을 검토함. 사업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1차적으로 사업의 주제에 대한 내용분석 실시, 2차적으로 사업계획서의 목적을 추가적으로 확인
 - 다음으로 사업의 내용을 검토함. 사업의 내용은 기술적 유사성(technological similarity)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 경우 전자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유사중복 검토 자료를 확인하고자 함

표 4-4. 전자정부지원사업 유사중복성 검토 기준

		사업 내용 유사성(기술 유사성)	
		낮음	높음
사업 목적 유사성	낮음	I: 가능성 낮음	III: 가능성 보통
	높음	II: 가능성 보통	IV: 가능성 높음

- 전자정부지원사업 유사중복성 검토 시 고려사항
 - 전자정부지원사업 유사중복성 검토는 법적 기준이 아닌 관리지침에 따라 검토되고 있음(<표 4-5> 참조)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법적 근거인 전자정부법 제64조에서는 행정기관 등이 전자정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하고 행정안전부가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 내용의 맥락을 보면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사업에서 다른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 기대됨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에 제1항에서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전자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도적·기술적 실현가능성,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으로 되어 있고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관계에서 유사중복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 관리지침에 따라 과제 선정단계에서 유사중복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지침 제2조 제1호 전자정부지원사업 정의에서는 다양한 사업의 유형을 제시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지만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이라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이외의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배제하지 못함
- 다만,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사업선정 시 유사중복성을 주요한 심의항목으로 두고 있음(〈표 4-5〉 및 〈표 4-6〉 참조)
- 전자정부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유사중복성 항목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기구축된 다른 사업의 내용과 비교하여 유사·중복 부분을 배제하기 위한 활동이며, 이는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²⁷⁾

27) 전자정부지원사업 선정에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2020년 4월 17일)에 의하면, 이러한 사전 장치가 엄격하게 작동되고 있음. 실제 사전 중복성 검토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사업의 중복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음

표 4-5. 전자정부지원사업 유사중복성 관련 법적 기준

<p>전자정부법 제64조(전자정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하 "전자정부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선정·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전자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2.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3. 제도적·기술적 실현가능성 4.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p> <p>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전자정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화사업 중에서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사업 나. 첨단기술을 시범도입하거나 적용을 확산하는 사업 다.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라.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수 시스템에 일시 지원을 하는 사업 마.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바.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사. 가목부터 바목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사회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다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총 예산은 지원사업 예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10조(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 적합 여부 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유사·중복성 3.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예산규모 적정성 4. 국정과제, 신기술의 발달, 전자정부 주요 정책 등을 고려한 우선 추진 필요성 5.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결과에 따른 연차별 계획의 이행 현황 6. 그 밖에 지원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법령별 발취²⁸⁾

28) <http://www.law.go.kr/>(검색일: 2020년 5월 4일)

표 4-6.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 및 심의항목

구분	세부내용	비고
유사 중복성	사업 중복성 검토	정보화 시행계획, 범정부EA 등
	범정부 공동자원 활용 검토	전자정부 성과 관리 검토
전자정부 지원사업 적합성	전자정부지원사업 적합성(법·규정)	관리지침 제2조 제1호
	대규모의 범정부 전자정부 시스템/기반 구축	
	신기술 성숙도 기반 범정부 도입 및 확산	
사업 필요성	사업 추진목적 및 추진 과업의 적정성	
	업무 현황 및 문제점에 따른 개선 타당성	시스템 현황 및 경과 확인 등
	전년대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의 필요성	정책 여건 변화 검토
	당해연도 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시급성 등)	법제도 시행의무, 외부 지적사항 등
실현 가능성	서비스 대상과 유형, 사업 내용의 구체성	
	목표시스템 및 사업 범위의 적정성	
	추진여건의 적정성(법제도, 기술, 개인정보보호 등)	
추진 효과성	업무개선 효과 등 시스템 활용성(정성적 효과)	전자정부 성과 관리 검토
	투자대비 성과, 비용절감 등(정량적 효과)	
전자정부 정책 부합성	전자정부 기본계획, 지능형 정부 추진계획 등	전자정부 기본계획 등 참고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 타당성	관리지침 대상 타당성 확인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법제도적 근거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 부합성
예산 타당성	정보시스템 도입, 개발 규모의 적정성	
	사업 범위 및 내용, 예산 산출 적정성	

자료: 행정안전부, NIA(2018: 5-6)²⁹⁾ 발췌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는 2017년까지는 전문기관인 한국 정보화진흥원에서, 2018년부터는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담당부서(정보화 사업성과관리과)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유사중복성 해결 권고에 대해, 먼저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내용을 반영하고 사업조정위원회가 그 내역을 검토 및 조정 한 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9) 행정안전부, NIA. (2018). 2020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수요조사 설명회 자료. 11월 30일.

표 4-7. 유사중복성 해결 권고에 대한 조치결과 및 반영여부(예시)

과제명	주관기관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구축 (2020)	행정 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의 '디지털 주민민원 창구 서비스' 과업 일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개발' 사업과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정보지원과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적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순 안내 및 본인 증명서 출력 부분으로 한정되어 민원발급기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확인('20.3.20 기준)하였고 본 사업에서는 신청내용을 출력할 필요없이 시스템으로 입력되고 처리되는 사항으로 중복은 아니라 보고 있음. 다만, 서식 간소화 부분은 지역정보지원과와 협업하여 진행 	반영

주: 유사중복성 해결 권고에 대한 조치결과 사례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록으로 정리하였음

□ 하지만, 이와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검토의견 중 타기관 연계 등 사전에 조치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사업진행 과정에서 제대로 사업추진 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사업선정 및 사업계획서 수립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의견을 파악하고 검토 결과 유사중복성 의견이 있는 경우 그것이 실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적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목적 검토 시 내용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어떤 단어들이 어느 정도 중복적으로 확인되는지 살핍으로써 전자정부 지원사업 내 사업 간 유사성을 보완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2.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기반한 유사중복성 검토

□ 사업목적 유사중복성 검토결과

- 전자정부지원사업과 부처 정보화사업 간 유사중복성 검토 대상 사업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우 2010~2020년의 377개, 정보화사업의 경우 2010~2020년의 4,496개 등, 전체 4,873개 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

□ 유사중복 가능성의 유형

-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한 뒤, 주관기관이 직접 예산을 확보하여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해당 부처의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목적의 유사성이 발견됨
 - 예)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구축 사업(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하고, 2017년 이후 자체 정보화예산으로 운영. 2017년 사업에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과 자체 정보화예산이 병행하여 활용됨
 - 예)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구축 사업(해양수산부):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되었고, 2017년부터는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운영 사업이 자체 정보화예산으로 진행되어 사업명이 유사함
- 전자정부지원사업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부처의 정보화사업이 존재하여 차별성이 낮은 경우
 - 예) 범죄이력(유·무) 증명 관리시스템 구축사업(경찰청): 경찰청은 2014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으로 범죄이력 증명 관리시스템을 구축. 경찰청은 2014년 이후 매년 자체 정보화예산으로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 사업 운영. 범죄이력 증명이 경찰정보화기반이라고 본다면 유사성이 있음
 - 예)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 유통 및 공적공간 정보구축(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으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시스템 구축. 이와 유사한 정보화사업으로 2014년과 2015년의 건축물생애관리대장 및 시스템 구축 사업, 2016년 이후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과 유사
 - 예)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개선 구축(교육부): 교육부는 2017년 전

자정부지원사업 예산으로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개선 사업을 수행. 또한, 교육부는 2014년 이후 매년 교육정보보호사업을 자체 정보화 예산으로 운영. 전자서명 인증체계는 정보보호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때 두 사업 간 차별성이 낮음

표 4-8. 유사중복 사례 유형

유형 구분		유사중복 사례
1	지원사업으로 구축 후 개별 부처 사업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구축 사업(행정안전부)(2017) •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구축 사업(해양수산부)(2017)
2	부처의 정보화 사업과 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이력(유·무)증명 관리시스템 구축사업(경찰청) •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 유통 및 공적공간 정보구축(국토교통부) •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개선 구축(교육부)

- 기본적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이나 부처 정보화사업은 모두 IT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
 - 동일한 사업을 어떤 부처는 정보화사업으로 수행하고 다른 부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사업의 내용으로는 두 사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냄

- 이중,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주관기관에 이관하여 부처의 정보화사업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자정부지원사업이 부처의 정보화사업과 내용이 유사하고 명확한 주관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심의의 책임성 확보와 예산편성 시 부처의 전략적 행동을 막기 위해 부처의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 또한, 새로운 첨단기술의 경우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시범적으로 구축해보고 성과가 나타나면 자체 정보화사업으로 운용하는 모델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첨단기술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어려워, 첨단기술이라는 명목으로 동일한 사업을 명확한 기준 없이 전자정부지원사업과 부처의

정보화사업으로 혼재되어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고도화 사업의 경우에도 어떤 부처는 자체 정보화예산을 사용하고 어떤 부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이용. 실제 “고도화”로 검색하는 경우 전자정부지원사업에서 20개, 정보화사업에서 53개 사업이 검색됨

□ 사업내용의 유사중복성 검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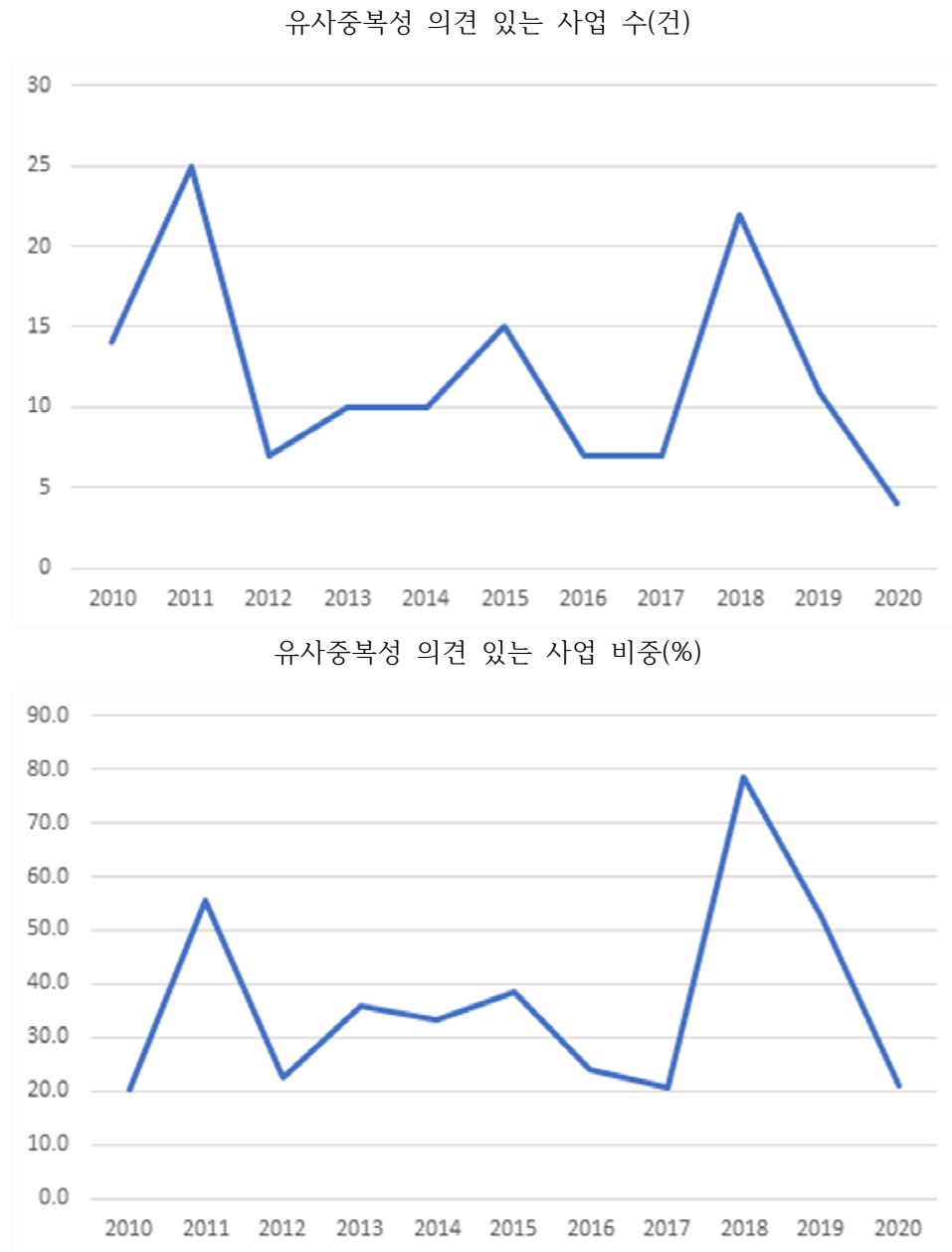
- 사업내용 유사중복성 검토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정보화진흥원이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사업의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한 자료를 분석(부록 참조)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377개 사업에 대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에 준하여,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을 행안부와 NIA에서 검토한 결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경우 연계나 통합, 참고 등을 권고한 내역을 제공받아 정리한 것임
- 유사중복성 의견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총 126건에 대하여 유사중복성 우려를 제시하고 해결을 권고하였음
 -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을 보면 매년 34.3개의 사업을 운용하였고, 이 중 매년 11.5개 정도의 사업에서 유사중복성 해결을 권고하고 있음
 - 연도별 중복성 의심 사업 비중은 2018년에 78% 정도(28개 과제 중 20개 지적)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약 26%로 나타남(19개 중 5개 지적)
 - 유사중복성 해결 권고 사업건수는 2011년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락 추세를 보이다 2018년에 20건으로 증가했다가 최근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초기 사업계획 검토과정에서 범정부EA정보 검색, 유관시스템과의 중복·연계 등을 검토하여 유사중복성에 대한 우려와 해결을 권고하고 있음
 - 이렇게 제시된 유사중복내용은 먼저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내용을 반영하고 전문가 검토, 조정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사유로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자정부법 제67조에 의한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근거)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업관리, 감리 및 검수 등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반영결과에 대한 이력관리 등 확인 절차는 미흡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126개에 대해 유사중복성 해결을 권고받았고, 그중 125개(99%)가 진행되었으며, 그 이후 조치내역을 확인한 결과 주관기관이 지적된 유사중복성을 제거하고 사업을 추진 및 이행 이행한 것으로 확인됨³⁰⁾³¹⁾

30) 유사중복성 해결 권고 및 이에 대한 조치내역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제출자료를 <부록 6>에 자세히 정리하였음

31)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앞서 유사중복성 의견을 받은 해당 사업 모두는 각 의견에 대해 중복요소를 제거하고 사업을 확정하여 발주하였으며, 유사중복성 항목의 의견이 많은 것은 철저한 사전 검증으로 볼 수 있고 발주 이전에 유사중복성을 해소하여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림 4-3. 전자정부지원사업 중 유사중복성 의견 있는 사업 변화 추이(단위, 건수, %)



- 유사중복성 심층 분석을 위해 최근 2년(2019~2020)의 유사중복 사례 전체를 검토함
 - 유사중복성의 정도는 사례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이 중 유사중복 권고의 수준이 높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예)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 사업의 경우 국민의견 수렴 창구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다수 등장하고 있으므로 연계 혹은 통합을 권고하고 있음. 예를 들어 중앙정

부의 온라인 광화문 1번가나 청와대 청원 사이트부터 지방정부의 민 주주의 서울이나 수다 등 12개 사업의 유사성을 제시하고 있음

- 예) 2019년과 2020년 행정안전부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클라우드 기반 민간분야 전자증명서 유통 서비스 구축사업과의 유사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연계 혹은 통합 등의 조정 권고가 2년 연속 이루어짐
- 유사중복성은 전자정부지원사업과 정보화사업 간뿐만 아니라, 전자정부지원사업 간에도 의견이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예) 행안부가 2019년 추진한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 ISP 사업의 경우 행안부가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수행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및 미래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과 연계를 권고함
- 예) 행안부 등이 추진한 2019년 공공자원 개방 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물품 분류 체계화 기능과 관련하여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ISP 사업을 참조할 것을 권고
- 동일한 사업을 전자정부지원사업과 정보화사업으로 번갈아 추진하면서 일관성의 문제가 제기된 경우가 있음
- 예) 2019년 국가보훈처의 개인 맞춤형 보훈서비스 구축사업의 경우 2017년에는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2018년에는 자체 정보화사업으로, 2019년에는 다시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 지원의 일관성을 권고하고 있음

□ 전자정부지원사업 유사중복성 분석의 종합

- 행정안전부에서 자체검토한 유사중복성 결과(사업내용의 유사중복성 검토)와 연구진이 검토한 사업목적의 유사중복성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목적과 내용의 유사중복의 가능성이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13개의 사례를 제시함³²⁾
- 부처의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임
- 하지만, 사업의 구축과 운영의 시차를 고려하여 기존에 관련 정보화사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주관기관의 정보화사업으로 연계한 경우는 모범사례로 이해할 수 있음

32) 13개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3>을 참조하기 바람

표 4-9. 유사중복 가능성이 높은 전자정부지원사업과 그 유형

연번	연도	주관기관	전자정부지원사업명	유형1	유형2
1	2017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 유통 및 공적공간 정보구축	B	부처의 정보화 사업과 유사
2	2013-2018	행정안전부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B	
3	2013-2017	산림청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 구축	B	
4	2010-2012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	B	
5	2019	국토교통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1차)	B	
6	2018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재구축 마스터플랜수립	A	
7	2018	행정안전부	전자기록관리 고도화 BPR/ISP 위탁감리	A	
8	2015-2016	고용노동부	종합취업정보 및 연관정보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B	
9	2019	행정안전부	공공자원 개방 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A	지원사업 으로 구축 후 개별 부처 사업으로 전환
10	2015-2019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A	
11	2015-201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피해구제 등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B	
12	2015-2017	해양수산부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구축	B	
13	2010-2012	행정안전부	행정공간정보체계구축	A	

주1. 유형1은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과 전자정부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사례(A)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과 타기관 정보화사업 간 유사중복사례(B)로 구분

주2. 유형2는 전자정부지원사업과 부처의 정보화사업과 유사한 경우와 지원사업으로 구축 후 개별 부처 정보화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3. 사업 특성에 따른 유사중복성 검토

- 이외에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과 관련하여 사업의 참여 부처나 사업의 지속성과 같은 사업별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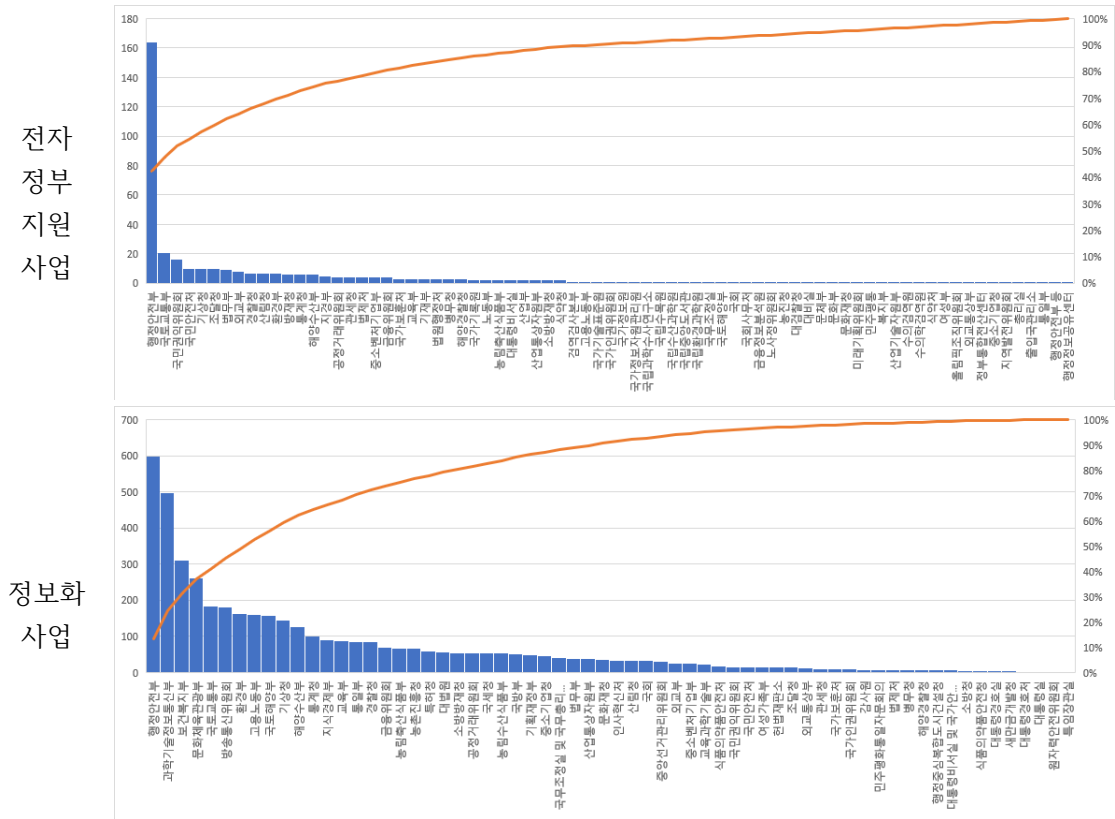
- 참여 부처에 따른 특성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사업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³³⁾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 기상청, 조달청,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산림청 등이 주로 참여함

 - 정보화사업 역시 행정안전부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해양수산부, 통계청, 교육부 등의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우 다수 부처 사업이 많고 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므로 사업수행 주체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33) '10년~'20년 전자정부지원사업 377개 중 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 단독사업인 경우가 169개(44.8%)이고, 행정안전부 사업은 공통인프라 구축이나 다부처 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상기 행정안전부 사업 169개 중 이와 같은 유형이 대부분(158개, 94%)임.

그림 4-4. 전자정부지원사업과 정보화사업 간 참여 부처 비교(단위: 건수, %)



* 주: 부처명의 경우 현재 부처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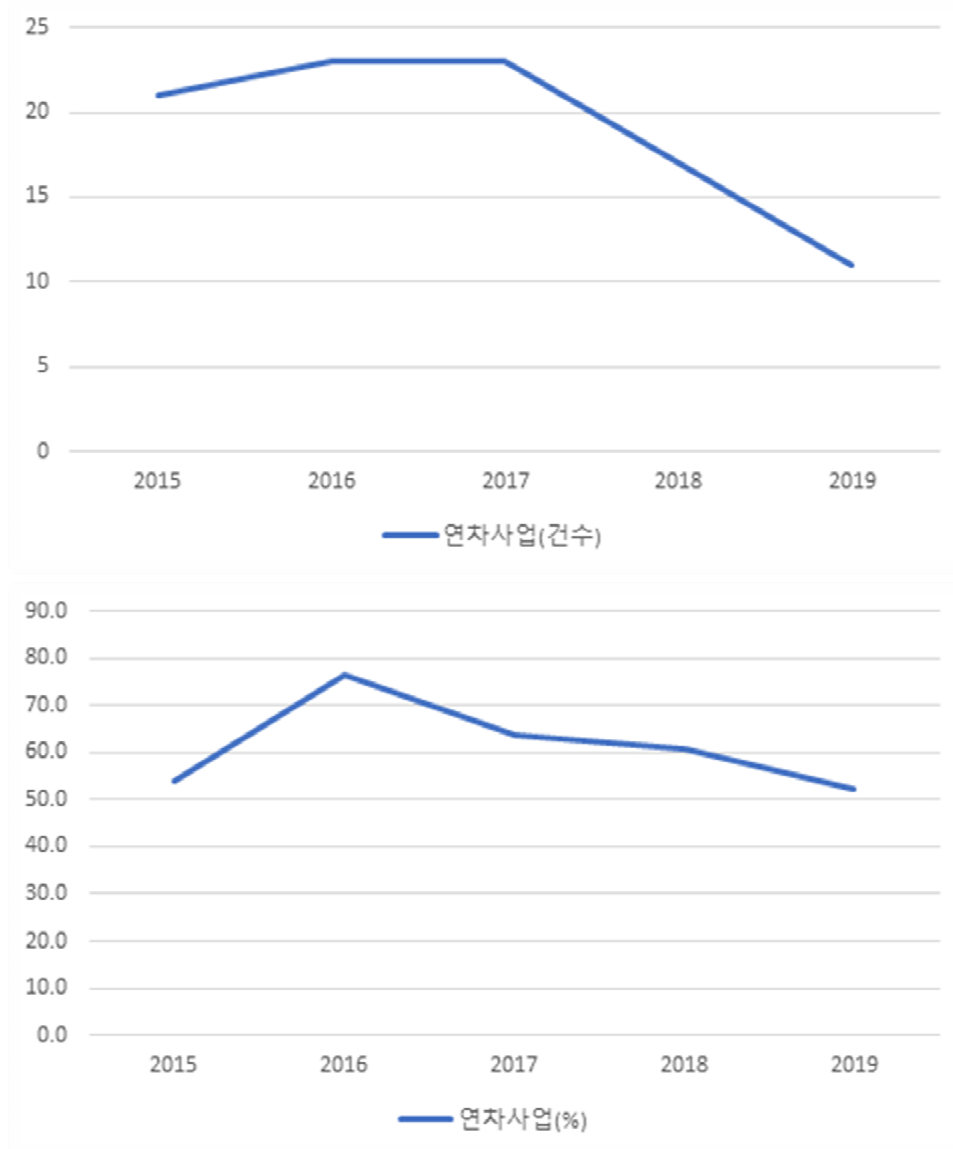
□ 계속사업의 추이³⁴⁾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분석해보면³⁵⁾ 연차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차사업의 경우 2016년에는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연차사업의 비중이 52.4%를 나타냄

34) 분리발주사업은 상용소프트웨어 등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 계약하는 형태이며, 연차사업은 다년도에 걸쳐 지속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과 동일한 의미

35) 연차사업과 분리발주사업 분석의 경우 분리발주사업을 하나로 취급함

그림 4-5. 연차사업의 추이(2015~2019)



- 연차사업은 사업목적이 동일하므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사업의 중복 가능성이 높아 일정한 연도 제한을 두어 연차사업의 비중을 낮추거나 전년도 사업과의 차별화 방향이 필요함
- 아래 예시와 같이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은 연차사업으로서 2020년도에 3년차 사업으로 기획되었는데 이 중 사업의 일부 내용 중에 전년도 사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가 있어 세부적인 차별화 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있음

“과업내용 중 ‘인공지능 플랫폼(SFR-001-037)’, ‘서비스 모델 개발(SFR-041-053)’의 기능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이 2019년 2차 사업과 동일·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계획서에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 요구내용을 3차 사업의 목표 및 범위에 적합하게 세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³⁶⁾

36) 2020년 15번 전자정부지원사업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에 대한 유사중복성 검토 의견 중 일부 발췌

4. 전자정부지원사업 유형 및 현황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1호, 2020. 1. 13. 일부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정보화사업 중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인프라 조성사업, 첨단기술을 시범도입하거나 적용을 확산하는 사업,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수 시스템에 일시 지원을 하는 사업,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 이러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유형은 수차례 변경이 이루어져 왔으며, 성과분석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유형분류로 통일하여 분석을 수행함
 - 2010년 이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수행된 모든 사업의 유형을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행 유형에 맞춰 재분류하였음

가. 전자정부지원사업 유형별 사업의 연도별 변화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4-10>과 같으며, 주로 다수 시스템 용·복합이나 범정부 공통인프라와 같이 다부처 중심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다수 시스템 용·복합’ 유형이 매년 가장 많이 수행되고 있으며, ‘범정부 공통인프라’와 ‘사회현안 해결’ 유형이 2, 3순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의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보호’ 유형의 사업은 2010년 가장 많은 수가 시행되었으나, 이후 사업의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함
 - 2010년의 세부사업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네트워크 분리사업이 28개, 보안관제센터구축 사업이 6개를 차지하고 있음
 - ‘첨단기술 도입’ 유형은 1년에 1~2건이 이루어지거나, 추진되지 않는 연도도 다수 존재함

표 4-10. 전자정부지원사업 유형에 따른 연도별 사업의 수

지원사업 유형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범정부 공통인프라	7	11	8	8	7	9	3	9	6	5	3
첨단기술 도입 및 적용확산	1	1	1	0	0	0	0	0	0	1	1
다수 시스템 용·복합	11	24	14	11	16	19	17	11	8	5	8
범정부 정책 추진 (다수시스템일시지원)	6	0	0	0	0	0	1	1	0	0	0
국정과제 추진	3	1	0	0	0	0	0	4	9	6	4
정보보호	40	1	5	0	1	2	2	1	2	3	1
사회현안 해결	1	7	5	8	7	9	8	10	1	1	2

주: 2018년 이후 변경된 전자정부지원사업 유형에 따라,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을 재유형화한 결과임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개별 사업당 평균 사업비의 연도별 변화는 <표 4-11>과

같으며, 평균 사업비는 약 50억 원 이하로 파악되며, 2010년 초반에 비해 사업당 평균 사업비는 작아진 것으로 보임

- 연도별 사업비의 평균값과 최댓값, 최솟값을 분석한 결과, 분석기간 동안 개별사업의 사업비 편차가 대체로 큰 것으로 나타남
 - 2010년부터 2012년의 사업은 사업 간 사업비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3년 사업 간 사업비 편차가 가장 작아졌다가 이후 2016년까지 꾸준히 사업 간 편차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업비의 편차가 크다는 것은 해당 연도에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 주요 사업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중점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ISP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경우 사업비 편차가 과대계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존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연도별 사업비 최댓값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이 존재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임

표 4-11. 전자정부지원사업 ISP 및 구축사업의 사업비 현황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전체	최대	157	184	179	55	100	150	273	105	157	76	103
	최소	1.6	1.8	2.8	5	3	3	10	5	5	6.5	6.6
	평균	24	42	57	25	29	32	43	39	32	40	50
ISP	최대	10	10.9	-	27.1	15	15	19.5	20.7	28	8	8.5
	최소	7	6.7	-	5	3	3	15.4	5	5	8	6.6
	평균	8.8	9.4	-	12.3	7.2	8.7	17.5	9.7	14.1	8	7.7
구축	최대	157	184	179	55	100	150	273	105	157	76	103
	최소	2	2	3	8	11	5	10	10	10	6	14
	평균	25	46	57	30	33	41	45	46	46	42	58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형과 사업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로, 대부분의 사업이 범정부 공통인프라 구축이나, 다수 시스템의 용·복합과 관련된 사업으로 여러 부처 혹은 기관 간 연계가 필수적임

- 둘째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개별사업 간에 상당히 큰 사업비 편차가 존재하므로, 각 연도의 중점사업(대규모 사업비 투입사업)에 대한 중점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셋째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관리지침을 통해 대상사업의 유형을 정하고 있으나, 관리지침 상 유형과 별도로 사업유형을 관리하거나 대상사업 유형이 수 차례 변경·확장되는 과정을 거쳐 일반 정보화사업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유형을 법령의 형태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나.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사업 유형과 관련한 쟁점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형과 관련하여, 2018년 개정된 관리지침 상의 유형이 서로 배타적이지 못하고, 유형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정보화사업과 전자정부지원사업 간 경계가 모호해진 측면이 존재
 - 여러 부처에 연계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공동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전자정부사업과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계가 모호하여 차별성이 떨어지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전략적인 예산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음
- 우선, 다수 시스템 융·복합 유형으로 추진된 사업 중 단일 부처 내의 다수 시스템 간 융·복합을 수행하는 사업이 일부 존재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도입이 여러 부처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융·복합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한 개 부처 내의 다수 시스템을 결합시키는 것이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에 적합한지에 의문이 존재
 - 한 개 부처 내의 다수 시스템을 결합시키는 경우 해당 부처의 자체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사업 유형인 다수 시스템 융·복합 사업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임

표 4-12. 다수 시스템 융·복합 사업 중 단일 부처의 시스템 융·복합 사업 예시

사업명	연도	예산 (백만원)	사업목적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유통 및 공적공간정보 구축	2017	1,338.5	- 건축물 정보 공동활용 서비스 구축 - 공적 공간관리시스템 기능이관 구축 및 기능개선 - 공적 공간정보 DB구축 - 인프라 이중화 구축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4차)	2017	3,837	- 산림재해 진화 및 모니터링 서비스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 - 유관기관 연계 정보확대, 공간정보 내·외부연계서비스 구축
안전정보통합 관리시스템 구축(5단계)	2017	3,699	- 지역안전진단 및 생활안전지도 DB 구축 - 생활안전지도 웹모바일 구축 - 안전정보 통합DB 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 다음으로, 정보보호 관련 사업은 다부처 또는 범정부 사업일지라도 행안부 고유사업이므로,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행정안전부 단위사업 ‘정보보호체계강화’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관할기관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거나, 이미 개별 부처의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관할기관이 명확한 경우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표 4-13. 정보보호 유형으로 분류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예시

사업명	연도	예산 (백만원)	사업목적
자치단체 정보자원통합관제 체계 강화	2016	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연계솔루션 기반으로 정보연계 송수신 현황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개발 -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성능 및 시스템정보수집, 관리기능개발 - 정보연계, 업무 프로그램 등의 수집된 시스템정보를 통합하여 표출할 수 있는 대시보드 구현
전자정부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2016	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 서비스, 기관, 이용자별 인증수준 및 관리체계 등 인증관리제 수립 - 효과적인 전자정부 인증관리제를 위한 관리시스템 및 인증관리제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디지털 ID 원패스 시범 서비스 개발 - 액티브엑스 대체 수단 및 전자정부 웹서비스용 프로그램의 신뢰성 제공을 위한 코드사인 인증체계 구축 등
정부3.0 정보보호 기반 강화 - 범정부 정보보호 등급제 마련	2015	6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 정보보호등급 산정기준 마련 - 국내외 등급제 동향 분석, 정보보호 등급 산정기준(안) 및 산정안내서 개발 - 정보시스템 정보보호 등급 보안관리 기준 마련 -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내외사례 분석, 정보보호 등급별 보안 관리기준(안) 마련 - 정보시스템 정보보호 등급관리 체계 마련 - 국·내외클라우드 보안관리 동향 분석, 관련 법제도 분석, 정보보호 등급 현황 관리체계(안)
정부3.0 정보보호 기반 강화 - 사이버 침해위협 분석·대응 훈련장구축	2015	4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의훈련 트래픽 분석시스템 구축 - 사이버 공격 모의훈련환경 구축: 다양한 사이버 공격유형·시나리오에 대한 실습이 가능한 훈련환경 조성 - 훈련장 구축 성과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측정방안 마련 - 훈련장 발전 방안 수립
범정부 유해사이트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2011	2,4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 - 유해사이트 및 비업무용 사이트 차단 기능 제공 - 차단 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신규 유해사이트 및 비업무용 사이트 자동업데이트 기능 제공 - 정보보호 CC인증제품 도입을 통해 성능검증

□ 마지막으로, 첨단기술 시범도입의 경우 첨단기술의 개념 정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국정과제 추진이나 사회현안 해결 등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전자정부 지원사업과 일반 정보화사업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부처의 전략적 예산편성의 여지가 존재

-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로 분류되는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기술은 기술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공공분야에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
 - 기술 자체를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기술을 공공 부문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개별 부처가 각자의 배경과 목적을 바탕으로 해당 부처의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최근 개별 부처의 역량이 강화되었고, 행정안전부의 주된 역할이 예산 확보 및 배분의 역할이며, 실제 전문성의 지원은 정보화진흥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추진체계의 복잡성이 큰 상황.
 - 전문성이 낮은 부처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직접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한 전문성은 정보화진흥원에서 직접 지원받는 방식으로 추진체계의 효율화를 도모

- 다만, 이 경우에도 범정부 공통으로 활용되어 표준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첨단기술의 도입은 ‘첨단기술의 시범도입 및 확산’ 이 아닌 ‘범정부 공통 인프라’의 관점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

표 4-14. 첨단기술 시범도입 및 적용확산 유형의 사업 예시

사업명	연도	예산 (백만원)	사업목적
인공지능기반 병무민원 신청시스템 구축	2019	1,5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자동상담을 통해 병무행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개인의 병역이행과 관련한 맞춤 상담과 병역 관련 통합 정보를 365일*24시간 제공하고 국민과 소통을 위한 기반 마련 ○ 상담과 민원출원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상담과 동시에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화된 민원출원에서 대화형 민원출원 서비스로 전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2019	3,6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온라인 완결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종이 없는 민원행정 구현의 기반을 마련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2018	4,7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 클라우드 공통기반 마련 ○ 클라우드 기반 업무관리시스템(문서2.0) 확산 및 고도화 ○ 클라우드 기록관리시스템 개발·확산

출처: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계획서 각 년도에서 발췌함

5. 전자정부지원사업 유사중복성 검토의 종합 및 제언

가. 유사중복성 검토의 종합

- 우선,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유사중복성 검토에 관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유사중복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전자정부 지원사업과 정보화사업(행안부 및 각 부처의 정보화사업) 간 차별화가 중요
- 현재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제도화된 것은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 사업선정 시 사전심사의 경우가 유일함³⁷⁾
-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수준이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 협의제도의 틀 안에서 유사중복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사후관리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37) 현재 전자정부법 제67조에는 행정기관 등이 전자정부사업과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동법 제64조에서는 전자정부사업(제1항)과 전자정부지원사업(제2, 3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고시인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호, 2020년 2월 21일 일부개정) 제2조에서는 전자정부사업을 제6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있음

나. 유사중복성 관련 정책제언

- 첫째,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의 제도화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재정 효율성을 위해 예산편성의 책임성 확보와 부처의 전략적 행위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 유사중복성 검토의 주체를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음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의 검토를 행정안전부나 정보화진흥원 등 내부에서 수행하는 경우 실행은 용이하지만 외부 검토에 비해 유사중복성 검토가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음
 - 반대로 외부 검토의 경우 유사중복성 검토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낮을 수 있음
 - 유사중복 검토 절차를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이나, 전자정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지침의 경우 규제의 강도는 낮으나 실행이 용이하고, 시행령의 경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음
 - 사전협의를 2010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 시 도입되었으나, 도입 초기부터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전자정부지원사업과 부처의 정보화사업 간의 차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함
 - 행정안전부의 총괄조정 권한을 고려하였을 때, 다부처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전자정부사업과의 차별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래 기준 중에서 나, 마, 바, 사 등의 사업의 경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표 4-15>의 ‘기준 라’의 경우 ‘기준 가’ 및 ‘기준 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범정부 정책추진을 위한 다수시스템 일시 지원(기준 ‘라’)은 웹표준 준수, 플러그인 제거 등을 범정부적으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범정부 공통인프라 조성사업(가), 다수 시스템 융·복합(다)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 직접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범정부 공통인프라 조성사업이나 다수 시스템 융·복합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관할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으로 일원화시킴

표 4-15. 전자정부지원사업 차별화를 위한 대상사업 유형 변경(안)

현재 유형	변경 유형
가.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인프라 조성사업 나. 첨단기술을 시범도입하거나 적용을 확산하는 사업 다.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라.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수 시스템에 일시 지원을 하는 사업 마.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바.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사. 가목부터 바목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사회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범정부 공통인프라 조성사업이나 다수 시스템 융·복합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관할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

- 마지막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 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정보시스템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 주체가 BPR/ISP를 수립하여야 하고, ISP 최종산출물에 대해 기획재정부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는 ISP 최종산출물에 대한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ICT투자성과센터)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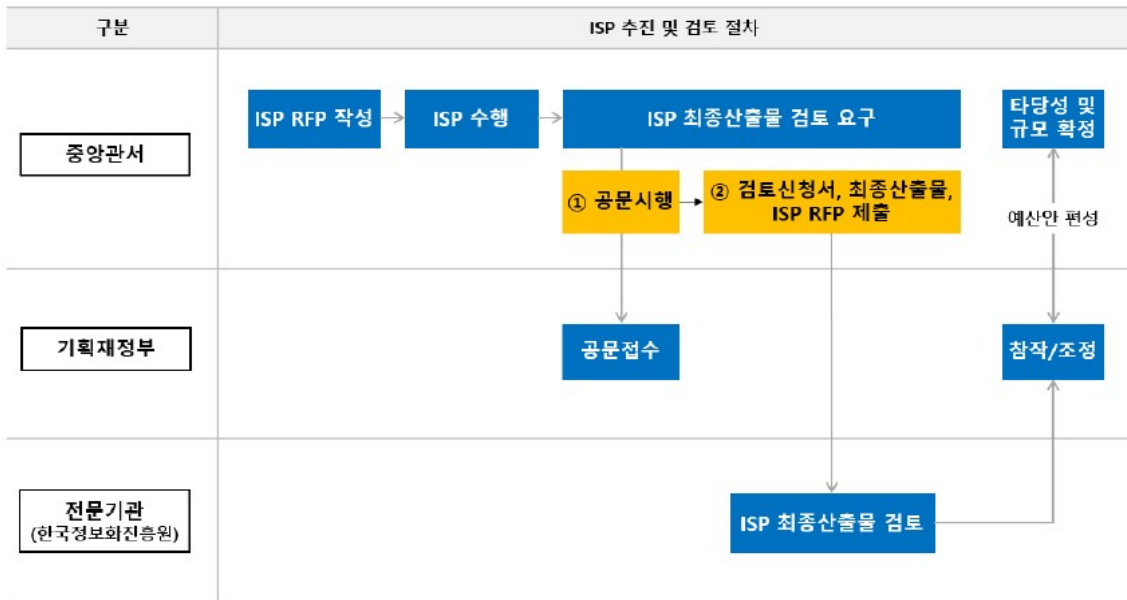
표 4-16. 기획재정부의 ISP 최종산출물에 대한 검토

<p><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 <p>□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BPR 및 IS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혹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되어 전용된 예산으로 수행된 경우에 한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IS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요구에 앞서 ISP 최종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 * 기획재정부는 ISP 산출물 검토 등에 대해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음
--

자료: 기획재정부(2020: 48)³⁸⁾ 발췌

- ‘IS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르면 ISP 최종산출물에 대하여는 사업타당성, 실현 가능성,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타당성은 필요성, 시급성, 중복성을 평가하는데, 중복성은 “기관 내외부 타 시스템과의 중복가능성을 점검하고 통합연계 검토 결과를 기술”하는 것임. 즉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사전 중복성 검토과정이 있음

그림 4-6. ISP 추진 및 검토 절차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 5)³⁹⁾ 발췌

38) 기획재정부. (2020).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39) 기획재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 제3판.

- 결과적으로 정보화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 체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단계에서 행정안전부는 발주단계에서 사전협의 제도에 따라 검토하고 있는 반면,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사업선정단계에서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기획재정부가 다시 발주단계에서 행정안전부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정을 볼 때 두 절차가 서로 연계되는 경우 안전장치로서의 가외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으나 두 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용되는 경우 유사중복성 검토 체계의 효율성을 낮추고 더 나아가 전자정부지원사업 전체 운용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표 4-17. ISP 검토를 위한 주요 구성항목 및 내용

분야	구성항목	주요내용
1. 사업 타당성	① 필요성	①-1 현행 업무 수행 상에 문제점이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유를 제시
		①-2 이행과제(세부사업)를 사업목표와 일관성 있도록 작성
	② 시급성	②-1 차년도에 추진해야 하는 시급한 사유를 제시
	③ 중복성	③-1 기관 내·외부 타 시스템과의 중복가능성을 점검하고 통합·연계 검토 결과를 기술
2. 실현 가능성	① 사업추진 여건	①-1 사업 추진 및 신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방안을 기술
		①-2 유관기관과 연계·통합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 역할과 수행업무 등 협조체계를 기술
		①-3 신규 서비스 시행을 위한 단계별 법·제도 정비방안을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② 기술 적정성	②-1 적용된 기술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요소 여부 및 적용가능성을 분석
②-2 적용된 기술의 실용화 사례를 조사·분석		
3. 규모 적정성	①-1 총사업비의 모든 구성요소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등을 활용하여 빠짐없이 산출하고, 모든 이행과제들의 비용 합과 일치하도록 작성	
		①-2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TTA)을 준수하여 시스템 용량산정
	※ ISP 최종산출물 제출 시, 총사업비 산출 근거자료를 필수 제출 (예: SW개발비 간이법 산정 엑셀양식)	

자료: 기획재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9: 17)⁴⁰⁾ 발췌

- 기획재정부의 ISP 검토 절차가 모든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활용되며,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사전심사는 세부사업 선정과정에서 유사중복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두 절차가 가지는 차별화된 목적이 존재하므로, 두 절차 간 연계를 강화하여 유사중복성 검토결과를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즉, 기획재정부의 ISP 결과와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의 결과, 그리고 전자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수행한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를 공유하여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한 중복적인 유사중복 검증이 효율성을 확보하고 Double gate keeping의 효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고려

40) 기획재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 제3판.

V. 성과관리 분석

1. 성과지표의 타당성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되거나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하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외부 고객(공무원, 국민 등)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내·외부 고객이 중요시하는 가치, 욕구, 수요 등의 우선규명과 이를 통한 사회적 편익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함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대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평가, 그리고 환류의 순환과정이 중요함
 - 다음에서는 기추진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함
 - 구체적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의 선정 및 활용이 이뤄지고 있는지, 성과정보의 환류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가. 성과지표의 의의

- 성과지표는 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기대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치이자 달성 방법을 제시하는 가이드임
 - 성과지표는 정책이나 사업의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해야 함
 - 성과지표의 발굴 및 선정기준은 ▲타당성(대표성)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목표-결과간의 인과성 ▲명확성 및 구체성 ▲측정 가능성 ▲기한성(적시성) ▲비교가능성 등이 일반적임

그림 5-1. 성과지표의 개념 및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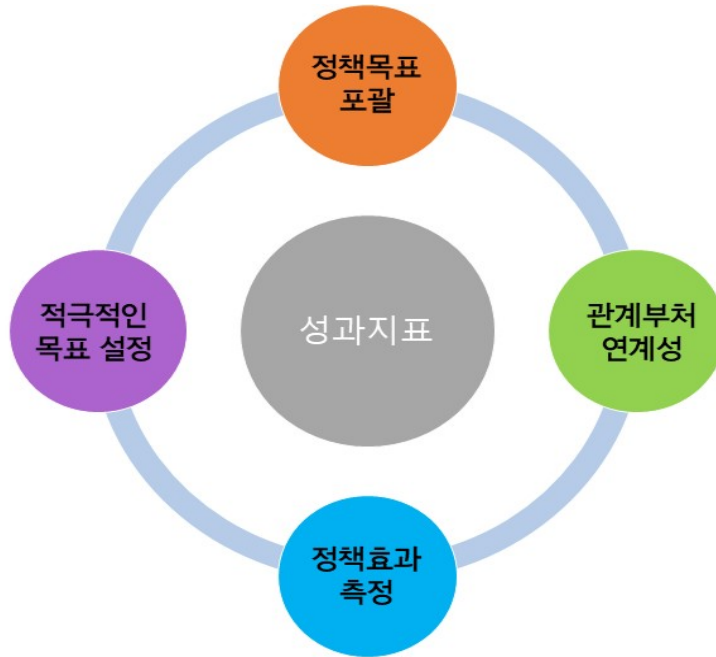


표 5-1. 성과지표의 발굴 및 선정 기준

기준	주요 내용
정책대표성	성과목표·관리과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지표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
명확성 및 구체성	성과목표 또는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대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 개발, 조직 구성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제시
목표와 결과 간 인과성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인의 통제가 가능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직접적인 노력과 역량이 포함된 지표 설정
목표치수준의 적절성	목표치는 과거 3년간의 추세 및 전년도 성과에 근거하여 적극적 업무 수행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와 논리를 통해 목표치를 설정하였는지 명확히 제시
측정가능성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근거 등은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성과측정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자료: 국무조정실·한국정책학회(2015: 17~21)⁴¹⁾을 참조하여 작성

41) 국무조정실·한국행정학회. (2015).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 성과지표의 유형에는 정량적 측정 여부에 따른 분류와 성과정보의 성격 및 내용에 따른 분류가 존재함

표 5-2.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구분

구분	정량지표(계량지표)	정성지표(비계량지표)
정의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 가능	양적 수치로 측정 불가능
특성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없음 반복 측정시 동일 결과 도출	평가자 주관 개입 가능성 높음
예시	이용자 수, 서비스 제공 건수, 발생률 등	인지도, 이용자 만족도, 정보시스템 구축도 등

자료: 국무조정실·한국정책학회(2015)⁴²⁾을 참조하여 작성

표 5-3. 성과정보에 따른 지표 구분

구분	개념 및 예시
투입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물적·인적 자원 확인, 투입지표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정보를 제공하고 예산집행과 사업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줌 • 투입자원: 예산, 인력, 시간 등 • 예: 예산집행률, 투입인력(명), 투입기간(일) 등
과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업의 진행상태(비용, 일정)를 파악하여 사업추진 정도 중간 점검 • 예: 사업공정률(%), 계획대비 집행실적(%) 등
산출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과 사업활동을 거쳐 생산된 산출물 확인(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 산출물) • 산출지표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근간이 되고 사업이 의도한 1차적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 기준으로 활용 • 예: 이용건수, 이용자수 등
결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의도한 최종 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 측정 • 1차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 예: 소요시간 단축 등

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06)⁴³⁾, 교육과학기술부(2012)⁴⁴⁾, 국무조정실·한국정책학회(2015)⁴⁵⁾, 행정안전부(2019)⁴⁶⁾ 등을 참조하여 작성

42) 국무조정실·한국행정학회. (2015).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43) 한국조세연구원. (2006). 재정사업 성과지표개발 매뉴얼.
 44) 교육과학기술부. (2010). 효과적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연구.
 45) 국무조정실·한국행정학회. (2015).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46)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가이드.

나.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지표

□ 연혁

- 2010~2020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성과관리 지침 등의 관련 자료들 검토 결과, 성과 측정영역 및 지표 구성에 있어 계속된 수정 및 보완이 이뤄져 왔음
 - 과정-결과, 공통-고유, 관리-운영-고유 등을 성과평가의 큰 틀로 하고 있으나 세부 지표가 삭제·추가·이동하거나 배점 등이 연도별로 달라지는 변화가 많았음

표 5-4.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지표의 변경

2010		2011		2012	
과정	사업관리 적절성	공통	사업관리 적절성(10%)	일반	사업관리 적절성(10%)
결과	이용만족도		이용자 만족도(30%)	핵심	이용자 만족도(30%)
	이용건수		시스템 이용률(30%)		이용률 또는 이용건수(30%)
	이용자수	고유	개별사업		고유지표(30%)
	서비스 제공 수		고유지표(30%)		
2013		2014		2015	
공통	사업관리 적절성(10%)	투입	예산투입의 적정성(30/10%)	사업 관리	예산투입의 적정성(30%/10%)
	이용자 만족도(30%)	과정	사업관리의 적절성(30/10%)		사업관리의 적절성(30/10%)
	이용률 또는 이용건수(30%)	산출	시스템 운영의 적시성(40/20%)		시스템 운영의 적시성(40/20%)
고유	개별사업 고유지표(30%)	결과	이용자 만족도(-/20%)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20%)
			이용률 또는 이용건수(-/20%)	운영 실적	이용률 또는 이용건수(-/20%)
			고유지표(1-2개, -/20%)		고유지표(1-2개, -/20%)
		기타	지원사업 협력도	기타	지원사업 협력도
2016		2017		2018 이후	
사업 관리	예산투입의 적정성(30/10%)	관리	예산투입의 적정성(10)	운영	이용자 만족도(20%)
	사업관리의 적절성(30/10%)		사업관리의 적절성(10%)		이용자수(15%)
	시스템 운영의 적시성(40/20%)		시스템 운영의 적시성(20%)		이용건수(15%)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20%)	운영	이용자 만족도(20%)	고유	시스템 운영의 적시성(10%)
운영 실적	이용률 또는 이용건수(-/20%)		이용자수(10%)		사업별 2개 이상(40%)
	기타	지원사업 협력도	고유	이용건수(10%)	기타
기타			사업별지표(20%)		
			지원사업 협력도		

출처: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별 성과계획서 각 년도를 바탕으로 재구성

□ 주요 내용 및 특징

- 20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지표는 관리, 운영, 고유, 기타 등 4가지로 구분됨
 - 여기서 관리지표는 모든 지원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성과지표이며, 운영 및 고유지표는 사업별로 상이한 성과확인이 가능한 기준임
 - 각 지표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특성은 다음과 같음

① 관리지표

- 관리지표는 예산투입의 적정성, 사업관리의 적절성, 시스템 운영의 적시성 3가지로 모든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됨

표 5-5. 20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표

예산투입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사업비 대비 정산사업비(계약변경에 따른 정산액, 지체상금 등) 비율 • 달성률=실적(정산금액)/목표(계약금액)×100
사업관리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감리보고서를 참고하여 4개(진도·위험·변경·품질관리) 항목별 점수 산정 - 적정 25점, (미흡 또는 부적정) 조치 완료 20점, 미조치 0점 • 달성률=∑항목별 점수
시스템 운영의 적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구축 완료 후 정상적인 서비스 개통 여부 및 시기 점검 • 사업 기간 내 110점, 1개월 이내 100점, 1개월~3개월 95점, 미개통 90점

② 운영지표

- 운영지표는 이용자 만족도와 이용자수, 이용건수로 구성됨
-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수 등에서의 ‘이용자’란 구축된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국민, 기업 등으로 대표될 수 있음
- 이용건수는 시스템을 이용한 횟수이거나 시스템을 통한 업무건수 등을 말함

③ 고유지표

- 고유지표는 각각의 사업이 다른 사업과 차별화된 고유의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평가지표로 사업의 담당자가 직접 발굴·제시함

다. 정보화사업 성과지표의 검토

□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 전자정부 성과관리 점검은 각 기관의 사업추진 단계별 성과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자체진단(Self-Appraisal)이 목적임
 - 범정부적으로는 기관별 정보화 성과관리 수준의 점검 기준으로 활용
- 전자정부 성과관리 측정은 계획-관리-결과 단계를 거쳐 진행되므로 특정 시점이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성과측정이 아닌 성과관리 체계 구축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에 있어 전년도 이행계획의 조치부터 성과평가를 통한 향후 개선조치, 이행계획의 수립까지 포함하고 있음
 - 전자정부 성과관리는 정보화사업 이행수준 점검, 중복투자 예방,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3개 영역 및 18개 질의항목으로 구성됨

그림 5-2. 전자정부 성과관리 분야 정부업무 평가지표

전자정부 성과관리 분야 정부업무 평가지표					
정보화사업 이행수준 점검		중복투자 예방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단계	측정 집의	단계	측정 집의	단계	측정 집의
계획 (25)	당해연도 정보화사업 이행수준 점검계획 수립/관리	계획 ① (20)	당해연도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대상 식별/관리	전년도 이행계획 조치 (5)	전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계획 이행
		계획 ② (10)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수립 전 단계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수행		
관리 (25)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및 지표 선정/관리	수행 ① (10)	예산수립단계 정보화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수행	계획 수립 (10)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계획 수립
		수행 ② (10)	예산수립단계 자체검토결과와 반영여부 및 발주단계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 정보화사업 검토 수행	성과측정 (20)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이행
결과① (15)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종합적 보고/관리	수행 ③ (20)	사업발주단계 자체검토결과 및 사전협의 검토결과와 RFP 등의 반영 여부	개선방안 마련/ 지표별 개선 (20)	시스템별 개선방안 마련 또는 성과측정결과에 따른 측정지표별 개선계획 수립
결과② (20)	기관 내 핵심과제에 대한 성과점검 결과, 당초 목표 성과 달성	관리 (15)	정보화사업 검토 소 절차별 관리정보의 관리에 대한 시스템 활용	관리 (30)	업무측면 기초데이터 및 근거자료 관리
현류 (15)	정보화사업 성과 결과, 차년도 기획 및 예산 반영 여부	결과 (15)	기관 내 내부검토와 사전협의에 대한 기준/절차 수립 및 그에 따른 종합 보고/관리 수행	조치/ 이행계획 수립 (15)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관리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영역만 해당

출처: 행정안전부(2018),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 매뉴얼, 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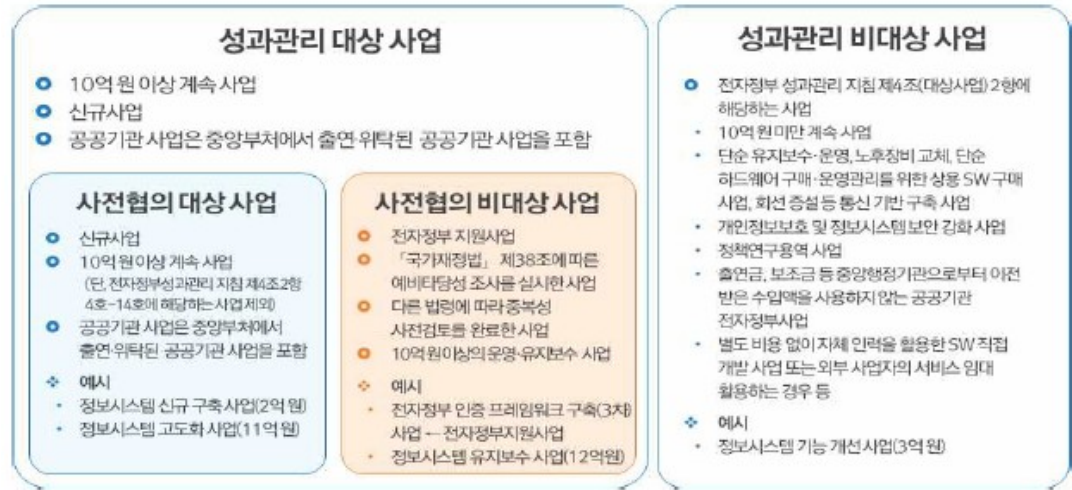
표 5-6. 전자정부 성과관리 점검을 위한 측정영역

측정영역	설명	측정단계	측정내용
정보화사업 이행수준 점검	기관별 정보화사업의 계획수립, 성과목표 및 지표 선정, 성과평가, 환류 등 단계별 추진사항 점검	계획-관리- 결과-환류	(계획) 기한준수: 성과계획서 제출기한 및 방식 준수 (관리) 사업계획서 상에 성과목표 및 지표의 포함여부 (결과1) 전년도 성과관리 결과 또는 당해연도 성과계획에 따른 성과측정 결과 / 기관장 대상 성과관리 결과 보고.결재 수준 (결과2) 성과목표달성도 및 성과관리 수준, 기능활용도 (환류)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반영 여부
중복투자 예방	기관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유사중복, 타당성 등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지를 점검	계획-수행- 관리-결과	(계획) 자체 관리하고 있는 정보화사업 검토대상목록 제출 등 /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타당성 검토결과 (수행1) 계획의 적정성 검토, 모든 정보화사업 목록에 대한 기관 자체 검토 결과, 사전협의 신청 여부 (수행2) 사업발주단계의 자체검토 결과 및 행안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 등의 RFP 반영여부 (관리) 정보화사업에 대한 검토 소절차별 관리정보(사업계획, 검토결과, 반영결과 등)의 범정부EA포털 또는 기관 자체 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활용 관리 유무
정보 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기관별 정보화사업 이행을 통해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운영 성과 관리(계획수립, 성과측정, 성과측정결과에 따른 이행 및 조치계획 수립 등) 수행여부를 점검	전년도 이행계획 조치-계획수립- 성과측정-개선방 안마련/지표별개 선-관리-이행계 획수립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의 적정성 : 누적유지보수비 비율 • 유지의 용이성 : 투입 운영유지비 증감률 • 비용의 효율성 : 평균 운영유지비 증감률 (과정) • 업무수행 영향도 : 기능활용도(구현된 기능 활용수준) • 사용상의 편의성 : 사용자가 느끼는 편의성 • 업무성과 달성도 : 목표대비 업무성과 달성도 (+ 업무성과 증감률(평균 3년))

출처: 행정안전부(2018),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 매뉴얼을 참조하여 작성

- 대상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
단체 등 모두로 하며 10억 원 이상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중앙정부에서
출연·위탁한 공공기관 사업을 포함함

그림 5-3. 전자정부 성과관리 대상사업



출처: 행정안전부(2018),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 매뉴얼, p.32

그림 5-4. 전자정부 성과관리 중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측정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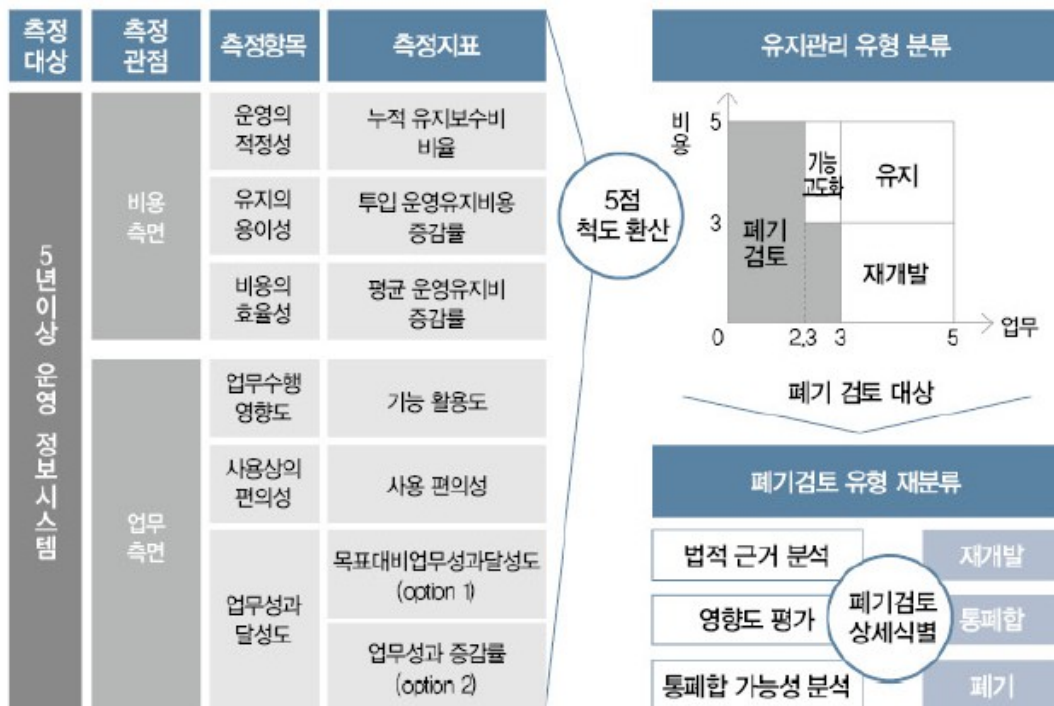


출처: 행정안전부(2018), 전자정부 성과관리 매뉴얼 Vol.2, p.11

□ 검토결과

- 전자정부사업의 성과관리는 정보화사업의 이행수준 점검, 중복투자 예방,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로 이뤄짐
- 이 중 전자정부사업의 정보시스템 운영성과는 비용과 업무 측면으로 구분(3~4년 정보시스템의 경우 비용은 제외)하여 측정됨
 - 비용은 운영의 적정성, 유지의 용이성, 비용의 효율성으로 측정함
 - 정보시스템 개발비(초기, 추가), 매년 투입되는 운영비, 유지보수비로 측정되며, 추가적으로 정보시스템 유형별로 적합한 활용규모에 대해서도 파악함
 - 업무는 업무수행 영향도, 사용상의 편의성, 업무성과 달성도로 측정함
 - 기능 활용도(구현된 기능, 활용기능, 미활용 기능, 저활용 기능), 사용 편의성 점수, 업무성과달성도(이용률, 달성률, 증가율, 절감률, 처리율 등, 구체적으로 목표대비 또는 직전년도 대비 달성도, 해당 시스템의 3년간 평균 업무성과 증감률 등을)를 주된 지표로 측정함

그림 5-5.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개요



출처: 행정안전부(2018), 전자정부 성과관리 매뉴얼 Vol.2, p.11

-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비해 전자정부사업은 ‘계획-실행-결과’ 전 과정에 걸친 성과관리를 이행하며, 따라서 성과지표 역시 투입-산출-결과(영향)지표가 균형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즉 전자정부사업은 성과평가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정보를 도출하고, 이를 다시 계획이나 실행 등에 환류시켜 시스템의 폐기, 기능고도화, 유지와 같은 결정이 가능해 사업의 비용절감, 행정효율화 달성에 기여

표 5-7. 전자정부사업과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비교

		성과 영역	세부 평가내용 또는 지표
전자정부성과관리	정보 시스템 운영 성과지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의 적정성 : 누적유지보수비 비율 • 유지의 용이성 : 투입 운영유지비 증감률 • 비용의 효율성 : 평균 운영유지비 증감률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 영향도 : 기능활용도(구현된 기능 활용수준) • 사용상의 편의성 : 사용자가 느끼는 편의성 • 업무성과 달성도 : 목표대비 업무성과 달성도 (+ 업무성과 증감률(평균 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투입의 적정성 : 계약사업비 대비 정산사업비 비율 • 사업관리의 적절성 : 최종감리보고서 참고하여 4개 항목 점수 산정 • 시스템 운영의 적시성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정상적 서비스 개통 여부 및 시기 점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만족도 • 이용자수 : 사업 특성을 반영한 실제 서비스 이용자수 • 이용건수 : 사업 특성을 반영한 실제 서비스 이용건수
		고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지표 :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지표 달성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협력도 : 사업 추진 및 성과점검 추진 일정에 따른 주관기관의 협력정도

라.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지표의 진단

□ 지표별 한계

- 20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성과지표 운영을 진단하고 한계점 및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운영지표상의 한계

- 이용자에 대한 모호한 구분과 정의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운영지표의 ‘이용자’는 구축된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자들로 다양하게 구분·정의될 수 있음
 - 따라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구분과 정의가 선행되어야 함
 - 그러나 20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이용자 만족도’ 평가상 이용자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사업(예: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고도화 사업 등)은 적었음
 - ‘이용자’, 혹은 ‘일반국민’, ‘소속기관 및 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포함되어야 할 실질적인 이용자가 빠진 경우도 있음
 - ‘이용자수’에 있어서도 단순 방문자수 또는 접속건수(예: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관리제공시스템 구축(3차), 행정정보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정부조직·정원관리시스템 전면 재구축 등)와 같이 시스템의 실질적 이용으로 볼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드는 정의임
- 일차적 단순 산출에 집중된 평가지표
 - 한편, ‘이용건수’는 해당 사업의 이행(즉, 시스템 운영)에 따른 일차적 산출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업의 실질적 결과나 영향을 평가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2단계), 전자정부 인증 프레임 워크 구축(2차) 등)만이 사업추진에 따른 실질적 결과(영향)를 고려하여 이용건수를 정의하는 것으로 보임

표 5-8. 20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이용자수 정의

사업		이용자수 지표 정의
1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4차)	•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한 사용자
2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고도화	• 시스템 이용자(신고접수자 로그인수, 1366 상담사 수)
3	범정부 행정 협업체계(지식경영) 구축	• (온-나라 지식) 온나라 지식 연간 접속자 수 • (온-나라 메일) 온-나라 메일 시스템에 접속한 연도별 사용자수
4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2단계)	• 법원행정처 통합전자등기시스템 이용자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5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4차)	•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수
6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관리·제공 시스템 구축(3차)	• 대국민 포털 메인화면 접속 건수
7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구축(2단계)	•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연간 방문자 수
8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5단계)	•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이용자수
9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구축(4단계)	• 위험평가시스템 등록 이용자수
10	전자정부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2차)	• 디지털원패스 서비스 이용자수
11	정부디렉토리 및 행정표준코드시스템 프레임워크 구축	• 정부디렉토리 이용기관 수 측정
12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 (클라우드 업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온나라 확산 기관 이용자수 • (클라우드기록관리시스템) CRMS로 전환된 부처의 기록관 담당자(기록관리업무사용자)
13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3단계)	• 해양수산재난포털 시스템 이용자수
14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 정부24 방문자 수
15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 구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수
16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유통 및 공적공간정보 구축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용자의 접속 빈도
17	공공조달 계약이행확인시스템 구축	• 계약이행확인시스템의 내·외부 사용자 측정
18	교육행정정보서비스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가입자 수
19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배출권 및 상쇄등록부 시스템 개선	• 배출권등록부시스템과 상쇄등록부시스템 이용자수
20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관리시스템 구축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 및 유지보수 운영자의 보안취약점 점검·조치를 위한 시스템이용자수
21	정부조직·정원관리시스템 전면 재구축	• 조직관리 업무서비스(조직개편) 이용자 수와 정부조직 대국민 웹서비스 접속자 수
22	차세대 사건처리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구축	• 온라인사건처리 및 분쟁조정시스템 이용자수
23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및 외국인정보 표준연계체계 구축	•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이용자 수 및 표준연계체계에 따른 연계기관 수
24	차세대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구축	• 시스템을 사용하는 총 사용자 수
25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 업무관리시스템 이용자수

표 5-9. 20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이용건수 지표 정의

사업		이용건수 지표 정의
1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4차)	•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 시스템 이용건수 * 국가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관리자 메뉴의 접속 통계 화면
2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고도화	• 긴급신고전화 공동대응건수 / 시범첫날 공동대응건수(442,380건)
3	범정부 행정 협업체계(지식경영) 구축	• (온-나라 지식) 연도별 온-나라 지식에 등록된 지식건수 • (온-나라메일) 온-나라 사용자가 송신한 메일 건수
4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2단계)	• 법원행정처 부동산 정보 요약 제공 서비스 이용건수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건수
5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4차)	•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의 연간 방문수
6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관리·제공 시스템 구축(3차)	•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도점검 시범운영 자체 수(2016년도) • 대국민포털시스템 접속 건수(2017년도)
7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구축(2단계)	• 상품·비교·리콜·안전·위해정보 등 조회 건수
8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5단계)	• 생활안전지도 DATA API 활용건수 + 지역안전진단시스템 활용건수
9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구축(4단계)	• 국가 위험평가시스템의 서비스 이용건수
10	전자정부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2차)	• 디지털원패스를 활용한 연계서비스 로그인 이용건수
11	정부디렉토리 및 행정표준코드시스템 프레임워크 구축	• 정부디렉토리서비스의 이용건수 (이용기관의 조회, 생성, 변경, 삭제 건수의 합)
12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 (클라우드 업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온나라 확산 기관 이용건수 • (클라우드기록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인수 건수
13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3단계)	• 해양수산재난포털 시스템 접속 이용건수
14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 통합포털 페이지뷰 건수
15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 구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중계, 열람) 활용건수
16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유통 및 공적공간정보 구축	• 공적공간의 신규 및 행정업무 처리 건수
17	공공조달 계약이행확인시스템 구축	• 웹서버 접속 로그 파일을 활용하여 이용 현황 측정
18	교육행정정보서비스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 교육부 전자서명 통합검증서비스 이용 건수
19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배출권 및 상쇄등록부 시스템 개선	• 배출권등록부시스템 장외파생거래 등록건수 • 상쇄등록부시스템 해외 감축 사업 신청건수
20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관리시스템 구축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 및 유지보수 운영자의 보안취약점 점검·조치를 위한 시스템 이용건수
21	정부조직·정원관리시스템 전면 재구축	• 조직법령 개정 시 조직관리 업무서비스 접속 건수
22	차세대 사건처리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구축	• 온라인 사건 등록 건수 및 온라인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건수
23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및 외국인정보 표준연계체계 구축	• 외국인정보공동이용 표준체계구축을 통한 이용건수 • 차세대 이민행정 시스템을 통한 이용건수
24	차세대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구축	• 시스템을 통한 연간 민원접수 건수
25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 업무관리시스템 연간 로그인 횟수

2) 고유지표 상의 한계

○ 고유지표 기능의 미흡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유지표는 사업별로 차별적이며 고유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됨
- 그러나 활용된 고유지표를 보면 차별적 성과측정 수준이 미흡하거나 일차적 산출에 치우친 한계를 가짐
- 다시 말해, 사업추진을 통한 이차적, 광역적 성과측정 지표보다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른 일차적이며 단순한 산출 측정지표가 많음
- 특히 각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적이나 목표 등과 연계·부합되는 정도가 미미하였음
- 비교적 지원사업을 통해 기대하게 되는 실질적 성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우수지표는 아래 <표 5-10>의 진한 글씨로 표시된 부분임

표 5-10. 20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 고유지표 정의

	사업명	고유지표	지표정의	유형
1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4차)	자료제공기관 및 연계실적	• 실제 발생한 침수 대비 시스템에서 예측한 정보의 연계기관 제공 실적	산출
		침수피해 예측 정확도 (%, 2013~2017년)	• 침수피해 발생 및 미발생 지자체를 시스템에서 예측한 정확도 * 특보발령 지자체를 대상으로 침수피해 발생 지자체(수) 및 미발생 지자체(수)와 풍수해피해 예측시스템으로 침수피해를 예측한 지자체(수)를 비교하여 침수피해예측 정확도를 측정	결과
2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고도화	긴급신고 연계시간(초)	• 긴급신고전화 이관소요시간	결과
3	범정부 행정 협업체계(지식경영) 구축	KMS 서비스사용 비율(%)	• 전 기관(중앙·지자체 276개) 대비 온-나라 지식시스템 사용기관의 비율	산출
		온-나라메일 활성이용기관 비율(%)	• 소속직원의 50% 이상이 온-나라 메일을 사용하는 기관의 비율	
4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2단계)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이용률(국토교통부)	-	산출

	사업명	고유지표	지표정의	유형
		매매전자계약서 작성대비 전자 매매등기신청 이용률(법원행정처) 부동산정보요약 제공 서비스 이용률(법원행정처)		
5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4차)	산림재해 발생 인지시간 단축(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시 인접 기관의 인지시간 단축(2015년, 2016년) •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119산불신고 위치가 표출되는 시간(2017년) 	결과
		산불발생 예측정확도 향상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산불예측 정확도 향상 	
6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관리·제공 시스템 구축(3차)	환경배출시설통합 관리시스템 활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을 활용한 지도점검 업무 처리율(지도점검 시스템 등록건수/지도점검 실시건수)* 100 	산출
		생활화학제품 및 화학물질 정보 공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구축된 생활화학제품 및 화학물질정보의 대국민 포털서비스 공개율(DB건수 기준) 	
7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구축(2단계)	-	-	-
8	안전정보통합관리시 스템 구축(5단계)	진단시스템 활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안전진단시스템 활용건수 및 진단결과보고서 작성건수를 통한 시스템 활용도 점검 	산출
		정보개방 활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안전지도 정보개방 활용률 	
9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구축(4단계)	의심거래보고(STR)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시스템 구축결과, 금융회사의 자체 위험관리 능력이 강화되어 STR보고건수 증가 비율을 측정 	결과
10	전자정부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2차)	디지털원패스 적용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ID를 통해 본인확인(인증)이 가능한 신규사이트 수 	산출
11	정부디렉토리 및 행정표준코드시스템 프레임워크 구축	신규 API 발급건수(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API 발급건수 	산출

	사업명	고유지표	지표정의	유형
12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SaaS 플랫폼 적용 부처 수(개)	• 신규 구축된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SaaS 서비스 적용 기관 수(누적)	산출
13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 계 구축(3단계)	전자서식 여객선 안전점검표 작성률 (%)	• 여객선 출항 전 안전점검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식 안전점검표 작성률	산출
		태풍대비 상황판단자료 확보시간 단축률(%)	• 태풍대비 상황판단을 위한 업무시간 단축시간을 측정	결과
14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행정서비스 연계 종수(건)	•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 종수	산출
15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 구축	정보연계수(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조회·유통정보연계수	산출
16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유통 및 공적공간정보 구축	-	-	-
17	공공조달 계약이행확인시스템 구축	불공정 조사 대상 업체 수(개)	• 불공정행위 의심 확인 대상 업체 추출건수	산출
		불공정행위 적발률(%)	• 불공정행위 의심확인 대상 업체 추출건 대비 적발률	
18	교육행정정보서비스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인증서비스의 안정성(점)	• 본 사업을 통해 개선되는 등급별 인증서비스 장애 발생 정도를 통해 서비스안정성을 측정	산출
19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배출권 및 상쇄등록부 시스템 개선	-	-	-
20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관리시스템 구축	진단대상 자동화적용률(%)	•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대상 자동화 적용률	결과
21	정부조직·정원관리 시스템 전면 재구축	처리시간 단축률(%)	• 조직정보를 이용한 기본통계 생산 처리시간 단축률 * 개정~대국민공개 시점까지의 조직 기본통계 처리시간 산정	결과
22	차세대 사건처리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구축	자동연계비율(%)	• 분쟁조정시스템과 사건처리시스템 간 접수 및 결과를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비율	산출

	사업명	고유지표	지표정의	유형
23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및 외국인정보 표준연계체계 구축	정보제공(열람)건수	• 외국인정보공동이용 표준체계구축을 통한 정보제공(열람) 건수	산출
24	차세대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구축	평균 민원처리시간(시간)	• 시스템을 통해 당일 접수·완료된 민원의 평균 처리 시간	결과
25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기반 업무처리율(%)	•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율	결과

□ 주요쟁점⁴⁷⁾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고유성·차별성의 반영수준 미흡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고유성은 범정부적 공동활용, 다수 시스템의 융·복합을 통한 대규모 정보시스템구축 등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른 단순 산출성과에 치중할 뿐 다부처에 대한 영향이나 결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부재함
- 또한 사업의 주관부서, 실제 고객 등을 고려할 때 전자정부지원사업보다 개별 부처의 고유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 만큼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가 도출됐는지 확인할 지표 부재

예) 사업명	주관기관
범정부 행정 협업체계(지식경영) 구축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2차)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 구축	행정안전부
정부조직·정원관리시스템 전면 재구축	행정안전부
차세대 사건처리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위원회

47)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 정보화사업에 대한 이해, 성과지표의 타당성(대표성), 목표와 결과 간 인과성, 측정가능성, 기한성(적시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임

표 5-11.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적용된 성과지표 예시

Good / Active / 결과지표 (예)	Bad / Passive / 결과지표 (예)
산림재해 발생 인지시간 단축(분)	자료제공기관 및 연계실적
산불발생 예측정확도 향상율	서비스사용 비율(%)
태풍대비 상황판단자료 확보시간 단축률(%)	이용기관 비율(%)
진단대상 자동화적용률(%)	자동연계비율(%)
처리시간 단축률(%)	행정서비스 연계 종수(건)
평균 민원처리시간(시간)	정보연계수(개)
시스템 기반 업무처리율(%)	

- 성과에 대한 개념 정의, 사업별 목적(효과)과 성과지표의 연계성 미흡
 -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를 도출하기에 부족한 지표를 설정하여 실제 성과평가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 산출지표에 집중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통지표(이용자 만족도, 이용건수, 이용자수 등)의 활용으로 명확한 효과추정이 어렵고 하향평준화,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과지표의 대표성,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목표달성의 노력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 고유지표가 부재(예: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하거나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예: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S등급),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A등급))가 존재하지만, 우수 사업으로 평가되는 등으로 평가의 객관성·실효성 등에 의문 존재

예) 사업명: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3단계)

⇒ 전자서식 여객선 안전점검표 작성률 및 태풍대비상황판단자료 확보시간 단축률은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사고 초기 골든시간 타임 단축, 인명사고 감소, 방재비용 절감을 측정하기 곤란함

예) 사업명: 정부디렉토리 및 행정표준코드시스템 프레임워크 구축

⇒ 중앙, 지자체, 공공, 민간 기관에도 표준화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 운영 효율화, 정부디렉토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증가에 따른 중복투자예방, 비용절감 등의 사업의 궁극적 목표, 정량적 기대효과와 관련된 지표 추가 필요

예) 사업명: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 SaaS 플랫폼 적용 부처 수로는 사업의 궁극적 목표 달성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예) 사업명: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5단계)

⇒ 이 사업에서 이용자는 지역안전진단시스템의 이용자인 공무원과 생활안전지도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으로 구분.정의하였으나 이용자수 지표에 있어서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 수로만 평가하는 등 편의에 따라 정의를 달리 함

예)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 구축

⇒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된 계속사업으로 이용만족도의 경우 2016-2017년 달성 못하다가 2018년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면서 달성하게 됨
 * 당초 목표 설정 시 목표치가 과도하게 상향설정됨에 따라 목표달성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하향조정된 것으로 보임

예) 사업명: 교육행정정보서비스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 이 사업에서는 고유지표로 시스템의 궁극적 목적과 상관없는 인증서비스 안정성(연간무장애인증서비스제공률)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점 만점의 20점을 부여받음

○ 종합적·전략적 성과관리의 부재

- 기획-실행평가-환류 간 전략적 연계성이 취약하여 일회적 성과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시스템의 운영성과에 집중된 한계 존재
- 산출지표 대비 투입, 과정, 결과지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업의 계속적 이행 여부나 예산배분 등의 결정 기준이 될 성과정보의 생산 및 환류 수준 미흡(앞의 <표 5-10> 참조)

예) 사업명: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관리제공시스템 구축(3차)

⇒ 주요 지표가 환경배출시설통합관리시스템 활용률, 생활화학제품 및 화학물질 정보 공개율 등 단순 정보제공에 그쳐 향후 사업의 계속적 이행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평가 자체를 위한 쉬운 성과지표의 발굴 및 적용

- 성과계획에서는 미시적·거시적, 단·중장기적 성과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는데 성과지표는 미시적·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함
- 다시 말해, 달성하기 쉽고,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단순 지표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단일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단위 성과관리에 치중

○ 계속사업의 경우 연도별 성과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 부재

- 계속사업의 경우, 성과보고서를 통해 연도별 실적을 단순 제시하는 데 그쳐 성과정보를 환류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전년도 이행계획의 조치, 성과평가를 통한 향후 개선조치 및 이행계획 수립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화 등 필요

<참고: 2019년 성과보고서 내 연도별 성과점검 결과 제시>

[표 3-19]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4차) 사업 연도별 성과점검 결과

성과지표	성과점검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목표	실적	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목표 달성률(%)	목표	실적	목표 달성률(%)
운영지표	이용자 만족도(점)	73	67.6	92.7	77	71.6	93.0	73	79.09	108.34
	이용건수(건)	1,386	1,596	115.2	4,612	4,715	102.2	100,591	119,665	120
고유지표	산림재해 발생 인지시간 단축(분)	20	5	120	3	실시간	100	7	5.1	120
	산불발생 예측정확도 향상(%)	78	78.9	101.2	80	79	98.2	82	81	98.78

연도별 성과점검 결과

이용자 만족도는 2016년과 2017년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2018년에는 최근 2년간 실적을 근거로 목표치를 낮게 설정함에 따라 목표를 108% 달성하였다. 만족도 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특히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8점이 상승하였다. 이용건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다.

산림재해 발생 인지시간 단축 지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다. 2016년과 2017년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대한 인지시간으로 2017년 최종 목표를 달성하였고 2018년에는 산불 발생에 대한 인지시간으로 산림재해 대상이 변경되었다. 산불발생 예측 정확도 향상 지표는 최근 3년간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2016년 101%, 2017년 98%, 2018년 100%)하였고 예측정확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었다.

→ 연도별 실적에 대한 단순 기술에 불과함

(종합)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2010년 이후 계속된 수정·보완 작업이 이뤄졌으나 성과관리의 연속성, 사업의 차별성 확보 등에 있어 여전히 한계를 지님

- 성과지표 대다수가 산출지표인 데 반해 투입, 결과지표는 소수에 불과
- 2020년 전자정부 성과지표는 다시 운영, 고유, 기타지표로 변경되었으며, 시스템 운영성과 중심으로 점검
- 계속사업의 경우 연도별 성과평가 및 환류 부재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이 추구하는 ▲구체적 목표치 ▲측정 가능한 효과 ▲관계부처(기관)와의 연계성 등의 반영 시급 그리고 각 유형별 사업의 고유성에 맞는 목표치의 설정, 성과지표의 발굴 및 적용 등이 포함된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맞는 성과관리 필요

마.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지표의 개선전략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차별성을 보장하여 사업이행의 타당성,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관리 요소 및 전략

-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평가의 3대 핵심요소는 ▲사업의 대상 ▲사업의 내용 ▲기대효과로 제시해 볼 수 있으며 성과관리전략은 다음의 다섯 가지(▲고객세분화 및 니즈 규명 ▲평가 강화 ▲고유지표의 발굴 및 적용 ▲시스템 생애주기의 고려 ▲우선순위 평가체계 구축 등)로 도출

그림 5-6. 전자정부지원사업 평가모델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고객중심적 추진을 위한 고객 세분화 및 니즈 규명
 - 범정부 공통인프라 조성, 다수 정보시스템 융·복합 등은 다수 사용자를 고객으로 하므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니즈가 다양하며 복잡
 - 사업계획 또는 성과계획 단계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른 내·외부, 직·간접 고객(예: 공무원과 시민, 기업 등)과 니즈를 현재보다 더욱 세분화·구체화하여 성과평가 지표와 연계·적용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차별성 유지를 위한 고유지표 활용 강화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목표달성의 노력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
- 단순 산출지표보다 결과(영향)지표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최초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목적 등과 연계된 지표 발굴 유도
- 공통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이용자수, 이용건수, 이용자 만족도 등은 사업특성에 따라 고유지표로의 전환을 검토하거나, 공통지표 유지 시 측정방식과 지표정의를 명확화하는 것으로 개선

○ 지원사업의 확장성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 네트워크 평가 강화

- 범정부 공통인프라 조성, 다수시스템 융·복합 등에 따른 부처별 혹은 부처 간 행정변화(영향) 평가지표의 공통지표 활용 검토
- 예) 부처별 업무처리시간의 단축(분), 관계부처 간 협조(지원) 시간의 단축, 범정부 정책결정의 효율화 정도, 대규모 융·복합 정보시스템구축에 따른 관계기관 행정비용 절감액 등

○ 예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선순위 평가 강화

- 사업예산의 투입 적정성, 운용 적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추가
- 특히 전체 사업예산의 투입 및 운용적정성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업별 세부 활동의 중요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예산적정성 평가

○ 사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종합적 성과관리 전환

- 지원사업 추진과정을 고려하여 투입, 과정, 산출, 결과지표를 균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 단계 성과관리 실시
- 예) 예산투입의 적정성(투입) - 사업관리의 적절성(과정) - 시스템 운영의 적시성/시스템 이용자수·건수 등(산출) - 행정효율성(소요시간 단축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결과)
- 한편, 계속사업의 경우, 성과정보의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전년도 이행계획의 조치, 성과평가를 통한 향후 개선조치, 이행계획 수립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 활용 필요

그림 5-7. 사업단계별 종합적 성과관리(안)

사업단계	성과관리단계	성과측정기준(지표)
계획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투입의 적정성 •비용효율성
실행평가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관리의 적절성 •예산운용의 적정성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운영의 적시성 •시스템 이용건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부처 행정효율성 •고객만족 •전략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
환류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개선조치 •이행계획의 수립

2. 성과보고서를 활용한 효율성 분석

가.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관리 DB의 구축

□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내역사업은 사업별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지표, 고유지표, 기타지표를 두고 있음

□ 성과점검 체계

○ 2017년까지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점검은 행정안전부 스마트서비스과에서 실시하였으나, 2018년 3월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점검부터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에서 실시

- 2016년까지 추진된 사업은 이듬해 성과점검을 통해 성과점검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2017년 추진된 사업부터는 이듬해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성과보고서는 그다음 해에 발간

예) 2014년 사업을 진행한 경우, 2015년 7~8월 성과점검 보고서 발간

예) 2017년 사업을 진행한 경우, 2018년 성과점검 후 2019년 성과보고서 발간

- 성과점검에 사용되는 지표는 지표 개별로 측정 시기 및 기간이 다르나, 대체로 사업종료 후에 측정됨

표 5-12.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보고서 발간 현황

사업추진	성과점검	성과보고서 발간
2010년	2011년	2011년 성과점검보고서
2011년	2012년	2012년 성과점검보고서
2012년	2013년	2013년 성과점검보고서
2013년	2014년	2014년 성과점검보고서
2014년	2015년	2015년 성과점검보고서
2015년	2016년	2016년 성과점검보고서
2016년	2017년	2017년 성과점검보고서
2017년	2018년	2019년 정보화사업 성과보고서
2018년	2019년	2020년 정보화사업 성과보고서 발간예정(2020.8월)
2019년	2020년	

- 성과점검에 사용되는 지표는 지표별로 측정시기가 다르나, 대체로 사업 기간 내의 성과를 측정하며, 만족도의 경우 사업종료 후에 측정됨

□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에 대한 검토

-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지표가 변화하고 있으며, 정확한 산식이나 지표 정의의 제공이 미흡한 경우가 있음
 - 2019년 성과점검 보고서는 지표별로 명확한 지표 정의와 산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전 보고서는 지표 정의 및 산식이 불명확하거나 제공을 하지 않고 있음
 - 지표를 포괄하는 명칭의 변경이 다수 발생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 관리지표 : 예산투입의 적정성과 시스템운영의 적시성은 2014년에 도입되었으며, 사업관리의 적절성은 지속적으로 사용됨
 - 운영지표 :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핵심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운영지표는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수, 이용건수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전까지는 이용자 만족도와 이용률 또는 이용건수로 측정되었으며 이용률 또는 이용건수의 경우 측정 가능 여부에 따라 누락된 사업도 다수 있음
 - 고유지표 :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수, 이용건수가 고유지표로 선정되어있던 사업들은 2018년부터 해당 지표가 운영지표로 변경됨에 따라 2019년 성과점검에서는 고유지표가 없는 경우가 있음

표 5-13.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지표의 연도별 변화

점검 대상 연도	내용
2010~2011년	- 공통지표: 사업관리 적절성, 사용자만족도, 시스템 이용률 - 고유지표
2012~2013년	- 일반지표: 사업관리 적절성 - 핵심지표: 이용자 만족도, 이용률 또는 이용건수, 고유지표
2014년	- 공통지표: 예산투입의 적정성, 사업관리의 적절성, 시스템운영의 적시성 - 운영지표: 이용자 만족도, 이용률, 이용건수, 사업고유지표
2015~2016년	- 공통지표: 예산투입의 적정성, 사업관리의 적절성, 시스템운영의 적시성 - 운영실적지표: 이용자 만족도, 이용률, 이용건수, 고유지표
2017년	- 관리지표: 예산투입의 적정성, 사업관리의 적절성, 시스템운영의 적시성 - 운영지표: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수, 이용건수 - 고유지표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사업 구분이 동 사업 관리지침의 지원사업 대상 유형분류를 따르지 않고, 별도의 분야로 관리되고 있어 혼란이 발생
 - 2019년 정보화사업 성과보고서 이전까지는 사업을 분야별로 구분하였으며, 분야별 구별은 범정부 정책목표와의 일관성 확보, 지원사업 대상 유형분류, 각 과제별 내용 등을 참조하여 연도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음
 - 하지만 시기별로 분야 명칭이 변경(예. 맞춤형 서비스 → 국민이 주인 되는 맞춤형 정부)되었고, 분야 자체가 변경된 경우도 있음(예: 개방·공유 및 변화관리 → 범정부 인프라)

표 5-14.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분야별 구분

점검 대상 연도	분야
2010	① 국민편익증진, ② 행정효율제고, ③ 사회안전강화, ④ 경제활성화, ⑤ 정보화기반강화
2011	① 국민편익증진, ② 행정효율성제고, ③ 사회안전강화, ④ 경제활성화, ⑤ 정보화기반강화
2012	① 국민편익증진, ② 행정효율성제고, ③ 사회안전강화, ④ 경제활성화, ⑤ 정보화기반강화
2013	① 안전한 사회, ② 유능한 정부, ③ 성숙한 자치, ④ 창조경제
2014	① 유능한 정부, ② 안전한 사회, ③ 개방 및 맞춤형 서비스, ④ 투자효율 강화
2015	① 국민이 주인되는 맞춤형 정부, ②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③ 국민이 안전한 사회, ④ 개방·공유 및 변화관리
2016	① 맞춤형 서비스, ② 안전한 사회, ③ 유능한 정부, ④ 범정부 인프라
2017	사용 안함

주: 진한 글씨는 전년도 대비 변경된 분야명

○ 사업명이 변경되는 사례 다수 발견

- 범정부 행정협업체계(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구축(2014년)에서 정부의사소통채널 통합 구축(2015년)으로 변경되는 사례와 같이 명칭이 상당 부분 변경될 경우 사업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 개별 사업마다 사업 ID번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2010년 이후 추진된 377건의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내역사업에 대한 개별사업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확보하여 성과관리 DB를 구성한 뒤, 연도별·유형별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

나. 성과지표별 달성률 연도별 변화

표 5-15. 성과지표별 달성률 기술통계

성과지표		사업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리지표1	예산투입의 적정성	101	99.5	1.9	86.2	100.0
관리지표2	사업관리의 적절성	190	96.7	11.4	25.0	100.0
관리지표3	시스템 운영의 적시성	101	99.2	5.7	90.0	110.0
운영지표1	이용자 만족도(점)	159	99.4	10.8	69.0	138.0
운영지표2	이용자수/이용률	99	106.9	29.6	2.7	214.0
운영지표3	이용건수	74	124.7	80.1	6.2	678.8

주. 달성률이 0인 사업은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 관리지표인 예산투입의 적정성, 사업관리의 적절성, 시스템 운영의 적시성의 달성률 평균은 각각 99.5, 96.7, 99.2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의도한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사업관리의 적절성의 경우 평균이 96.6으로 다른 관리지표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표준편차가 11.4로 큰 것으로 나타나 사업 간 달성률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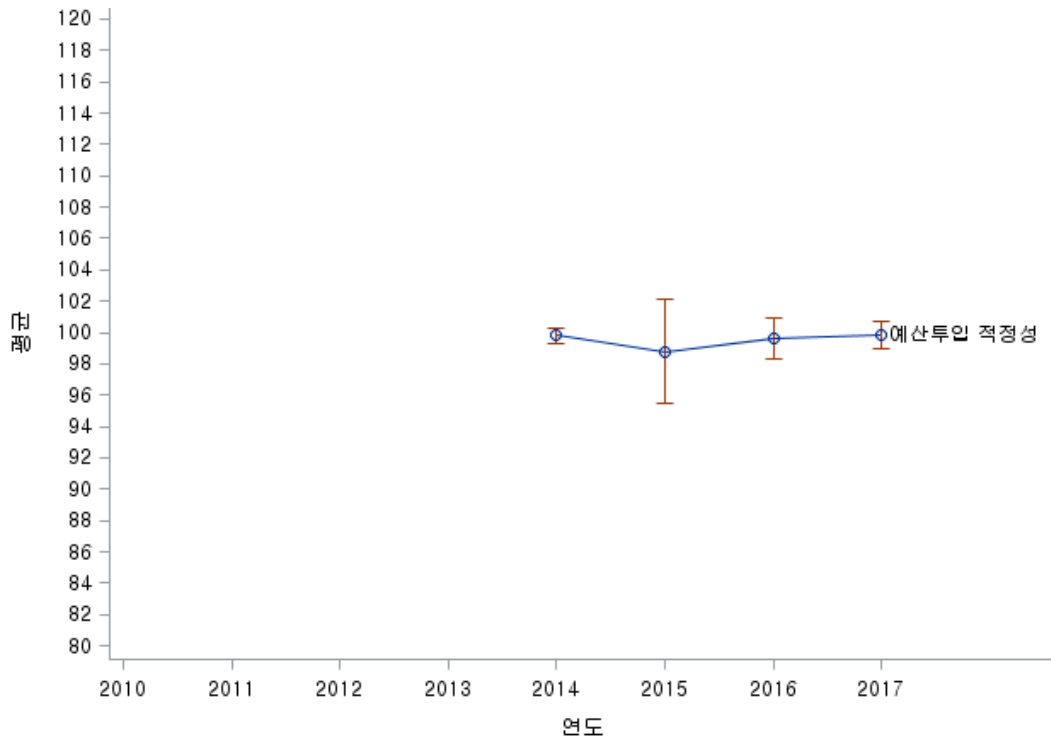
□ 운영지표는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수/이용률, 이용건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각 운영지표의 최댓값이 138.0, 214.0, 678.8로 사업계획 시 설정한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는 사업이 존재하는 반면, 최솟값은 69.0, 2.7, 6.2로 나타나 사업수행 후 단기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사업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관리지표1(예산투입의 적정성)은 2014년부터 관리지표로 설정되었으며, 연도별 성과지표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부분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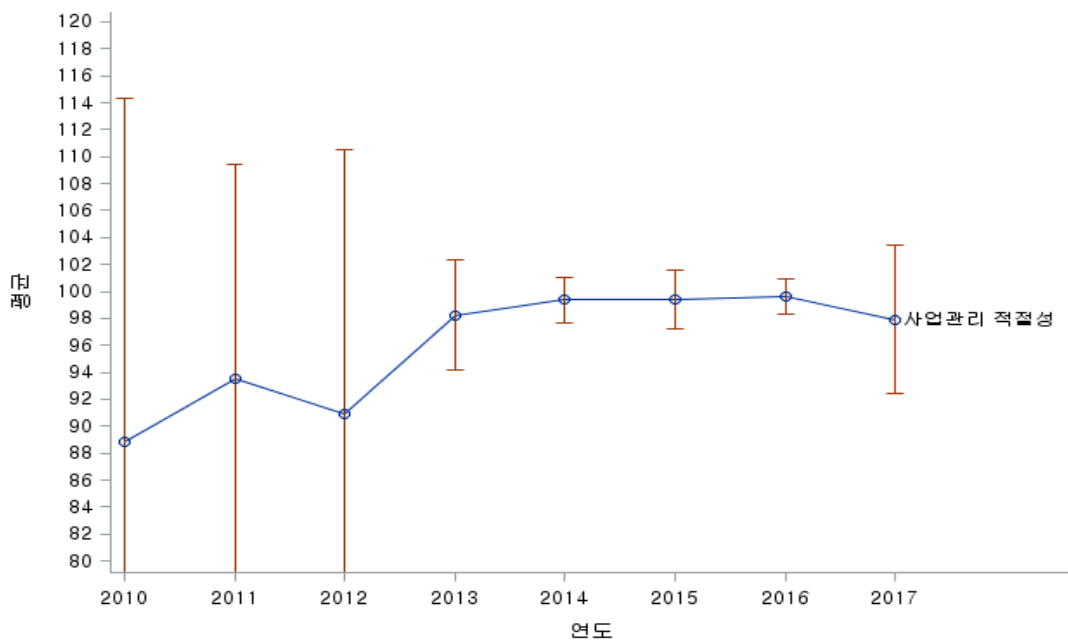
○ 다만, 2015년 달성률의 평균이 다소 낮아지면서 사업 간 달성률에 편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5-8. 관리지표1(예산투입의 적정성) 달성률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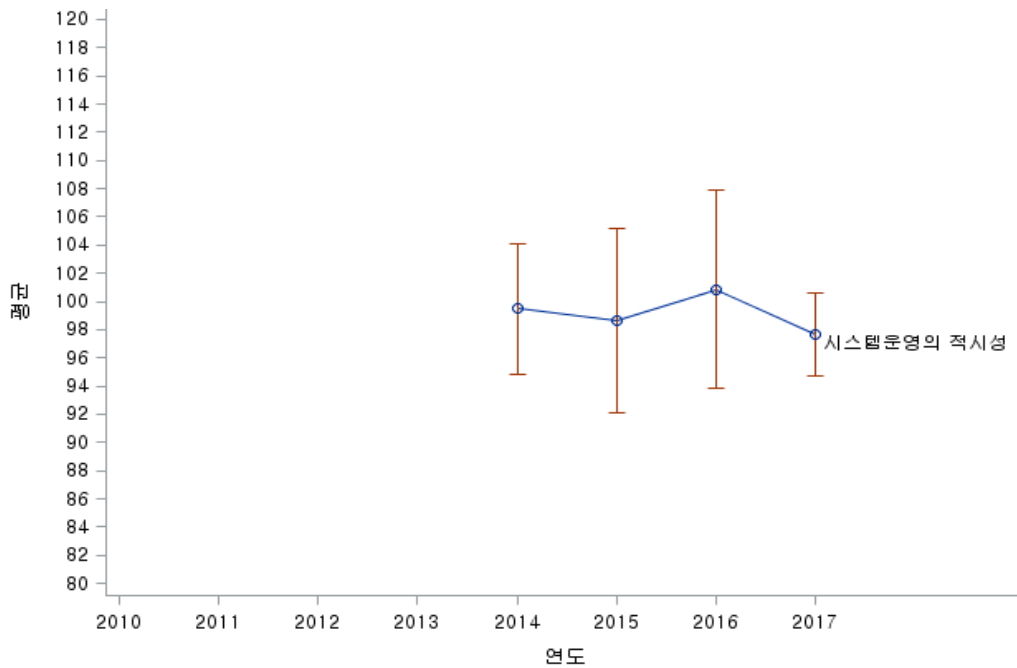
□ 관리지표2(사업관리 적절성)은 2010년 이후 꾸준히 관리지표로 활용되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꾸준히 달성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5-9. 관리지표2(사업관리 적절성) 달성률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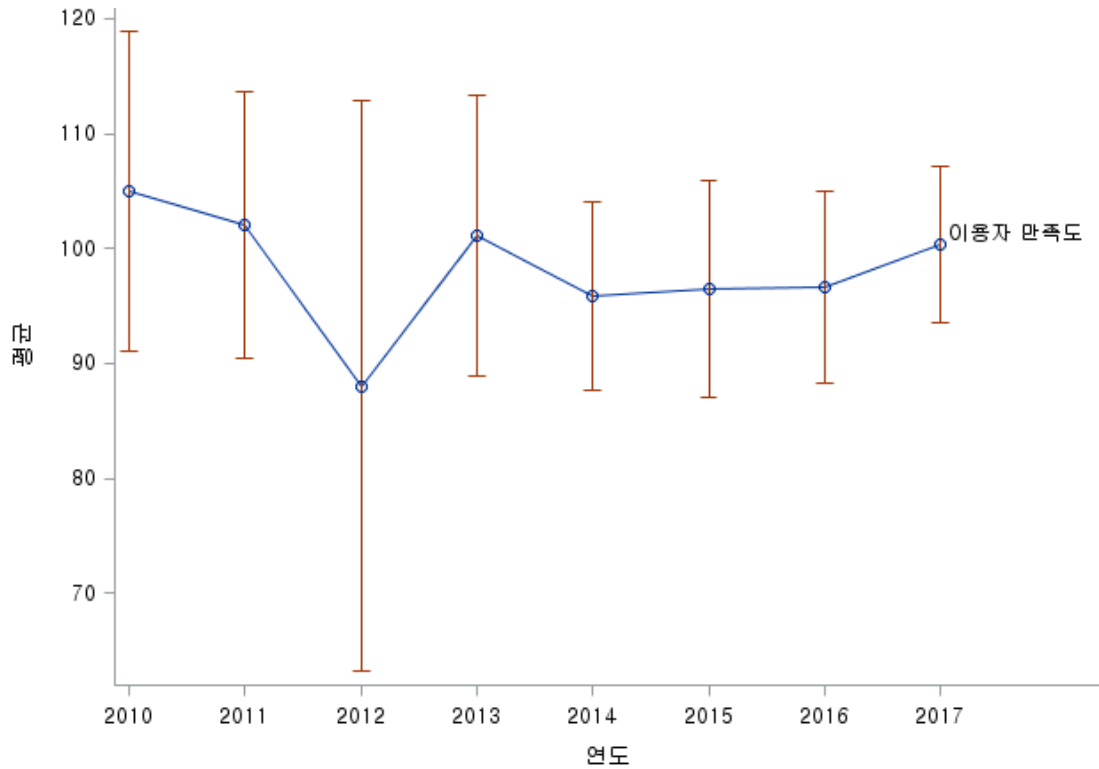
- 관리지표3(시스템 운영의 적시성)은 2014년 이후 관리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목표했던 실적치를 달성하고 있음
- 다만, 2017년의 달성률이 이전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타 관리지표에 비해 연도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5-10. 관리지표3(시스템운영의 적시성) 달성률의 연도별 변화



- 운영지표1(이용자 만족도)는 2010년과 2011년, 2013년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어, 목표로 한 만족도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012년의 경우, 이용자 만족도의 달성률이 크게 하락했으며 사업 간 달성률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용자 만족도를 여러 해 동안 목표치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는 것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우수한 이용자 만족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공격적인 목표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그림 5-11. 운영지표1(이용자 만족도) 달성률의 연도별 변화



- 운영지표2(이용자수/이용률)은 분석기간 동안 달성률 100을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로 한 이용자수/이용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전체적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일부 사업의 경우 목표로 한 성과를 크게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사업의 선정과 집행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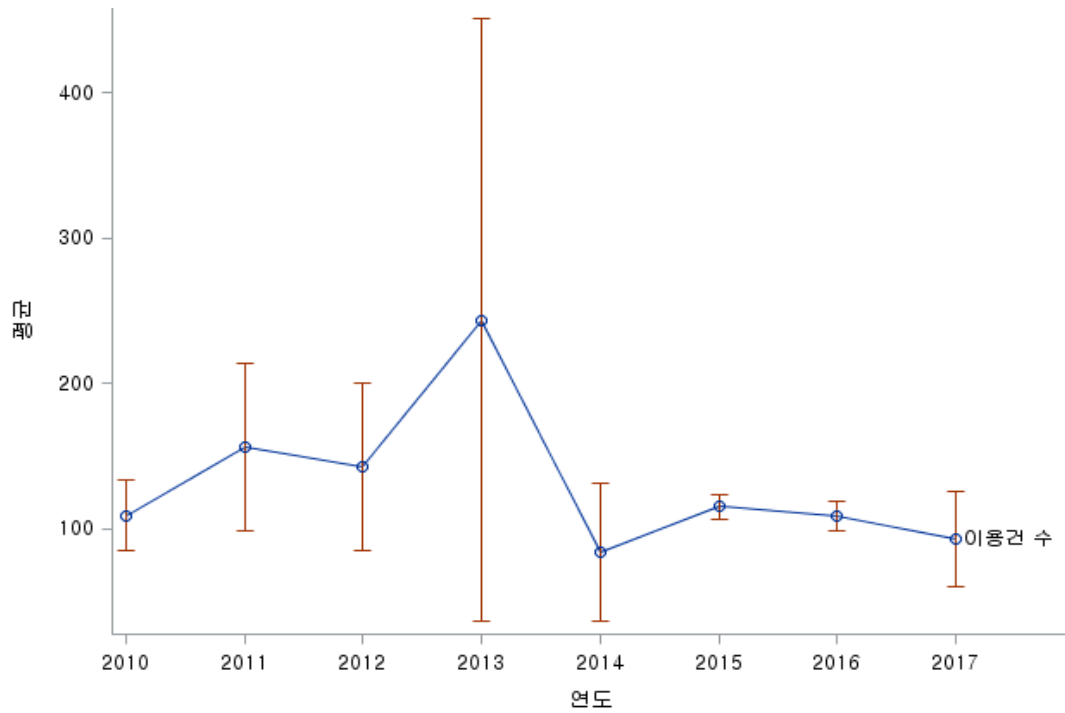
그림 5-12. 운영지표2(이용자수/이용률) 달성률의 연도별 변화



□ 운영지표3(이용건수)의 경우, 대부분의 기간에서 달성률 100을 넘어 초과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3년의 경우 사업의 평균 달성률이 250에 육박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달성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앞서 살펴본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목표치의 설정이 소극적이었거나, 반대로 실제 성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림 5-13. 운영지표3(이용건수) 달성률의 연도별 변화



□ 이상에서 살펴본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관리지표와 운영지표의 달성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5-16>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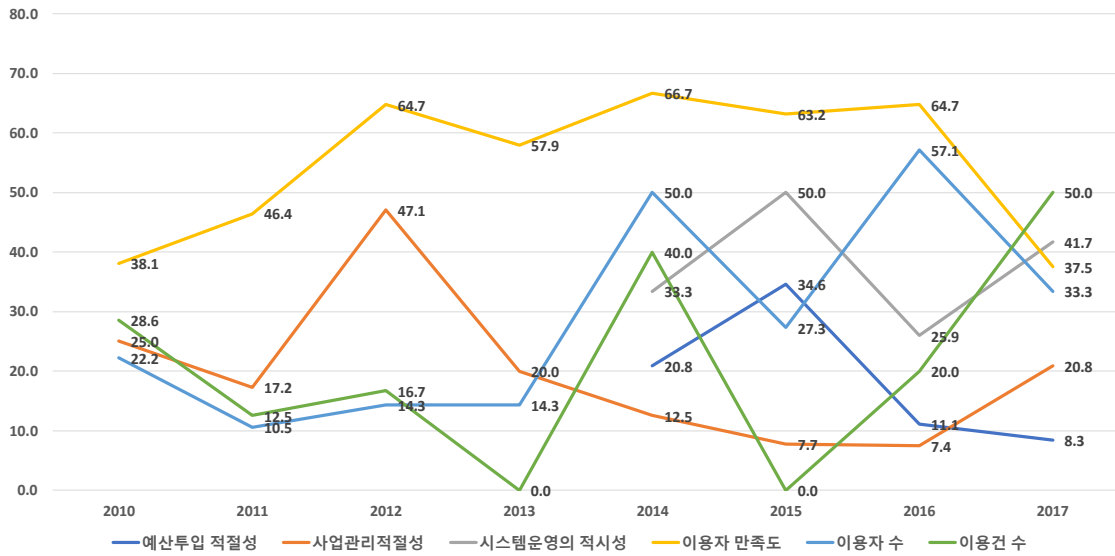
표 5-16. 연도별 공통지표(관리지표+운영지표)의 달성여부

구분	관리지표						운영지표						
	예산투입 적절성		사업관리 적절성		시스템 운영의 적시성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수 (이용률)		이용건수		
	미달	달성	미달	달성	미달	달성	미달	달성	미달	달성	미달	달성	
2010	개수			6	18			8	13	2	7	2	5
	비중			25.0	75.0			38.1	61.9	22.2	77.8	28.6	71.4
2011	개수			5	24			13	15	2	17	1	7
	비중			17.2	82.8			46.4	53.6	10.5	89.5	12.5	87.5
2012	개수			8	9			11	6	1	6	1	5
	비중			47.1	52.9			64.7	35.3	14.3	85.7	16.7	83.3
2013	개수			4	16			11	8	2	12	0	7
	비중			20.0	80.0			57.9	42.1	14.3	85.7	0.0	100
2014	개수	5	19	3	21	8	16	10	5	5	5	2	3
	비중	20.8	79.2	12.5	87.5	33.3	66.7	66.7	33.3	50.0	50.0	40.0	60.0
2015	개수	9	17	2	24	13	13	12	7	3	8	0	8
	비중	34.6	65.4	7.7	92.3	50.0	50	63.2	36.8	27.3	72.7	0.0	100
2016	개수	3	24	2	25	7	20	11	6	4	3	2	8
	비중	11.1	88.9	7.4	92.6	25.9	74.1	64.7	35.3	57.1	42.9	20.0	80.0
2017	개수	2	22	5	19	10	14	9	15	8	16	12	12
	비중	8.3	91.7	20.8	79.2	41.7	58.3	37.5	62.5	33.3	66.7	50.0	50.0

주: 붉은색은 미달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 미달사업 비중에 대한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5-14>와 같으며, 이용자 만족도 지표에 대한 달성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 이용자 만족도 지표에 대한 달성도가 대체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사업이 원래 의도한 수준으로 완성도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사업의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
- 사업관리의 적절성은 2012년 미달 비중이 가장 높았다가 이후 미달사업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용자수와 이용건수 지표의 경우 2013년 이후 미달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용자수와 이용건수의 미달은 사업의 설계 단계에서 수요예측이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적절한 사업설계와 수요예측이 필요함을 보여줌

그림 5-14. 전자정부지원사업 공통지표에 대한 연도별 미달사업 비중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관리지표와 운영지표 외에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고유지표를 두고 있음(〈표 5-17〉 참조)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형별로 활용된 사업의 고유지표를 정리하면 다음 〈표 5-17〉과 같으며, 앞서 살펴본 관리지표나 운영지표와 달리 개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고유지표의 선정과 목표치 설정과 관련하여, 개별사업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이를 설정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매년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의 활용은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하며, 그 결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별 고유지표가 활용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이들 지표의 선정, 개념 정의, 측정방식, 측정시기 등에 따라 지표의 타당성이 차이가 존재하며, 지표선정의 절차와 방법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

표 5-17.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형별 고유지표 pool

전자정부지원사업 유형	고유지표 pool
국정과제 추진	복지정보 시스템 연계 기관수(개), 수급실적 연계사업 수(개), 시스템 기반 업무처리율(%), 진단대상 자동화 적용률(%), 컨설팅 결과 이행 준비율(%), 품질 및 완성도(%)
다수 시스템 용·복합	ISP 결과의 반영 정도(%), KMS 서비스 사용 기관수, KMS 서비스 사용 비율(%), OK주민서비스 인지도(%), 공동이용 기관 수(개), 공동이용 정보수(건), 공동활용 대상기관 관측자료 수집율(%), 공동활용 참여 위원회 수(개), 공동활용서비스 접속자 수(명), 공통기반 가동률(%), 국가소송 패소율(%), 나눔프로그램 제공증가율(%),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개), 무역업무 전자적 처리율(%), 무역업무 전자화율(%), 물류정보시스템 업무활용률(%), 물류정보시스템 활용률(%), 민원구비서류 감축건수(건), 민원발급 전자화율(%), 민원신청 전자화율(%), 발주비용 절감액(억원), 범죄경력이 없거나, 동명이인이 아닌 경우 평균처리시간(분), 범죄경력이 있거나, 동명이인의 경우 평균처리시간(분), 병무민원 상담 포기율(%), 보고통계 생산시간 절감율(%), 부처협의 결과 등록건수 상승률(%), 불공정 조사 대상 업체 수(개), 불공정행위 적발률(%), 비밀유통 시스템 유통건수(건), 서비스목록 현행화율수주비용 절감액(억원), 시스템 가용성률(%), 시험인증 교부서비스 신청건수(건), 실태조사 정보 대체율(%), 압류해제처리 소요시간(분 이내), 영상서비스를 이용한 업무협력 건수(건), 온나라 메일 활성 사용자수, 온-나라메일 활성 이용기관 비율(%), 온라인 청구 신청률(%), 온라인서비스 제공 종수(종), 외교통상정보등록률의원 발의안 관련 자료 등록비율(%), 임상도 품질확보, 자동연계비율(%), 자치법규 검색 결과 향상률(%), 전자결재 시스템 이용점수(점), 전자결재이용률(%), 전자무역 신규 사용자수(명), 제안비용 절감액(억원), 주요기능 구축건수(개), 지원사업 협력도(점), 창업절차 간소화(단계/일), 처리기간 준수율(%), 취학시 예방접종 확인서 연계율(%), 통화대기시간(초), 평균 민원처리시간(시간), 침수피해예측 정확도, GIS이용률(%), 개방형 정보 활용기반 이용 시스템 수(개), 공동활용 위원회수(개), 국가대표포털 인지도(%), 기부단체정보 연계기관수(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율(%), 사이트(G4B) 방문자수(명/일), 월별 서비스목록 현행화율(%), 입국불허자 비율(%), 전자인사 기록관리의 적정성(점), 전자정부서비스 gateway 역할(%), 중복유사성 검토건수, 지방세 부과착오건 감소율(%), 지방세 징수율 증가, 창업절차 간소화(일), 통관단일창구 이용률(%), 행정서비스 연계 종수(건), 공간정보활용건수(천건/기관), 대민서비스 접속자수(명), 쏠림지원 기업비율(%), 연계활용 기관수(개), 온라인 창업건수(건), 의심거래보고(STR) 증가율(%), 탄소저감량(만톤)
범정부 공통 인프라	BPR/ISP 결과 활용률(%), 가격통계예측 정확도(%), 갈등이슈 발굴건수(건), 디지털원패스 적용도(개), 모바일 공통서비스 이용건수(다운로드건수)(건/년), 물가통계 예측 정확도(%), 빅데이터 기반의 부정부당 사용단지 추천대비 실사 적발률(%), 시군수 온-나라 메모보고 건수(천건), 신규 API 발급건수(건), 업무협력건수(건), 연계, 통합 사업 식별 향상률(%), 영상회의(협업) 개설건수(건), 원격강의 참여(도입) 비율(%), 원문다운건수(건), 인증서비스의 안정성(점), 중복투자사업식별향상률(%), 참여기관 수(개), 처리시간 단축률(%), 클라우드 저장소 사용률(%), 클라우드 통합계정 등록률(%), 협업과제 도출 건(건), 협업과제 발굴건수(건), 협업과제 발굴건수(건), SaaS 플랫폼 적용 부처 수(개), 공유서비스 신청건수(건), 공유자원 제공건수(건), 공통서비스 이용건수(다운로드건수)(건/년), 원문다운건수(만건),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사업수(개), 정보연계수(개)

전자정부지원사업 유형	고유지표 pool
범정부 정책추진	웹브라우저 호환지수(점), 웹표준문법 준수수준(점), 장애인 웹접근지수(점)
사회현안 해결	DNA 검색 소요일(일 이내), 공사상자 수(%), 구급단말기 이용률(%), 구급대원 병원선정 시 재이송 비율의 감소율(%), 농가정보 DB확보율(%), 방역업무 소요시간(시간), 소방장비 물품현행화율, 소방헬기 위치 관제율, 시스템 활용기관 비율(%), 실종아동 등 위치추적 활용도(%), 안전Dream 활용도(건), 예측 데이터 확보율, 자료제공기관 및 연계실적 (건, 2014~2015년), 재난상황파악 소요시간(분), 중증환자 이송병원 선정률(%), 침수피해 예측 정확도 (%, 2013~2017년), 해양사고 발생 감소율(%), 홈페이지 접속건수(건),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활용률(%), 회수 소요일(일), 긴급신고 연계시간(초), 농장정보DB 충실도(%), 방역업무 단축시간(시간), 생활화학제품 및 화학물질 정보 공개율(%), 실종아동 등 발견율(%), 자료제공기관 및 연계실적 (%), 재난훈련 증가율(%), 전자서식 여객선 안전점검표 작성률(%), 축산관계자 방역조치율(%), 태풍대비 상황판단자료 확보시간 단축률(%), 산림재해 발생 인지시간 단축(분), 산불발생 예측정확도 향상률(%), 정보개방 활용률(%), 진단시스템 활용률(%), 초기진압 평균소요시간(초)
정보보호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속차단율(%), 서비스 응답시간(시간), 앱 검증 ID 발급 관리 시스템 운영안정도(%), 업무처리 시간(시간), 운영안정도(%), 위험인식 소요시간 단축률(%), 유해사이트 차단율(%), 이용기관 서비스 제공수(종), 자원조사 데이터 오류 건수(건), 자원조사 업무처리 소요시간(일), 재난상황판단 소요시간 단축률(%), 재난상황판단 소요시간(분), 정보공유율(%), 좀비 PC 제거율(%), 좀비 PC 차단율(%), 운영 안정도(%)
첨단기술 도입	민원정보 분석서비스 유형 수(종), 분석보고서 조치결과 회신율(%), 온라인 민원 정보 분석 시스템 활용 기관수(개)

□ 종합적으로, 고유지표를 포함하여 관리지표 및 운영지표 모두, 사업 완료 후 차년도에 측정하여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 지원 완료 후 3년까지 운영지표를 점검하고 있음

○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중장기적인 관점의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보고서의 발간 주기와 횟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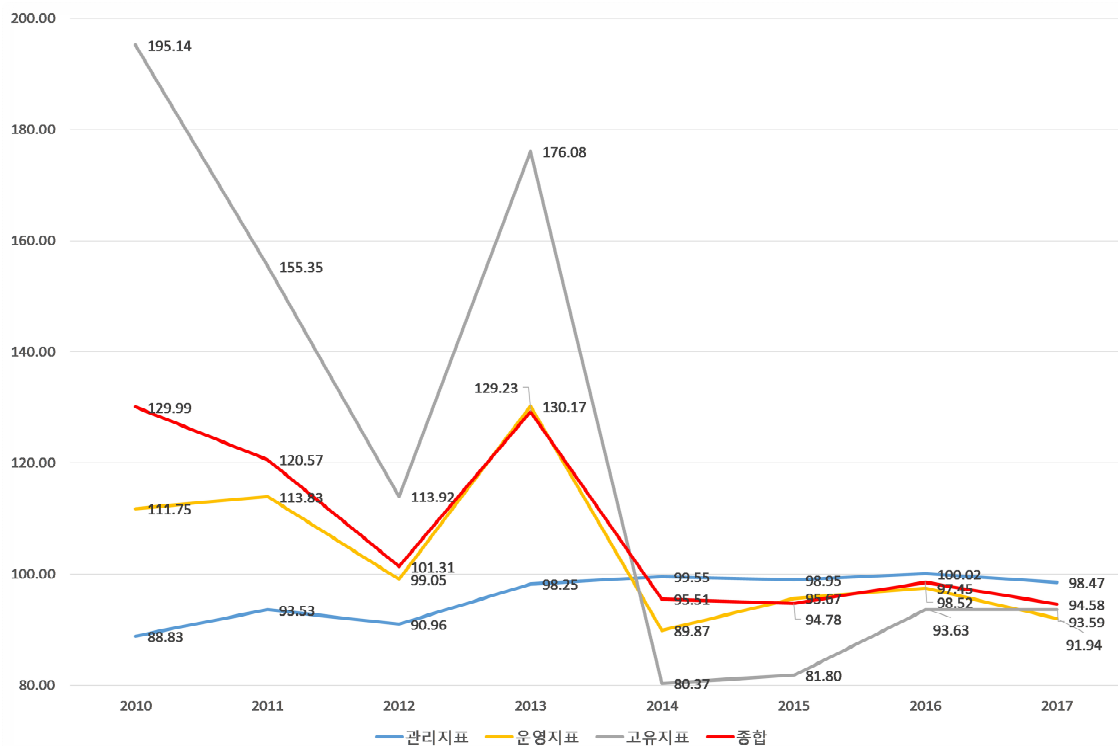
다. 전자정부지원사업 종합적인 성과분석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위해 공통지표(관리지표 및 운영지표)와 고유지표의 달성도를 평균하여 개별사업의 종합달성도를 산출한 뒤,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였음

○ 2010년 이후 성과지표체계가 계속 변화하면서 사업별로 복수의 공통지표를 가지는 경우, 일부 지표가 설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존재하여, 측정된 지표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정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지표를 관리지표 달성도, 운영지표 달성도, 고유지표 달성도, 종합지표 달성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그림 5-15>과 같음

그림 5-15.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지표의 연도별 변화



주: 개별사업별 관리지표, 운영지표, 고유지표의 달성도 평균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종합의 경우 세 가지 지표의 단순평균으로 계산함

- 분석결과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고유지표의 달성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태로 출발하여, 현재 10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수렴한 상태임
 - 운영지표와 관리지표의 경우 120 수준의 달성도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95 정도의 수준으로 수렴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종합지표 달성도의 경우도 공통지표 및 고유지표의 결과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며, 최근 95 정도의 수준으로 수렴하였음
-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설정의 관점과 함께,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특성변화 등과 연계하여 설명이 가능함
- 상기 분석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성과지표와 목표치 수준에 대한 달성도를 분석한 것이므로, 2010년~2013년 시기의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이 상대적으로 달성하기 쉬운 수준이었을 가능성
 - 사업특성의 관점에서는 초기의 지원사업이 보다 많은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던데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특정집단에 관계된 사업이 되어 고유지표의 달성도가 낮아졌을 가능성
 - 지원사업이 초기 구축사업 중심에서 재구축이나 고도화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고유지표를 달성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을 가능성

라. 성과지표 달성률 하위 10개 사업 분석

- 관리지표와 운영지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 달성률 하위 10개 사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사업별 심층분석을 위한 문제사업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관리지표1(예산투입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해당 지표 달성률 하위 사업을 기본적인 특성을 포함하여 나열하면 다음 <표 5-18>과 같음
- 하위 10개 사업 대부분이 예산투입의 적정성에서 90점을 넘고 있으며, 2015년에 추진된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사업만 80%대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표 5-18. 관리지표1(예산투입의 적정성) 하위 사업

사업명	사업유형	연도	사업비 (백만원)	달성률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5	6,122	86.20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3단계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5	2,803	90.04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6	5,849	94.66
빅데이터 공통기반 및 시범서비스 구축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5	3,517	95.38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관리·제공 시스템 구축	사회현안 해결	2016	2,862	95.49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사회현안 해결	2017	6,360	95.73
범정부 행정협업체계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구축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4	1,024	97.94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정보체계 1단계 구축	사회현안 해결	2015	4,534	98.66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6	2,150	98.85
범죄이력(유·무) 증명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4	1,446	98.94

- <표 5-19>는 관리지표2(사업관리의 적절성)에서 전체 전자정부지원사업 중 달성률 하위 10개 사업을 나열한 것으로, 대부분 2012년 이전의 비교적 오래된 사업이 선정되었음

- 특이점은 다수 시스템 용·복합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관리에서 다수 시스템의 용·복합 유형의 난이도가 높다고 추측할 수 있음
- 이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기술적 난이도뿐만 아니라, 다수의 부처 및 기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수요를 맞추는 과정, 즉 관리적 난이도가 높은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표 5-19. 관리지표2(사업관리의 적절성) 하위 10개 사업

사업명	사업유형	연도	사업비 (백만원)	달성률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납부시스템 구축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2	4,738	25.0
온라인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첨단기술 도입 및 적용확산	2010	1,666	25.0
글로벌 물류 무역정보망 구축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1	5,980	37.5
나눔포털 구축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1	4,075	50.0
기업경쟁력 지원체계 구축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2	4,520	60.0
전자정부 웹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	범정부 정책 추진	2010	4,854	71.0
네트워크 분리	정보보호	2010	16,161	73.0
디지털 가축방역체계 구축	사회현안 해결	2011	7,864	75.0
국가대표포털 구축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0	3,871	75.0
온라인 민원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첨단기술 도입 및 적용확산	2011	1,378	75.0

주. 국가 정보자원개방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사업(2010)은 사업관리의 적절성 지표가 측정되지 않아 달성률이 0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관리지표3(시스템 운영의 적시성)은 하위 10개 사업을 선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시스템 운영의 적시성은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자정부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활용과 관련 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사업이 선정되므로, 적시성을 갖춘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선정과정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다만, 사회현안 해결 유형의 지원사업이 하위 10개 사업 중 2개가 선정되어있어, 다른 유형에 비해 적시성이 더욱 요구되는 유형의 사업이 오히려 적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5-20. 관리지표3(시스템 운영의 적시성) 하위 10개 사업

사업명	사업유형	연도	사업비 (백만원)	달성률
정부조직·정원관리시스템 전면 재구축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7	828	90.0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5	6,122	90.0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6	5,849	90.0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3단계 구축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4	3,148	90.0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사업	사회현안 해결	2014	3,733	90.0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 구축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5	2,056	90.0
원문정보 공개시스템 3차 구축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5	1,705	90.0
수혜자 중심 맞춤형 행정서비스 통합 제공(2차)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5	4,187	90.0
스마트농정 농식품통계 생산 활용 기반 구축	사회현안 해결	2016	2,027	90.0
전자정부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정보보호	2016	719	90.0

□ 운영지표1(이용자 만족도) 관점에서 달성률 하위 10개 사업을 살펴보면, <표 5-21>과 같음

- 이용자 만족도는 재정사업평가를 포함한 많은 성과관리 분야에서 결과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사업의 성과를 사업수요자의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정성지표 중 하나임

- 특히, 사회현안 해결 유형의 사업인 경우 이용자 만족도가 중요한 결과 지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형 중 4개의 사업이 이용자 만족도가 낮은 사업으로 선정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됨
- 다수 시스템 용·복합 유형도 4개의 사업이 달성률이 저조한 것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들 사업의 경우 사업의 결과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는 유저의 입장에서의 만족도가 사업의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서 사회현안 해결 유형과 마찬가지로, 사업별 심층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표 5-21. 운영지표1(이용자 만족도) 하위 10개 사업

사업명	사업유형	연도	사업비 (백만원)	달성률
디지털 가축방역체계 구축	사회현안 해결	2012	4,676	69.0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유통 및 공적공간정보 구축	사회현안 해결	2017	1,338.5	81.6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6	5,849	81.7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개발 프레임워크 구축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1	3,298	82.1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3단계 구축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4	3,148	82.7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1	27,713	82.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3차 구축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5	4,692	83.4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사회현안 해결	2015	5,887	84.4
국가긴급이송정보망 통합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2차)	사회현안 해결	2014	1,346	84.5
나눔포털 구축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2	1,315	84.7

주.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납부시스템 구축(2012)는 ‘자동차법’ 제정 등 법·제도적으로 압류 해제를 위한 사무 대행 근거의 미비로 운영지표를 측정하지 않아 달성률이 0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운영지표2(이용자수/이용률)의 경우 다수 시스템 융복합 유형과 사회현안 해결 유형의 사업이 주로 달성률 저조 사업에 속해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의도한 이용자수나 이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성과계획 시 설정한 이용자수나 이용률이 적정하다는 가정하에, 해당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사업의 집행 측면의 부실 가능성과 동시에, 사업의 선정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표 5-22. 운영지표2(이용자수/이용률) 하위 10개 사업

사업명	사업유형	연도	사업비 (백만원)	달성률
국가긴급이송정보망 통합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2차)	사회현안 해결	2013	1,482	2.7
범죄이력(유 무) 증명관리시스템 구축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5	911	11.7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구축(2단계)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7	4,042	35.3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유통 및 공적공간정보 구축	사회현안 해결	2017	1,338.5	37.3
공공조달 계약이행확인시스템 구축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7	1,090	38.7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3	3,672	61.4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4차)	사회현안 해결	2017	6,360	75.0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3단계 구축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4	3,148	77.0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체계 구축	국정과제 추진	2011	2,471	80.0
원문정보공개시스템 2단계 구축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4	1,794	83.9

주.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납부시스템 구축(2012)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단계(2014)는 동 지표를 측정하지 않아 달성률이 0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운영지표3(이용건수)의 달성률 하위 10개 사업 또한, 운영지표2(이용자수/이용률)과 마찬가지로 다수 시스템 융·복합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2017년에 추진된 사업들이 다수 속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의도한 목표치를 절반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

표 5-23. 운영지표3(이용건수) 하위 10개 사업

사업명	사업유형	연도	사업비 (백만원)	달성률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구축(4단계)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7	3,345	6.2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배출권 및 상쇄등록부 시스템 개선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7	550	36.7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유통 및 공적공간정보 구축	사회현안 해결	2017	1,338.5	42.8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및 외국인정보 표준연계체계 구축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7	12,794	57.1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구축(2단계)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7	4,042	59.6
기상관측자료 표준화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0	3581	71.0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5단계)	사회현안 해결	2017	3,699	71.5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 구축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7	6,743	79.1
범정부 행정 협업체계(지식경영) 구축	다수 시스템 융복합	2017	2,314	83.0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3단계)	사회현안 해결	2017	3,122	85.8

주.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사업(2014)은 시스템 구축 이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이용건수를 측정하지 않아 달성률이 0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이상에서 살펴본 관리지표와 운영지표 상 성과저조 사업 중 사업비 총액의 규모가 큰 순서로 사업을 선정하면 <표 5-24>와 같음

-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사업과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는 각각 6회와 5회 성과지표 하위 10개 사업에 포함되어 전반적인 성과가 저조한 사업으로 판단됨⁴⁸⁾
-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은 단일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약 277억으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며, 운영지표1(이용자 만족도)가 저조한 사업으로 선정되었음

48) ‘n차년도’와 같이 다년도에 걸쳐 수행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계산하였음

표 5-24. 성과저조 사업 중 사업비 총액이 높은 사업

사업명	사업비 총액 (백만원)	횟수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30,373	6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29,791	5
국가 공간정보체계 구축	27,713	1
자동차 일괄 압류해제·납부시스템 구축	14,214	3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및 외국인정보 표준연계체계 구축	12,794	1

주. 관리지표 및 운영지표의 하위 10개 사업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 총액을 합산하여 제시한 결과임

마. 확률변경분석을 활용한 효율성 평가

- 효율성 분석 이론은 효율변경을 자유가처분성, 볼록성, 규모에 대한 수확 가정을 이용하여 추정하나, 자료포락분석의 일종인 확률변경분석(Stochastic Frontier Analysis, SFA)은 모수적 접근을 통해 생산함수를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
 - SFA는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생산변경을 추정한 후 관찰된 산출수준과 생산변경에서의 산출수준 거리를 이용해 효율성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과 유사
 - 하지만, DEA는 관찰된 투입과 산출자료의 무오차성을 가정하여 생산변경을 추정하지만, SFA는 오차항을 모형에 반영하여 생산변경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전자가 비확률적 추정이라면 후자는 확률적 추정이라고 할 수 있음
- SFA는 생산변경함수를 $f(x_i|\beta)$ 와 같이 오차가 없는 확정적 함수로 가정하지 않고, 일정한 오차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며, 생산함수의 형태를 가정한 뒤 이를 모수적으로 추정
 - 생산함수의 형태는 Linear, Cobb-Douglas, Quadratic, Normalised quadratic, Translog(Transcendental logarithmic production function, Translog), Generalised Leontief, 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CES) 등 다양하며, 여기서는 Translog 함수, 즉 초월대수함수로 가정
- 분석의 모형은 종속변수에 사업비를, 독립변수에 관리지표 중 사업관리의 적정성의 달성률, 운영지표 중 이용자 만족도의 달성률을 각각 포함
 - 관리지표 중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수행의 적시성은 2014년 이후 성과지표로 포함되어, 2014년 이전 사업이 분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모형에서 제외하였음
 - 운영지표도 마찬가지로 이용자 수와 이용건수는 사업 성격에 따라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결측치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분석에서 제외

- 분석에 포함되는 관측치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성과지표를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나, 관리지표 중 사업관리의 적절성이 가장 대표성을 가지며, 이는 운영지표 중 이용자 만족도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음
- 이들 변수 이외에 사업의 ID(계속사업은 은 번호를 부여), 사업의 유형(2018년 이후 유형으로 일치), 연도 등은 더미변수로 모형에 포함
-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는 사업비, 사업관리의 적절성(달성률, %), 이용자 만족도(달성률, %), 연도, 사업유형이며,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음(표준화 이전의 값으로 분석한 결과)

표 5-25.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사업비 (백만 원)	215	3457.76	3875.26	281	28731
관리지표2: 사업관리 적절성 달성률(%)	191	96.16	13.05	0	100
운영지표1: 이용자 만족도 달성률(%)	160	98.77	13.33	0	138

연도	빈도	백분율	사업유형	빈도	백분율
2010	25	11.63	국정과제 추진	5	2.36
2011	30	13.95	다수 시스템 용·복합	105	49.53
2012	17	7.91	범정부 공통인프라	42	19.81
2013	21	9.77	범정부 정책 추진	2	0.94
2014	30	13.95	사회현안 해결	44	20.75
2015	38	17.67	정보보호	11	5.19
2016	29	13.49	첨단기술 도입 및 적용확산	3	1.42
2017	25	11.63	결측치	3	

- SFA 분석을 위해서, 분석에 사용될 변수를 표준화(standardization)하고, 이를 로그변환한 뒤 SAS의 QLIM 프로시저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함
- 분석모형은 종속변수가 사업비, 독립변수가 성과지표이므로, 회귀계수의 해석은 ‘사업관리의 적절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1 표준편차 변화시킬 때 필요한 사업비’ 로 이해할 수 있음

- 사업관리 적절성과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의 사업비가 높은 경향을 가지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아님
- 더미변수의 형태로 포함된 사업유형은 ‘첨단기술 도입’ 유형을 기준으로 할 때, 사업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며, ‘다수 시스템 용·복합’ 과 ‘사회현안 해결’ 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사업비 규모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수 시스템 용·복합 사업유형의 경우, 타 유형 사업에 비해 사업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시스템의 최초 도입 시에 공동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임
 - 사회현안 해결 유형의 경우 지원사업의 대상 유형에서 제외하여, 개별 현안의 주관부처에서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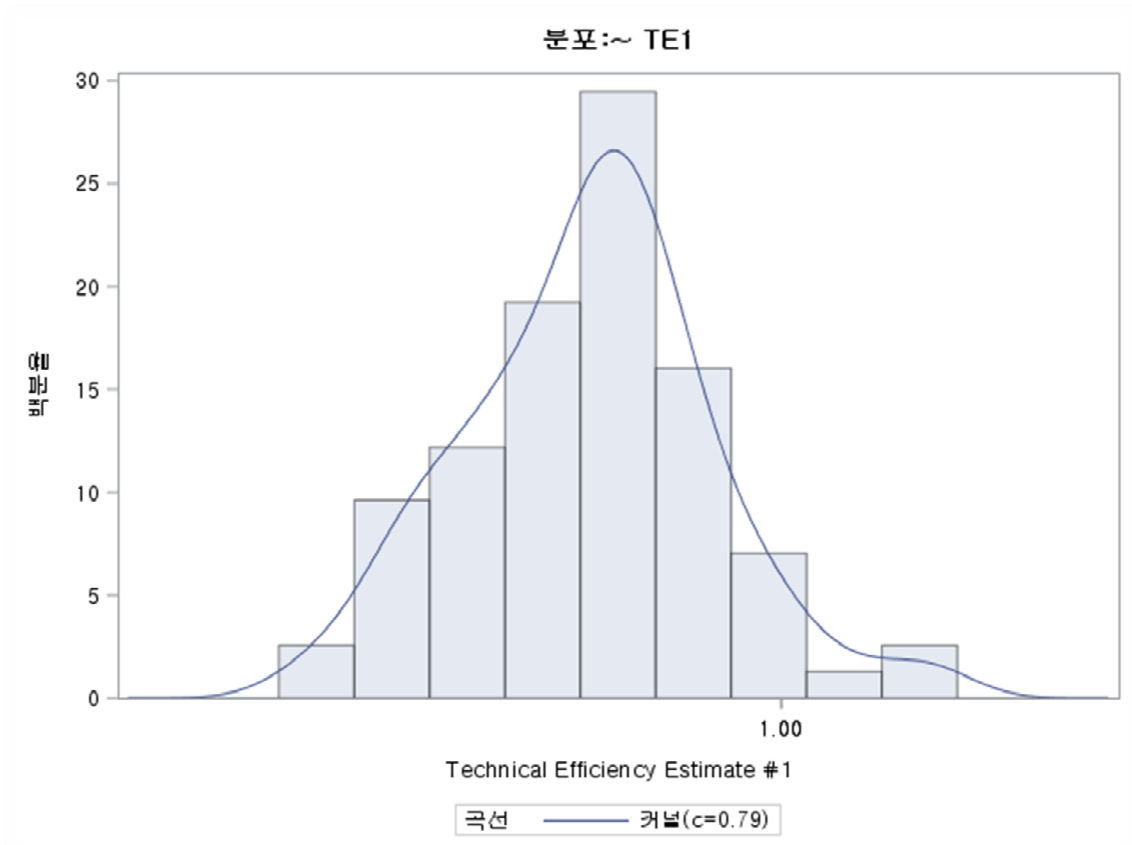
표 5-26. SFA에 근거한 전자정부지원사업 효율성 분석(2010-2017)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Approx Pr > t
Intercept	-2.27	10.69	-0.21	0.83
lvar16(사업관리 적절성)	1.56	3.58	0.44	0.66
lvar26(이용자만족도)	5.41	6.17	0.88	0.38
lvar16*lvar16	-0.71	1.38	-0.51	0.61
lvar26*lvar26	-3.61	3.44	-1.05	0.29
lvar16*lvar26	-2.49	3.78	-0.66	0.51
국정과제 추진	0.88	0.65	1.34	0.18
다수 시스템 용·복합	1.06	0.54	1.97	0.05
범정부 공통인프라	0.72	0.55	1.30	0.19
범정부 정책 추진	1.33	0.92	1.44	0.15
사회현안 해결	1.12	0.55	2.04	0.04
정보보호	0.87	0.65	1.33	0.18
_Sigma_v	0.74	0.04	17.63	<.0001

주: ref=첨단기술 도입

- σ 는 오차항인 v 의 표준편차의 크기를 의미하며, 이 오차항을 다시 무작위 오차와 효율성 값의 변동에 의한 값으로 분해하여 개별 DMU의 효율성 측정에 사용함
- 한편, 추정된 효율성 점수를 이용하여 효율성 점수의 분포를 살펴볼 수 있음

그림 5-16. 커널 밀도함수를 이용한 효율성 점수의 분포(반정규분포 가정)



VI. 종합 및 정책제언

1. 평가결과의 종합

-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사업심층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의 틀을 계획(유관계획 간 정합성, 법제도 분석)-운영(예산, 유사중복성)-성과(성과지표, 효율성)로 크게 나누어 분석함
- 이하에서는 주요 쟁점을 예산심의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결과를 요약함

가. 쟁점1: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사업 유형 재정립 필요성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자정부법 제64조 3항에 근거하고 있으나, 정보화사업, 전자정부사업 등과의 개념적 혼돈이 존재
 - 국가정보화(사업), 전자정부(사업), 전자정부지원사업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용어의 정의와 함께, 실무수준에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립 필요

표 6-1. 전자정부지원사업과 유사사업과의 개념적 혼돈

구분	정의
정보화사업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정보화’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정보화를 추진하는 사업의 의미로 ‘정보화사업’이라는 용어 사용)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말한다.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
전자정부사업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전자정부법 제64조 1항)
전자정부지원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 (전자정부법 제64조 3항)
지역정보화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전자정부법 제65조)

- 정보화사업과 전자정부사업은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심의·조정 위원회가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사업집행 단계는 유사함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우는 예산확보와 심의·조정 기능을 행정안전부가 전적으로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표 6-2. 정보화사업, 전자정부사업,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비교

구분	근거(법령)	예산확보	사업계획작성	심의·조정	사업집행
정보화사업	국가정보화기본계획 (국가정보화기본법)	각 부처	각 부처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각 부처
전자정부사업	전자정부 기본계획 (전자정부법)	각 부처	각 부처	전자정부 추진위원회	각 부처
전자정부지원사업	전자정부 기본계획 (전자정부법)	행정안전부	각 부처	행정안전부· 사업조정위원회	각 부처· 전문기관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조에서는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사업 유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음

가.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사업 나. 첨단기술을 시범도입하거나 적용을 확산하는 사업 다.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라.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수 시스템에 일시 지원을 하는 사업 마.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바.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사. 가목부터 바목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사회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다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총 예산은 지원사업 예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현재의 유형 기준을 바탕으로 지난 10년간 추진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 유형별 사업 수와 예산규모 특성을 분석
 - 대표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사업 수와 총사업비 모두 다수 시스템 융·복합과 범정부 공통인프라가 다수
 - 지원사업의 사업명을 기준으로 주제어 분석 결과, 시스템 고도화, 구축, ISP 재설계 등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또는 재구축에 많은 예산 할당

- 최근 2년 동안은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기반의 사업이 전격적으로 다수 시행되고 있고, 이는 지능형 정부 구현이라는 상위 목표와 계획 정합성이 높음
- 전자정부지원사업 유형이 2008년 이후 크게 4번의 변화가 있었고, 2018년 이후 대상사업 유형이 다변화 혹은 확장되는 상황
 - 전자정부지원사업 초기 유형인 다부처 연계 공통인프라, 행정업무 효율화 등의 사업유형에 첨단기술 시범도입 및 적용확산, 국정과제 추진, 사회현안해결 지원 등이 포함되며 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 관리지침상 변화는 최근 10년간 4회에 불과하나, 실제 관리차원의 유형 분류는 전자정부지원사업 특성 및 상위계획·정부정책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민편익 증진, 경제활성화, 안전한 사회 구현, 유능한 정부구현, 개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유형분류를 활용
- 전자정부지원사업이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유관개념과의 차별화된 명확한 법적 개념정의와 대상사업 유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정과제 추진, 사회현안해결 지원, 정보보호 중 하나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수 시스템 용·복합의 경우 하나의 부처 내의 여러 시스템을 결합하는 사업이 존재
 - 다수 시스템의 용·복합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부처의 자체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정보보호 유형이면서 범정부 공통인프라 조성 유형인 사업은 정보화사업 성격이 강함
 - 정보보호사업이 행정안전부의 고유사업이므로,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아닌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국정과제 추진, 사회현안해결 지원, 정보보호 중 하나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첨단기술 시범도입 및 적용확산에 해당하는 사업이 존재
 -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로 분류되는 인공지능(AI),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

- 아니라, 공공분야에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
- 기술 자체를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기술을 공공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개별 부처가 각자의 배경과 목적을 바탕으로 해당 부처의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범정부 공통으로 활용되어 표준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첨단기술의 도입은 ‘첨단기술의 시범도입 및 적용확산’ 이 아닌 ‘범정부 공통인프라’ 의 관점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

나. 쟁점2: 유사중복성 검토의 실효성 제고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유사중복성을 사업선정 과정에서 심사하고 있으나,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제도의 적용이 제외된 상태에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음
 - 정보화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등이 전자정부사업과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⁴⁹⁾
 - 동법 제64조에서는 전자정부사업(제1항)과 전자정부지원사업(제2, 3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고시인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호, 2020년 2월 21일 일부개정) 제2조에서는 전자정부사업을 사전협의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 한편, 현재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제도화된 것은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사업 선정 시 사전심사가 유일함
 -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 수준으로 제시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절차적으로 노력하고는 있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협의제도의 틀 안에서 유사중복성 검토가 이루어지고 사후관리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실제로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된 사업 중 유사중복을 검토한 결과 사업목적이 유사한 사업은 26건,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유사중복성 해결 권고를 받은 사업)은 126건이 발견
 - 유사중복성 해결을 권고받은 126개 사업 중 그중 125개(99%)가 진행되었으며, 해결 권고에 대한 조치내역을 확인한 결과 주관기관이 지적된 유사중복성을 제거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⁵⁰⁾
- 유사중복의 해소를 위해서는 전자정부지원사업과 타 부처의 정보화사업 간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49) 전자정부법 제67조

50) 유사중복성 해결 권고 및 이에 대한 조치내역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제출자료를 <부록 6>에 자세히 정리하였음

- 기본적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이나 부처의 정보화사업은 모두 IT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내용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
- 첨단기술 시범도입의 경우 국정과제와 마찬가지로 전자정부지원사업과 일반 전자정부사업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부처의 전략적 예산편성의 여지가 존재
- ‘고도화’ 사업의 경우에도 일부 부처는 자체 정보화예산을 사용하고 일부 부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이용하고 있음.
 - 실제 ‘고도화’로 검색하는 경우 전자정부지원사업에서 20개, 정보화 사업에서 53개 사업이 검색됨

표 6-3. 유사중복 사례 유형(〈표 4-8〉과 같음)

유형 구분		유사중복 사례
1	지원사업으로 구축 후 개별 부처 사업으로 운영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구축 사업(행정안전부)(2017)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구축 사업(해양수산부)(2017)
2	부처의 정보화 사업과 유사	범죄이력(유·무)증명 관리시스템 구축사업(경찰청)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 유통 및 공적공간 정보구축(국토교통부)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개선 구축(교육부)

다. 쟁점3: 전략적 성과관리 활용의 필요성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운영 및 추진결과가 목표 및 기대에 부합하였는지를 검토하고 환류하는 성과관리가 매우 중요함

○ 그런데 그간 전자정부지원사업에서 활용한 성과지표나 성과정보의 도출 및 환류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과관리에 있어 몇 가지 한계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존재함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고유성 반영 미흡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고유성은 범정부 공통인프라 조성, 다수 시스템의 융·복합을 통한 정보화에 대한 투자효율화 등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단순 산출성과에 치중하는 지표활용이 많은 반면, 다부처의 정책결정 등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거의 부재함

○ 예컨대 범정부 공통인프라 조성 또는 다수시스템의 융·복합을 통해 부처 간 협력이나 의사결정이 단축된 정도, 부처별 정보화예산 절감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발굴·활용될 필요 있음

□ 성과에 대한 개념 정의, 사업별 목표(효과)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미흡

○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와 실제 성과평가에 활용된 지표 간 정의가 다른 경우가 많고 단순 산출지표에 집중된 경향이 강함

○ 또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통지표(이용자만족도, 이용건수, 이용자수 등)의 활용으로 명확한 효과추정이 어렵고 하향평준화,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과지표의 대표성,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목표달성의 노력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됨⁵¹⁾

51) 행정안전부는 공통 운영지표 중 사업특성상 무의미한 지표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공통, 고유지표 목표

- 고유지표가 부재하거나 대외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수사업으로 평가되는 등 평가의 객관성, 실효성에 대한 의문 존재
- 전자정부지원사업이 다부처 협력과 범정부 인프라 관련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및 조정을 과정지표로 포함시키는 방법 필요함⁵²⁾
 -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유형은 (1) 다수 시스템 융·복합, (2) 사회현안 해결 지원, (3) 범정부 공동인프라 조성의 순서
 - 대부분의 사업이 다수의 부처 혹은 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종합적·전략적 성과관리의 부재

- 기획-실행평가-환류 간 전략적 연계성이 취약하여 일회적 성과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시스템의 운영적 성과에 집중된 한계 존재
- 산출지표 대비 투입, 과정, 결과지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업의 계속적 이행 여부나 예산배분 등의 결정 기준이 될 성과정보의 생산 및 환류 수준 미흡
- 계속사업의 경우 이전 성과에 대한 고려 부재하여 사업의 폐기나 축소 등의 결정에 필요한 성과정보 제공 불가
 -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각 전자정부지원사업 종료 후 개별 부처로 이관되기 전에 사업 전 기간에 대한 총괄평가를 진행하여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기획재정부 및 주관기관 등 외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각 사업내용이나 수준이 다르나 전체 사업내용을 포괄하는 지표를 적용하는 등 포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다만 연차별 차이가 많은 경우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내용에 따른 적절한 고유

달성도 60점 내에서 지표별 배점 조정가능하도록 성과지표 개선 예정('20년 지원사업 성과관리 추진 계획)이며, 공통지표와 고유지표의 목표치와 측정기준 등을 사업계획 수립 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토,조정하고 있음

52)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평가 시행계획을 마련(2019.3)하면서, 부처 간 협업을 평가하는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지표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운영지표 및 고유지표에서 양적 성과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계속사업은 반드시 이전 년도 실적 대비 성과를 평가해야 하며 점수화되어야 함. 현재 이전연도 실적을 차년도 지표 목표 수립 시 참고 및 반영하고 있음
- 연도별 추진사업 간 사업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예산 규모와 사업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심화 관리하는 예외적 관리(management by exception)를 적용할 필요

□ 평가 자체를 위한 쉬운 성과지표의 발굴 및 적용

- 성과계획에서는 미시적·거시적, 단·중장기적 성과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는데 성과지표는 미시적·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함
- 다시 말해, 달성하기 쉽고,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단순 지표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단일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단위 성과관리에 치중

□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지표는 2010년 이후 계속된 수정·보완작업이 이뤄졌으나 성과관리의 연속성, 사업의 차별성 확보 등에 있어 여전히 한계를 지님

- 성과지표 대다수가 산출지표인 데 반해 투입, 결과지표는 소수에 불과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과점검 항목은 2018년부터는 관리지표, 운영지표, 고유지표의 동일한 지표로 유지되고 있음
 - 관리지표: 예산투입의 적정성과 시스템운영의 적시성은 2014년에 도입되어, 사업관리의 적절성은 지속적으로 사용됨
 - 운영지표: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핵심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운영지표는 이용자만족도, 이용자수, 이용건수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전까지는 이용자만족도와 이용률 또는 이용건수로 측정되었고 이용률과 이용건수는 측정 가능 여부에 따라 누락되기도 함.⁵³⁾ 2017년까지 이용률과 이용건수 중 선택하게 되어 있었으나, 2018년부터 이용자수와 이용건수로 구분하여 설정함

53) 2010년 이래로 운영지표로 이용자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는 사업은 161개이며, 이용자수(율)를 측정하는 사업은 103개, 이용건수를 측정하는 사업은 76개로 조사됨

- 고유지표: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발굴·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의 목적상 고유지표가 이용자수나 이용건수인 경우도 있어 이때는 단순한 시스템 접속자 수가 아닌 실질적인 이용자 수(예, 시스템을 이용한 신청건수, 시스템을 통한 다운로드 수 등)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겠음
- 성과관리의 연속성과 관련하여, 성과관리 조직의 변경으로 인해 2017년 사업에 대한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보고서는 발간 시점인 2019년으로 기재되어 발간됨
 -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점검은 기존에는 행정안전부 스마트서비스과에서 실시하였고(2017년 3월까지),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의 신설(2018년 3월) 이후 2018년 성과점검부터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에서 실시하였으나, 2020년 4월 디지털정부국으로의 개편 이후 공공지능정책과(구 스마트서비스과)에서 실시하고 있음
-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핵심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 성과보고서는 상기의 관리지표 및 운영지표, 고유지표가 대부분 반영되었음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이 추구하는 구체적 목표치, 측정 가능한 효과, 관계부처(기관)와의 연계성 등의 반영 시급
- 그리고 유형별 사업의 고유성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발굴, 구체적 목표치 설정 등이 필요함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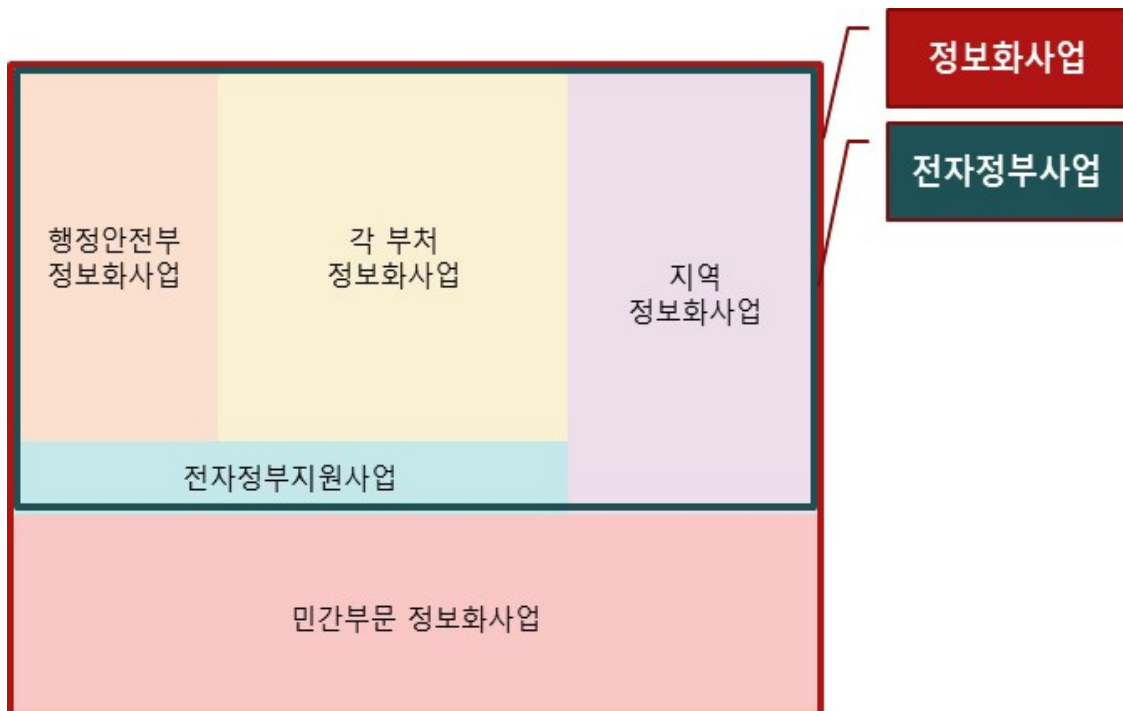
54) 사례: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 구축(4차)의 경우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지표 활용(산림재해 발생 인지시간 단축, 산불발생예측정확도 향상률 등)하고 있으며 목표치 또한 수치로 구체화(산림재해 발생 인지시간 단축 목표치 7분, 산불발생예측정확도 향상률 목표치 82%로 제시)

2. 정책제언

가.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유사사업의 개념정의 명확화

- 정보화사업, 전자정부사업,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개념정의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하고,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해 법령상 용어의 혼재를 해소할 필요
- 정보화사업은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 전자정부지원사업, 민간부문 정보화사업을 포함하는 가장 큰 개념
 - 전자정부사업은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의 정보화사업과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포함
 - 다만, 전자정부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 정보화사업과 구분하여, 다수 부처가 공통으로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는 ‘범정부 공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사업으로 한정

그림 6-1. 정보화사업 및 전자정부사업 등의 범위(안)



- 단기적으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호) 제2조의 개정을 통해 관련 용어 간 정의를 명확히 할 수 있음
 - 전자정부법에서 전자정부사업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행정기관 등’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지침수준에서 전자정부사업과 지역정보화사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수정될 필요
 - 국가정보화기본법이나 전자정부법에서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는 정보화사업을 지침 수준에서 정의하면서 정보화사업을 전자정부사업과 지역정보화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의 개정 필요

나.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사업 유형 구체화 및 차별화

- 전자정부지원사업과 행정안전부 및 각 부처의 정보화사업의 차별화를 위한 대상사업 유형 명확화가 필요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재의 대상사업 유형은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상 개정된 유형으로 기존의 유형에 국정과제 추진, 정보보호, 사회현안 해결이 추가된 형태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사업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재한 상황
 - 관련 법령, 지침, 매뉴얼, 사업설명자료에서 대상사업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확인할 수 없음
 - 따라서 범정부, 공통 인프라, 첨단기술, 시범사업, 다수 시스템, 융·복합 등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연구진이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
 - 이에,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련 법령과 지침, 사업설명자료를 통한 문헌검토와 지난 10년간 추진된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등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 사업유형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함
- 현재의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사업 유형을 크게 기반조성과 전문성 지원으로 구분하였음
 - 기반조성 : 정보자원의 생산과 유통, 활용에 둘 이상의 부처가 연계되는 정보화사업으로 범정부 공통 인프라나 다수 시스템 융·복합, 범정부 정책추진을 위한 일시 지원 등이 해당함
 - 전문성 지원 : 국정과제, 사회현안 해결, 정보보호, 첨단기술 시범도입 등 정보화사업의 중요성은 높으나, 해당 정보화사업의 관할 부처의 전문성이 취약하여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사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경우

표 6-4.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유형 검토

대분류	현재 기준	검토의견
기반조성	가.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사업	범정부 공통 인프라 사업이라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의 고유사업으로 존재하는 정보보호, 지역정보화사업 등은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전문성 지원	나. 첨단기술을 시범도입하거나 적용을 확산하는 사업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개발되어 민간에서 적용되고 있는 첨단기술을 공공분야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별 부처의 정보화역량을 바탕으로 국가정보화사업이나 전자정부사업에서 도입 및 확산을 하는 것으로도 충분
기반조성	다.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지난 10년간 수행된 전자정부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다수 시스템 융·복합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 중 단일 부처의 다수 시스템 융·복합인 경우가 일부 존재하며, 이 경우는 개별 부처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기반조성	라.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수 시스템에 일시 지원을 하는 사업	범정부 정책추진을 위한 다수 시스템 일시지원의 경우에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과의 차별성확보가 필요 사실상 가, 다 목과 차별성이 없어 별도의 목적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전문성 지원	마.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정과제 추진의 경우 해당 국정과제의 주무부처에서 관련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
전문성 지원	바.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행정안전부의 '정보보호체계강화(정보화)'로 추진이 타당
전문성 지원	사. 가목부터 바목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사회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사회현안 해결의 경우, 해당 사회현안에 관련된 부처의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 원칙적으로 기반조성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사업으로 하고, 전문성 지원
은 개별 부처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반조성은 둘 이상의 부처가 참여하는 정보화사업이라는 점에서 전자
정부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에 더 가까우며, 전문성 지원은 대부분 주관
기관이 명확하여 개별 부처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

○ 향후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이거나, 다수 시스템
융·복합에 해당하는 사업에 집중

- 다만, 범정부 정책추진을 위한 다수시스템 일시 지원은 정책주무부처에서
자체추진 가능하므로 별도의 목적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첨단기술을 도입하거나 적용을 확산하는 사업,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사회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중 다수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인프라 조성사업 및 다수 시스템 융·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지원 가능함

다.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사업 유형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상사업 유형의 변경 방안은 다음 표와 같음

○ 대상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하에서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서술함

표 6-5. 전자정부지원사업 차별화를 위한 대상사업 유형(안)

현재 유형분류	변경 대상사업 유형
가.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사업 나. 첨단기술을 시범도입하거나 적용을 확산하는 사업 다.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라.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수 시스템에 일시 지원을 하는 사업 마.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바.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사. 가목부터 바목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사회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 사업이나 다수 시스템 융·복합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관할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

체크포인트1: 범정부 공통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나, 다부처 시스템 융·복합 등과 같이 둘 이상의 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인가?

○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 : 둘 이상의 부처가 연계되어, 정보의 생산, 유통, 활용에 있어 표준에 맞게 생산, 유통, 활용되어야 하는 경우

○ 다부처 시스템 융·복합 :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부처의 시스템 간 호환성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

- 다만, 단일 부처의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하는 경우는 해당 부처의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체크포인트2: 해당 사업의 관할기관이 부재하거나 모호한 사업인가?

- 일부 정보화사업의 경우 범정부 공통 인프라 혹은 다수 시스템 용·복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되지 않고 특정 부처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존재
- 개별 법령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관할부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화(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개별 부처의 정보화사업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
 - 전자정부지원사업과 유사한 정보화사업이 개별 부처에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부처의 정보화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시스템이 구축된 후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에서 운영하게 된 경우에도, 명확한 관할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동 사업을 재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경우 관할기관의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범정부 공통 인프라 혹은 다수 시스템 용·복합 사업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하는 것은 명확한 관할기관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 체크포인트3: 해당 사업은 구축기간이 3년 이하인가?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최초 구축 및 기반조성에 집중하고, 이후 운영 및 관리는 주관기관의 정보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부분은 2년 이상의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정보화사업이 전반적으로 장기화되는 경향이 전자정부지원사업에도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3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장려

- 실제 지난 10년간 추진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사업별 기간(ISP 포함)을 분석한 결과 가장 긴 사업이 6년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3년 이하인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업이 수행 중인 계속사업의 경우 3년 이하 조건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신규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표 6-6.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사업지속기간(ISP 포함)

최종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계속연도 (ISP 포함)
2012	디지털가축방역체계 구축 4차	검역검사본부	5
2012	실종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3단계	경찰청	4
2012	국가 기상관측자료 표준화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	기상청	2
2018	국가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6
2016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	국민안전처	4
2017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 구축(4차)	산림청	5
2015	119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안전처	3
2014	국가긴급 이송정보망 통합 및 공동 활용체계 구축	방재청	2
2017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단계	행안부	6
2017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3단계 구축	해수부	4
2017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관리·제공시스템 구축(3차)	환경부	3
2017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고도화(비긴급)	안전처	3
2019	청와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대통령비서실	3
2019	데이터기반의 통합자원봉사 서비스 구축	행안부	2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유형을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 또는 다수 시스템 융·복합 사업으로 한정하고, 개별법에서 특정부처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추진의 주체가 명확한 경우는 해당 부처에서 추진

-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차별성을 가지고 명확한 대상사업 유형을 가지는 경우는 현재의 기준 중 기반조성에 해당하는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 과 ‘다수 시스템 용·복합’ 으로 수렴됨.
 - 정보자원의 생산과 유통, 활용에 둘 이상의 부처가 참여하는 정보화사업 중, 주관기관이 부재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정보화사업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구축기간이 3년 이하의 단기사업(ISP 제외, 구축사업 기준)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사업 완료 후 주관기관이 관리 및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도록 함

라.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사업 유형의 법령상 근거마련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사업 유형은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 101호)으로 정하고 있으나,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대상사업 유형을 법률에 정하는 경우, 전자정부 및 디지털 정부혁신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필수적으로 두 개 이상의 부처가 연계되는 사업이므로, 행정안전부 예규가 아닌 대통령령 수준으로 규정하여 부처 간 협의를 거치게 할 필요가 있음
 -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행정규칙의 형식임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대상사업 유형은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보다 고차원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행정작용이므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부처 간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

그림 6-2. 정부입법 절차



주: 법(법률절차), 대(대통령령절차), 총(총리령/부령절차)

출처: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s://www.lawmaking.go.kr/lmGde/govLm>

- 현재 관리지침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상사업의 유형은 실질적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해당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석이 가능),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에서 대상사업 유형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관리지침에서 구체적인 용어의 설명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공통인프라, 다수 시스템, 융·복합, 주관부처의 유무, 3년 이하 단기사업 등 용어의 구체적인 설명도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마. 유사중복 사전심사 실효성 제고

- 현행 전자정부법에서는 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 대상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
 - 다만,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사전협의에 준하여, 자체적인 사전심사를 통한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였고, 유사중복성 의심해소 권고에 따라 조치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있음
 - 유사중복성 해결 권고사업의 목록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유사중복성 권고를 받은 사업의 경우 해당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유사중복성 검토 체계의 효율성 측면
 - 현재 기획재정부에 정보시스템구축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 주체가 BPR/ISP를 수립하여야 하고, ISP 최종산출물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사업타당성, 실현 가능성,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데, 여기에 중복성이 포함되나 기재부외의 기관에는 공개하지 않음
 - 다만, 현재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 검토 체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상호연계 되지 못하고 있음(행정안전부는 매년 사업선정 및 발주단계에서,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유사중복성 검토)
 - 중복적인 유사중복 검토 절차는 두 절차가 서로 연계되는 경우 안전장치로서의 가외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으나 두 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용되는 경우 유사중복성 검토 체계의 효율성을 낮추고 더 나아가 전자정부지원사업 전체 운용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음
 - 두 절차 간 연계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double gate keeping 필요

바. 전략적 성과관리 필요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차별성을 살릴 수 있는 성과지표로 관리지표를 추가할 필요

- 단일사업의 성과평가에서 범정부 차원으로 성과평가의 범위 확대 필요가 있으며, 범정부적 공동활용, 대규모 융·복합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관계부처에 대한 영향/결과(예: 행정효율성, 업무성과달성도 등)의 측정지표 마련
 - 예) 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계부처별 업무처리시간의 단축(분), 대규모 융·복합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관계기관 행정비용 절감액 등
- 전자정부지원사업이 범정부 공통인프라 조성 및 다부처 시스템의 융·복합적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정보화진흥원, 주관기관, 사업자 등의 역할과 협력의 과정을 과정지표로 성과지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일회성 평가가 아닌 사업 전(全)주기적 성과관리로 전환

-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단계 및 성과관리 단계를 고려한 성과관리 모형 구성 및 투입, 과정, 산출, 결과지표의 균형적 활용
- 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이행계획의 조치, 성과평가를 통한 향후 개선조치, 이행계획 수립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반드시 포함
- 단년도 및 계속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전자정부지원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
 - 주관기관과 공유하여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와의 공유를 통해 예산편성 및 심의 시 활용

그림 6-3. 사업단계별 종합적 성과관리

사업 단계	성과관리단계	성과측정기준(지표)
계획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투입의 적정성 비용효율성
실행 평가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관리의 적절성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운영의 적시성 시스템 이용건수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부처 행정효율성 정책고객 만족도 전략목표/성과 달성도
환류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개선조치 이행계획 수립

□ 지원사업 특성을 반영한 고유지표 활용

- 고유지표는 사업별 차별화된 성과측정을 위해 적용되는 지표로 발굴되어야 하고, 단순 산출에 그치지 않고 결과(영향)까지 포괄
- 고유지표를 2개 이상 제시하도록 하고, 산출지표보다 결과(영향)지표에 높은 가중치 부여
- 공통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이용자수, 이용건수, 이용자만족도 등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명확하게 측정방식과 지표정의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표 6-7.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고유지표 우수 및 미흡사례 예시

Good / Active / 결과지표 (예)	Bad / Passive / 산출지표 (예)
산림재해 발생 인지시간 단축(분) 산불발생 예측정확도 향상율 태풍대비 상황판단자료 확보시간 단축률(%) 진단대상 자동화적용률(%) 처리시간 단축률(%) 평균 민원처리시간(시간) 시스템 기반 업무처리율(%)	자료제공기관 및 연계실적 서비스사용 비율(%) 이용기관 비율(%) 자동연계비율(%) 행정서비스 연계 종수(건) 정보연계수(개)

참고문헌

정부문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2019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관계부처합동. (2019).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 관계부처합동.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 국무조정실·한국행정학회. (2015).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 국회예산정책처. (2009). 전자정부지원사업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2020). 2020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II.
- 교육과학기술부. (2010). 효과적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연구.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재정부. (2020).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기획재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 제3판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2003). 전자정부백서.
- 한국조세연구원. (2006). 재정사업 성과지표개발 매뉴얼.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2020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수요조사 설명회 자료.
- 행정안전부. (2017). 전자정부 50년사
- 행정안전부. (2018).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측정 매뉴얼
- 행정안전부. (2018). 범정부 EA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유사중복 검토 가이드.
- 행정안전부. (2018). 전자정부 성과관리 매뉴얼 Vol. 1, 2
- 행정안전부. (2019). 2020 행정안전부 성과계획서.
- 행정안전부. (2019). 2020년 정보화예산 요구서, 2020년 성과계획서.
- 행정안전부. (2019). 정보화사업 중복·연계 검토 가이드.
- 행정안전부. (2019).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가이드.
- 행정안전부. (2020).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 행정안전부. (2010-2019).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보고서 각 년도.
- 행정안전부, NIA. (2018). 2020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수요조사 설명회 자료

논문 및 단행본

- 김희연. (2012). 호주 공공서비스 ICT 전략, 「동향」, 24(20): 35-42.
- 배문식·한상진. (2018). 미국(18F)과 영국(GDS) 정부의 디지털 도입방식 벤치마킹. 「NIPA 이슈리포트」, 2018-제48호: 1-11.
- 소영진. (2003). 전자정부 구축사업 추진체계의 딜레마와 극복방안: 전자정부 특별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0(2), p.30-49.
- 엄석진. (2018). 국가정보화사업 거버넌스 분석을 통한 예산효율화 방안 연

- 구.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연구용역보고서.
- 윤건. (2013). 공공기관 간 기능 중복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 진흥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279-312.
- 정충식. (2008). 2018 전자정부론: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론, 서울: 서울경제경영
- 정충식. (2009). 국가정보화 추진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추진체계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4), 39-66.
- 지은정. (2015). 노인일자리사업의 유사·중복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9(4), 229-264.
- 한국정보통신산업연합회. (2019). 디지털 전환시대의 민관협업 기반 공공서비스 추진 방향과 과제. FKII Issue Report 2019-07.
- 한세익. (2019). 「사라지는 정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부 모습과 기능」, 서울: 박영사.
- Burgess, S., & Houghton, J. (2006). E-government in Australia. In P. Hernon, R. Cullen & H. C. Relyea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E-Government: Serving Today and Building for Tomorrow (pp. 84-101). Lanham, Maryland: Scarecrow Press, Inc.
- Chugh, R., & Grandhi, S. (2013). E-government in Australia: A Usability Study of Australian City Council Websites. In Gil-Garcia, JR(ed), E-Government Success around the World: Cases, Empirical Studies, and Practical Recommendations. IGI Global: Hershey, pp. 216-235.
- Digital Transformation Agency. (2017). Annual Report 2016-17.
- European Commission. (2019a). Digital Government Factsheet 2019: Denmark.
- European Commission. (2019b). Digital Government Factsheet 2019: The United Kingdom.
- Meyerhoff Nielsen, M. (2017). eGovernance and cooperation models for online service supply and citizen use: A comparative analysis of Denmark and Japan. JeDEM - J. eDemocracy Open Gov. CeDEM Issue Best Pap. from CeDEM Asia 16 CeDEM17 Conf., vol. 9, no. 2, pp. 68-107.
- Meyerhoff Nielsen, M., & Yasouka, M. (2014). An analysis of the Danish approach to eGovernment benefit realisation, Internet Technol. Soc.

2014 Conf. Proc., pp. 47-58.

Ott, A., Hanson, F., & Krenjova, J. (2018), Introducing integrated e-government in Australia. Policy Brief Report No. 11/2018. International Cyber Policy Centre.

Ozols, G., & Meyerhoff Nielsen, M. (2018), Connected Government Approach for Customer-centric Public Service Delivery: Comparing strategic, governance and technological aspects in Latvia, Denmark and the United Kingdom. United Nations University, UNU-EGOV: Operating Unit on Policy-Driven Electronic Governance.

웹페이지

“전자정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년 5월 4일 접속,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query=%EC%A0%84%EC%9E%90%EC%A0%95%EB%B6%80%EC%A7%80%EC%9B%90%EB%B2%95#undefined>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지원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2020년 4월 24일 접속, <https://egov.nia.or.kr/EgovBizIntro.do>

“전자정부 평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2020년 3월 27일 접속,

<https://www.mois.go.kr/frt/sub/a06/b04/egovEstimation/screen.do>

“정부입법 절차”,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2020년 5월13일 접속.

<https://www.lawmaking.go.kr/lmGde/govLm>

덴마크 디지털화청 홈페이지, 2020년 4월 23일 접속, <https://en.digst.dk/>

영국 정부 디지털 서비스청 홈페이지, 2020년 5월 14일 접속,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government-digital-service>

호주 디지털 전환청 홈페이지, 2020년 5월 20일, <https://www.dta.gov.au/>

부록 1

연도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현황

연도	행정부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분야		비고
					사업 시행 당시	현재 기준	
2010	이명박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공동이용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8,800	국민편의 증진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0	이명박	주민생활 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	행정안전부	2,000	국민편의 증진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0	이명박	국가 대표포털 구축(1차)	행정안전부	5,400	국민편의 증진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0	이명박	민원서비스 선진화 2단계	행정안전부	9,100	국민편의 증진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0	이명박	법정부 복지전산망 연계 BPR/ISP	행정안전부	817	행정효율 제고	국정과제 추진	
2010	이명박	법정부 복지전산망 연계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3,183	행정효율 제고	국정과제 추진	
2010	이명박	국가공간정보체계 확산	국토부	15,700	행정효율 제고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0	이명박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1차)	행정안전부	9,300	행정효율 제고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0	이명박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수립	통계청	1,000	행정효율 제고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0	이명박	디지털 행정협업체계 구축 ISP	총리실, 행안부	1,500	행정효율 제고	법정부 공통인프라	
2010	이명박	국가외교통상정보 통합관리체계 BPR/ISP	외통부	700	행정효율 제고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0	이명박	온라인 국민소통(민원정보분석) 시스템 구축	권익위	2,500	행정효율 제고	첨단기술 도입 및 적용확산	
2010	이명박	비상대비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1,980	사회안전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재난영상정보(CCTV) 통합·연계 2차	소방방재청	3,020	사회안전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국가 기상관측자료 표준화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	기상청	4,000	사회안전 강화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0	이명박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구축 2차	수의검역원	7,000	사회안전 강화	사회현안해결	
2010	이명박	전자정부 웹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행안분야)	행정안전부	1,307	정보기반 강화	법정부 정책 추진 (다수시스템일시지원)	
2010	이명박	전자정부 웹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법제분야)	법제처	591	정보기반 강화	법정부 정책 추진 (다수시스템일시지원)	
2010	이명박	전자정부 웹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조달분야)	조달청	504	정보기반 강화	법정부 정책 추진 (다수시스템일시지원)	

연도	행정부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분야		비고
					사업 시행 당시	현재 기준	
2010	이명박	전자정부 웹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산림분야)	국립수목원	671	정보기반 강화	범정부 정책 추진 (다수시스템일시지원)	
2010	이명박	전자정부 웹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행정분야)	행정안전부	1,289	정보기반 강화	범정부 정책 추진 (다수시스템일시지원)	
2010	이명박	전자정부 웹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중기분야)	중소기업청	638	정보기반 강화	범정부 정책 추진 (다수시스템일시지원)	
2010	이명박	기업경쟁력 강화(2단계)	지경부	8,000	경제활성화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0	이명박	글로벌 물류·무역정보망 통합(2단계 구축)	국토부, 산자부, 관세청	9,600	경제활성화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0	이명박	전자정부 개발프레임워크 3단계 구축	행정안전부	4,000	정보기반 강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0	이명박	국가정보자원개방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3,500	정보기반 강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0	이명박	교통보육분야 서비스 지향적 국가자원 개방공유체계	행정안전부	2,193	정보기반 강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0	이명박	식품공연법률등 7개 서비스 지향적 국가자원 개방공유체계	행정안전부	4,007	정보기반 강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0	이명박	차세대 통합인증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3,000	정보기반 강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0	이명박	그린IT기반 업무환경조성	행정안전부	1,400	정보기반 강화	국정과제 추진	
2010	이명박	정부 전산자원통합 전문기술지원	행정안전부	1,000	정보기반 강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조달청	조달청	804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통계청	통계청	877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문화재청	문화재청	695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산림청	산림청	611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기상청	기상청	617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844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국립과학수사연구소	행정안전부	535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해양경찰청	해경청	2,801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기술표준원	기술표준원	912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연도	행정부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분야		비 고
					사업 시행 당시	현재 기준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미래기획위	미래기획위	159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지역발전위	지역발전위	258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828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1,173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농진청	농진청	1,060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식약청	식약청	1,331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280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민주 평통	민주 평통	339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정부통합전산센터	행정안전부	840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국회	국회	3,191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출입국관리소	출입국관리소	1,933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법제처	법제처	603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657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여성부	여성부	590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	278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1,001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718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1,221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_국회 2차	국회사무처	1,642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법무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	법무부	1,333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노동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	노동부	1,333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환경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	환경부	1,333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기상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	기상청	1,333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연도	행정부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분야		비고
					사업 시행 당시	현재 기준	
2010	이명박	통일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	통일부	1,333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농림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	농림부	1,333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비밀관리시스템 구축	행안부, 국정원	7,500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2010	이명박	좀비PC 탐지 제거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낙찰잔액 활용(3,499)
2010	이명박	스마트 전자정부 앱보안성 검증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정보보호 강화	정보보호	낙찰잔액 활용(611)
2011	이명박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안전부	10,005	국민편익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1	이명박	국가 대표포털 구축(2차)	행안부, 각 기관	2,200	국민편익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1	이명박	다부처 복지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행안부, 복지부	8,000	국민편익	국정과제 추진	
2011	이명박	기업경쟁력지원 체계 구축	지경부, 중기청	7,000	경제활성화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1	이명박	글로벌 물류·무역정보망 통합	국도부, 지경부, 관세청	8,100	경제활성화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1	이명박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2차)	행정안전부	11,579	행정효율제고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1	이명박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2차)	국도부	18,421	행정효율제고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1	이명박	국가통계선진화를 위한 범정부 통계조사 시스템 구축	통계청	3,800	행정효율제고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1	이명박	국가 외교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외교부	5,500	행정효율제고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1	이명박	온라인 민원정보 분석시스템 2단계	국민권익위	1,500	행정효율제고	첨단기술 도입 및 적용확산	
2011	이명박	차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7,473	행정효율제고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1	이명박	실종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경찰청	4,616	사회안전강화	사회현안해결	
2011	이명박	실종대비 아동정보 사전등록 시스템 구축	경찰청	184	사회안전강화	사회현안해결	
2011	이명박	국가 기상관측자료 표준화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1차)	기상청	3,500	사회안전강화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1	이명박	디지털 가축방역체계 구축	수의학검역원	5,000	사회안전강화	사회현안해결	
2011	이명박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개발프레임워크구축	행정안전부	2,000	정보화기반강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1	이명박	나눔 정보화 기반 구축 ISP	행정안전부	686	국민편익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1	이명박	나눔문화확산을 위한 나눔포털 구축	행정안전부	4,616	국민편익	다수시스템 용·복합	

연도	행정부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분야		비고
					사업 시행 당시	현재 기준	
2011	이명박	예방접종통합관리체계	질병관리본부	1,651	국민편익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1	이명박	자동차 압류해제 일괄서비스 BPR/ISP	국토해양부	1,047	국민편익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1	이명박	서비스 지향적 국가자원 개방공유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7,500	정보화기반강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1	이명박	차세대통합인증체계구축	행정안전부	3,500	정보화기반강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1	이명박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행안부, 각 기관	1,188	정보화기반강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1	이명박	스마트워크센터 2차 구축	행안부, 각 기관	932	정보화기반강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1	이명박	스마트워크센터 3차 구축	행안부, 각 기관	680	정보화기반강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1	이명박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ISP	행안부, 각 기관	1,093	신기술(모바일) 적용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1	이명박	모바일 표준프레임 워크 구축	행정안전부	1,549	신기술(모바일) 적용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1	이명박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인프라 구축	행정안전부	4,389	신기술(모바일) 적용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1	이명박	모바일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구축	행정안전부	1,257	신기술(모바일) 적용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1	이명박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행정안전부	513	신기술(모바일) 적용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1	이명박	행정업무 및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행정안전부	900	신기술(모바일) 적용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1	이명박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시스템 구축	해경청		사회안전강화	사회현안해결	낙찰잔액 활용(2,226)
2011	이명박	행정부 의원입법지원서비스 구축	법제처		행정효율제고	다수시스템 용·복합	낙찰잔액 활용(978)
2011	이명박	재난상황정보 원클릭시스템 구축	소방방재청		사회안전강화	사회현안해결	낙찰잔액 활용(848)
2011	이명박	국가위험물 안전관리 ISP	국토해양부		사회안전강화	사회현안해결	낙찰잔액 활용(743)
2011	이명박	병무민원상담소 정보시스템 고도화	병무청		국민편익	다수시스템 용·복합	낙찰잔액 활용(2,733)
2011	이명박	자치법규 통합검색서비스	법제처		행정효율제고	다수시스템 용·복합	낙찰잔액 활용(1,310)
2011	이명박	범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통합	국민권익위		행정효율제고	다수시스템 용·복합	낙찰잔액 활용(718)
2011	이명박	국가송무통합정보서비스 소송수행청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법무부		행정효율제고	다수시스템 용·복합	낙찰잔액 활용(1,685)
2011	이명박	온나라 시스템 지자체 확산	행정안전부		행정효율제고	범정부 공통인프라	낙찰잔액 활용(2,505)
2011	이명박	디지털 행정협업체계 구축(1차)	행정안전부		행정효율제고	범정부 공통인프라	낙찰잔액 활용(870)

연도	행정부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분야		비고
					사업 시행 당시	현재 기준	
2011	이명박	세금·공과금통합납부 BPR/ISP	행정안전부		국민편익	다수시스템 용·복합	낙찰잔액 활용(1,166)
2011	이명박	의료기기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 ISP	식약청		사회안전강화	다수시스템 용·복합	낙찰잔액 활용(355)
2011	이명박	행정기관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정보화기반강화	정보보호	낙찰잔액 활용(3,780)
2012	이명박	행정정보공동이용 기능 고도화	행정안전부	13,000	국민편익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2	이명박	기업경쟁력지원 체계 4단계 구축	지경부	7,500	경제활성화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2	이명박	국가 물류·무역정보망 통합	국토부, 지경부, 관세청	7,600	경제활성화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2	이명박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3차)	국토부	17,919	행정효율제고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2	이명박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3차)	행정안전부	12,081	행정효율제고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2	이명박	국가 외교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2단계	외교부	5,500	행정효율제고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2	이명박	온라인 민원정보 분석시스템 3단계 구축	국민권익위	1,500	행정효율제고	첨단기술 도입 및 적용확산	
2012	이명박	차세대 전자인사관리 2단계	행정안전부	7,500	행정효율제고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2	이명박	실종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2단계	경찰청	4,500	사회안전강화	사회현안해결	
2012	이명박	국가 기상관측자료 표준화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2차)	기상청	2,500	사회안전강화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2	이명박	디지털가축방역체계 구축 4차	검역검사본부	5,000	사회안전강화	사회현안해결	
2012	이명박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개발 프레임워크 구축 5단계	행정안전부	1,500	정보화기반강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2	이명박	자동차 일괄압류해제 시스템 구축	행안부, 해당부처	7,489	국민편익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2	이명박	나눔포털 구축 2단계	행정안전부	1,970	국민편익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2	이명박	서비스 지향적 국가 정보자원 개방·공유 체계 구축	행안부, 해당부처	7,200	정보화기반강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2	이명박	모바일 공통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행안부, 해당부처	277	신기술(모바일) 적용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2	이명박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1차)	행안부, 해당부처	938	신기술(모바일) 적용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2	이명박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2차)	행안부, 해당부처	1,697	신기술(모바일) 적용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2	이명박	모바일서비스 대국민 공통기반 및 보안 강화	행안부, 해당부처	2,988	신기술(모바일) 적용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2	이명박	공공민간간 전자문서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ISP수립	행정안전부		정보화기반강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낙찰잔액 활용(720)

연도	행정부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분야		비고
					사업 시행 당시	현재 기준	
2012	이명박	행정기관 인터넷PC 자료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정보보호강화	정보보호	낙찰잔액 활용(780)
2012	이명박	국가기관 내외부망간 자료교환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정보화기반강화	정보보호	낙찰잔액 활용(800)
2012	이명박	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간 자료유통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정보화기반강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낙찰잔액 활용(1,650)
2012	이명박	스마트 평창동계올림픽 통합서비스 ISP	올림픽조직위		행정효율제고	사회현안해결	낙찰잔액 활용(1,500)
2012	이명박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차)	기재부		행정효율제고	다수시스템 용·복합	낙찰잔액 활용(2,000)
2012	이명박	세종시 이전기관 정보자원 이전·설치	국토부 등 해당부처		정보화기반강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낙찰잔액 활용(7,018)
2012	이명박	국가 외교통상정보 통합업무관리 시스템 3차 구축	외교부		행정효율제고	다수시스템 용·복합	낙찰잔액 활용(4,300)
2012	이명박	실종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3단계	경찰청		사회안전강화	사회현안해결	낙찰잔액 활용(4,028)
2012	이명박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 확충	행정안전부		정보보호강화	정보보호	낙찰잔액 활용(1,000)
2012	이명박	전자정부서비스 본인확인수단 강화	행정안전부		정보화기반강화	정보보호	낙찰잔액 활용(2,083)
2012	이명박	좀비PC 탐지 및 제거 시스템 확산	행정안전부		정보보호강화	정보보호	낙찰잔액 활용(5,470)
2012	이명박	빅데이터 공통기반 마련 및 활용을 위한 BPR/ISP	행정안전부		정보화기반강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낙찰잔액 활용(1,270)
2012	이명박	경찰 DNA정보 시스템 고도화	경찰청		사회안전강화	사회현안해결	낙찰잔액 활용(695)
2013	박근혜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 ISP	방재청	1,500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3	박근혜	산림재해 통합관리 체계 ISP	산림청	1,000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3	박근혜	119 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재청	1,756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3	박근혜	국가 긴급이송정보망 통합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	방재청	1,677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3	박근혜	의료기기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식약처	5,000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3	박근혜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ISP	국토부	2,715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3	박근혜	국가 기후변화 공동활용체계 구축 ISP	환경부	1,000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3	박근혜	안전정보통합관리 및 생활안전지도서비스 시범구축	안행부 등	2,500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3	박근혜	빅데이터 분석인프라 및 시범서비스 구축	행정안전부	5,000	유능한 정부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3	박근혜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공동 이용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4,467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연도	행정부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분야		비고
					사업 시행 당시	현재 기준	
2013	박근혜	공공정보 민간개방 확대	행정안전부	5,000	유능한 정부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3	박근혜	범국가 영역별 정보시스템 통합방안 수립	행정안전부	1,000	유능한 정부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3	박근혜	범정부 정보자원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성과진단 및 개선	행정안전부	1,000	유능한 정부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3	박근혜	지방이전 교육훈련기관을 위한 실시간 원격강의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1,002	유능한 정부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3	박근혜	법무부-외교부 통합사증 정보시스템 구축	법무부	5,500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3	박근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1차)	권익위	3,133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3	박근혜	국가표준·인증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ISP	산업부	750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3	박근혜	범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 구축	행정안전부	2,500	유능한 정부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3	박근혜	범정부 행정협업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2,600	유능한 정부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3	박근혜	생활민원정보통합 서비스 구축	행정안전부	800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3	박근혜	행정기관 원문정보 공개기능 및 기반 구축	행정안전부	2,000	유능한 정부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3	박근혜	간단 e-납부시스템 구축(1차)	행정안전부	1,769	성숙한 자치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3	박근혜	과세자료 관리 및 체납방지 시스템 BPR/ISP	행정안전부	500	성숙한 자치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3	박근혜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ISP	중기청	1,599	창조경제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3	박근혜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1차 구축	중기청	4,901	창조경제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3	박근혜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차)	기재부	4,853	창조경제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3	박근혜	탄소흡수원 통합관리 (접경지역 임상도 구축)	산림청	1,725	창조경제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3	박근혜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구축	문화부	1,600	창조경제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4	박근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 2차	권익위	2,388	일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4	박근혜	국가표준·인증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산업부	3,500	일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4	박근혜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3차 구축	기재부	3,706	일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4	박근혜	과세자료 관리 및 체납방지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6,095	일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다수시스템 용·복합	

연도	행정부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분야		비고
					사업 시행 당시	현재 기준	
2014	박근혜	범정부 행정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나라e음 2단계	행정안전부	1,150	일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4	박근혜	행정정보공유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HUB] 구축	행정안전부	4,600	일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4	박근혜	통합사증정보시스템구축 2차	법무부	5,000	일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4	박근혜	지방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BPR/ISP	행정안전부	1,500	일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4	박근혜	범죄이력(유·무)증명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경찰청	1,888	일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4	박근혜	국가 자금세탁위험평가시스템구축	금융위	1,150	일잘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4	박근혜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1차)	방재청	3,000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사회 구현	사회현안해결	
2014	박근혜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산림청	4,500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사회 구현	사회현안해결	
2014	박근혜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1차)	국토부, 기상청, 인행부	5,000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사회 구현	사회현안해결	
2014	박근혜	국가긴급 이송정보망 통합 및 공동 활용체계 구축	방재청	1,510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사회 구현	사회현안해결	
2014	박근혜	119소방현장 통합관리 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방재청	2,030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사회 구현	사회현안해결	
2014	박근혜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단계	행정안전부	5,684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사회 구현	사회현안해결	
2014	박근혜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정보체계 구축 ISP	해수부	300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사회 구현	사회현안해결	
2014	박근혜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행정안전부	1,500	개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4	박근혜	민원24 기반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구축	행정안전부	3,740	개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4	박근혜	간단 e-납부시스템 구축(2차)	행정안전부	2,093	개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4	박근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	중기청	10,000	개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4	박근혜	원문정보 공개시스템 2차구축	행정안전부	2,250	개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범정부 공통인프라	

연도	행정부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분야		비고
					사업 시행 당시	현재 기준	
2014	박근혜	공공정보화사업 선진화를 위한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BPR/ISP	조달청	480	개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4	박근혜	공공정보화사업 선진화를 위한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1차 구축	조달청	1,058	개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4	박근혜	범정부 지식경영시스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행정안전부	300	개방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4	박근혜	범정부 정보자원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성과진단 및 지원체계 마련	행정안전부	1,000	전자정부 투자효율 강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4	박근혜	실시간 원격강의 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1,500	전자정부 투자효율 강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4	박근혜	빅데이터 공통기반 및 시범과제 확대 구축	행정안전부	3,500	전자정부 투자효율 강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4	박근혜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구축	통계청	3,500	전자정부 투자효율 강화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4	박근혜	개방형 기술기반 클라우드 업무환경 구현 등 종합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투자효율 강화	범정부 공통인프라	낙찰잔액 활용(1,796)
2014	박근혜	부동산 거래정보 암호화	국토부		전자정부 투자효율 강화	정보보호	낙찰잔액 활용(300)
2014	박근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ISP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투자효율 강화	정보보호	낙찰잔액 활용(1,360)
2014	박근혜	주요정보시스템 주민번호 암호화	행자부 등		전자정부 투자효율 강화	정보보호	낙찰잔액 활용(1,152)
2015	박근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3차 구축	중기청	5,307	국민주권 맞춤형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5	박근혜	민원24 기반의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구축	행정안전부	4,000	국민주권 맞춤형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5	박근혜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5,000	국민주권 맞춤형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5	박근혜	통합재난 안전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15,000	국민이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5	박근혜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3단계	행정안전부	3,778	국민이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5	박근혜	종합 취업정보 및 연관교육 포털(ISP)	노동부	300	국민주권 맞춤형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5	박근혜	국민활용을 위한 위치기반 행정정보 개방지원 ISP	행정안전부	1,000	국민이 안전한 사회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5	박근혜	유아보육·교육 정보 통합서비스 ISP	교육부	1,000	국민주권 맞춤형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연도	행정부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분야		비고
					사업 시행 당시	현재 기준	
2015	박근혜	소비자 피해구제 등 종합지원체계 ISP 수립	공정위	1,000	국민주권 맞춤형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5	박근혜	긴급 신고전화 통합 BPR/ISP	행정안전부	1,000	국민이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5	박근혜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4,676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5	박근혜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	조달청	3,390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5	박근혜	범죄이력 (유무) 증명 관리시스템 구축	경찰청	1,090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5	박근혜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산자부	3,801	국민주권 맞춤형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5	박근혜	빅데이터 공통기반 고도화 및 분석과제 추진	행정안전부	5,000	개방공유 및 변화관리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5	박근혜	원문정보공개시스템 3차 구축	행정안전부	2,067	개방공유 및 변화관리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5	박근혜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구축 2단계	통계청	4,615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5	박근혜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구축	행정안전부	2,620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5	박근혜	국가위임사무 통합관리시스템구축 ISP	행정안전부	1,000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5	박근혜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1차)	행정안전부	8,200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5	박근혜	범정부 클라우드 통합전산환경 ISP	행정안전부	1,500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5	박근혜	범정부 행정협업체계(지식경영) 구축	행정안전부	2,640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5	박근혜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2차)	국토부, 기상청, 안전처	8,000	국민이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5	박근혜	119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행정안전부	3,000	국민이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5	박근혜	행정심판허브시스템구축 3단계	권익위	3,350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5	박근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2차 구축	행정안전부	4,020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5	박근혜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HUB) 확대 구축	행정안전부	4,227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5	박근혜	국가 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금융위	4,000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5	박근혜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진단	행정안전부	1,000	개방공유 및 변화관리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5	박근혜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부	2,610	국민이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5	박근혜	클라우드 PaaS기반 GAPP 시범개발 및 확산	행정안전부	500	개방공유 및 변화관리	범정부 공통인프라	

연도	행정부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분야		비고
					사업 시행 당시	현재 기준	
2015	박근혜	정부IT자원 조달 프로세스 혁신 ISP	행정안전부	500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5	박근혜	정부의사소통채널 통합구축	행정안전부	500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5	박근혜	범정부 협업프로세스 구현(ISP)	행정안전부	500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5	박근혜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BPR/ISP 수립	행정안전부	972	국민주권 맞춤형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5	박근혜	정부3.0 정보보호 기반강화 - 정보보호등급제	행정안전부	1,799	개방공유 및 변화관리	정보보호	
2015	박근혜	정부3.0 정보보호 기반강화 - 사이버 침해사고 훈련장	행정안전부	1,201	개방공유 및 변화관리	정보보호	
2015	박근혜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 BPR/ISP 수립	해수부	654	국민이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5	박근혜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1차)	해수부	5,346	국민이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5	박근혜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2차)	산림청	6,000	국민이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6	박근혜	국가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산업기술자원부	1,909	맞춤형 서비스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6	박근혜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5,288	맞춤형 서비스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6	박근혜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위원회	3,200	맞춤형 서비스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6	박근혜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1차	행정안전부	7,338	맞춤형 서비스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6	박근혜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2차	행정안전부	4,362	맞춤형 서비스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6	박근혜	종합 취업정보 및 연관교육 포털 구축	고용노동부	1,000	맞춤형 서비스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6	박근혜	국가수문기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기상청	2,579	안전한 사회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6	박근혜	긴급신고전화 통합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27,290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6	박근혜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3차)	산림청	4,970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6	박근혜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환경부	3,750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6	박근혜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1,500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6	박근혜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2차)	해양수산부	3,500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6	박근혜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3차)	행정안전부	9,100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6	박근혜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3,200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연도	행정부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분야		비고
					사업 시행 당시	현재 기준	
2016	박근혜	국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금융위원회	3,290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6	박근혜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	통계청	5,734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6	박근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교육부	4,744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6	박근혜	스마트농정 농식품통계 종합DB 구축	농림부	3,140	유능한 정부	사회현안해결	
2016	박근혜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	법무부	1,433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6	박근혜	재외공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확산 사업	외교부	1,800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6	박근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4차)	권익위원회	3,050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6	박근혜	e-발주지원 통합관리시스템 3단계 구축	조달청	2,280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6	박근혜	각 부처의 우수 전자정부 시스템 등 행정한류 확산	행정안전부	1,540	전자정부 인프라	범정부 정책 추진 (다수시스템일시지원)	
2016	박근혜	범정부 행정 협업체계(지식경영) 구축(2차)	행정안전부	2,034	전자정부 인프라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6	박근혜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온나라 보안성 강화 통합)	행정안전부	7,942	전자정부 인프라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6	박근혜	자치단체 정보자원통합관제체계 강화	행정안전부	1,000	전자정부 인프라	정보보호	
2016	박근혜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전환 구축	행정안전부	1,949	전자정부 인프라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6	박근혜	차세대 인증 프레임워크 시범 구축	행정안전부	1,000	전자정부 인프라	정보보호	
2016	박근혜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공동이용체계구축	행정안전부	3,783	전자정부 인프라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7	문재인	차세대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포털시스템 구축	공정위	3,000	맞춤형 서비스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7	문재인	인공지능 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ISP	행정안전부	918	범정부 인프라	정보보호	
2017	문재인	부패방지정보시스템 ISP	권익위	500	유능한 정부	국정과제 추진	
2017	문재인	정부조직·정원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1,106	유능한 정부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7	문재인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 구축(4차)	산림청	4,850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7	문재인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외교부	831	맞춤형 서비스	국정과제 추진	
2017	문재인	문화정보 중심의 다부처 연계시스템 ISP	문체부	500	맞춤형 서비스	다수시스템 용·복합	

연도	행정부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분야		비고
					사업 시행 당시	현재 기준	
2017	문재인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및 외국인정보공동이용 표준연계체계 구축	법무부	14,705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7	문재인	차세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구축	보훈처	4,127	맞춤형 서비스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7	문재인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 고도화	행정안전부	6,743	범정부 인프라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7	문재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 유통 및 공적공간 정보 구축	국토부	1,472	유능한 정부	사회현안해결	
2017	문재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단계	행정안전부	4,628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7	문재인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	조달청	2,000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7	문재인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개선 구축	교육부	2,148	범정부 인프라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7	문재인	국가 마스터데이터 식별 및 관리	행정안전부	2,067	범정부 인프라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7	문재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2단계)	공정위	5,300	맞춤형 서비스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7	문재인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법원행정처, 국토부	7,611	맞춤형 서비스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7	문재인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2단계 1차)	행정안전부	5,000	맞춤형 서비스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7	문재인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1,000	범정부 인프라	범정부 정책 추진 (다수시스템일시지원)	
2017	문재인	범정부 행정 협업체계(지식경영) 구축(3차)	행정안전부	2,314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7	문재인	국가자금세탁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금융위	4,500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7	문재인	전자정부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2차)	행정안전부	1,044	범정부 인프라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7	문재인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고도화	행정안전부	9,848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7	문재인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관리·제공시스템 구축(3차)	환경부	3,750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7	문재인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행안부, 해양경찰청	7,814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7	문재인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3차)	행정안전부	9,182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7	문재인	위치기반의 해양안전지킴이 서비스 구축	해수부	2,726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사업 취소
2017	문재인	정부디렉토리 및 행정표준코드시스템 프레임워크 구축	행정안전부	1,500	범정부 인프라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7	문재인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4차)	행안부, 국토부, 기상청	7,730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연도	행정부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분야		비고
					사업 시행 당시	현재 기준	
2017	문재인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3단계 구축	해수부	3,410	안전한 사회	사회현안해결	
2017	문재인	국가융합망 기반 구축	행정안전부	4,000	범정부 인프라	범정부 공통인프라	사업 취소
2017	문재인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대통령비서실		유능한 정부	국정과제 추진	낙찰잔액 활용(2,648)
2017	문재인	온실가스관리를 위한 배출권 및 상쇄등록부 시스템 개선	국무조정실		유능한 정부	다수시스템 용·복합	낙찰잔액 활용(549)
2017	문재인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범정부 인프라	국정과제 추진	낙찰잔액 활용(650)
2018	문재인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 구축	행정안전부	2,376	범정부 공통인프라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8	문재인	공통기반시스템 운영환경 구조진단 및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행정안전부	1,330	범정부 공통인프라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8	문재인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ISP	행정안전부	1,000	범정부 공통인프라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8	문재인	차세대 전자정부 표준플랫폼 체계 구축 ISP	행정안전부	1,800	범정부 공통인프라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8	문재인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7,300	정보보호	정보보호	
2018	문재인	전자인증 프레임워크 구축(3단계)	행정안전부	1,300	정보보호	정보보호	
2018	문재인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4차)	행정안전부	4,740	첨단기술 시범도입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8	문재인	전자민원서류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ISP	행정안전부	2,000	첨단기술 시범도입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8	문재인	지능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재설계 ISP	행정안전부	2,500	첨단기술 시범도입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8	문재인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1차)	권익위	3,914	첨단기술 시범도입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8	문재인	국가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행안부, 국토부, 기상청	2,160	다수시스템 용·복합	사회현안해결	
2018	문재인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3,635	다수시스템 용·복합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8	문재인	재외공관 스마트 영사민원 포털시스템 구축	외교부	8,485	다수시스템 용·복합	국정과제 추진	
2018	문재인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	법무부	15,698	다수시스템 용·복합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8	문재인	행정서비스 통합 제공	행정안전부	5,028	다수시스템 용·복합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8	문재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면개편 ISP 수립	조달청	2,804	다수시스템 용·복합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8	문재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ISP	법무부	2,322	다수시스템 용·복합	다수시스템 용·복합	

○ 2020 재정사업 심층평가 「전자정부지원사업」 ○

연도	행정부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분야		비고
					사업 시행 당시	현재 기준	
2018	문재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5,415	범정부적 정책 적용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8	문재인	전자기록관리고도화 BPR/ISP	행정안전부	683	범정부적 정책 적용	국정과제 추진	
2018	문재인	고향사랑기부제시스템 구축 ISP	행정안전부	500	국정과제 및 사회현안	국정과제 추진	사업 취소
2018	문재인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행정안전부	1,025	국정과제 및 사회현안	국정과제 추진	
2018	문재인	데이터기반의 통합 자원봉사 서비스 구현 ISP	행정안전부	500	국정과제 및 사회현안	국정과제 추진	
2018	문재인	주민참여 활성화위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고도화 BPR/ISP	행정안전부	536	국정과제 및 사회현안	국정과제 추진	
2018	문재인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대비실	1,500	국정과제 및 사회현안	국정과제 추진	
2018	문재인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1단계)	권익위	4,537	국정과제 및 사회현안	국정과제 추진	
2018	문재인	민·관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 BPR/ISP	행정안전부	859	국정과제 및 사회현안	국정과제 추진	
2018	문재인	전자정부 웹사이트 보안성 강화	행정안전부		정보보호	정보보호	낙찰잔액 활용(1,765)
2018	문재인	전자정부 웹사이트 본인확인확인절차 편의성 제고	행정안전부		정보보호	정보보호	낙찰잔액 활용(1,999)
2019	문재인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1차)	행정안전부	6,370	범정부 공통인프라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9	문재인	국가 기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지문정보 포함)	행안부, 경찰청	6,459	범정부 공통인프라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9	문재인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 확대 구축	행정안전부	2,253	범정부 공통인프라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9	문재인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1차)	행안부, 조달청	2,758	국정과제 및 사회현안	국정과제 추진	
2019	문재인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1차)	행정안전부	7,568	범정부 공통인프라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9	문재인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센터 구축 ISP	행정안전부	800	범정부 공통인프라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9	문재인	클라우드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국토부	5,833	범정부 공통인프라	다수시스템 융·복합	
2019	문재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1차)	행정안전부	3,677	첨단기술 도입확산	다수시스템 융·복합	
2019	문재인	인공지능기반 민원신청시스템 구축	병무청	1,536	첨단기술 도입확산	첨단기술 도입 및 적용확산	
2019	문재인	행정서비스 통합제공	행정안전부	7,390	다수 시스템 융·복합	다수시스템 융·복합	
2019	문재인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2차)	권익위	7,008	다수 시스템 융·복합	다수시스템 융·복합	
2019	문재인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시스템 구축(2차)	외교부	7,634	다수 시스템 융·복합	국정과제 추진	

연도	행정부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분야		비고
					사업 시행 당시	현재 기준	
2019	문재인	부패방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권익위	3,307	다수 시스템 용·복합	국정과제 추진	
2019	문재인	CIQ 정보공유시스템 전면 개편	관세청	2,050	다수 시스템 용·복합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9	문재인	인공지능 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5,853	정보보호	정보보호	
2019	문재인	전자정부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행정안전부	2,256	정보보호	정보보호	
2019	문재인	비밀관리시스템 고도화	행정안전부	5,148	정보보호	정보보호	
2019	문재인	데이터기반의 통합자원봉사 서비스 구축	행정안전부	650	국정과제 및 사회현안	국정과제 추진	
2019	문재인	청와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대통령비서실	2,500	국정과제 및 사회현안	국정과제 추진	
2019	문재인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구축	보훈처	1,045	국정과제 및 사회현안	국정과제 추진	
2019	문재인	국가 폐기물 안전처리 감시체계 구축	환경부	2,254	국정과제 및 사회현안	사회현안해결	
2020	문재인	클라우드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2차)	국토부	3,733	기존 시스템 차세대 전환	다수시스템 용·복합	
2020	문재인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2차)	행안부, 조달청	5,588	최신 Trend 적용	국정과제 추진	
2020	문재인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2차)	행정안전부	3,558	범정부 공통인프라	범정부 공통인프라	
2020	문재인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2차)	행정안전부	4,446	기존 시스템 차세대 전환	범정부 공통인프라	
2020	문재인	국가기준정보 관리체계 3차 구축(지문정보 포함)	행안부, 경찰청	7,532	범정부 공통인프라	범정부 공통인프라	
2020	문재인	범정부 민원상담 365 서비스 구축	행정안전부	4,873	최신 Trend 적용	다수시스템 용·복합	
2020	문재인	디지털 고지 수납 통합서비스 공통기반 구축 ISP	행정안전부	658	최신 Trend 적용	다수시스템 용·복합	
2020	문재인	부패방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3단계)	권익위	4,578	사회문제 해결지원	국정과제 추진	
2020	문재인	재외국민 통합전자행정시스템 구축(3차)	외교부	6,847	기존 시스템 차세대 전환	국정과제 추진	
2020	문재인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	행정안전부	2,998	최신 Trend 적용	다수시스템 용·복합	
2020	문재인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구축	국토부	10,022	기존 시스템 차세대 전환	다수시스템 용·복합	
2020	문재인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BPR/ISP	권익위	847	기존 시스템 차세대 전환	다수시스템 용·복합	
2020	문재인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디지털증거통합분석 플랫폼 개발	대검찰청	5,776	최신 Trend 적용	사회현안해결	
2020	문재인	인공지능기반 병무민원신청시스템 구축	병무청	1,404	최신 Trend 적용	첨단기술 도입 및 적용확산	

○ 2020 재정사업 심층평가 「전자정부지원사업」 ○

연도	행정부	사업명	주관기관	예산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분야		비고
					사업 시행 당시	현재 기준	
2020	문재인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3차 구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496	범정부 공통인프라	정보보호	
2020	문재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2차)	행정안전부	10,346	최신 Trend 적용	다수시스템 용·복합	
2020	문재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원스톱 부동산 거래 체계 구축 BPR/ISP	국토부	808	사회문제 해결지원	다수시스템 용·복합	
2020	문재인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행정안전부	6,912	기존 시스템 차세대 전환	국정과제 추진	
2020	문재인	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 관리체계 구축	환경부	7,929	사회문제 해결지원	사회현안해결	

부록 2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유형별 현황

연도	지원 분야 55)	범정부 공동인프라		첨단기술 도입 및적용확산		다수 시스템 융·복합		범정부 정책 추진 (다수시스템 일시 지원)		국정과제 추진		정보보호		사회현안 해결		합계	
		사업 개수	예산 ⁵⁶⁾ (백만원)	사업 개수	예산 (백만원)	사업 개수	예산 (백만원)	사업 개수	예산 (백만원)	사업 개수	예산 (백만원)	사업 개수	예산 (백만원)	사업 개수	예산 (백만원)	사업 개수	예산 (백만원)
2010	1	7	19,200	1	2,500	11	73,600	6	5,000	3	5,400	40	47,300	1	7,000	69	160,000
	2	14		1		8		38		2		0		0		63	
	3	40		0		0		3		1		0		0		44	
2011	1	11	25,500	1	1,500	24	85,578	0	0	1	8,000	1	0	7	9,800	45	130,378
	2	7		7		11		0		7		1		4		37	
	3	1		1		1		1		1		0		0		5	
2012	1	8	14,600	1	1,500	14	83,059	0	-	0	-	5	-	5	9,500	33	108,659
	2	9		7		6		0		2		1		2		27	
	3	0		0		1		1		0		0		0		2	
2013	1	8	20,102	0	-	11	31,597	0	-	0	-	0	-	8	17,148	27	68,847
	2	1		1		13		1		3		0		0		19	
	3	1		4		1		2		2		0		0		10	
2014	1	7	13,150	0	-	16	48,748	0	-	0	-	1	-	7	22,024	31	83,922
	2	5		2		11		1		4		0		0		23	
	3	3		6		2		0		1		0		0		12	
2015	1	9	25,634	0	-	19	47,465	0	-	0	-	2	3,000	9	45,388	39	121,487
	2	7		2		16		1		4		0		3		33	
	3	3		7		1		2		5		0		1		19	

○ 2020 재정사업 심층평가 「전자정부지원사업」 ○

2016	1	3	13,674	0		17	53,241	1	1,540	0		2	2,000	8	53,250	31	123,705
	2	5		0		8		0		2		1		1		17	
	3	0		3		0		0		4		0		0		7	
2017	1	9	27,790	0	0	11	49,717	1	1,000	4	5,131	1	918	10	44,958	36	129,514
	2	4		1		18		0		3		1		1		28	
	3	1		4		0		1		5		0		1		12	
2018	1	6	17,661	0		8	36,901	0	-	9	18,625	2	8,600	1	2,160	26	83,947
	2	3		6		10		0		1		0		1		21	
	3	1		3		1		0		3		0		1		9	
2019	1	5	23,450	1	1,536	5	25,958	0	-	6	17,894	3	13,257	1	2,254	21	84,349
	2	4		4		7		0		1		0		1		17	
	3	3		3		0		0		2		0		1		9	
2020	1	3	16,799	1	1,404	8	38,483	0	-	4	25,559	1	5,496	2	17,299	19	105,040
	2	3		8		6		0		0		0		1		18	
	3	1		3		1		0		3		0		1		9	
합계 ⁵⁷⁾		76	217,560	5	8,440	144	574,347	8	7,540	27	80,609	58	80,571	59	230,781	377	1,199,848

- 55) 지원분야: 1은 핵심분야, 2와 3은 관련분야를 의미
 56) 예산은 핵심분야(1)로 분류된 사업의 예산만 계산함
 57) 핵심분야(1)의 사업개수와 예산만 합산함

부록 3

사업 목적에 따른 유사중복 가능성 사례

ID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보화사업				유형 ⁵⁸⁾
	연도	부처	사업명	사업비	유형	연도	부처	사업명	사업비	
1	2017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 유통 및 공적공간정보구축	1,472	사회현안해결	2014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관리 대장 및 시스템 구축	700	B
						2015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관리 대장 및 시스템 구축	550	
						2016	국토교통부	건축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6,463	
						2017	국토교통부	건축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5,104	
						2018	국토교통부	건축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6,027	
						2019	국토교통부	건축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4,806	
						2020	국토교통부	건축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4,858	
2	2013	국토해양부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구축	2,715	사회현안해결	2012	기상청	국가 수문기상 예측정보시스템	100	B
						2013	기상청	국가 수문기상 예측정보시스템	50	
	2014	국토부, 기상청, 안행부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구축	5,000	사회현안해결	2014	기상청	국가 수문기상 예측정보시스템	104	
						2015	기상청	국가 수문기상 예측정보시스템	179	
						2016	기상청	국가 수문기상 예측정보시스템	273	
						2017	기상청	국가 수문기상 예측정보시스템	296	
	2015	국토부, 기상청, 안전처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구축	8,000	사회현안해결	2018	기상청	국가 수문기상 예측정보시스템	502	
						2019	기상청	국가 수문기상 예측정보시스템	571	
	2017	행자부, 국토부, 기상청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구축	7,730	사회현안해결	2020	기상청	국가 수문기상 예측정보시스템	573	

ID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보화사업				유형 ⁵⁸⁾
	연도	부처	사업명	사업비	유형	연도	부처	사업명	사업비	
3	2013	산림청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 ISP	1,000	사회현안해결	2010	산림청	산림자원정보화	5,823	B
						2011	산림청	산림자원정보화	7,069	
	2014	산림청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 구축	4,500	사회현안해결	2012	산림청	산림자원정보화	7,331	
						2013	산림청	산림자원정보화	7,974	
						2014	산림청	산림자원정보화	7,855	
	2015	산림청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 구축(2차)	6,000	사회현안해결	2015	산림청	산림자원정보화	7,355	
						2016	산림청	산림자원정보화	7,794	
	2016	산림청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 구축(3차)	4,970	사회현안해결	2017	산림청	산림자원정보화	9,559	
						2018	산림청	산림자원정보화	10,201	
	2017	산림청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 구축(4차)	4,850	사회현안해결	2019	산림청	산림자원정보화	10,281	
					2020	산림청	산림자원정보화	11,757		
4	2010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체계 확산	25,000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9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3,147	B
	2011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30,000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2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30,000	다수시스템 용·복합					
5	2019	국토교통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5,833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8	국토교통부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활용	2,419	B
						2010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정보화(세움터)	3,645	
						2011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정보화(세움터)	4,331	
						2012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정보화(세움터)	4,056	
	2020	국토교통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2차)	6,131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3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정보화(세움터)	3,952	

ID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보화사업				유형 ⁵⁸⁾
	연도	부처	사업명	사업비	유형	연도	부처	사업명	사업비	
						2014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정보화(세움터)	3,834	
						2015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정보화(세움터)	3,659	
6	2018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재구축 마스터플랜수립	1,330	범정부 공통인프라	2013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운영	219	A
						2014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운영	229	
						2015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운영	225	
						2016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운영	219	
						2017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운영	219	
						2018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운영	219	
						2019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운영	219	
						2010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17,072	
						2011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17,580	
						2012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16,217	
						2013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16,217	
						2014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14,687	
						2015	안전행정부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12,577	
						2016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13,017	
2017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지원	12,740							
7	2018	행정안전부	전자기록관리 고도화 BPR/ISP 위탁감리	683	국정과제 추진	2010	행정안전부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	3,595	A
						2011	행정안전부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	3,236	
						2012	행정안전부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	3,339	
						2013	행정안전부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	3,686	
						2014	행정안전부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	3,619	
						2015	안전행정부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	3,438	
						2016	행정자치부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	3,408	

ID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보화사업				유형 ⁵⁸⁾
	연도	부처	사업명	사업비	유형	연도	부처	사업명	사업비	
8						2017	행정자치부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	3,862	B
						2018	행정안전부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	4,036	
						2019	행정안전부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	3,963	
						2020	행정안전부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	4,366	
	2015	고용노동부	종합취업정보 및 연관교육 포털 구축을위한ISP	281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0	고용노동부	고용안전전산망관리	23,188	
						2011	고용노동부	고용안전전산망관리	21,751	
						2012	고용노동부	고용안전전산망관리	24,035	
						2013	고용노동부	고용안전전산망관리	22,646	
						2014	고용노동부	고용안전전산망관리	24,592	
						2015	고용노동부	고용안전전산망관리	24,646	
						2016	고용노동부	고용안전전산망관리	40,722	
	2016	고용노동부	종합취업정보 및 연관교육 포털	865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7	고용노동부	고용전산망관리	39,880	
						2018	고용노동부	고용전산망관리	35,592	
						2019	고용노동부	고용전산망관리	35,613	
201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전산용역	2		
201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전산용역	199		
201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전산용역	200		
201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전산용역	198		
9	2019	행정안전부	공공자원 개방 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2,758	국정과제 추진	2020	행정안전부	공공자원 개방 공유 관리시스템	788	A
	2020	행정안전부	공공자원 개방 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5,765	국정과제 추진					

ID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보화사업				유형 ⁵⁸⁾
	연도	부처	사업명	사업비	유형	연도	부처	사업명	사업비	
10	2015	안전행정부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BPR/ISP 수립	972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7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	2,421	A
	2016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1차, 2차	11,700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8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	5,267	
	2017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2단계 1차)	5,000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9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	5,394	
						2020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	5,993	
11	2015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 피해구제 등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1,000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0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정보망구축	150	B
						201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정보망구축	917	
						201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정보망구축	804	
						2013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정보망구축	320	
	2016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3,200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정보망구축	347	
						2015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정보망구축	517	
						2016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정보망구축	496	
						201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정보망구축	483	
	2017	공정거래 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2단계)	5,300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2,419	
						2018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1,104	
						2019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950	
						2020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1,184	

ID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보화사업				유형 ⁵⁸⁾
	연도	부처	사업명	사업비	유형	연도	부처	사업명	사업비	
12	2014	해양수산부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 ISP	300	사회현안해결	2017	해양수산부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운영	528	B
	2015	해양수산부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 BPR/ISP수립	654	사회현안해결	2018	해양수산부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운영	2,566	
	2015	해양수산부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구축	5,346	사회현안해결	2019	해양수산부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운영	2,461	
	2016	해양수산부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구축	3,500	사회현안해결					
	2017	해양수산부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구축 3단계	3,410	사회현안해결	2020	해양수산부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운영	1,633	
13	2010	행정안전부	국가 공간정보체계구축	20,796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2	행정안전부	행정공간정보시스템유지보수	942	A
						2013	행정안전부	행정공간정보시스템유지보수	1,564	
						2014	행정안전부	행정공간정보시스템유지보수	1,837	
	2011	행정안전부	국가 공간정보체계구축	27,713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5	안전행정부	행정공간정보시스템유지보수	1,778	
						2016	행정자치부	행정공간정보시스템유지보수	1,625	
						2017	행정자치부	행정공간정보시스템유지보수	1,543	
						2018	행정안전부	행정공간정보시스템유지보수	1,269	
	2012	행정안전부	국가 공간정보체계구축	28,731	다수시스템 용·복합	2019	행정안전부	행정공간정보시스템유지보수	500	
						2020	행정안전부	행정공간정보시스템유지보수	263	

58) 유형A: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사업과 전자정부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사례, 유형B: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과 타기관 정보화사업 간 유사중복사례

부록 4

사업 내용에 따른 유사중복 가능성 사례

연도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기관	유사중복 기능	유사중복 타사업	권고 사항
2020	12	법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 콜센터 구축 ISP	권익위	인공지능 기반 상담 시스템	법정부 민원상담 365서비스 구축사업(행정안전부) AI기반 상담 서비스(여러 유관기관)	연계, 참고
2020	15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행안부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모델 개발	연차 사업(2019)	차별화
2020	16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구축(2차)	행안부	전자증명서 열람을 위한 모바일용 웹 증명서 안심 발송 등의 기능	클라우드 기반 민간분야 전자증명서 유통 서비스 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계, 통합
2020	17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원스톱 부동산 거래체계 구축을 위한 BPR/ISP	국토부	부동산거래업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 BPRISP(국토부)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서울시)	활용, 참고
2019	3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법정부 정보유통허브 구축사업	행안부	정보조회 전자증명서 열람 서비스 제공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구축 사업(행안부, 전자정부지원사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유지보수 사업(행안부)	조정, 차별화
2019	4	공공자원 개방 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행안부 등	물품분류 체계화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ISP(행안부, 전자정부지원사업) 정부24 공공시설 개방목록 정보 제공 시범사업(행안부)	참고, 활용
2019	6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 ISP	행안부	문서유통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및 미래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BPR/ISP(행안부, 전자정부지원사업, 2018) 민간분야 증명서 전자증명유통 서비스(과기정통부)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전환 구축(행정안전부, 2016)	연계
2019	7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1차)	국토부	토지이용 인허가에 대한 민원처리 건축물대장 생성/변경/말소 등 건물 ID 관리체계 시범구축	건축인허가 민원업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연계
2019	8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시스템 구축	행안부	전자증명서	클라우드 기반 민간분야 전자증명서 유통 서비스 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ISP(행정안전부)	연계

연도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기관	유사중복 기능	유사중복 타사업	권고 사항
2019	9	인공지능 기반 병무민원신청 시스템 구축	병무청	상담전용 모바일 앱 구축	병무청 모바일 앱 내 '병무민원' 서비스(병무청) 지능형상담서비스(유사기관)	조정, 참고
2019	11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2019)	권익위	국민의견 수렴 창구	온라인 광화문 1번가(행정안전부) 청와대 홈페이지 내 '청원' 기능(대통령비서실) 국민참여예산플랫폼(기획재정부) 국민참여플랫폼 고도화(행정안전부, 2018)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온라인 국민의견수렴 플랫폼 구축운영(국가교육회의, 2018) 주민참여예산정보시스템(대구광역시) 민원제안콜통합관리시스템(대구광역시) 민주주의 서울(서울특별시) 수다(수원시) 주민참여예산(은평구) 스마트 민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충청남도)	연계, 통합
2019	13	부패방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권익위	공공기관별 부패신고 업무담당자 맞춤 권한 및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개별 기관)	확인
2019	15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2차 구축	행안부	사이버 안전시스템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	연계, 활용
2019	18	데이터 기반의 통합 자원봉사 서비스 구축 사업	행안부	타 기관 자원봉사활동 정보 연계로 통합 정보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혁신포털시스템 내 공공기관 행사정보(공공기관 주관 봉사활동, 강연, 문화 행사 등)(기획재정부)	연계, 활용
2019	20	개인 맞춤형 보훈서비스 구축	보훈처	맞춤형 보훈서비스	자체 사업(국가보훈처)	조정

부록 5 **전자정부사업 중 유사중복성 해결 권고 대상사업(2010~2020)**

No.	연도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기관	당해 진행	다음해 진행
1	2020	4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행안부	○	
2	2020	12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 콜센터 구축 ISP	권익위	○	
3	2020	15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행안부	○	
4	2020	16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구축(2차)	행안부	○	
5	2020	17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원스톱 부동산 거래체계 구축을 위한 BPR/ISP	국토부	○	
6	2019	3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 구축사업	행안부	○	x
7	2019	4	공공자원 개방 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행안부 등	○	○
8	2019	6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 ISP	행안부	○	x
9	2019	7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1차)	국토부	○	○
10	2019	8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시스템 구축	행안부	○	○
11	2019	9	인공지능 기반 병무민원신청 시스템 구축	병무청	○	○
12	2019	11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2019)	권익위	○	x
13	2019	13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권익위	○	○
14	2019	15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2차 구축	행안부	○	○
15	2019	18	데이터 기반의 통합 자원봉사 서비스 구축 사업	행안부	○	x
16	2018	2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재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행안부	○	x
17	2018	3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BPR/ISP 수립	행안부	x	○
18	2018	5	차세대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 ISP	행안부	○	○
19	2018	6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행안부	○	○
20	2018	8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BPR/ISP	행안부	x	x
21	2018	10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및 미래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BPR/ISP	행안부	○	○
22	2018	11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재설계 ISP	행안부	○	x
23	2018	12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	권익위	○	○
24	2018	13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행안부	○	○
25	2018	14	전자기록관리 고도화 BPR/ISP	행안부	○	x
26	2018	15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5차)	행안부 등	○	x
27	2018	17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1단계)	권익위	○	○
28	2018	19	행정서비스 통합 제공	행안부	○	○

No.	연도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기관	당해 진행	다음해 진행
29	2018	2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면개편 ISP 수립	조달청	○	×
30	2018	21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BPR/ISP	법무부 등	○	×
31	2018	23	고향사랑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ISP	행안부	×	×
32	2018	24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행안부	○	×
33	2018	25	데이터 기반의 통합 자원봉사서비스 구현을 위한 ISP	행안부	○	○
34	2018	27	전자정부 웹사이트 보안성 강화	행안부	○	×
35	2018	28	전자정부 웹사이트 본인확인절차 편의성 제고	행안부	○	×
36	2017	7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2단계)	공정위	○	×
37	2017	9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단계	행안부	○	×
38	2017	11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안전처	○	×
39	2017	13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4차)	안전처 등	○	○
40	2017	15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고도화	안전처	○	×
41	2017	20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 유통 및 공적공간 정보 구축	국토부	○	×
42	2017	29	범정부 행정 협업체계(지식경영) 구축	행안부	○	×
43	2016	2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국토부 등	○	×
44	2016	4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행안부	○	○
45	2016	6	국가수문기상 통합관리시스템	국토부 등	○	○
46	2016	11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	해수부	○	○
47	2016	18	스마트농정 농식품통계 종합DB 구축	농식품부	○	×
48	2016	24	범정부 행정협업체계(지식경영)구축	행자부	○	○
49	2016	25	자치단체 정보자원통합관제체계 강화	행자부	○	×
50	2015	2	민원24 기반의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구축	행안부	○	×
51	2015	3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체계 구축	행자부	○	×
52	2015	4	통합재난 안전체계 구축	안전처	○	○
53	2015	6	종합 취업정보 및 연관교육 포털 ISP	고용부	○	○
54	2015	7	범정부 행정 공간정보 개방지원 ISP	행자부	○	×
55	2015	14	빅데이터 공통기반 고도화 및 분석과제 추진	행자부	○	×
56	2015	18	국가 위임사무 통합관리 체계 구축 ISP	행자부	○	×
57	2015	20	범정부 클라우드 통합전산환경 구축 ISP	행자부	○	×
58	2015	21	범정부 행정 협업체계(지식경영) 구축	행자부	○	○
59	2015	23	119소방현장 통합관리 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3차	안전처	○	×
60	2015	30	클라우드 PaaS기반 GAPP 시범개발 및 확산	행자부	○	×
61	2015	31	정부 IT자원 조달프로세스 혁신 ISP	행자부	○	×
62	2015	34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BPR/ISP 수립	행자부	○	○

No.	연도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기관	당해 진행	다음해 진행
63	2015	37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정보체계 구축 BPR/ISP	해수부	○	○
64	2015	38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정보체계 구축	해수부	○	○
65	2015	39	산림재해 통합관리 체계 구축(2차)	산림청	○	x
66	2014	4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행안부	○	○
67	2014	11	통합 재난·안전체계 구축	방재청	○	○
68	2014	13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국토부 등	○	○
69	2014	14	국가긴급이송정보망 통합 및 공동 활용체계 구축	방재청	○	x
70	2014	15	119소방현장 통합관리 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방재청	○	○
71	2014	17	수요자 중심 맞춤형 행정서비스 통합 제공(1차)	행안부	○	○
72	2014	19	간단e납부시스템 구축	행안부	○	x
73	2014	25	범정부 정보자원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성과진단 및 지원체계 마련	행안부	○	○
74	2014	26	실시간 원격강의시스템 구축	행안부	○	x
75	2014	27	빅데이터 공통기반 및 시범서비스 구축	행안부	○	○
76	2013	1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 BPR/ ISP	방재청	○	○
77	2013	3	119 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재청	○	○
78	2013	4	국가 긴급 이송정보망 통합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	방재청	○	○
79	2013	8	빅데이터 공통기반 및 시범서비스 구축	행안부	○	○
80	2013	12	범정부 정보자원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성과진단 및 개선	행안부	○	○
81	2013	16	국가표준 인증 통합관리 및 서비스 체계 구축 BPR/ISP	산업부	○	○
82	2013	21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차	기재부	○	○
83	2013	26	생활민원정보 통합서비스 구축	행안부	○	○
84	2012	8	차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 2단계	행안부	○	x
85	2012	9	실종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경찰청	○	x
86	2012	14	나눔포털 구축 2단계	행안부	○	x
87	2012	17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1차)	행안부 등	○	x
88	2012	20	전자문서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ISP수립	행안부	○	x
89	2012	22	국가기관 내외부망간 자료교환시스템	행안부	○	x
90	2012	29	행정기관 좀비PC 탐지 및 제거 시스템 확산	행안부	○	x
91	2012	30	행정정보 공동이용 발전방안 ISP	행정정보 공유추진단	○	○
92	2011	2	국가 대표포털 구축	행안부 등	○	x
93	2011	3	다부처 복지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행안부 등	○	x

No.	연도	사업 번호	사업명	담당기관	당해 진행	다음해 진행
94	2011	4	기업경쟁력지원 체계 구축	산업부 등	○	○
95	2011	5	글로벌 물류·무역정보망 통합	국토부 등	○	○
96	2011	6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행안부	○	○
97	2011	7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국토부	○	○
98	2011	8	범정부 통계조사시스템 구축	통계청	○	x
99	2011	9	국가 외교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외교부	○	○
100	2011	12	실종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경찰청	○	○
101	2011	15	디지털 가축방역체계 구축	수의학검 역원	○	○
102	2011	16	가축 매몰지 종합정보지도시스템 구축	행안부	○	x
103	2011	19	나눔문화확산을 위한 나눔포털 구축	행안부	○	○
104	2011	27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ISP	행안부 등	○	x
105	2011	30	모바일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구축	행안부	○	x
106	2011	31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행안부	○	x
107	2011	32	행정업무 및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행안부	○	x
108	2011	33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시스템 구축	해경청	○	
109	2011	35	재난상황정보 원클릭시스템 구축	소방청	○	x
110	2011	36	국가위험물 안전관리 ISP	국토부	○	x
111	2011	42	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 구축	행안부	○	x
112	2011	43	세금·공과금통합납부 BPR/ISP	행안부	○	x
113	2011	44	의료기기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 ISP	식약청	○	x
114	2010	2	주민생활 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	행안부	○	x
115	2010	3	국가 대표포털 구축	행안부	○	○
116	2010	4	민원서비스 선진화 2단계	행안부	○	x
117	2010	5	범정부 복지전산망 연계 BPR/ISP	행안부	○	○
118	2010	9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수립	통계청	○	○
119	2010	12	온라인 국민소통(민원정보분석) 시스템 구축	권익위	○	○
120	2010	17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구축	수의검역원	○	○
121	2010	24	기업경쟁력 지원체계 구축	지경부 등	○	○
122	2010	25	글로벌 물류·무역정보망 통합 (2단계 구축)	국토부 등	○	○
123	2010	35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	문화재청	○	x
124	2010	66	농림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	농림부	○	x
125	2010	67	비밀관리시스템 1단계 구축	행안부 등	○	x
126	2010	68	좀비PC 탐지 제거 시스템 구축	행안부	○	x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유사중복성 해결 권고를 받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정리하였으
며, 당해 및 다음해 진행 여부는 연구자가 조사한 결과임

부록 6

전자정부지원사업 유사중복성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2010~2020)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2020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의 '디지털 주민민원 창구 서비스' 과업 일부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개발' 사업과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정보지원과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적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순 안내 및 본인 증명서 출력 부분으로 한정되어 민원발급기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확인('20.3.20 기준)하였고 본 사업에서는 신청내용을 출력할 필요없이 시스템으로 입력되고 처리되는 사항으로 중복은 아니라 보고 있음. 다만, 서식 간소화 부분은 지역정보지원과와 협업하여 진행 	반영
2020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 콜센터 구축 ISP	권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과업이 포함된 사업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에서 '범정부 민원상담 365서비스 구축사업'을 통해 범정부 챗봇 개발 공통플랫폼(챗봇상담서비스, 챗봇학습플랫폼, 플랫폼관리, 대화형플랫폼 등)을 구축할 예정이므로 인공지능 기반 상담 시스템 구축 시 상기 사업과 연계 또는 공동 활용을 고려한 ISP 수립, 추진을 권고함 - 또한, 과업범위 중 '지능형 상담도움 플랫폼 설계', '인공지능(AI)기반 대국민 자동상담 기반 설계'는 여러 유관기관에서 AI기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사업 추진 시 참고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p, 31p SFR-014)인공지능(AI)기반 대국민 자동상담 기반 설계)는 별도의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민원상담 365'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도록 사업계획서내에 명시 	반영
2020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2017년 연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기관 정보자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능을 적용하여 예측·예방 활동 및 분석 기술이 강화된 차세대 보안체계 구축·적용하는 사업으로, GEAP 등록된 정보기준으로 중복이 발견되지 않는 등 타 기관과의 유사·중복 및 연계 관련 특이사항 없음 ○ 다만, 과업내용 중 '인공지능 플랫폼(SFR-001~037)', '서비스 모델 개발(SFR-041~053)'의 기능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이 2019년 2차 사업과 동일·유사한 것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46p) 3차 사업 목표 및 범위에 적합한 세부 요구사항 구체화하여 반영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확인되므로, 사업계획서에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 요구내용을 3차 사업의 목표 및 범위에 적합하게 세부 요구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020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구축(2차)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행정·공공·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의 발급 및 제출을 전자문서 형태로 유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2차 사업임 - 본 사업을 통한 전자증명서 열람·발급·유통은 ‘정부24’ 앱 內 ‘전자문서지갑’ 등 모바일 In-App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PC기반 웹사이트에서 전자문서를 생산하고 전자증명서를 열람·발급·유통하는 서비스와는 차별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채널 : 전자증명서 포털서비스, 전자문서지갑(e-문서지갑) ○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클라우드기반 민간분야 전자증명서 유통서비스 구축」 사업에서 전자증명서 열람을 위한 모바일용 웹증명서 안심발송 등의 기능구축이 있음을 확인함 -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선행 추진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및 미래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BPR/ISP」사업 내용(기술적 측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클라우드 기반 민간분야 전자증명서 유통 서비스 구축」 사업과의 연계·협업 방안 마련의 과업이 있었음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2차’ 본 사업 추진 시, 전자증명서 발급 등의 전자증명서 관련 모바일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클라우드 기반 민간분야 전자증명서 유통 서비스 구축」 사업의 모바일 서비스와의 연계·통합 방안에 대해 부처 간 협의하여 공동 인프라 구축을 검토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이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본 사업의 플랫폼 구축범위를 조정 - (p.22) 민간부문 전자문서 유통연계는 기 구축된 ‘클라우드 기반 전자증명서 유통 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국공립대학 연계(5개 대학, 3종)로 추진 - (p.69) 대학증명서 연계로 대체 	반영
2020	스마트 계약 기반의 원스톱 부동산 거래체계 구축을 위한 BPR/ISP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부동산거래업무’ 관련 시스템 유관사업으로 동 기관에서 추진한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구축 BPRISP」 사업이 확인되나, ‘06년 구축 이후 노후화된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산재 되어있던 부동산거래 관리 업무시스템의 통합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한 ISP 사업으로 ‘부동산거래관리 업무프로세스 및 목표모델 설계 등 체계적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p.83) 부동산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관련 기관 및 민간 협의체 구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ISP 결과 도출 ○ (사업계획서 p.20) 현황 및 환경분석 시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p>부동산 거래관리 정보화 미래모델 수립,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 목표모델 구현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등의 과업이 있으므로 BPRISP 사업 추진 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p> <p>○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을 통해 블록체인의 보안성, 투명성을 적용하여 온라인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장안평자동차사업조합의 중고차 매물정보를 연계하여 중고차 차량정보, 매도정보, 성능정보 등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과업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과 거래라는 관점에서 업무적 유사성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참고하기 바람</p> <p>○ 외부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ISP를 수립할 것을 권고함</p> <p>- 「전자정부법」제36조,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지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공하는 대상정보 166종의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통망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p>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및 기존연계기술 등을 이용한 플랫폼 분석, 문제점 도출 등 사업계획서 내용 반영	
2019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 구축사업	행안부	<p>○ 본 사업의 과업내용 중 '정보조회 전자증명서 열람 서비스 제공'은 동일부서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만들어 전자증명서의 수취·열람·보관 기능 등을 구현할 예정이며, 과업내용이 유사하므로 두 사업 간 과업내용을 조정하시기 바람</p> <p>○ 또한, 본사업 추진시 동기관에서 매년 추진 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유지보수사업」과 유사·중복 과업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p>	○ 행공시스템을 기이용 중인 기관은 별도의 로그인 없이 증명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전자증명서 사업의 과업과 중복 없음	반영
2019	공공자원 개방 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행안부	○ 사업계획서 p.24 '단계별 사업목표'에서 물품관련 구축은 '19년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사업계획서 p.6 '20년 사업범위에 '국립대학 공동실험실습관(물품자원으로 분류) 연계 확대 및 기능개발'로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 일관성	○ 단계별 사업계획에 '20년 물품부분 보완함, 반영(25p) ○ 시범사업의 개방목록 정보 데이터 이관사항 포함(25p)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p>있게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p> <p>- 사업계획서 p.25에서 '20년에 국립대 공동실험실습관 연계 확대 및 정부물품 공동활용 기능개선 및 추가 개발, 연계기관 확대에 따른 물품분류 체계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7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ISP'에서 물품의 분류체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은 없으나 물품 기준데이터의 목표모델을 수립하는 과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p> <p>○ 본시스템 구축에 앞서 '정부24'에서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공시설 개방 목록정보(회의실, 강당, 주차장,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중('18.8월~)에 있으므로, 향후서비스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24'의 서비스 및 개방목록 정보를 이관받아 서비스하기 바람, '정부24' 운영부서와 협의하여 본시스템의 접속링크 등을 향후 '정부24'에서 제공하여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바람</p> <p>○ 본사업계획서내 '현황분석'에는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시스템(행정안전부)과 작은 결혼정보센터(여성가족부)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연차별 계획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검토 필요</p>	<p>* 정부24 시스템에서 링크를 통하여 본시스템에 연결되도록 정부24 운영팀과 기협의함</p> <p>○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시스템(행정안전부)과 작은 결혼정보센터(여성가족부)를 본시스템과 링크(1p)</p>	
2019	차세대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 ISP	행안부	<p>○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의 연계사항을 사업계획서 내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이사항 없음. 동 기관 행정정보 공유과에서 2018년에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및 미래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BPR/ISP」를 추진하였으므로, ISP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추진하기 바람</p> <p>○ 본사업내용 중 "행정·공공·민간간의 원활한 전자문서유통서비스를 위한 문서유통 통합포털구축방안 마련"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구축한 '민간분야 증명서 전자증명 유통서비스'와의 연계 또는 협업 방안을 고려하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p>	<p>○ 본 시스템은 공문서 유통시스템으로 민간분야 증명서와의 연계·협업이 불필요</p>	반영
2019	클라우드 기반	국토부	<p>○ 동 기관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p>	<p>○ (P40) 현재 연계 중인 시스템이 아니며,</p>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1차)		<p>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서는 '토지이용 인허가에 대한 민원처리'를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은 단순히 기존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를 고도화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건축인허가 민원업무*'등과 관련해서 해당 정책 및 사업담당자와 업무 협의(토지이용 인허가 통합민원 구축 범위 등)하여 사업과의 관계 설정 및 연계 방안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있음</p> <p>○ '건축물대장생성/변경/말소 등 건물ID 관리체계 시범구축'시, 건축물대장이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등)에도 변경적용이 가능하도록 구현하기 바람</p> <p>○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한 '임대등록 시스템기능 개선'사업과도 중복사항이 없음을 확인함(2019년 과업에는 임대등록 기능개선 등의 과업이 없음)</p>	향후 신규 연계요청 시 운영사업에서 대응	
2019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 시스템 구축	행안부	<p>○ 2018년 선행사업으로 진행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및 미래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BPR/ISP」사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한 「클라우드 기반 민간분야 전자증명서 유통 서비스 구축」와의 연계·협업 방안 마련이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사업에서는 연계·협업 방안이 따른 구축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선행사업의 사업결과물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역할 구분 및 통합·협업 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람</p> <p>- '17년에 「클라우드 기반 민간분야 전자증명서 유통 서비스 구축 사업」(이하 민간 증명서 서비스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이하 ICT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해당 서비스가 대국민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민간 자격 증명 유통·연계 등은 해당 사업으로 기능구현이 된 것으로 확인됨(산출물 확인).</p> <p>- 민간 증명서 서비스 사업과 본 사업은 각각 전자정부지원사업, 'ICT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각각의 공모사업의 성격*으로 판단하였을 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진행한 본 사업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p>	<p>○ '17년 구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클라우드 기반 전자증명서 유통 서비스' 연계 추진(p.5)</p> <p>- 2단계('20년도) 사업추진시 민간부문 문서 유통 확대를 위하여 중계기관 연계 등 추진(p5, p22)</p> <p>※KISA의클라우드기반전자증명서유통서비스 구축은실제서비스가되지않아활용불가(20년 전자증명서유사중복성의견과동일한의견)</p>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과기정통부와 민간 분야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일원화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협의해야 하며, 「클라우드 기반 민간분야 전자증명서 유통 서비스 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된 기능 및 데이터를 활용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동기관 정보공개정책과에서 추진예정인 「차세대전자문서유통시스템구축ISP」에서 민·관간 전자문서유통체계인 '문서24' 서비스의 확대 방안 마련을 수행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 시 중복과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범위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2019	인공지능 기반 병무민원신청 시스템 구축	병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요청서 상 '상담전용 모바일 앱 구축(3p)'은 기운영중인 병무청 모바일 앱("병역안내")내 '병무민원' 서비스와 일부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모바일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하기 바람 - (참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추진된 공공분야의 지능형 상담서비스 관련 유사사업을 조사하여 제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p) '상담전용 모바일 앱 구축' 삭제 및 병무청 모바일(병역안내) 앱 내 구축 수정 - (26p) 대국민용 접속채널 수정 - (35p) (SFR-014) '기존 병무청 앱 내 구축' 명시 	반영
2019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2019)	권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견 수렴 창구는 본 사업의 대상시스템 외에 행정안전부 "온라인 광화문 1번가" 및 대통령비서실 "청와대 홈페이지" 내 '청원' 기능,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플랫폼" 등 다수 존재하므로,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중복 기능은 통·폐합하여 국민의견 수렴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한국재정정보원)의 국민참여예산 온라인 플랫폼은 '예산'에 대한 특정분야, '예산참여제도'라는 특정 제도에 대한 플랫폼인 것은 확인되나, 국민신문고 내에도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 등의 기능이 확인되므로, 중복 기능 개발이라 볼 수 있음 ○ 행정안전부, 국가교육회의 등 타기관에서 분야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유사목적의 가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중복기능은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에 추진한 「국민참여플랫폼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수용 -각급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참여서비스*는 그 목적과 유형 다양하여 서비스 이용 주체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점이 있음 -따라서,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사업과 병행하여 참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과 서비스 연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국민신문고 입장에서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 * 참여예산, 광화문1번가, 청와대 청원, 민주주의 서울 등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p>사업은 기 운영 중인 “온라인 광화문 1번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및 “국민생각함”과 유사 기능은 연계·통합을 추진할 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교육회의에서 2018년 추진 중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온라인 국민의견수렴 플랫폼 구축운영」사업은 의견수렴 창구라는 점에서 본 사업과 목적이 유사하고, 대입제도 개편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은 광화문1번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음에 따라 유관 사업과 연계·공동활용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처리시스템을 별도 구축·운영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의 유사목적의 가진 시스템과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유사 시스템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정보시스템” 및 “민원제안콜 통합 관리시스템”, 서울특별시 “민주주의 서울”, 수원시 “수다”,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등 - 유사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 민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충청남도 「충청남도 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19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권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공공기관별 부패방지 업무(접수·처리, 신고 등)”를 공공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으로, - 본 사업의 내용 중 “공공기관별 부패신고 업무담당자 맞춤형 권한 및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최근 개별기관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개별기관들이 본 사업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반부패 업무처리 기능」과 중복된 기능을 구축하지 않도록 확인·검토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 유사시스템인 자치단체 청백e 2020년 연계로 명시 * 현재 청탁법이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절차대로 시스템 구축한 예는 없음[중복 없음] 	반영
2019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2차 구축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에서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결과물의 연계 또는 공동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등 대상기관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영)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KLID 국정과제 실무협의회(분기별 1회, 현재 4회)를 통해 진행내용이나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향후 위협 정보 관련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서로 차이가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 및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사업 등 분야별 사이버 안전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관계기관가 협의하여 분석 모델 등의 연계 또는 공동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연계를 위해 STIXX 등 표준형식을 따르고 있음	
2019	데이터 기반의 통합 자원봉사 서비스 구축 사업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의 내용 중 '타 기관 자원봉사활동 정보 연계로 통합 정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포털 시스템' 에서도 '공공기관 행사정보(공공기관 주관 봉사활동, 강연, 문화 행사 등)'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중복 사항이 없는지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알리오(www.alio.go.kr) 서비스와 별도로 국민의 실생활에서 유용한 공공기관의 정보를 종합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공공기관 혁신포털 홈페이지 오픈 예정('19년 4월 예정) - 기획재정부 사업의 제안요청서에는 '1365자원 봉사포털'과 연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65자원 봉사포털은 공공기관 행사정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민간시설, 기업체 등 전체 범위로 중복 사항 아님 	반영
2018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재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 중 '공통기반 시스템 전환계획 수립 및 가이드 작성(SFR-007, SFR-008)' 및 '표준연계 플랫폼 설계 및 구축방안 제시(SFR-009)'는 공통기반 대상인 9개 응용SW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기반 대상 중 '주민등록시스템'은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 “건축행정시스템”은 2017년에 「건축행정시스템 재개발 마스터플랜(ISMP)수립 용역」사업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2017년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BPR/ISP」사업을 추진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플랫폼을 고려한 공통기반시스템의 운영은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주체인 지자체 및 주무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환경 개선방안 도출 및 목표시스템 구축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고, 운영기관(지자체 및 업무별 중앙부처)가 공통기반운영 방향을 결정 -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ISP의 경우, 업무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소요내역만 산출하고, 소요자원 및 예산은 본 사업에서 산출 - 지방세시스템이 현재 중앙집중식으로 추진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p>시스템 운영 및 '17년도부터 자치단체의 의견을 여러 방법으로 수렴하고 있음, 시스템 측면에서만 판단하자면 공통기반의 시스템을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자치단체의 예산, 조직, 인력 등이 관련된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의견 최대한 반영</p>	
2018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구축 BPR/ISP 수립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등과 같은 기 운영 중인 유사 서비스와의 통합창구 구축에 대한 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대국민 서비스가 중복 제공되지 않도록 사업내용을 추가 반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이 단일한 웹사이트에서 모든 행정기관의 유휴 자원을 검색하고 예약하도록 기 운영 중인 대국민 서비스기능에 대한 통폐합 검토 필요 ○ 향후 구축될 “민·관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의 타 기관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가 반영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대국민 서비스는 타 기관 활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부족하여 기관별로 유사한 서비스를 구축·운영함에 따라 예산낭비 문제가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음(2017.5. 디지털타임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향후 구축될 “민·관 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의 경우에도 타 기관에서 유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타 기관 의견을 반영, 활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과업수행이 필요함 ○ 본 사업의 내용 중 “지도 서비스”의 경우, 지도 S/W 별도 개발 및 도입 등을 지양하고,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V-world를 사용하여 연계할 것을 권고함 ○ 조달청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에는 “유휴재산 조사”, “유휴행정재산”, “통계기능” 등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일부 지자체(서울, 부산, 광주, 대전)와 여가부(작은 결혼정보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자원공유서비스를 미미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구축된 공유서비스는 본 사업의 시스템 및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p1,49) ○ p20, 22, 25, 27 지도서비스 구축 시 V-world 연계검토 하도록 명시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2018	차세대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 ISP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 중 '전자정부 클라우드 어시스트 목표모델 수립(SFR-008)'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화 컨설팅 과제」에 선정된 “클라우드 기반 서울시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컨설팅” 사업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요구사항은 지능정보기술(IoT, 빅데이터, AI 등) 공동활용방안을 정의하고, 공동활용대상 100대 서비스 후보의 상세기능명세 및 구축 로드맵 수립을 명시하고 있음 - “클라우드 기반 서울시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컨설팅”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클라우드 기반 도시 안전망 플랫폼*을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하여 향후 타 자치단체 확산을 고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클라우드 기반 도시 안전망 플랫폼을 자치단체에 확산 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과업 내용 중 '클라우드 서비스 카탈로그 목표모델 수립(SFR-011)'은 조달청 “나라장터”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클라우드 스토어 씨앗”과 중복 기능이 구축되지 않도록 ISP를 수립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요구사항은 공개SW, 공통컴포넌트, 상용솔루션들이 실시간 검색·설치·이용되고, 유무상 이용 라이선스에 따라 마켓 과금 체계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나라장터”에서는 ‘종합쇼핑몰’에서 데이터베이스, 보안, 백신 등 일부 상용 SW를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확인되며, “클라우드 스토어 씨앗”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상용 SW를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확인됨 -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유사 기능이 확인되는 시스템과 중복되지 않도록 ISP를 수립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 기반 연계 중복성 검토에 PaaS-TA와 온나라 클라우드 검토 결과 반영(P75) 	반영
2018	인공지능기반 적응형 보안시스템 구축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간 연계방안에 대해 추가 반영하여야 함(붙임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 행정안전부 정보기반 보호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사업 등 분야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진화형 사이버 자가방어 기술개발 과제를 3 세부에 거쳐 진행 중('17~'20),(1차 사업 세부 : 능동적 사전보안을 위한 사이버 자가변이기술 (ETRI, 79.8억), 2차 사업 세부 :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사이버 안전시스템 등과 협력·연계하여 분석 모델 개선 및 재활용 등을 검토하여 중복없는 효율적 사업 추진	자가학습형 사이버 번역기술 개발 (KISA, 84.25억), 3차 사업 세부 : 진화형 사이버 방어 기술개발(시큐레이어, 52억) ○ 주요내용은 DNS, 네트워크 토폴로지 등의 능동적 변화기술, 시스템 내 자가취약 점 점검 및 제거, 손상파일 복구 등 자가복구기술, 1, 2세부 수행 내용에 대한 가시화 기술 등 으로 진행되고 있어, 해당 사업과의 중복성 없음	
2018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BPR/ISP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 중 '온라인 주민조례개폐청구 기능'은 2017년에 개발한 "온라인 조례 개폐청구 시스템"과 유사하므로 중복 기능이 개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 세부내용에 반드시 개발된 시스템 재활용 방안 마련을 명시하기 바람 ○ 과업내용 중 '자치법규 정보 관리' 및 '자치법규 업무 정보채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및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및 "정부입법지원센터" 내 일부 기능과 유사하며, 이용자가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법령정보도 함께 검색·조회해야 하는 수요를 감안하여 대국민 서비스 일원화에 대한 방안 마련을 사업계획서에 추가하기 바람 ○ 과업내용 중 '지방의회 의안 정보 통합제공 기능'은 자치단체에서 기 운영 중인 의안정보시스템과 통합 및 대국민 서비스 일원화에 대한 방안 마련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 별도 의견 없음. 다만 서비스 일원화 추진 시 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중복 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ISP를 추진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에 있는 전자서명 기능을 활용하면서, 모바일 서명기능 구현, 공인인증서 대체 등 다양한 서명을 위한 방안 수립(p32) ○ 법제처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치법규 정보는 중복이 아닌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관련 내용 추가하여 보완(p15) 	반영
2018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및 미래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BPR/ISP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전자문서를 유통·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부2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7년에 추진한 「클라우드 기반 전자증명서 유통 서비스 구축」사업과 일부 유사한 기능이 확인되나, 유사 시스템과의 연계·협업을 통해 중복 기능이 개발되지 않도록 미래모델 설계를 명시(SFR-037)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24, 행정정보공유센터 등과 기능중복 없도록 할 것이며, 행공시스템과는 유기적인 연계방안 수립 ※ KISA의 클라우드 기반 전자증명서 유통서비스 구축은 실제서비스가 되지 않아 활용 불가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p>있으므로, 반드시 중복 기능이 개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 중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과 관련한 요구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7년에 추진한 「클라우드 기반 전자증명서 유통 서비스 구축」사업과 유사하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정부24”는 정부에서 발급하는 전자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3자 발급요청, 발급비용 결제, 전자문서 보관함 등 일부 유사한 기능이 확인되므로 중복 기능이 개발되지 않도록 연계 방안을 도출하기 바람 		
2018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서비스 재설계 ISP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 중 ‘목표모델(SFR-013)’ 내 ‘지능형 공통 플랫폼 구축방안 수립’은 동 기관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 ISP」사업과 유사한 내용이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ISP를 수립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업내용에서 명시하는 공통기반 플랫폼은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기관별로 구축하여 별도 운영되고 있는 지능형 기술 중 상호운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통이 되는 모듈을 정의하고 구체화하여, 타 기관이 해당 모듈을 별도 구축하지 않고 공통모듈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임 -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전자정부 플랫폼 구축 ISP」사업은 정보자원 공동활용(공유) 서비스 등록·관리·활용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과업내용 중 ‘지능정보기술(IoT, 빅데이터, AI 등) 공동활용 방안 정의’ 및 ‘공동활용대상 100대 서비스 후보의 상세기능명세 및 구축 로드맵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는 각 기관에서 지능정보기술을 쉽게 적용·활용할 수 있는 공통 기반 또는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내용이라고 판단됨 ○ 과업 내용 중 ‘목표모델(SFR-013)’ 내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발굴 및 서비스별 모델 도출’은 정부업무별로 구축되어 있는 챗봇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ISP를 수립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정부24”는 2017년에 카카오톡 자동응답 API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로드맵 수립의 실행과제 도출 시 관련 사항을 파악하여 중복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 서비스 구축시 관련성이 높은 담당부서(정부24)와 사전협의를 통해 상호협업합의, 정부24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현황 등도 구체화하여 제시, 서비스도입 전후 비교, ISP를 통한 현황분석의 대상, ISP를 통해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 절차, ISP를 통해 도출해야 할 구체적 실행과제 예시 등으로 과업범위를 상세화하여 요건 명시 (p5~6, p21~24, p38, p51~54)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활용한 대국민 민원사무 채팅안내 서비스를 시범 구축하였고, 2018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2단계 2차)」사업에서는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 구축하고자 함 - 또한, 지능형 정부 패러다임에 맞추어 기관별로 챗봇 서비스를 구축·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사례가 다수 존재함		
2018	지능정보 기반 차세대 국민신문고 구축	권익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문고'의 정책참여 서비스와 '국민생각함'의 유사성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 사업에서 두 시스템 간 통합 추진 예정으로, 특이사항 없음 ○ 국민의견 수렴 창구는 본 사업의 대상시스템 외에 행정안전부 “온라인 광화문 1번가” 및 대통령비서실 “청와대 홈페이지” 내 ‘청원’ 기능,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플랫폼” 등 다수 존재하므로,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중복 기능은 통·폐합하여 국민의견 수렴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행정안전부, 국가교육회의 등 타 기관에서 분야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유사 목적을 가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중복 기능은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추진 중인 「국민참여플랫폼 고도화」사업은 기 운영 중인 “온라인 광화문 1번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및 “국민생각함”과 유사 기능은 연계·통합을 추진할 예정임 - 국가교육회의에서 2018년 추진 중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온라인 국민의견수렴 플랫폼 구축운영」사업은 의견수렴 창구라는 점에서 본 사업과 목적이 유사하고, 대입제도 개편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은 광화문1번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음에 따라 유관 사업과 연계·공동활용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민원 처리 시스템을 별도 구축·운영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 추진 시 자치단체의 유사 목적을 가진 시스템과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는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온-오프라인 국민참여서비스를 제공하되, 열림소통포럼 등의 오프라인 참여기능을 구축하고, 국민신문고는 연계를 통해 민원·국민제안·국민생각함(정책제안) 등 온라인 중심의 참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문서로 정리 ※ 국민신문고-국민참여 플랫폼 연계(방안 협의 결과('18.3.6) 제출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시스템 :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정보시스템” 및 “민원제안콜통합관리시스템”, 서울특별시 “민주주의 서울”, 수원시 “수다”, 은평구 “주민참여예산” 등 - 유사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 민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충청남도 「충청남도 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18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행안부	<p>○ 과업내용 중 ‘국토부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은 행정안전부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내 ‘기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 내용과 유사하므로 메타데이터 관리 기준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메타항목 선정 및 표준화 등 사업간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p>	<p>○ 데이터 소유기관(관리기관) 주관으로 사업추진(감독, 검사)하며, 기준데이터관리 공통기능을 활용하여 관리기관이 이용기관에 대해 직접 데이터 품질관리 지원하므로 국토부가 직접 메타데이터를 관리하여 이원화되지 않도록 추진</p>	반영
2018	전자기록관리 고도화 BPR/ISP	행안부	<p>○ 과업내용 중 ‘국토부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은 행정안전부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내 ‘기관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 내용과 유사하므로 메타데이터 관리 기준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메타항목 선정 및 표준화 등 사업간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업내용에서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중앙↔지방) 간의 업무 연계·활용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영구기록관리시스템(AMS) 구축을 위한 표준 SW의 기능 요건, 프로세스 설계, 표준 SW 보급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서울기록원 개원(’18.7.)을 대비하여 2017~2018년에 추진 중인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에서 AMS를 구축할 예정이며, 경상남도는 경상남도기록원 개원(’18.5.21.)을 대비하여 「경상남도기록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AMS)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서울특별시 및 경상남도 외 타 광역시도에서는 기록원 설립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본 사업의 결과로 표준AMS를 ’19년~’20년에 구축하여도 보급할 광역시도가 확정되지 않음 - 따라서, 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경상남도기록원 	<p>○ 기존 연구과제의 내용은 참조하나 실업무 분석 시 중복과업이 되지 않도록 산출물 수준 관리</p>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p>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표준AMS시스템으로 선정하거나 표준화하여 타 광역시도에 보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ISP를 수립하기 바람</p>		
2018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5차)	행안부	<p>○ 과업내용 중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 내 모의 피해예측 시뮬레이션 기능’은 국토교통부(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2018년 추진 중인 「낙동강권역 지방·도시하천 홍수위험지도 제작」사업과 공간적 범위 및 결과물이 유사하므로 중복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홍수통제소)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하여 홍수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예측되는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낙동강권역의 지방·도시하천에 대한 홍수 위험지도 제작 사업을 추진 중이며, - 본 사업의 1차 사업(‘14년 사업)의 과업내용 중 ‘호우 피해위험도 예측 시스템’에 ‘홍수위험지도 관리’라는 세부 기능이 확인되고 있고, - 본 사업의 시스템은 공간정보와 수문기상 정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재난유형별 모의상황을 설정하여 상황별 피해지역 지도, 피해액 등을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정보는 ‘홍수위험지도’와 다르지만 - 피해발생 지역 예측, 피해 규모 예측 등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양 시스템 간의 도출되는 정보의 연관성은 높다고 판단됨 - 따라서, 국토교통부(홍수통제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수위험지도’와연계·활용 방안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람 	<p>○ 국토부에서 제작 예정인 지도는 ‘15년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에서 활용한 낙동강권의 호우피해예상도*(70개 시군구, 185개 제작)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 : 본 사업에서 지도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으며, R&D에서 제작된 지도를 활용하여, 피해예측 기능을 개발한 사업임 - 호우피해예상도 : 행안부 자체 R&D 과제 성과물(‘15년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지방하천/소하천 대상으로 ’19년까지 지도 제작 예정) 	반영
2018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1단계)	권익위	<p>○ 타 기관에서 기 구축하여 운영 중인 유사 시스템이 다수 존재하고 사업계획서에 대국민 통합창구 개설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존 유사 시스템들과의 통합방안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국민을 대상으로 중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사업내용을 추가 반영하여야 함</p>	<p>○ 기 운영중인 청렴신문고는 신고만을 위한 창구로 불필요한 기능은 없는 상황임. 단지 신고의 불편함 및 신고정보 연계의 한계를 본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고, 부패관련 통합정보 제공</p>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시스템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청백e", 서울시 서대문구 "청렴포털" 등 ○ 과업내용 중 '통합연계체계구축'은 전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과 연계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계획서에 내용이 없으므로 추가반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에서 구축하려는 하위 시스템들*은 모든 타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내용으로 확인됨 * 위원회 부패방지 업무처리 시스템, 지식서비스 시스템, 부패정보분석 시스템 ○ 향후 구축될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타 기관 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가 반영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동 기관에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및 "민원통합분석시스템"은 타 기관 활용율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부족하여 기관별로 유사한 신문고 서비스를 구축·운영함에 따라 예산낭비 문제가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음(2017.5. 디지털타임즈 등) - 따라서 향후 구축될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경우에도 타 기관에서 유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타 기관 활용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과업수행이 필요함 ○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시스템 구축 및 부패방지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 2017년 추진한 기능개선 사항이 본 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진행된 사업은 청탁법 개정반영을 위해 긴급히 추진된 사업임. 본시스템과 중복내용은 없음 	
2018	행정서비스 통합 제공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별 과업내용 중복성을 검토한 결과 중복관련 별도의견 없음 ○ 과업내용 중 '정부서비스 연계-교육부(SFR-099~100)'는 대학교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및 대학교학적부증명서 등을 서비스할 예정으로 2017년에 ICT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으로 추진한 「클라우드 기반 전자증명서 유통 서비스 구축」사업과 유사한 기능으로 판단됨. 따라서 중복 기능은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SA의 클라우드 기반 전자증명서 유통 서비스 구축은 실제 서비스가 되지 않아 활용 불가 	반영
2018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및 경기도에서는 하도급 관련 계약정보관리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를 포함 지자체도 사용할 수 있는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시스템 전면개편 ISP 수립		<p>대금청구·지급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을 2017년에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서울특별시에서는 기 구축하여 운영 중임. 추후 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시스템 구축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ISP 수립 시 하도급 관련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시스템도 포함하여 검토 추진 필요</p> <p>○ 또한, 범정부EA포털 정보등록 기준으로 나라장터 이외 26개 자체조달시스템과 별도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도 “전자조달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ISP 사업추진시 검토 필요</p>	<p>시스템으로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검토 후 반영</p> <p>○ 항공우주연구원 자체 구매시스템 ISP 포함하여 검토</p>	
2018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구축 BPR/ISP	법무부	<p>○ 과업내용 중 ‘시스템 기반구조 최적화 및 개선(SFR-008)-멀티미디어 자료(동영상/사진) 통합 관리·유통기반 설계’ 시 검토가 필요한 유관시스템을 조사하여 제시하였음</p> <p>○ 과업내용 중 ‘차세대 형사사법 미래 서비스모델 설계(SFR-006) - 빅데이터 GIS 플랫폼 구축’은 분석대상시스템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경찰, 검찰, 법무부 시스템을 모두 분석대상시스템에 포함시킬 경우,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기 추진하여 구축 중인 시스템과 유사하므로 연계를 고려하고 중복기능은 제외하여 추진하기 바람</p> <p>- 대검찰청은 2017년에 「지능형 범죄예방 협업체계 구현을 위한 시범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음. 따라서 대검찰청은 범죄관련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사업에서는 대검찰청에서 개발한 서비스를 제외하기 바람</p> <p>- 또한, 경찰청에서도 2017년 ~ 2018년까지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 프로그램·플랫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본 사업에서는 경찰청에서 개발한 서비스를 제외하기 바람</p> <p>- 분석대상에 각 기관(경찰, 검찰, 법무부)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고 공통시스템만이 포함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음</p>	<p>○ 본 BPR/ISP 수립시 검찰과 경찰에서 기 추진하여 구축 중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중복기능 배제 및 연계, 데이터 확보 가능여부(공통시스템 포함시) 등을 검토하여 추진</p>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2018	고향사랑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ISP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관(기초자치단체)에서 산하 재단법인에 위탁하여 지역 기부금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된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으로, “고향사랑 기부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 시 유사 시스템과의 연계·통합 필요성을 고려하여 ISP를 추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진주시는 “진주시 다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이하 좋은 세상)”을 운영하고 있음 - 진주시는 “좋은 세상”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탁하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된 기부금을 경상남도 진주시의 복지사각계층을 찾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확인됨 ○ 또한, 결제 서비스 등을 위해 민간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시 민관 협업 및 연계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시 필요 	사업취소 -사유: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이 행안위법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취소	해당 없음
2018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 중 유관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결 관련 요구사항(SFR-013~029)은 본 사업으로 구축된 “국민참여 플랫폼” 내 연계 시스템별 기능으로 별도 구축할 경우 중복이 우려됨. 따라서 해당 요구사항에서 연계를 명시한 유사 시스템 내 유사 기능은 대국민 서비스 창구 일원화를 위해 완전 통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협의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요구사항에서 명시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및 “국민생각함” 내 유사 기능은 대국민 서비스 창구 일원화를 위해 3개 시스템 간 기능 통폐합이 필요함 - 대통령비서실 “청와대 홈페이지” 내 ‘청원’ 기능은 본 사업과 통폐합이 필요함 ○ 과업내용 중 열린소통포럼 관련 요구사항(SFR-007~012)은 제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및 “대한민국 청와대” 내 토론방과 목적이 유사하나 오프라인 모임 자료관리 및 생방송 중계 등 일부 차별된 기능이 확인됨 ○ 과업내용 중 국민디자인단 관련 요구사항(SFR-032~035)은 국민 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내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문고 등과 차별화 방안협의완료(별첨),청와대 내부업무관리시스템 연계 등도 MOU 체결(별첨)을 통해 협의 ○ 행안부·기재부 사업등도 담당자 협의 완료하였으며, 시스템 구축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연계 방안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에서는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다양한 참여서비스를 국민에 제공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의 민원.국민제안.국민생각함 관련 서비스를 국민참여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지원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p>특별관>국민디자인과제' 기능이 확인되므로, 중복 기능은 제외하고 연계·공동활용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p> <p>○ 국가교육회의에서 2018년 추진 중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온라인 국민의견수렴 플랫폼 구축운영」사업과 연계·공동활용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견수렴 창구라는 점에서 본 사업과 목적이 유사함 - 대입제도 개편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은 광화문1번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음에 따라 유관 사업과 연계·공동활용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2018	데이터 기반의 통합 자원봉사서비스 구현을 위한 ISP	행안부	<p>○ 본 사업에서 대상으로 하는 “1365자원봉사포털”은 현재 ‘맞춤형 나눔정보 추천’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본 사업에서 계획하는 맞춤형 매칭 서비스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봉사자 유형, 지역, 소요시간 등 개인이 선택한 조건을 기반으로 ‘일감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16년에 추진된 「1365나눔포털의 G-클라우드 전환 등 고도화」사업에서는 봉사자에게만 제공하던 ‘일감 추천’ 서비스를 봉사 수요자인 기업에게도 ‘맞춤형 봉사자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발한 것으로 확인됨 - 본 사업에서 계획하는 수요와 공급간 맞춤형 매칭 서비스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기능과의 차별성이 계획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p>○ 현재 운영 중인 “1365자원봉사포털”과 연계 중인 시스템을 명시하였으나, 연계되고 있지 않은 타 기관의 자원봉사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및 통·폐합 가능성을 ISP 수립 시 검토하여 대국민 서비스가 중복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p>	<p>○ 현재, 봉사자의 유형/지역/소요시간 등 개인이 선택한 조건을 기반으로 ‘일감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p> <p>○ 2016년에 추진된 「1365나눔포털의G-클라우드전환등고도화」 사업에서는 봉사자에게만 제공하던 ‘일감추천’ 서비스를 봉사수요자인 기업에게도 ‘맞춤형봉사자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개발</p>	반영
2018	전자정부 웹사이트 보안성 강화	행안부	<p>○ 본인확인절차 사업과 사업의 취지와 기술적 접근이 중복될 가능성 있음.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지 등 검토 필요할 듯</p>	<p>○ (미반영 사유) [전자정부 웹사이트 보안성 강화], [전자정부 웹사이트 본인확인절차 편의성 제고 사업]은 집행잔액 사업으로,</p>	미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2개 사업 통합발주 시 약 4,240백만원으로 집행잔액 활용한도(30억원)를 초과함 → 2개 사업으로 개별 발주 - 개별 발주 금액 : 전자정부 웹사이트 보안성 강화(2,206백만원), 전자정부 웹사이트 본인확인절차 편의성 제고(2,045백만원) ○ (근거)전자정부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0조의2(집행잔액의사용)2항 - 장관은 집행잔액 사용 시 국회 상임위에서 결정한 집행잔액 활용한도(사업별 30억원)를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활용계획을 상임위에 보고 또는 상임위 간사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개정, 국회·감사원 지적 등의 사업은 집행잔액 활용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2018	전자정부 웹사이트 본인확인절차 편의성 제고	행안부	○ 보안성 강화 사업과 사업의 취지와 기술적 접근이 중복될 가능성 있음.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지 등 검토 필요할 듯	○ (미반영 사유) [전자정부 웹사이트 보안성 강화], [전자정부 웹사이트 본인확인절차 편의성 제고 사업]은 집행잔액 사업으로, 2개 사업 통합발주 시 약 4,240백만원으로 집행잔액 활용한도(30억원)를 초과함 → 2개 사업으로 개별 발주 - 개별 발주 금액 : 전자정부 웹사이트 보안성 강화(2,206백만원), 전자정부 웹사이트 본인확인절차 편의성 제고(2,045백만원) ○(근거)전자정부지원사업관리지침제20조의2(집행잔액의사용)2항 - 장관은 집행잔액 사용 시 국회	미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상임위에서 결정한 집행잔액 활용한도(사업별 30억원)를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집행잔액 활용계획을 상임위에 보고 또는 상임위 간사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개정, 국회·감사원 지적 등의 사업은 집행잔액 활용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2017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2단계)	공정위	○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모니터링, 사고사례, 리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 필요	- 본 시스템은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제공하는 리콜정보 수준과 동일한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의 리콜정보를 이미 활용하고 있으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통표준코드(GTIN-13)와 연결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함	반영
2017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단계	행안부	○ 모바일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은 기존에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임에, 삭제 혹은 사업범위 조정이 필요	'15년 교통정보 제공은 교통사고, 공사 등의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고, '17년은 현재의 교통정체·원활구간을 시각적으로 제공하여, 빠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내용임	반영
2017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안전처	○ 해양수산부의 “지능형 해양수산안전정보체계” 사업의 어선안전관리를 위한 상황전파, 모니터링, 선박위치정보 연계와 해양경비안전 상황관리를 위한 어선정보 연계와 관련되어 보임. - 서비스 내용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중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위해 연계방안 등 서비스 방안 제시 필요 - 각각의 업무를 구분할 수 있는 관련 근거나 자료 등 제시 필요	- (반영) 어선위치및정보의 원데이터는 해경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해수부에 연계 제공 해경과 해부수 사업의 연계성 검토는 기 실시 되었음	반영
2017	국가 수문기상	안전처	○ 가뭄전망정보 생산은 현재, 기상청에서 별도 운영중인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재난안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4차)		“종합가뭄정보시스템”과의 중복성 여부, 차별성 서술 필요	종합가뭄정보시스템과 중복성 X -ISP에'가뭄정보제공시스템구축('17년)'계획포함 -본사업에서기상청현업모델을활용한멀티모델 양상블구축('17) -기존의UM3km모델(7일예측)과함께이를활용 한단기(2주이내)가뭄전망정보를생산할계획 이며,1,3개월전망의종합가뭄정보와는차별 화된정보임	
2017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고도화	안전처	○ '119다매체신고기능개선'은 119소방의 기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추가개발(고도화 등) 예산 확보 내역 제시 필요 ☞중복성 검토 후 사업범위 포함 필요	○ 119다매체신고서비스는 119로 해경신고통합, 신고량 증가 예상으로 장비교체/증설 및 기능개선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추가개발과는 무관	반영
2017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 유통 및 공적공간 정보 구축	국토부	○ 본 사업의 경우, 국토부 자체 예산과 병행하여 과업 추진예정. 따라서, 지원사업에서 진행되는 과업과 부처사업에서의 중복성은 재검토 해야함. - 동시에 진행되는 건축물생애이력 시스템의 개발 내용과의 중복성은 재검토 필요. ○ 건축물관련 정보연계 및 공동활용서비스(유통)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정보공동활용의 기관연계는 국토교통부자체사업인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확산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중복여부확인인 필요함. - 기 구축된 국토부 자체 시스템의 기능 재활용여부 재검토 필요	○ 업무연계관련 사항은 자체예산 사업인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확산」 사업에서 추진함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 기 제출	반영
2017	범정부 행정 협업체계(지식경영) 구축	행안부	○ 모바일 메일 기능이 필요성 및 korea메일에서의 모바일 기능과의 중복성에 대한 검토 필요 - 계속 추진 시 korea메일과 온나라메일의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차별성에 대한 정의 필요	○ 온-나라 메일은 행망 기준, korea메일은 인터넷 기준으로 메일이라는 공통점은 있으나 기반이 다름	반영
2016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국토부	○ 특이사항 없음 ○ (공통) 2개 기관의 과업범위 중 일부 내용이 중복제시 되어있어 관련 내용에 대한 조정필요 - (온라인 확정일자) '15.9월 이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제공	○ (온라인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스캔방식에 의한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법원행정처에서, 전자계약시스템에 의한 확정일자 자동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p>중인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와 국토부의 전월세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온라인 확정일자 처리(46p) 부분의 관계 확인 필요</p> <p>*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하여 이를 인터넷등기소에 온라인으로 제출 후 확정일자 서비스 신청 가능</p> <p>-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이 국토부(RTMS와 연계)와 법원행정처(워크스페이스를 통한 법정절차 이행 이미지)에 모두 포함</p> <p>- (전자계약서 표준서식) 전자계약서 표준서식 내용이 법원행정처(위임 및 전자계약서 불러오기)와 국토부(전자적 거래계약서 서식의 개발 및 표준화)에 모두 포함. 또한 '15년 추진된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사업의 표준계약서 양식 개발과 중복 가능성 확인 필요</p>	<p>담당('15.8, MOU 협약)</p> <p>- 국민 입장에서는 둘 중 어느 것을 이용해서 처리하더라도 관계가 없으며, 원래 확정일자는 등기소 업무였으나, 국민 편의/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p> <p>○ (거래신고)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서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처리하는 내용, 법원행정처는 첨부정보로서 부동산거래 신고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으로 중복 아님</p> <p>○ (전자계약서 표준서식)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서의 서식개발 및 표준화를 담당, 법원행정처는 등 기원인 정보의 연계표준을 정의, 적용하는 내용으로 중복 아님</p>	
2016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행안부	<p>○ EA 연관정보 3개 시스템 관련 대상 포함 필요(현재는 수혜자 맞춤형 시스템 정보만 제시되어 있음)</p> <p>○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대민서비스 포털들을 중심으로 타부처 포털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여타사업과 중복되지 않음</p> <p>○ 자격기반의 개인맞춤형 서비스 검색기능은 복지로서 이미 서비스 중이므로 이를 연계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p> <p>※ 복지로서 중앙부처 복지사업 208종에 대한 자격 판정 모듈 개발 운영 중</p>	<p>○ 자격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 검색 기능은 복지로서 이미 서비스 중이므로 이를 연계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p> <p>☞ 맞춤형 혜택안내는 주민센터 창구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으로 변경</p>	반영
2016	국가수문기상 통합관리시스템	국토부	<p>○ 한강홍수통제소 “통합홍수예보시스템”의 예측 모형(유역유출모형, 강우예측방법, 유효우량 산정방법) 응용기능과의 차별성 구체적 제시 필요</p>	<p>○ (138p)“통합홍수예보 시스템”의 예측모형과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명시</p>	반영
2016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	해수부	<p>○ 국민안전처의 “지능형 해상교통 안전관리시스템(2011년, 약 21억 원)” 사업의 주요기능(해상교통안전관리, 해상지도 등)과의 연계 또는 중복성 검토</p> <p>○ 또한, 국민안전처에서 운영 중인 “해상교통관리시스템” 사업의</p>	<p>○ 해당사업은 권역별 VTS 센터를 중심으로 선박에 대한 운항상태를 레이더, CCTV를 통해 관제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해양오염 예방활동, 상황관리지원을</p>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p>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정보관리기능과의 연계 또는 중복성 확인 필요</p> <p>○ 국민안전처에서 기추진 또는 추진예정인 유관사업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필요(CCTV연계, 재난정보활용 체계 등)</p>	<p>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과는 중복성이 없음</p> <p>○ 국민안전처 재난정보 공동활용시스템 연계, 상황전파 API를 통한 상황관리체계 연계, 위험물 취급항만 CCTV 영상 국민안전처제공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중</p>	
2016	스마트농정 농식품통계 종합DB 구축	농림부	<p>○ (P17) 사업범위에 명시된 수집, 관리, 메타관리, 오류검증, 추출시스템 등은 통계청에서 수행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구축 사업과 유사하여 일부 개발 기능 활용 여부 검토 필요(구축 매뉴얼 유사 가능성 존재)</p> <p>※통계청사업과명확한구분을위해개발기능시스템변경"</p> <p>○ (P51~54) 상세기능 요구사항에 사업범위에 명시된 오류 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등 기능이 기술되어있지 않아 보완 필요</p> <p>○ (P17)농림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12종 승인통계와 통계청에서 보관 중인 11종 통계마이크로 데이터를 서로 각각의 기관에 제공하면 좀 더 다양한 서비스 및 분석이 가능해 보임(농림부와통계청간의업무협약필요)</p> <p>○ 농식품부유관시스템과의관계확인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부가 생산하는 12종의 승인통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통계관리(업무) 시스템을 운영 중(27~28p) - 만약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인 스마트농정 농식품통계 종합DB와 기존 농식품통계관리 (업무)시스템이 별개라면 향후 농식품통계관리(업무)시스템은 폐지되는 것인지 혹은 각각의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병행 운영할 것인지 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의 시스템은 승인통계만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므로 행정자료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개발 필요 -사업계획서의 기능 요구사항에 반영함(p58) -현재 농식품부에서 생산하는 승인통계(12)종은 농식품 통계관리시스템을 통해 통계청에 전송하고 있으며, 향후 통계청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데이터 공유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당해연도에는 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이관한 후 내년부터는 종합 DB구축사업을 통해 관리하고자 함 	반영
2016	법정부 행정협업체계(지식 경영)구축	행안부	<p>○ 정부 협업시스템 간 업무·지식 검색·활용 확대 구축(20p) 과업의 경우, 2015년 추진한 관련 업무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 필요</p>	<p>○ '16년에는 업무·지식 통합검색 강화</p> <p>○ 업무·지식의 검색 대상 확장 및 통합검색을 위한 창구 일원화, 허브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 메모보고, 등록지식, 게시글, 담벼락 활동 등 개인이 등록한 특정 사용자별 지식을 한 번에 추출, 개방형 서비스 제공 - 개인의 관심 키워드를 받아 자동으로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사용자 맞춤형 검색 서비스 제공 - 범정부 지식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대용량 DB 및 각종 첨부 문서(내용포함) 외에 신규 추가될 서비스에 대한 통합검색 화면 제공	
2016	자치단체 정보자원통합관리체계 강화	행안부	○ EA 연관정보 내용 작성 필요 ○ 지자체 모니터링 등본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유지보수사업과의 중복여부 확인 필요	○ 사업계획서에 반영(p86) ○ 현재 진행중인 유지보수사업은 기존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본사업은 기존시스템에 없는 추가기능을 개발하는 사업임	반영
2015	민원24 기반의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구축	행안부	○ EA 연관정보 첨부 필요 ○ 연계·중복검토결과서첨부필요	- EA연관정보 및 연계·중복검토결과서 별도 첨부	반영
2015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체계 구축	행안부	○ 연계·중복 검토결과서 첨부 필요 ○ OKLife 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비교분석자료 첨부 필요	▶ EA 연관정보 및 연계·중복 검토결과서 첨부 ▶ OKLife와비교분석자료첨부	반영
2015	통합재난 안전체계 구축	안전처	○ 본 사업내용 관련 EA 연관정보 자료 제시 필요	○ 사업계획서에 반영(p358)	반영
2015	종합 취업정보 및 연관교육 포털 ISP	고용부	○ EA 연관정보 제시 필요 ○ 행자부,복지부관련시스템연계필요	추진체계에 지자체 일자리 정보연계 등을 위한 행자부, 복지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체 포함	반영
2015	범정부 행정 공간정보 개방지원 ISP	행안부	○ EA 연관정보 제시 필요 ○ 위치기반 행정정보 개방공개를 위한 플랫폼 시범 구축, 행정POI구축 등은 국토부와 중복성 검토 필요	▶ 반영(p58) ▶ 현재중복되지는않지만,추후협의하여추진하겠음	반영
2015	빅데이터 공통기반 고도화 및 분석과제 추진	행안부	○ EA연관정보에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 모두 명시 필요 ○ 복지부'15년자체사업과의중복성검토필요	- 사업계획서 EA연관정보 추가(p141) - 검토의견에 따라 복지부 추진과제와 유사성이 있어, 복지부과제에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본 과업에서 제외함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2015	국가 위임사무 통합관리 체계 구축 ISP	행안부	○ 일부 클라우드 기반 통합전산센터 ISP 내용을 활용가능여부 검토 필요 - SFR-019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의 경우, 통합전산센터 ISP의 현황조사 내용과 일부 유사하여 해당 사업 산출물 활용가능여부 검토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조사내용의 차이점 검토 필요	○ 클라우드기반 통합전산센터 ISP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 반영 (p35)	반영
2015	범정부 클라우드 통합전산환경 구축 ISP	행안부	○ 정보자원 평가기준 및 등급분류(p24)의 경우, ‘정부3.0 정보보호 기반강화’ 사업의 보안등급기준 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필요	○ 정보보호 관련 등급기준은 ‘정부3.0 정보보호 기반강화’ 사업에서 도출된 기준을 활용	반영
2015	범정부 행정 협업체계(지식경영) 구축	행안부	○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온-나라), 정부 의사소통채널 통합구축 사업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중복이 없도록 각 사업간 통합 검토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별도의 발전방안(시스템간 연계, 통합, 중복 제거 등)을 수립하고 사업계획반영 및 담당자와 협의하여 각 사업간 조정을 완료	반영
2015	119소방현장 통합관리 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3차	안전처	○ 2011년 “소방 긴급출동(영상,방송)시스템구축”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필요	○ (반영,p33~36) -경남에서 구축중인 모바일 기능을 활용(재사용)하여 전국 확산	반영
2015	클라우드 PaaS기반 GAPP 시범개발 및 확산	행안부	○ EA 연관정보 첨부 필요	□ EA중복검토결과서 별도 첨부 ○범정부EA포털을통해주요키워드를입력하여현행정보시스템,목표정보시스템,이행계획과중복되는지를검토함 1)정보화사업키워드->마켓 ☞기존정보화사업과중복검토결과해당사업의사업요구내용과 중복 발생되지 않음 2)정보화사업키워드->앱개발 ☞기존정보화사업과중복검토결과해당사업의사업요구내용과 중복 발생되지 않음 3)정보화사업키워드->마켓플레이스 ☞기존정보화사업과중복검토결과해당사업의사업요구내용과 중복 발생되지 않음 4)정보화사업키워드->마켓플레이스 ☞EA정보검색결과서울시의공간정보플랫폼이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검색됐지만 정보시스템의 기능 검토 결과 해당사업의 사업요구내용과 중복 발생되지 않음	
2015	정부 IT자원 조달프로세스 혁신 ISP	행안부	○ 사업계획서 19쪽 '(운영) 과업'의 경우 '범정부 클라우드 통합전산환경 ISP' 사업의 과업과의 중복여부 검토 필요	○ 3, 19P에 운영관련 내용 하여 중복 과업이 아님을 표현	반영
2015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BPR/ISP 수립	행안부	○ EA연관정보 첨부 필요 ○ 연계·중복검토결과서첨부필요	○ 67페이지 반영(기수행 유사사업들과의 연계·공유 필요성 검토 및 연계방안 제시)	반영
2015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정보체계 구축 BPR/ISP	해수부	○ 국민안전처에서 추진 예정인 유사사업이 있는지 확인하고 중복성, 연계성 검토 필요 (예: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 2차, 긴급전화 통합서비스 ISP 등)	-보완(178p 붙임4) -국민안전처와의정보연계개념추가(57p)	반영
2015	지능형 해양수산 재난정보체계 구축	해수부	○ (165p) EA 연관정보 내용 기술 필요 ○ 국민안전처에서 추진예정인 유관사업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필요(CCTV연계, 재난정보활용체계 등)	-보완(178p 붙임4) -국민안전처와의 정보연계개념 추가(57p)	반영
2015	산림재해 통합관리 체계 구축(2차)	산림청	○ 산사태 예측분석 등 산림청 자체 기구축 산사태방지시스템 등에서 추진 가능한 세부 고도화 기능은 제외 필요	p192~194 : 연도별 구축계획 -산사태시스템은2016년에산림재해통합시스템 과연계·통합구축	반영
2014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행안부	○ 본 사업에서 추진 예정인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시스템은 기존 구축·운영 중인 타 기관의 유사시스템과 중복 가능성이 있음 - 기존 지방세·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etax),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서울시 Wetax, 서울시 세외수입종합정보시스템과, 간단 e납부 시스템(구축예정)과의 명확한 구분 필요 -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세외수입정보시스템(주정차위반 과태료 시스템 등)과 연계·통합 방안 필요	○ 기존 유사시스템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	반영
2014	통합 재난·안전체계 구축	소방청	○ 재난정보 개방체계 구축은 공공데이터 포털과의 연계성 명시 ○ EA연관점검표작성(www.geap.go.kr참조) ○ EA기반의사업간중복성검토	- 재난안전정보 개방관련 시스템 관계도 제시 (87~88p) -EA연관점검표 작성 및 첨부 (229p)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EA연계중복검토결과서 첨부 (223~227p)	
2014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별 기존 시스템의 중복 여부 및 차별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공사: 실시간 수문정보시스템, 댐-보유역 단기강우예측시스템 - 홍수통제소: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통합홍수예보시스템, 수문자료 지자체 공유시스템 -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 정보시스템 - 지자체: 홍수정보 등 통합방재시스템 ○ 서울시 도림천 홍수예 경보시스템('13년) 및 지자체별 기상관측과의 차별성 제시 	- 사업계획서 최하단 별첨1로 관련 시스템과의 중복성 검토 자료 작성	반영
2014	국가긴급이송정보망 통합 및 공동 활용체계 구축	소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정보는 신규 시스템 구축없이 연계 활용방안 모색해야함 - 응급의료센터와 긴급이송정보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비교하여 중복된 기능 삭제 필요 ○ EA기반의사업간중복성검토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기능 삭제 및 재개발로 산정 ※FP 산출내역 참고 ☞ 1,144개 병원정보 실시간 관리기능 삭제 ☞ 검토하여 EA 연관정보 추가 98p 	반영
2014	119소방현장 통합관리 시스템 확산 및 고도화	소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축 중인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간정보시스템과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축 대상이 다르며 기 구축 정보 활용가능성 검토하여 반영 24p ※ 방재청 : 위험물 대상 ,국토부 : 공공시설물, 서울시 : 공공건물 	반영
2014	수요자 중심 맞춤형 행정서비스 통합 제공(1차)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24 혹은 행복e음 등과의 서비스 내용이 중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24 등과의 차별성은 아래와 같음 -민원24:민원사무를처리하지않으며,수혜성공 공서비스통합안내및신청처리하는시스템 -복지로:범정부적인서비스에대해개인화된맞춤형서비스목록을안내 -새울정보시스템:민원인의“맞춤형서비스조회 요청”시목록을안내및신청처리하는시스템 -행복e음:범정부서비스목록안내및신청처리(접수및이송)하는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한자격정보및신청서이송을위한연계수행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2014	간단e납부시스템 구축	행안부	○ EA시스템을 활용한 중복성 자가 점검 필요 (중복성 검토결과서 붙임 필요)	- 반영(p.95)	반영
2014	범정부 정보자원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성과진단 및 지원체계 마련	행안부	○ 2013년 범정부 정보자원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성과진단 과제 내용 중복성 여부 검토 필요	- 연계·중복검토결과서[붙임 3] 첨부	반영
2014	실시간 원격강의시스템 구축	행안부	○ 본 사업에서 추진 예정인 원격교육포털 시스템은 기존 구축·운영 중인 타 기관의 교육시스템과 중복 가능성이 있음 - 국토교통부(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학사행정시스템의 동영상강의관리 기능 - 안전행정부(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시스템의 교육소개 기능 등	- 사이버교육의 경우 원격강의 VOD제작에 비해 제작비용 및 시기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어 교육의 적시성 확보 등에 한계가 있음 - 중공교 사이버교육센터와 링크하여 수강편의를 제고하고 수강생의 필요에 맞는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 - 공무원 뿐만아니라 대국민에도 원격강의 VOD를 공개할 계획이므로 공무원에 한정된 기존포털 등과 차별성을 가짐	일부 반영
2014	빅데이터 공통기반 및 시범서비스 구축	행안부	○ 일부 서비스의 경우 기존 서비스와의 중복성 여부 확인 필요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시 필요 - 스마트 재난상황체계의 경우 ·안전행정부(국립재난 안전연구원) 정부3.0 기반 재난관리 플랫폼(Smart Big Board)와의 중복 여부 ·재난상황실 구축과 소방방재청 중앙대책본부(상황실)과 관계 등 - 교통사고 위험도로 예측의 경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빅데이터 기반 교통예측 솔루션 및 국토부 국가교통DB 구축에서의 교통빅데이터 분석·처리기술을 이용한 교통혼잡지도와의 관계 ○ 공통기반 활성화(건설팅)의 '신규서비스모델발굴' 등은 이미 이루어진 활동이고, 추가발굴은 주관기관이 자체수행하는 방안 강구 필요	- (스마트 재난상황체계) 동일 사업으로써 '13년에 구축한 파일럿시스템을 실제 운영가능한 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시범과제임 - (재난상황실 구축과 소방방재청 상황실과의 관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에 의거, 방재청의 종합상황실과는 별도로 안행부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구축 필요 - (서울시) 국토부, 서울시 등의 관련사업과의 차별성을 추가 ○ (공통기반 활성화(건설팅)중 '신규서비스 모델발굴' 과업 제외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2013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 BPR/ ISP	소방청	○ 13년 전자정부지원사업「국가 긴급이송정보망 통합 및 공동 활용체계 구축」사업과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필요	반영 (긴급이송망 사업내용 조정)	반영
2013	119 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소방청	○ 기 구축 중인 재난·재해 및 소방 관련 정보시스템 및 모바일서비스 시스템과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필요 - 12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구축한「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2차) 사업내용」중 ‘모바일 소방활동시스템 구축」사업과 모바일서비스개발내용 중복	○ (반영.p33~36) -경남에서 구축중인 모바일 기능을 활용(재사용)하여 전국 확산	반영
2013	국가 긴급 이송정보망 통합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	소방청	○ 소방방재청(긴급구조 재난대응망) 및 보건복지부(응급의료 이송망) 관련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복 구축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필요	○ 상세 개발대상 기능목록에 재개발 사용 표시 p. 37~44	반영
2013	빅데이터 공통기반 및 시범서비스 구축	행안부	○ 각 부처별 빅데이터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되기 전에 빅데이터 공통기반 구축사업 추진계획 및 부처별 대응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를 통해 중복투자 방지 및 범정부적 빅데이터 도입 방향 제시가 요구됨 ○ 미래부 및 통합전산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빅데이터 관련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중복 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검토 및 확인이 필요함	- 기재부 예산 조정을 통해 부처별 빅데이터 사업 추진을 조정 - 미래부와 역할구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미래부, 통합전산센터와의 역할 구분 자료 별첨)	반영
2013	범정부 정보자원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성과진단 및 개선	행안부	○ 국가 정보화 투자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 사업(2011.10), 국가 정보화 투자관리체계 효율화 사업(2012.10)과 과제 내용 등 중복성 여부 검토 필요	○ 관련 사업과의 영역 분담을 통해 중복성 제거 -(관련사업) 성과측정모델 및 지침 개발 및 개선 -(본 사업) 기능단위활용도 점검모델 개발 및 관련사업을 통해 마련된 모델.지침 적용	반영
2013	국가표준 인증 통합관리 및 서비스 체계 구축 BPR/ISP	산업부	○ 기존 기업지원플러스(G4B)내 기업관련 국가 표준·인증 서비스 연계 부분이 상호 중복이 되지 않도록 연계범위 및 서비스 내역을 명확히 하여 추진 필요	- (23p, 29p) 추진전략, ISP 사업범위에 반영	반영
2013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차	기재부	○ 국유재산 DB 통합 관련 ‘12년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 필요(34p) - ‘12년 사업에서 기 활용 중인 중앙기관의 국유재산관리시스템	○ 1단계 사업에서는 국유재산 유관기관의 전산시스템을 분석하여 각 시스템의 주요 정보를 기준으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정보 통합과 통합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및 개별기관으로 통합데이터 확산이 추진 중 - 따라서 국유재산 DB 통합 관련 '12년 사업과 '13년 사업과의 관계를 명확화 필요 ○ 2차년도 개발대상업무 '국유재산운용보고'와 '변상금부과'등의 2개부문은 1차 개발대상과 중복되므로 확인 필요	설계하고 초기자료를 구축함. 2단계 사업에서는 행정망을 사용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구축된 통합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고도화(상세화) 및 주기적 자료 연계 처리를 위한 개발필요 ○ 개발대상에서제외	
2013	생활민원정보 통합서비스 구축	행안부	○ 현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 창구 측면으로서의 중복성은 없으나, 세금·공과금 분야의 납부정보 서비스에 대해서는 구축에 대한 검토 필요 (올해 생활민원정보 구축 대상인 벌금·과태료 납부 정보를 안정행정부 지방세분석과에서 2014년도 중기재정계획의 서비스 대상으로 제출)	○ P27 연계계획 제시 생활민원정보 통합 서비스는 납부 등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납부정보 등을 연계해 납부시스템 등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중복성이 없음	반영
2012	차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 2단계	행안부	○ 본 사업 추진시 1단계 표준인사시스템에서 개발된 기능과 중복 개발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필요	○ 중복기능 없도록 검토하여 추진	반영
2012	실종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경찰청	○ 본 과제에 포함된 H/W도입 부분을 경찰청의 타 업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중복 구매/투자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체크되어야 함	<H/W 타 업무에 활용 및 중복 구매·투자 방지 관련> - '12년도 사업내용의 사전등록 대상은 14세미만의 아동, 치매노인, 장애인이며 특히 14세 미만의 아동 지문은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지문검색시스템(AFIS)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료로서 중복 투자가 아님. - 지문검색시스템(AFIS)DB서버와통합하여운영 하는방안을 검토하였으나, AFIS의 지문자료가 2억건 이상으로 방대하여 지문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이 실종아동을 대상으로 지문을 검색하는 시간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실종아동등만을 대상으로 사전등록된 지문자료를 활용하는 업무 특성상 독립된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DB서버로 운영하는게 효율적으로 판단됨.	
2012	나눔포털 구축 2단계	행안부	○ '11년 구축내용과 중복 사항 제외 필요 - '11년 구축사업에서 시도, 시군구 및 1365포털의 자원봉사 관련 DB(회원정보, 실적정보, 수요처정보, 일감정보 등)의 통합 및 정비를 수행 ⇨ 따라서 본 과업범위에 포함된 '최근 3년간 지역별 자원봉사활동정보 DB 통합 정비 및 구축'(25p)은 제외 필요	○ 지역센터별 홈페이지 통합·구축을 과업에서 제외	반영
2012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1차)	행안부	○ 스마트러닝 통합시스템구축 - 현재 서비스 중인 모바일 홈페이지('12.2.1)와 중복되는 기능 제외 필요	○ (P.74) 중복되는 기능을 선별하여 제외	반영
2012	전자문서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ISP수립	행안부	○ 민간과의 유통 서비스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新전자문서유통체계'와 관계를 고려하여 추진이 필요함	○ 사전에 역할 및 연계방향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사업계획서에 협의내용 반영	반영
2012	국가기관 내외부망간 자료교환시스템	행안부	○ 행안부의 경우, 2009년도 「보안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네트워크 분리 사업」에서 도입·구축한 자료연동시스템과의 중복 여부 확인 필요 - 데이터 중계용 스토리지(1), 중계서버(업무망(1)/인터넷망(1)), 중계S/W(업무망(1)/인터넷망(1)) 기 도입·구축	○ 09년도 도입장비는 스트림연계용으로써 중복성 없음을 확인	반영
2012	행정기관 좀비PC 탐지 및 제거 시스템 확산	행안부	○ 업무 현황에 '10년 중앙부처와 16개 시도에 도입된 좀비PC탐지·제거시스템 현황과 이전까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등에 도입된 좀비PC탐지·제거시스템 현황 제시 ○ 사업계획서상 대상기관의 도입여부 재확인 및 대상기관 확정 필요 - 기 도입 기관의 경우 추가 도입 필요성에 대한 확인 필요 - 본 사업 대상기관이 기 추진한 사업(좀비 PC 탐지 및 제거시스템, 보안관제센터 구축사업 등)과 시스템 기능상의 중복이 있는지 검토 필요	○ 반영(P39~40) ○ 공문, 유선을 통해 재확인을 거쳐 기도입 기관 제외(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 본부, 대전통합전산센터 제외)	반영
2012	빅데이터 공통기반 마련 및 활용을	행안부	○ 행정·공공정보 현황 조사 등은 기존 유사 조사와 중복 가능 - 행안부(정보자원정책과)에서 약 1,000여개 공공기관을	○ 기존 유사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으로써 관련 내용을 과업에서 제외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위한 BPR/ISP		대상으로 정보보유 현황 및 공개 가능 정보현황을 조사 중임 - 또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수립의 일환으로 보유데이터 현황 및 수요조사를 기 수행(정보화전략위, '빅데이터 마스터플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2.6.21)		
2011	국가 대표포털 구축	행안부	○ '통합 유실물찾기 서비스 시범구축'은 경찰청 소관업무로써 자체 예산확보를 통한 전국서비스 제공을 계획 중이므로 중복 우려	○ 반영함 - 사업내용에서 제외	반영
2011	다부처 복지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행안부	○ 복지부에서 기수행하고 있는 행복e음 고도화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필요 - 고도화사업중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과 본사업의 '범정부 복지정보 처리지원 신규 개발' - 고도화사업의 서비스 확대 사업중 '희망키움통장'과 자격·정보이력정보 수집대상 복지사업 대상중 '희망키움통장'(p62)	- 온라인신청시스템구축은 대국민포털을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서비스(보육료지원 등 3개)이며, 범정부 복지정보처리지원은 행복e-음을 활용한 타 부처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용 서비스임 - 행복e음 확대대상사업은 자격·이력정보통합 대상 186종에 포함되나, 본사업 개발범위에서는 FP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부정수급관리에 포함된 "희망키움통장"은 FP에서 삭제	반영
2011	기업경쟁력지원 체계 구축	산업부	○ SMS관리, Q&A관리, FAQ관리 등은 기존 1,2단계 구축한 부분을 재활용	○ FP부문에서 재활용으로 수정함 반영	반영
2011	글로벌 물류·무역정보망 통합	국토부	○ "글로벌 화물추적시스템 구축"에서 화물위치정보 제공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FID기반 글로벌 화물추적서비스와 해외 거점(중국, 독일, 미국 등)이 중복되므로,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 정보 제공이 필요(p27, p103-p104) - 화주, 선사, 운송사 등 물류주체 입장에서 화물추적 서비스가 물류, 무역 양쪽에서 이루어지므로 단일화 서비스가 필요 - '10년 사업으로 화물추적/상태/이동정보, 스케줄 정보 등 국토부와 연계중인데, 별도 서비스 구축은 불필요함 - 4개 주요 거점이 명확치 않으며, 국토부와 정보연계 활용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음	- (전자) : 글로벌 화물추적시스템 구축 과업 제외함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2011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행안부	1.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 ○ p11, p59, 3D 공간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내역 대부분은 국토해양부의 3D GIS 사업과 중복됨	○ 당초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3D GIS 연계는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추후 도입 고려	반영
2011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국토부	1.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 ○ p11, p59, 3D 공간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내역 대부분은 국토해양부의 3D GIS 사업과 중복됨	○ 당초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3D GIS 연계는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추후 도입 고려	반영
2011	범정부 통계조사시스템 구축	통계청	○ 범정부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통계시스템을 본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며, 향후 시스템 구축에 따라 개별기관의 통계생산 시스템을 구축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전체사업범위 중 기존시스템의 보완/재구축범위와 신규구축범위 및 상호연계현황에 대한 제시를 요함 -전체사업범위에 대한 단계별 계획이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함(목표개념도에 나타난 모든 시스템이 본1단계 구축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바, 2. 3단계 업무범위는 무엇인지)	○ 언급된 내용을 사업계획서 반영	반영
2011	국가 외교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외교부	○ 기 추진한 외교통상정보화 사업내용과의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구분. 정리가 필요함	○ 반영 -기존사업과중복없음(p12-13)	반영
2011	실종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경찰청	○ 1차년도 사업과의 기능 중복성이 소규모 발생 → 예산 조정 필요	○ 1차년도 중복 기능 삭제 반영	반영
2011	디지털 가축방역체계 구축	수의학검역원	○ (본문-P72) 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사업과의 중복성 확인 필요	○ 전화예찰은 방역관련 임상예찰만을 수행하므로 농장 및 축산관계자 정보의 현행화와는 무관함	반영
2011	가축 매몰지 종합정보지도시스템 구축	행안부	○ 디지털가축방역체계구축사업의 살처분 관리 기능과의 중복 - 디지털가축방역체계구축사업 내 '질병가축 사후관리' 중 살처분매몰지관리가 포함되어있음	○ 사업계획에서 살처분 등록 기능을 제외하였으며, 매몰지 관리부분에 대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디지털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 시스템)과의 역할 분담 추진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2011	나눔문화확산을 위한 나눔포털 구축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자원봉사포털과의 중복성 검토 필요 ○ 복지부 등 타부처 나눔관련 시스템과의 중복성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포털에 기존 자원봉사포털을 이관하여 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의 나눔관련 시스템은 해당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나눔활동(예: 청소년자원봉사, 도서관자원봉사등)에 대한 것으로 나눔활동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제공 형태를 띠고있지 않고, 특히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은(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구축·운영하는 민간시스템임 	반영
2011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 ISP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활성화 ISP 수립” 과제 수행범위와 일부 중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활성화 ISP수립' 과제의 경우 국가무선망 구축방안 및 성과분석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음 - '모바일전자정부추진현황' 부분에ISP사업추진 현황을명시하고,사업추진시참고토록함 	반영
2011	모바일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구축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주소 안내 모바일 서비스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중복성 여부의 확인 필요 	반영 : 새주소 모바일 서비스를 사업범위에서 삭제	반영
2011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 통합메일 중복성 검토 필요 : pop3서비스 등을 통해 기존 웹메일 서비스를 통해 활용 가능 등 	- 보안기능을 위한 ActiveX 등으로 인해 현재도 POP3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으로 해당사항 없음	반영
2011	행정업무 및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협업시스템에서도 모바일SNS서비스(메신저)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 과업에서 제외 ○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바일오피스가 600명 대상으로 알림마당, 일정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바일 포털(방통위)의 공지사항 등 게시판기능과 중복성에 대한 확인 필요 ○ 범용통계 조사시스템에서도 모바일서비스 계획이 있는데, 본사업 내용과의 중복성이 우려되는데 차별성이 제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쪽지전달 기능 이외에 메신저채팅 기능 등은 삭제 ○ 방통위에서 시범사업형태로 각 통신사업자의 플랫폼을 이용한 모바일 업무포털을 구축하였으나, 모바일 공통기반시스템을 이용한 업무포털 구축방향으로 바꾸어 본 사업에 포함하여 중복성 없음 ○ 범용통계조사시스템은 통계청을 제외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사용하는 시스템임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2011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시스템 구축	해경청	○ 해양경찰청 해양경비안전망('11-'15년) 사업과 중복내용이 없도록 추진필요	○ 해양경비안전망은 어선의 위치추적 및 출입항신고를 자동화를 위한 인프라망 구축사업으로 본사업과 중복성이 없음	반영
2011	재난상황정보 원클릭시스템 구축	소방청	○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등 현행 시스템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본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 필요 - 이미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등을 통해 각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타 기관에 제공하고 있고 GIS상황판 기능도 존재(p20) - 또한 상황전파시스템을 통해 유관 기관간 재난상황 전파 보고체계가 이미 운영중임 - 따라서 본 사업과 이들 현행 시스템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있음	○ 재난정보 공동활용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수집되는 재난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 조회하고, 기존 상황전파시스템의 메시지 전송기능을 활용하여 수신처 및 재난상황 내용을 자동 지정하여 즉시 발송하는 기능으로 중복기능이 아님(p3)	반영
2011	국가위험물 안전관리 ISP	국토부	○ 국토해양부(위험물운송관리체계 방안 연구용역), 환경부(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관리ISP), 소방방재청(위험물 탱크로리 원격조회 시스템 구축)과의 사업 중복내용을 재확인 하고, 차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국토해양부의 연구용역과제는 해상운송 관련 용역으로 지상 위험물운송과는 다름 - 환경부의 ISP사업은 위험물 중 유해화학물질 및 DB시스템 구축에 국한한 사업이고, 소방방재청의 구축사업은 사고발생시 신속한 긴급인명구조를 위한 사업으로 본사업과 중복성이 없음	반영
2011	디지털 행정협업시스템 구축	행안부	○ 온라인 협업과제 관리 등이 현행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GKMC) 커뮤니티와 관련기능이 일부 유사하므로 검토가 필요함	(조치내역) -GKMC활용검토 (조치반영확인) -p24,협업포털공통기능확인	반영
2011	세금·공과금통합납부 BPR/ISP	행안부	○ 국세청, 지경부 등 각 기관에서 통합과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관련 사업과의 중복성 없음에 대한 현황자료 추가 필요	○ 참여기관 중에 국세청도 포함되어 있으며, 협의체를 통해 중복없이 추진	반영
2011	의료기기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 ISP	식약청	○ 심평원의 '의료장비 관리시스템' 등 타 시스템과의 중복성 검토 필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p2~3) 수정 보완	반영
2010	주민생활 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	행안부	○ 전입신고, 주소변경알리미 등 현재 제시된 일부 민.관 협력 온라인 신청서비스에 대해 G4C의 생활민원 일괄서비스의 Open API 적용 고려	-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내용 반영(p5, 33)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2010	국가 대표포털 구축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처 홈페이지 등에 구축되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토론방(포럼), 온라인 서베이(24p) 등은 중복 가능 ○ 파워검색서비스중 타기관제공을 위한 검색인터페이스 및 openAPI개발은 동사업의 전사업(09년도)에서 개발된 내용이며 중복이 우려됨 ○ 온라인 토론방은 '참여마당 신문고'의 온라인공청회, 정책포럼기능과 중복 ○ 전자정부 openapi 자료실은 “국가자원개방.공유체계사업(행안부)”의 개방서비스 저장소와 중복 우려 	<p>→ (반영, 25P) 대표포털의 대국민 정책소통서비스 구현을 위해 온라인 토론방, 서베이 등의 기본기능은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정책정보와 블로그, 메신저 등을 결합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개발 추진</p> <p>→ (설명) 09년 개발된 범위 외에 신규 구축되는 콘텐츠와, 신규 개발되는 위젯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임</p> <p>→(반영,25P) 대표포털의 대국민 정책소통서비스 구현을 위해 온라인 토론방, 서베이 등의 기본기능은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정책정보와 블로그, 메신저 등을 결합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개발추진</p> <p>→(중복없음) 전자정부 OpenAPI자료실은, 전자정부서비스 안내기능과 연동하여 다양한 전자정부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각의 OpenAPI 서비스(메타데이터)를 수집서비스하게 되며, “국가자원개방.공유체계사업”에서 추진하고있는 '개방서비스저장소'의 서비스내역을 포함하여 대국민에게 서비스하는 내용임</p>	반영
2010	민원서비스 선진화 2단계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비온라인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여 중복가능성은 낮으나 구축대상 서비스를 개별 부처에서 별도 개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중복 방지 노력 필요 	<p>→ 사업추진시 온라인 민원 동의시 개별기관 개발여부 등 파악하여 중복성 배제</p>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2010	범정부 복지전산망 연계 BPR/ISP	행안부	○ '10년도 국가 EA 기반 공동활용체계 2차 사업에서 범정부적 서비스 연계 통합방안 수립을 추진 예정으로 본 사업내용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어 확인 필요	○ “국가 EA 기반 공동활용체계 2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산출물 제공	반영
2010	국가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수립	통계청	○ '09.9월에 추진한 통계청 ISP사업과의 차이점 제시 필요	☞ 기존 통계청 ISP사업은 EA사업의 이행과제를 기반으로 통계청 정보화 과제 도출을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의 추진내용과는 중복성이 없음	반영
2010	온라인 국민소통(민원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권익위	○ 민원정보 분류체계 관련 내용의 경우 선행 사업의 과업범위와 중복여부 확인 필요 - 23p(분류체계 관리, 분류체계결과 관리), 26p(기타-자동분류시스템 구축 등)의 경우 참여마당 신문고 구축을 통해 구현된 민원들을 자동분류하는 기능과 중복여부 확인 필요	○ 내용 확인 결과, 중복 없음	반영
2010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구축	수의학검역원	○ '09년 수행한 DB 구축, 데이터 정제, 표준코드체계 구축내용과 중복성 확인 필요	○ 사업계획서수정 - '09년도와 '10년도 구축내용 비교표 추가(p69, p71)	반영
2010	기업경쟁력 지원체계 구축	산업부	○ 온라인 직거래 기반 서비스 부분은 전자무역 시스템과 중복기능으로 판단되므로 중복여부 판단 및 구축필요성 재검토 필요 ○ 기업애로신청 접수처리 지원부분은 중소기업 규제정보시스템 및 기업호민관 홈페이지와 중복성 검토 및 차별성 제시 필요 ○ 각종 R&D사업 정보, 자금지원정보 및 금융지원 정보제공(162p)의 경우 '09년 구축된 내용과 차별성 제시 필요	○ 온라인 직거래 기반 서비스 - BPR/ISP당시 UTH를 선진사례 및 벤치마킹 대상으로 파악하여 메뉴구성면에서는 유사점이 많음. - 그러나, 사이트 운용개념상 서비스 이용대상이 다르며, 서비스 내용에서도 일반상용 물자와 방산물자로 구별됨 따라서, 방산진흥을 위한 방산물자 전용 서비스 구축으로 전자무역시스템과의 중복성 없음으로 판단됨. ○ 하나의 기관 중심의 기본적인 신청/접수/처리/환류 기능에서, 여러 개 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기본기능의 변경과 규제맵, 규제과제발굴, 접수창구관리, G2B에 규제서비스를 위한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연계모듈개발 등의 전체적 관점에서의 신규기능이 요구됨 ○ 자금지원 정보제공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p127) -금융지원정보내용삭제함 -자금지원정보제공대상확대 : 교과부 NTIS 연계를 통한 범부처R&D공고정보의 추가제공 -자금지원정보의수요자맞춤정보제공	
2010	글로벌 물류·무역정보망 통합 (2단계 구축)	국토부	○ 항만물류의 RFID 기반의 화물정보 추적시스템과 전자통관의 UCR(화물식별번호체계) 관리시스템간에 화물추적.관리 측면에서 업무 및 시스템적으로 유사성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각각의 차이와 유사성을 비교하여 명확히 제시 필요	사업계획서 [붙임 9] 참조 ○ RFID기반 컨테이너 추적과 UCR기반 가시성 정보의 연계 관련 -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RFID기반의 컨테이너 추적은 물리적 단위의 추적시스템으로서 논리적 진행정보를 제공하는 UCR기반 가시성정보와 차이가 있으며, 수출입통관과정에서 컨테이너 번호의 제출은 선택사항으로서 제출되지 않는 화물이 많아 연계가 곤란하며 특히 두개의 단위(컨테이너, UCR)의 화물을 실질적으로 연계할 키가 없어 연계 곤란. - 장기적으로 RFID인프라가 최대한 확충되었을때 UCR번호를 RFID Tag에 넣어 컨테이너 추적시 사용할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여 물류가시성 정보의 확대제공 추진	반영
2010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	문화재청	○ 기존 정부청사 망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 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자원, 소프트웨어를 우선 활용 검토 - 방화벽, IPS는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신규 인터넷망 구성에만 지원(2대→1대)	○ 문화재청에서 기 구축하여 운영 중인 시스템(HW, SW 등)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정원의 망 분리 매뉴얼, 구축 가이드, 예산 운영 방침 및 상용 메일 개선 계획	반영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1	유사중복 검토의견	조치결과	반영 여부
				등에 부합하도록 사업범위 준용하여 사업계획 반영 - PC보안 및 PMS, 망관리시스템, 매체관리시스템 및 방화벽 등 필수시스템 도입 - 상용메일 사용에 따른 보안 강화를 위해 인터넷 영역에 한하여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 도입 - 백신S/W는 별도 서버를 도입하지 않고 PC보안/PMS 서버를 공동 활용	
2010	농림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	농림부	○ 농촌진흥청에서 기 추진 중인 보안관제센터 구축사업의 대상기관과 본 사업의 대상기관이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검토 필요	○ 보안관제센터 구축대상기관 기준 없음. 부처별로 판단(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견) ○ 대상기관 중복 없음	반영
2010	비밀관리시스템 1단계 구축	행안부	○ 비밀관리시스템 구축기관별 추가 기능요구사항 개발내용과 기구축 사업(08~09년)의 개발내용간 중복성 검토 필요	○ 기 개발내용과 중복되는 추가 기능 요구사항은 기획단계에서 제외하였으며, 재활용 기능항목은 FP산출시 별도 표기하여 반영함	반영
2010	좀비PC 탐지 제거 시스템 구축	행안부	○ 정보화 현황에 '09년 범정부 DDoS 대응체계 구축사업(특히 교과부, 행안부(자치단체), 경찰청 등)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09년 사업과 본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필요	○ 아래와 같이 '09년사업과의 중복성을 배제 - 교과부 대상 : '09년 사업 대상기관에 대한 장비 확충 - 행안부 대상 : '09년 사업 대상기관 (지역정보개발원, 통합센터)는 탐지·차단시스템 도입 대상에서 제외 - 경찰청 대상 : '09년 사업에서 제외된 기관으로써 중복되지 않음	반영

※ 2010년~2017년까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내부에서 유사중복성 검토, 2018년부터는 사전협의 제도에 따라 유사중복성 검토함

부록 7 전자정부지원사업 이용자만족도 정의(2017년도)

사업		이용자만족도 지표 정의	[참고] 만족도 조사 대상	
1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 구축(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시스템을 이용한 사용자(행정안전부, 기상청, 국토지리정보원, 자치단체 공무원 등)들의 만족도 점검 	공무원 : 행정안전부, 기상청, 지자체 공무원	약 150명 이상
2	긴급신고전화 통합체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신고전화 운영자 만족도 	공무원 : 공동대응시스템 사용경험이 있는 상황실 신고접수담당자	약 150명 이상
			110 이용 상담사	약 100명 이상
			1366 이용 상담사	약 300명 이상
3	범정부 행정 협업체계(지식경영)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나라 지식(지식, 메일분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공무원 중앙, 지자체 서비스 이용자	약 150명 이상
4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스템 구축완료 후,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이용자 만족도 	국민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이용자	약 100명 이상
5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공무원 : 소속기관 및 자치단체	약 150명(50%)
			대국민 : 산림공간정보유통서비스 사용자	약 150명(50%)
6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관리·제공 시스템 구축(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포털 및 배출시설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대상 만족도 측정 	일반국민	약 100명 이상
			공무원 환경부 지도점검 담당자	약 30명 이상
7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 구축(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이용자의 만족도 	상품·비교·리콜·안전·위해정보 등 포털 이용 경험자(국민)	100명

사업		이용자만족도 지표 정의	[참고] 만족도 조사 대상	
8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5단계)	• 생활안전지도(대국민) 및 지역안전진단시스템(지자체 공무원) 이용자 만족도	공무원 : 지역안전진단시스템 이용자	약 150명 이상
			국민 : 생활안전지도서비스 이용자	약 100명 이상
9	자금세탁 위험평가시스템 구축(4단계)	• 국가 위험평가 시스템을 사용하는 공무원, 검사수탁기관, 금융회사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점검	공무원 : 금융정보분석원	약 3명 이상
			공공기관 : 검사수탁기관	약 7명 이상
			금융회사 : 준법감시부직원	약 90명 이상
10	전자정부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2차)	• 디지털원패스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국민 : 디지털원패스 이용자	약 100명 이상
11	정부디렉토리 및 정표준코드시스템 프레임워크 구축	• 정부디렉토리 및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정부디렉토리·행정표준코드 이용기관 기관관리자) 만족도 조사	공무원 : 정부디렉터리·행정표준코드 이용기관 기관관리자	116명
12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 클라우드 온나라 전환에 따른 사용 만족도 • (클라우드기록관리시스템)중앙부처 기록관 담당자들의 사용만 족도	공무원: 설문 당시 클라우드 온-나라 사용자	약 200명 이상
			공무원 : 중앙부처 기록관 담당자 43개 부처 기록연구사(관)	43명
13	지능형 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 구축(3단계)	• 구축된 시스템의 사용자 이용편의성 등 만족도 조사(해수부 등 재난관련 업무담당자)	공무원(해양수산부 내부) 관련업무 담당자	80명
			공공기관 : 임직원(선박안전관리공단) 안전점검 담당자	100명
			공공기관 : 임직원(해양환경공단) 해양방재 담당자	130명
14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 통합포털 이용자(정부 24이용자, 대국민 및 공무원)의 서비스 만족도	(국민) 정부24 이용자	100여 명
			(공무원) 정부24 공무원 창구 이용자	약 90여 명

사업		이용자만족도 지표 정의	[참고] 만족도 조사 대상	
15	행정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허브 구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공무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자	150명
16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유통 및 공적공간정보 구축	•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공무원 : 공적공간 시스템 사용자	약 50명 이상
17	공공조달 계약이행확인시스템 구축	• 공무원(계약이행확인시스템 사용자), 국민(시스템 이용기업 담당자) 대상시스템 이용자만족도	공무원 : 계약이행확인시스템 사용자	약 50명 이상
			국민 : 시스템 이용기업 담당자	약 100명 이상
18	교육행정정보서비스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	• 신규 개발되는 등록·관리 기능 및 일반 인증서비스 이용관련 사용자 만족도 조사	공무원 : 교육(행정)기관 인증서비스 담당자	약 600명 이상
19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배출권 및 상쇄등록부 시스템 개선	• 배출권거래제 관장부처 담당자 시스템 이용 만족도	공무원 : 배출권거래제 관장부처 담당자	약 9명 이상
20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관리시스템 구축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 및 유지보수 운영자의 시스템 이용 만족도	공무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	약 20명 이상
			사업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지보수 사업자	약 60명 이상
21	정부조직·정원관리시스템 전면 재구축	• 정부조직관리시스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공무원: 각급기관 조직업무담당(51)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직제관리담당(30)	80명
			국민 : 개통이후 1개월*간 서비스 이용자	150명
22	차세대 사건처리 및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구축	•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 공정위 직원 및 분쟁조정기관 150명 이상, 시스템 이용자 300명 이상	공무원 :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및 분쟁조정기관	약 150명 이상
			국민 : 시스템 이용자	약 300명 이상

사업		이용자만족도 지표 정의	[참고] 만족도 조사 대상	
23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및 외국인정보 표준연계체계 구축	• 업무담당자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공무원 : 외국인정보 표준연계 대상 기관	100명
			내·외국인 : 대민포털사이트(하이코리아 등) 이용자	500명
24	차세대 통합보훈 정보시스템 구축	• 차세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및 보훈통계시스템 사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25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 업무관리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공무원 : 청와대(대통령비서실) 시스템 사용자	약 150명 이상

부록 8 전자정부지원사업 대표사례

사업명	총지원 예산 (백만원)	추진 배경	추진 목표	추진 내용	추진 과정(이력)	추진 성과
국가 물류 종합 정보 서비스	41,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물류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전자정부 3대 과제 중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물류 업무프로세스 개선 물류서식 표준화를 통해 정보공동활용을 확대하여 이용자 중심 물류 서비스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출항, 화물신고, 통관 등에 필요한 서식 중 유사·중복 서식 표준화 및 간소화 입출항, 승객·선원명부, 적하목록 등 여러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서식을 표준화하여 한 번의 제출로 해당 기관의 인·허가정보를 공동활용 할 수 있게 함 서식 통합 및 표준화를 통해 정보공동활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물류 인·허가 통관단일창구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 물류중심의 국가물류정보체계 혁신 BPR/ISP(2003) 수출입물류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1~3차, 2004~2006) 수출입물류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확대 구축 (2007) 글로벌 물류무역정보망 구축 (ISP, 1~4차, 2008~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인이 요구하는 정보 적시에 제공 가능 해당기관에서 입출항 관련 정보 및 적하목록, 검역, 출입국관리 정보 등을 필요로할 때 적시 활용 가능 민간 분야와의 항만·항공물류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으로 물류업체와의 협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됨
국가 복지 종합 서비스 (복지로)	15,3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국정과제로 선정, 실천과제로 ‘보건복지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분야별,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복지정보 및 서비스들을 연계하여 국민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원스톱 복지정보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계적인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복합종합서비스 단일창구 및 복지종합상담 콜센터 구축 유관시스템과의 연계·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유관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통합 추진 대국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복지 종합서비스에 대한 홍보강화,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 최소화 통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복지정보포털 구축 ISP(2003.8~2004.2)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 1차 (2004.11~2005.8)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2차 (2005.11~2006.7)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 3차 (2006.8~2007.4) 법정부 복지정보 통합체계 구축 1~2차 (2010.9~20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성 대폭 향상 복지서비스 제공시설 측면에서 시설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복지관련 업무의 표준화와 투명성 확보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서비스 이력을 관리함에 따라 부적정 수급을 방지, 서류통합 및 선정 소요기간 단축으로 사용자 이용편의성 제고
국가 안전 관리 종합	55,8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중앙보고 중심으로 구축되어 현장대응지원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관리책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간의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정보에 대한 범정부적 이용을 위해 ‘범정부재난관리 네트워크’ 구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안전관리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BPR/ISP(2004) 법정부 재난관리 네트워크 구축 (1~3차, 2005~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71개 재난책임기관 간의 재난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으로 전국적 통합 상황전파체계 구축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동

사업명	총지원 예산 (백만원)	추진 배경	추진 목표	추진 내용	추진 과정(이력)	추진 성과
서비스		<p>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미흡하고, 정보전달체계가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국가안전관리 고도화 추진</p>	<p>축하고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현장중심의 국가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기술을 활용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및 지원 기능의 고도화 추진 및, 재난 유형별로 신속한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시군구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추진 • 재난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제고 위해 소방·방재분야의 대 국민 온라인 단일창구인 '국가 재난정보센터' 구축 추진 • 각종 소방활동 지원 위한 시도 긴급 구조표준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 (1~3차, 2005~2007) • 소방대상물 정보 활용 기반 구축 사업 (2006)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2007) • 안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5차, 2013~2017) 	<p>활용을 위한 공조체제 기반 구축을 위해 재난정보 공동활용센터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전파시스템의 구축으로 재난관리 업무 수행대상이 모두 포함돼 중앙에서 시·도·시·군·구·읍·면·동에 이르는 수직적 전파체계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동시다발적으로 수평적 상황 전파가 가능해짐
외교 통상 정보화 (e-Diplomacy)	35,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기반 취약, 유관기관과의 연동체계 부족 등 대국민 서비스가 미흡 • 글로벌 네트워크의 통신비용 측면과 보안문제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외교통상 업무 추진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기밀을 취급하는 외교통상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 간 네트워크 및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공유 및 안전한 전자문서유통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문서를 DB화하여 문서 검색 및 활용성을 제고하는 비밀자료 관리 • 시스템 구축 본부 및 재외공관의 비밀자료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광역외교정보망과 외교통신망을 통합하고, 통신보안장비 보급 및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 구축 • 외교통상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 전자문서유통체계를 TCP/IP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반문서의 유통체계는 2004년에 구축, 비밀문서유통체계를 2006년 구축해 이를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통상정보화 1차 (2003.12~2004.10) • 외교통상정보화 2차 (2004.12~2005.10) • 외교통상정보화 3~4차 (2005.10~2006.12) • 국가 외교통상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2010.4~20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재외공관에 비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보급 • 재외공관 문서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하여 타부처 - 외교통상부본부 -재외공관 간 전자문서를 외교부 고유의 전자문서 형태에서 국가표준 전자문서로 유통하게 됨 • 영사/행정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고객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웹기반으로 전환

사업명	총지원 예산 (백만원)	추진 배경	추진 목표	추진 내용	추진 과정(이력)	추진 성과
인터넷 민원 서비스 고도화 (G4C)	58,5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민원서비스에 제기된 문제점 개선위해 인터넷 민원서비스(G4C) 고도화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과 일선처리기관의 민원처리시스템간의 연계체계 마련하고, 민원서비스 종수 확대 및 사용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들이 행정기관을 방 문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 에서부터 발급까지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자 민원 단일창구를 구축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민원 사무를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민원내용과 처리절차, 처리방법 등을 안내하는 민원 안내 및 정보검색 서비스를 추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인터넷 민원서비스(G4C)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종수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 수단 다양화 전자민원 공통서비스를 개발해 97개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서비스시스템(G4C) 고도화 BPR/ISP(2003.9~2004.5) 민원서비스 및 공동이용 확대 구축 1단계 (2004.12~2005.9) 전자민원서비스(G4C) 확대 구축 2단계 (2005.12~2006.8) 전자민원서비스(G4C) 확대 구축 3단계 (2006.10~2007.5) 민원서비스 선진화 구축 1~2차(2009.4~20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 처리 전 과정을 온라인화 하여 민원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 일부 민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인터넷 서비스를 민원사무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안방민원처리 기반이 구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민원서비스 수단을 현재의 인터넷 매체 뿐 아니라 핸드폰, PDA 등 무선 서비스로 다양화, 확대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을 제고
정부 업무 관리 시스템 (온나라)	42,6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수평적·수직적 협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 과제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부처 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 기능과 부처의 업무활동을 연계하고, 업무 및 실적을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관리를 목표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비서실의 e-지원시스템을 기반으로 표준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처 특성에 맞도록 보완 개발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이들 과제별 업무추진상황 실시간 조회 가능하게 함 정부기능연계시스템과 연계하여 과제별 정책결정 과정의 이력정보관리 및 업무지식 축적을 통해 일목요연한 업무관리지원 과제별·단위업무별 문서관리 및 정책품질관리 등을 통한 다양한 정책정보의 공유 및 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업무관리시스템 BPR/ISP 수립 (2004.8~2004.11)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개발 및 시범부처 적용 (2005.5~2006.3)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확산(2006.7~2007.5) 온-나라 시스템 고도화 구축 및 확산(2007.12~2009.5) 클라우드 기반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2015.8~201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별·기관별로 이루어지던 행정 업무 처리의 전 과정이 표준화, 통합화, 시스템화 되었으며, 업무에 대한 계획과 실적이 자동으로 축적되고 정부 내 의사결정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증대 온-나라시스템 도입으로 표준화된 문서관리카드와 과제관리카드에 의해 업무 추진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정책결정 프로세스 확립 정책의제 및 국정과제 관련 자료의 실시간 조회 통해 정책결정의 속도와 질 향상

사업명	총지원 예산 (백만원)	추진 배경	추진 목표	추진 내용	추진 과정(이력)	추진 성과
지방 재정 정보화 (e호조)	20,8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관련 정보화사업은 재정 혁신의지 미흡, 업무 프로세스 개선 능력 부족, 표준화 및 공통영계 서비스 부재, 재정여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정보화수준 차이 등 문제점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 분야에 선진형 재정 제도를 도입 하여 지방재정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고, 실시간 업무 처리 기반을 마련 하여 지방재정의 효율화, 건전화, 투명화 실현을 목표로 추진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를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주의 회계제도 등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제도에 따른 지방재정 업무의 재설계 및 표준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업무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표준정보시스템을 개발·보급하며, 지방교육재정시스템과 국가재정을 연계·통합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e-호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 정보화 BPR/ISP(2003)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핵심분야 개발(2004) 지방재정정보화 3단계 사업(2005)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고도화(200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e-호조 기능개선)(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년에 시도, 시군구에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설치·보급 완료 2007년 상반기부터 국고보조금 신청, 중기 지방재정 계획 등을 거쳐 2008년도 예산편성작업 등과 같은 일부 업무에 대해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이용 지방재정 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정통계·분석 등의 고도화사업이 2008년 1월 완료되면서 지출을 포함한 모든 재정업무가 동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됨
행정 정보 공동 이용 확대	81,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민원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간 행정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대두됨 행정업무 효율 제고 위해 행정정보의 공유는 필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유를 통해 전자정부 인프라 및 서비스를 강화시키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및 대상 정보를 확대함으로써 행정민원 담당 부처가 민원 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민원인이 발급받아 제출하던 것을 부처 간·기관 간 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게끔 하여 민원인의 기관방문을 최소화하고, 구비서류 감축을 목표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정보 공유실태조사 및 공용 DB 구축을 통해 70여종에 대상 정보에 대한 공동활용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구축하기로 함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정보 공유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2005) 법정부 행정정보 공유체계 구축(2006)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구축 (2007)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구축 (ISP, 1~3차, 2008~2011)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고도화 (1~2차, 2012~2013)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법정부 정보유통허브 구축 (1~3차, 2014~2015,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정보공유로 인해 연간 5900만 통의 민원 구비서류가 감축되어 약 28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전동의 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11종의 공시성 정보 열람을 제공하고 있어 사용자의 이용편의성을 높이고 있음

부록 9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지원사업 사례

- 주요 선진국 사례를 선정한 기준은 UN 전자정부평가에서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임
 - 2018년 전자정부 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의 순위를 보면, 1위 덴마크, 2위 호주, 3위 대한민국, 4위 영국 순임
 - 여기서는 2018년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제외한 상위 국가인 덴마크, 영국, 호주를 선정함

1. 덴마크의 전자정부지원사업

1) 전자정부 및 지원 전략

- 2001년부터 전자정부 사업을 시작한 덴마크는 2014년 종이 없는 정부를 선언하는 등 공공부문 디지털화를 통해 행정혁신을 달성함(한세익, 2019)
- 최초의 전자정부 계획은 「전자정부를 향해: 덴마크 공공부문을 위한 비전 및 전략」(Towards eGovernment: Vision and Strategy for Public Sector in Denmark 2001-2004)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된 이 계획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여 전자정부에 대한 덴마크 접근법의 기본 개념을 마련함
 - 디지털 협업을 위한 전자서명, 행정당국과 시민 간의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등을 추진함
 - 이 계획은 디지털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4가지 목표를 제시함
 - 목표 1 : 전자정부는 네트워크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함
 - 목표 2 : 공공부문은 전자적으로 작동하고 소통해야 함
 - 목표 3 : 공공부문의 서비스는 시민과 기업에 중점을 둔 포괄적인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 목표 4 : 공공부문의 업무는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수행되고 처리되어야 함
- 2차 계획은 「잠재가능성의 실현」(Realising the Potential 2004-2006)임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된 이 계획은 공공부문의 내부적 디지털화를 추진함
 - 효율적인 지불 및 내부 디지털화를 위해 Nem Konto(행정당국의 지불을 위한 필수 기본 시민 계정), 전자 송장, Virk.dk(비즈니스 포털), Sundhed(eHealth 포털) 등을 구축함
- 이 전략은 공공기관들이 달성해야 할 우선순위 목표를 포함하는 5개의 '이정표'를 설정하였음
 - 이정표 1 : 공공부문은 시민과 기업에 중점을 둔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이정표 2 : 전자정부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자원을 공개해야 함
 - 이정표 3 : 공공부문은 디지털 방식으로 일하고 소통해야 함
 - 이정표 4 : 전자정부는 일관되고 유연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야 함
 - 이정표 5 : 공공부문 관리자는 방법을 선도하고 자신의 조직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3차 계획은 「전자정부 전략」(eGovernment Strategy 2007-2010)임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된 이 계획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서비스 개선, 효율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화 추진, 공공부문 IT시스템의 상호연결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결속(digital cohesion)을 창출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 공통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여 NemiD(eID 솔루션), 연합 사용자 관리, EIndkomst(디지털 소득신고), Digital Post(시민과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Borger.dk(시민 포털) 및 공통 ICT 인프라 등을 갖추

□ 4차 계획은 「미래 번영을 위한 디지털 여정」(Joint Public Digital Strategy : The Digital Road to Future Prosperity 2011-2015)임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된 이 계획은 단순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서비스에 중점을 두었으며, 종이 양식과 우편의 종식(An end to paper forms and post), 디지털 복지서비스(New digital welfare), 공공부문 디지털화를 위한 협력 강화(Closer digital public cooperation) 등을 목표로 하며, 2014년 11월을 종이 사용을 끝내는 e-Day4로 지정함
 - 그 핵심 목표는 ①공공부문 디지털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②자원 및

재원 절약, ③공공서비스 전달의 현대화임

- 2015년까지 정부·공공기관·기업·국민 간의 소통방식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일상생활에서 디지털복지를 체감하도록 함
- 이를 위해 기존의 서류제출 등 문자 의사소통(written communication)을 탈피하여 80% 이상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전자정부의 5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 ①출력자료 및 우편물 서비스이용 중지(No more printed forms or letters): 정부·공공기관·기업·국민 간 오고가는 지원서, 신청서, 고지서 등 각종 서류 및 우편물을 모두 디지털화함
- ②신 디지털복지시스템 구축(New digital welfare): IT를 활용해 교육기관(특히, 초·중등 교육) 의료·보건기관, 노인의료시스템, 재활치료시스템 등에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함
- ③공공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 개발(Digital solutions for closer public sector collaboration): 모든 공공기관은 관련 공공 부문 솔루션을 이용해 기관마다 각기 다른 평행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대신 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함

○ 신 디지털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디지털복지전략」(Strategy for Digital Welfare 2013-2020)을 별도로 마련함

-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될 이 전략은 교육, 노인복지, 재활치료, 건강보건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원격의료 보급화, 건강복지 분야 디지털시스템 구축, 간호복지기술 개발, 정보 기록·전달기술 개발, 디지털학습 및 교육 개발, 디지털복지 인프라 구축 등을 골자로 함

□ 5차 계획은 「더욱 강력하고 안전한 디지털 덴마크」(A Stronger and more secure Digital Denmark 2016-2020)임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될 이 전략은 기존 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공공부문의 디지털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는 과감한 목표로 함

- 3대 주요 목표는 ①디지털 고품질 복지 솔루션으로 보다 응집력 있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②덴마크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기

쉽고 매력적인 환경 조성, ③시민 및 기업의 데이터 보안을 고려한 디지털 솔루션 개발 및 그 대한 높은 신뢰의 지속적인 유지임

덴마크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

시 기	주요 핵심 전자정부 전략	
2001년 ~ 2004년	디지털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 서명 • 행정당국과 시민 간의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2004년 ~ 2006년	효율적인 지불 및 내부 디지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m Konto (행정당국의 지불을 위한 필수 기본 시민 계정) • 전자 송장 • Virk.dk (비즈니스 포털) • Sundhed (eHealth 포털)
2007년 ~ 2010년	공통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miD (eID 솔루션) • 연합 사용자 관리 • EIndkomst (디지털 소득보고) • 디지털 포스트 (시민과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 Borger.dk (시민 포털) • 공통 ICT 인프라
2011년 ~ 2015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필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디지털 포스트 • 디지털 복지 서비스 • 필수 온라인 셀프 서비스 • 기본 데이터 프로그램
2016년 ~ 2020년 • 더욱 강력하고 안전한 Digital Denmark (2016-2020) • 디지털 성장 전략(2018년 ~ 2025년)	포괄적인 디지털 사회 : National Digital Growth Strategy는 덴마크의 기술 생태계를 개선하고 기업이 새로운 기술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정부 : 디지털 서비스, 한 번만하는 원칙 및 더 나은 복지 서비스, 개방형 데이터, 스마트 시티, 자동 사업보고, 효율적인 유틸리티 부문, 한 번만하는 원칙에 대한 데이터 공유, 디지털 기술 및 정보 보안 인식의 사용자 친화적 구축. • 디지털 성장 전략 : 인재 중개 플랫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한 민첩한 규제, 초등학교의 컴퓨터 사고, 회사의 사이버 보안보고 도구 개발

자료: Ozols & Meyerhoff Nielsen(2018).

- 디지털 전략의 3대 테마는 ①생산적이며 효과적인 공공부문, ②시민과 기업을 위한 가치를 창조하는 공공서비스, ③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공공부문의 디지털화임
- 3대 테마 기반의 디지털 전략 추진대상은 행정 프로세스의 자동화, 시민과 기업을 위한 더 나은 사용자 경험, 디지털 복지, 데이터 공유, 일관된 공공행정 프레임워크, 개인정보보호, IT인프라 솔루션, IT프로젝트 관리, 공공부문 디지털화를 위한 공동협업 등임

- 2015년 4월부터 정부부처, 지방정부,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새로운 디지털비전 수립을 위한 테마 데이(theme day)를 진행함
 - 테마 데이는 DI ITEK(Agency for Digitisation and Confederation of Danish Industry)가 진행하며, 총 10회의 워크숍으로 구성됨
 - 주요 논의내용은 현재 공공 IT 인프라,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데이터 주도의 성장, 복지기술 그리고 공공부문 디지털화 노력의 전략적 관리 등임

2)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거버넌스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거버넌스는 국가 수준의 정책 주도자, 사업의 조정, 집행, 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관련행위자들의 지배구조로서 아래와 같음 (European Commission, 2019a)

□ 국가의 정책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덴마크 전자정부와 관련된 전략 및 정책의 주도자임
 - 전략은 공공부문의 최상의 서비스 품질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절차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 따라 형성됨
 - 따라서 재무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 공공 리더십 및 디지털화와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개발함
- 디지털화청(Agency for Digitisation)은 덴마크 디지털 발전의 촉진자
 - 이 기관은 재무부 소속이며, 국가IT통신청(National IT and Telecom Agency)의 폐지와 정부관리청(Agency for Governmental Management)으로부터 공공부문 디지털화에 대한 책임을 양도 받아 2011년 11월에 설립되었음
 - 정부는 디지털화청을 설립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효율성을 구현하는 ICT를 더욱 강화함
 - 청의 주요 책임은 디지털 시대에 정부의 정책비전을 구현하고 디지털화와 관련된 전략을 개발하며 덴마크 디지털 인프라를 개발 및 관리하는 것임

- 산업금융부(Ministry of Industry, Business, and Financial Affairs)는 비즈니스 규제, 지적 재산권, 경쟁 및 소비자 정책, 금융부문 및 운송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중요한 여러 정책영역의 디지털을 담당함
 - 산업금융부는 비즈니스 환경 내에서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한 공공 서비스와 관련하여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산하기관인 덴마크 비즈니스 당국(Danish Business Authority)은 덴마크 비즈니스 포털을 담당함
 - 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디지털화는 재무부와 협력하여 이루어짐
- 기후에너지 및 유틸리티부(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Utilities)는 덴마크 통신정책의 담당자임
 - 로밍, 경쟁 규제, 모바일 및 광대역 보급을 포함한 통신정책을 담당함

□ 사업의 조정

- 디지털화청(Agency for Digitisation)은 하나의 단일조직 내에서 강력한 전략적, 전문적 및 기술적 역량을 수집함
 - 여기는 개념에서 산출에 이르기까지 전자정부의 전략과 정책을 실행하는 책임을 맡는 주요 역할 중 하나를 촉진함
 - 따라서 전자정부 전략의 실현에 따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과 관련된 행위자를 조정함
 - 국가 전자정부 전략(eGovernment Strategy)과 모든 정부 차원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전자정부 전략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for the eGovernment Strategy)를 조정함
- 정부 IT 서비스청(Agency for Governmental IT Services)은 2010년 1월 1일 8개 부처의 운영 ICT 조직을 통합하여 기본적인 ICT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정부의 공유서비스센터로 설립되었음
 - 2010~2014년 사이에 여러 프로젝트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더 높은 품질과 저렴한 비용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ICT 플랫폼을 하나의 공통운영플랫폼으로 표준화함
 - (i) ICT 사용을 위한 공통의 중앙정부 기본 플랫폼으로서 중앙정부 ICT 작업장, (ii) 다른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운영 ICT 인프라, (iii) 공통 플

랫폼의 생성을 통한 일반 관리시스템의 표준화, (iv) 표준 프레임워크 조달을 통한 운영계약의 효과적인 아웃소싱 등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접근성, 안정성, 효율성 및 정보보안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둠

□ 사업의 집행

- 재무부 및 디지털화청은 국가 수준의 전자정부 전략을 집행하고 있음
 - 재무부는 전반적인 전자정부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 외에도 행정, 공공 리더십 및 디지털화와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개발 및 구현하여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킴
 - 디지털화청의 디지털화 프레임워크는 공공부문의 디지털화 전략에 대한 정부의 약속 내에 존재하며 전략의 이행을 책임짐
- 각 정부부처 및 그 소속기관
 - 개별 정부부처 및 그 기관은 전반적인 국가 전자정부 전략에 따라 영역별로 정부 간 및 부처 수준에서 결정된 개별 행동계획뿐만 아니라 각 역량 영역에 속하는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구현함

□ 사업의 지원

- 재무부의 정부 IT 서비스청(Agency for Governmental IT Services)
 - 정부 IT 서비스청은 효율적인 IT 지원을 실행하고 덴마크 전역에서 고도의 일관된 IT 서비스를 보장할 책임을 지며, 주요 임무는 지역 전체에 걸쳐 IT의 지원, 개발 및 조화를 포함함
- 재무부의 중앙정부 디지털 프로젝트국(Division for Central Government Digital Projects)
 - 이 곳은 재무부의 디지털화청에 상주하며 대규모 ICT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조언과 코칭을 제공하고, 그 임무는 국가의 공통 IT 프로젝트 모델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임
- 데이터 윤리위원회(Data Ethical Council)
 - 2019년 초에 설립되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기술, 데이터 및 AI 사용에 대한 공개토론을 촉진하였으며, 위원회에는 공공 및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대학교 및 싱크탱크 회원이 포함됨

□ 사업의 감사

○ 덴마크 국가감사실(National Audit Office of Denmark)

- 국가감사실은 주정부 계정(state account)을 감사하고 의회의 결정에 따라 주 자금(state fund)이 관리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주된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감사실은 ‘선한 공공감사 관행’의 원칙에 따라 재무감사 및 성과감사를 수행함

3)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조정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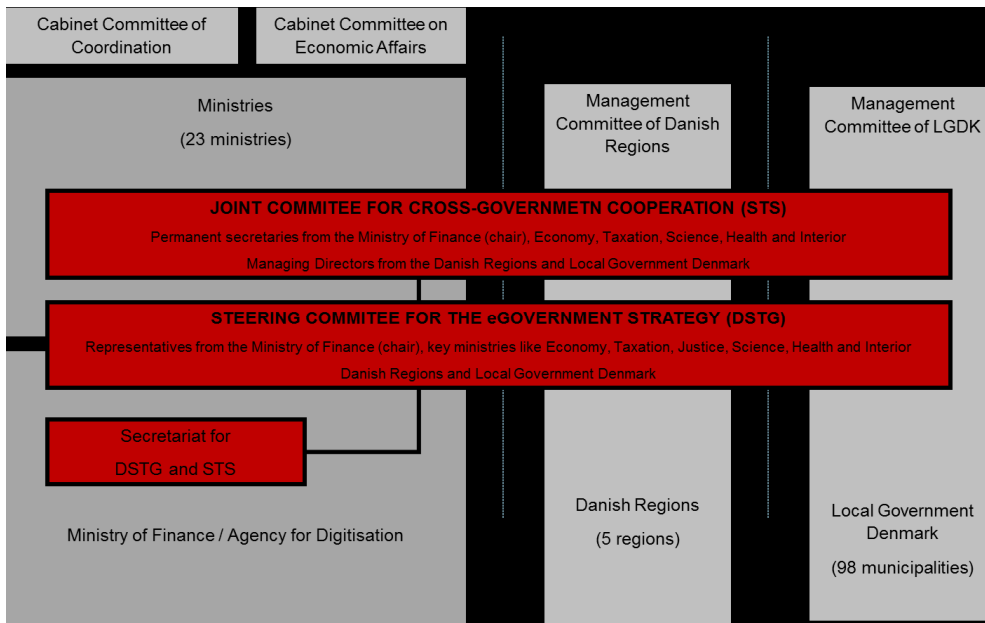
□ 덴마크 디지털화청

○ 청의 임무와 책임

- 디지털화청은 재무부의 기관이며 정부의 디지털화 정책을 담당하기 위해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이 기관은 덴마크 복지 현대화를 목표로 정부의 디지털 야망 이행과 공공부문에서의 디지털 복지기술 사용을 책임지고 있음(Meyerhoff Nielsen, 2017)
- 정부의 디지털 야망(digital ambitions)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역 및 지방 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의 정부가 포함됨(예: 부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 병원, 학교, 대학 등)
- 청은 공공부문을 디지털로 변환하려는 노력에서 공공부문 협력을 추진하는 엔진으로서 덴마크 디지털 혁신 노력은 디지털 마인드와 디지털 공공부문의 비전을 포용해야 하는 고유한 공통책임을 기반으로 하며, 민간부문은 이와 관련하여 핵심 파트너임
- 또한 공공부문, 비즈니스, 무역 조직 및 NGO와의 상호작용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일반적인 솔루션을 찾고 강력하고 안전한 디지털 덴마크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공공부문을 위한 디지털화 정책개발(레드테이프를 줄이려는 이니셔티브 포함)
- 공동정부 디지털 전략 2016-2020의 포트폴리오 관리 및 모니터링
- 기관 디지털 서비스, 국가 디지털 정체성 개발을 위한 공유 서비스
- 시민 포털 및 통합 시민 디지털 계정(Digital Post)
- 사이버 및 정보보안 규정 및 표준
- 전자정부 아키텍처 및 데이터 교환

- 사용자 경험, 접근성 및 응집력 있는 사용자 여정 조정
- IT 프로젝트 관리 프레임워크 및 전문화
- 전자정부 전략운영위원회의 조정

덴마크의 부처간 거너번스 및 조정 모형



출처: Meyerhoff Nielsen (2013).

○ 포트폴리오 조정위원회(PSC)의 의장 및 조정 역할

- 전략적 차원에서 디지털화청은 국가 전자정부 전략을 조정하고 포트폴리오 조정위원회(PSC)의 의장을 맡고 정부 간 전자정부 전략의 조정 및 이행을 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의장 및 관련 기관으로 활동함 (Meyerhoff Nielsen, 2017)
- PSC는 전자정부에 대한 덴마크식 접근방식의 고유한 특징으로 정부 간에 모든 정부 차원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함
- 조정은 프로젝트 조정그룹에 의해 운영수준에서 이루어지며, 프로젝트 조정그룹은 개별 프로젝트 또는 여러 개의 관련 프로젝트로 구성된 프로그램 형태로 각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루어지며, 일부 이니셔티브는 기존 포럼 및 운영 그룹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그룹 내에서 조정됨
- PSC는 이니셔티브에 걸쳐 작업을 조정하기 위해 특정 조정 및 작업 그룹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개별 프로그램 리더,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및

실무 그룹은 매월 PSC에 보고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PSC에 문제를 이관함

- PSC는 각각 법률, 재정 및 예산 문제에 관한 상임위원회 두 곳에서 지원하며, PSC 및 전자정부 전략 실행계획에 직접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는 주요 중앙 정부기관, 덴마크 지역 및 지방정부의 포괄조직(모든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의 관리위원회를 포함하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자에는 IT 부문 대표, 공공 및 민간(예: 덴마크 산업(이해관계자 조직) 및 시민단체(예: 노인 및 장애인 단체) 단체 등이 포함됨
- 마찬가지로 개별 이니셔티브의 구현을 계약한 민간 벤더는 일반적으로 관련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및 실무 그룹에 참여함
- 프로젝트 수준에서 모든 주 당국은 공통 IT 프로젝트 모델을 적용해야 하며, 1,000만 DKK(약 € 1,3M)가 넘는 프로젝트의 경우 IT위원회가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주 비즈니스 사례 모델을 사용해야 함
- 일반적인 IT 프로젝트 모델은 PRINCE2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관리도구인 단계 분할 및 단계 전환의 원칙이 포함되며 조직 및 역할의 원칙을 제공함(Meyerhoff Nielsen & Yasouka, 2014)
- 요약하면 DIGST와 PSC에 의해 가정된 강력한 임무와 중심적인 역할은 덴마크 전자정부의 성공 스토리를 촉진하는 핵심요소로 인식됨
- 공동-정부적 성격은 세 가지 정부 차원에서 국가 비전, 전략 및 행동 계획의 공동 비전과 소유권을 창출하며, 전략과 개별 이니셔티브에서 목표와 KPI 간의 연결은 성공적인 구현과 이익 실현에 도움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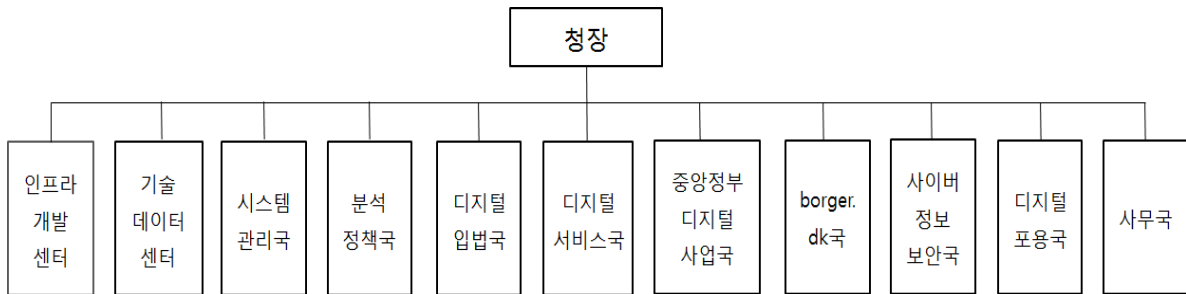
○ 인프라 개발센터(Center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 이 센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를 개발함 : MitID(“MyID”, 3세대 국가 eID 솔루션), NemLog-in3 (“EasyLogin”, 차세대 싱글 사인온 솔루션) 및 Næste generation Digital Pos(시민 및 기업을 위한 차세대 디지털 우편함)
- 이 센터는 덴마크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는 미래에 대비해야 하며 사용자 요구에 맞게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연성 향상의 필요성을 반영해야 함
- 센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솔루션을 준비하고 구현할 책임이 있으며, 센터는 연락처 정보 등록 및 지원 솔루션을 구축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 시민 및 기업들이 공공기관과 상호작용할 때 필요한

도움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 센터는 덴마크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카드 모두의 디지털 버전을 개발하는 일을 맡고 있음

덴마크 디지털화청의 조직도



○ 시스템 관리국(Division for System Management)

- 시스템 관리국은 중앙 공동솔루션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핵심 요소로서, 공공부문, 시민 및 회사는 안전하고 고성능의 솔루션을 경험하는 것이 디지털화의 신뢰성을 위해 필수적임
- 이곳은 덴마크 디지털화청 내에서 시스템 관리의 지속적인 개발 및 전문화를 위한 노력을 책임지고 있음
- 목표는 GDPR 및 ISO 준수 및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높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보장하는 것임

○ 기술 및 데이터센터(Centre for Technology and Data)

- 기술 및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와 새로운 기술기회를 공유하고 재사용하기 위한 개선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일관된 공공부문을 조성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
- 이 센터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및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작업을 준비, 조정 및 구현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기본 데이터 작업과 일반 공공부문 디지털 아키텍처 간의 상호 운용성이 보장됨
- 이 센터는 공공부문 디지털 전략 2016-2020 및 공공부문 디지털 아키텍처, 기본 데이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전략, 인공지능을 포함한 세계적인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향한 정부의 일관성 개혁을 기반으로 한 많은 이니셔티브를 담당함

○ 분석 및 정책국(Division for Analysis and Policy)

- 분석 및 정책국은 광범위한 디지털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 국은 중앙정부, 덴마크 지방자치단체 및 덴마크 지역의 공동 디지털화 노력, 즉 공동 디지털 전략의 전반적인 관리를 통해 공동 디지털화 노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또한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효율적인 프로세스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도구로 디지털화를 사용하기 위해 사례처리 프로세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현재 덴마크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 및 로봇공학과 같은 신기술의 잠재적 이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또 다른 중요한 의제는 디지털 준비 법률임

○ 디지털 입법국(Division for Digital Legislation)

- 디지털 입법부에서는 청구서, 계약, 조달, 데이터 보호 및 디지털화 가능 입법에 관한 문제를 담당함
- 법률고문과 함께 기관 내 다른 부서를 지원하고 협력하며 디지털 서비스의 데이터 전략과 관련하여 여러 활동을 조정함
- 또한 데이터 윤리에 관한 디지털 서비스 및 이니셔티브에 관한 기관의 작업에서 법률과 정책 사이의 연결을 담당하며, 정부의 데이터 윤리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함

○ 중앙정부 디지털 프로젝트국(Division for Central Government Digital Projects)

- 중앙정부 디지털 프로젝트국은 정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부문의 ICT 프로젝트 및 운영에 대한 전문화 작업의 기초를 제공함
- 주요 노력은 중앙정부 ICT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정부 ICT 프로젝트를 위한 기존 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부기관 내에서 강력한 역량을 키우고, 정부계약관리 모델을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이곳은 덴마크 ICT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함

○ borger.dk 사업국

- 전국적인 시민 포털 borger.dk는 모든 디지털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점”으로서, 포털에는 매년 3천 4백만 건 이상이

방문함

- borger.dk 사업국은 사용자 요구에 맞게 포털을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용자는 쉽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시민이 borger.dk를 쉽게 탐색할 수 있어야 하며 웹 사이트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확신해야 함

○ 사이버 정보보안국(Division for Cyber- and Information Security)

- 사이버 정보보안국은 공공부문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디지털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보안 관련 법적 요구사항, 표준 및 EU 일반 데이터 보호규정(GDPR) 및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식별 및 신뢰 서비스에 대한 EU 규정(eIDAS 규정)에 대한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디지털 포용국(Division for Digital Inclusion)

- 디지털 포용국은 공공부문 디지털화가 사회의 모든 사람을 수용하도록 보장함
-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이 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결코 디지털이 되지 않으나 무엇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필요한 공공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함
- 업무에는 당국이 웹 접근성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함
- 또 다른 임무는 공공기관의 웹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며, 덴마크의 미래 공공부문 디지털 인프라, 특히 NemLog-in, MitID 및 Digital Post 솔루션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여 디지털 관리에 대한 시민과 기업의 신뢰를 유지하고 기본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 디지털 서비스국(Division for Digital Services)

- 디지털 서비스국은 시민과 기업을 위한 공공부문 디지털 서비스 솔루션의 품질과 일관성을 보장함. 예를 들어, 본부에서는 borger.dk의 응집력 있는 디지털 사용자 여정 및 Mit Overblik(My Overview)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자신의 정보 및 현재 사례에 대한 향상된 디지털 개요를 공공기관과 함께 제공할 책임이 있음
- 또한 단일 디지털 게이트웨이 EU 규정의 덴마크 구현을 조정하여 EU 사용자가 국경을 넘어 디지털 셀프서비스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록 공통 유럽 포털을 구축함

-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국제 파트너십인 열린 정부 파트너십의 덴마크 멤버십을 조정함

○ 국제팀(International Team)

- 국제팀은 EU 관련 활동 조정을 포함한 국제 활동을 책임지며, 이 팀의 목적은 덴마크가 EU의 디지털 안전과 그 지역의 후속규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EU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
- 또한 해외 파견 및 최고경영진 프레젠테이션 및 해외대표단의 책임을 맡고 있음

□ 정부간 협력운영위원회(Styregruppen for Tværoffentlige Samarbejder: STS)

○ 청의 임무와 책임

- 정부간 협력운영위원회는 디지털 정부작업에 공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위원회는 디지털 정부를 위한 중요한 원칙과 일관된 프레임워크의 조건을 결정하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원할당을 결정하고, 디지털 정부운영 및 프로젝트 유지 보수를 위한 모델을 결정하기 위해 공공자원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조정함
- 운영수준에서 부처간 사업청(inter-ministerial project office)은 덴마크 IT 프로젝트 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하는 디지털화청에 위치함
- 정보기술(IT) 프로젝트 모델, 비즈니스 사례 및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며, 중앙정부의 IT 운영 컨설팅사무국(Consultancy Secretariat for IT operations)으로서 아웃소싱된 IT 운영의 관리 및 조달을 지원함

○ 청의 구성

- STS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을 대표하는 협회의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5개 부처의 고위급 대표(상임 사무국장 / 관리이사 수준)로 구성됨
- 협회의 구성원은 ICT 관리자로서, 절반은 공공부문, 절반은 민간부문이며, 위원회에서 실제로 경험이 풍부한 관리자의 존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둠

□ 전자정부 전략조정위원회(The Steering Committee for the eGovernment Strategy: DSTG)

○ 정의 임무와 책임

- 조직 구성과 참여 이해관계자는 매우 유사하지만 STS는 국가 전자정부 전략, 행동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예산 및 승인을 승인하고 공동 전자정부 금융을 할당해야 할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
- DSTG는 덴마크 거버넌스 및 협력 모델의 중간 계층에 해당하며, 총괄적으로 전자정부 전략 및 행동계획을 구성하는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진행 보고를 받음
- 예를 들어, DSTG는 공동 조직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지만 STS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며, DSTG는 정보를 필터링하고 STS 승인을 위한 결정을 제안하지만 STS의 특권인 공동정부 금융을 승인할 수는 없음
- 국가전략 내의 모든 이니셔티브는 DSTG와 STS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함
- DSTG는 DIGST의 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회원들은 주요 부처, 덴마크 지역 및 LGDK의 이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DSTG는 매년 10~12회 정도 회의를 함

2. 영국의 전자정부지원사업

1) 전자정부 및 지원 전략

- 2000년에 발행된 「전자정부: 정보 시대의 공공 서비스 전략 프레임워크」는 영국 최초의 공식 전자정부 전략으로 볼 수 있음
 - 영국은 처음에 다른 국가와 유사한 발전 패턴을 따랐음
 - 중앙 포털, 조정 메커니즘(2005년 설립된 국가 및 지방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CIO 협의회) 개발, 비용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둠
- 2005년 영국의 국가 디지털 전략(Digital strategy)과 혁신적 정부(Transformational Government: Enabled by Technology)라는 별도의 전자정부 전략을 발표함
 - 국가 디지털 전략은 광대역 개발과,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를 설정하고,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과제에 착수함
 - 낮은 단계의 전자정부 서비스 도입, 디지털 격차 및 사회적 배제 측면을 다루고, 보다 시민중심의 서비스 설계 및 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구성 기간을 제시함
 - 첫 번째 단계는 내각 사무처에 전용 전자정부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었으며, 서비스 혁신위원회는 새로운 서비스 디자인 원칙을 준수하고 고객 그룹 이사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짐(HM Government's Cabinet Office, 2005).
 - 공유 서비스의 사용과 포트폴리오 관리 및 공급업체 관리 거버넌스 관행의 표준화 및 구현은 디지털 전략의 초점 영역 중 하나임
- 2007-2009년 내각 사무처는 정부 웹 사이트의 중앙 집중화와 시민 및 비즈니스 포털 Directgov.uk 및 Businesslink.gov.uk의 생성을 발표함
 - 2009년 행동계획인 최우선과제(Putting the Frontline First: Smarter Government)에서는 디지털 공공 서비스, 정부 데이터를 여는 보다 급진적인 접근방식, 백 오피스(back-office) 기능 통합, 검사 및 평가 조정에 중점을 둠

- 국가 차원에서는 Tell Us Once와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서비스 성과 데이터를 게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
- 2010년 정부 서비스 제공 최적화의 또 다른 물결로 정부 인터넷 통신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통해 보다 중앙집중화되고 전문화 된 정부 정보 및 서비스 제공으로의 전환이 시작됨
 - 보고서에 대한 반응으로 GOV.uk 웹 사이트에서 모든 중앙정부 정보 서비스와 API의 통합이 시작됨(GOV.uk는 정부 정보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단일 웹사이트)
 - 내각 사무처에 모든 온라인 정부를 감독하기 위해 디지털 상무이사의 직책이 모든 디지털 채널 및 부서 간 디지털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담당하는 중앙 조직(team)으로서 정부 디지털 서비스 (Government Digital Service) 담당자에 설립됨(Lane Fox, 2010)
- 2013년 전략적 초점은 정부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하고 재설계하여 시민과 기업을 위한 기본 선택이 되도록 하는 것임
 - 이 전략은 부서별 디지털 및 인식 제고 전략과 보조 디지털 및 API 제공에 대한 정부 간 및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방식으로 이어짐
 -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기본 표준별 디지털이 정교해지고 서비스 품질 관리 및 기관 간 거버넌스 절차가 구현됨(GDS에서 수행한 전자정부 프로젝트 평가 절차)
 - 그리고 중앙집중화된 전자정부 플랫폼, 서비스 성과보고를 위한 중앙 집중화된 성과 대시보드, 전선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앙집중화 (GOV.UK로의 전환)를 예상함
 - 이 전략은 주요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위한 중앙집중식 수평 코디네이터, 공유 인프라 개발자, 지침 제공 업체 및 게이트 키퍼로서 GDS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3자의 참여에 더 중점을 둠
- 2017년 영국 디지털 전략 2017(UK Digital Strategy 2017) 및 정부혁신 전략 2017-2020(Government Transformation Strategy 2017-2020)을 발표

- 국가 디지털 전략은 영국의 디지털 경제를 강화하고 EU 탈퇴(Brexit)와 관련된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며, 정부혁신 전략은 점점 더 정교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많은 부서가 조직의 운영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계에 도달했음을 인정함
 - 새로운 디지털 정부 아젠다의 전략적 초점은 중앙 및 지방정부와 제3자에 합류함으로써 조직 경계를 넘어서 협업을 강화하는 것임
 - 결과적으로, 전략적 범위는 전달 채널의 전환뿐만 아니라 내부 백 오피스 프로세스의 재설계도 포함함
 - 이 전략은 서비스 및 정책 설계 관행의 통합을 포함하여 몇 가지 다른 요소(다학제 정책 및 전달 팀 구성, 정부 차원에서 가치와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리모델링된 접근방식, 서비스 또는 부서 수준에서 수행하는 대신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거버넌스를 통한 해결)를 예상함

- 또한 이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우선순위가 가정됨
 - 첫째, 가입 서비스의 설계 및 제공
 - 둘째, 주요 혁신 프로그램의 제공
 - 셋째, 변화에 대한 정부 전체의 접근방식 수립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사 지방 GOV 커뮤니티 그룹, 플랫폼 및 정부 간 프로세스와 협력하여 전문가 및 고위지도자 커뮤니티 그룹을 구축하는 것임

- 영국 정부의 새로운 정부혁신 전략은 다음 세 가지 주요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음
 - 전체 시민 대상 서비스 혁신 : 공공부문의 시민, 사업체 및 사용자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함
 - 전체 부서 혁신 : 모든 정부조직에 영향을 미쳐 유연한 방식으로 정책 목표를 제공하고 채널 전반에 걸쳐 시민 서비스를 개선하며 효율성을 향상시킴
 - 정부 내부 혁신 : 시민 대상 서비스를 직접 변경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수적임

영국 전자정부의 발전 단계

시 기	주요 핵심 전자정부 전략	
2000년 ~ 2004년 • 전자 정부: 정보화 시대의 공공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 워크	주요 초점: 조직의 혁신, 부서별 e-비즈니스 전략 촉진, 공통 인프라 및 리더십 제공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포털 UKonline.gov.uk; • BusinessLink.gov.uk; • Directgov; • 에이전시 정책 입안자를 위한 e-Policy 원칙.
2005년 ~ 2011년 • 혁신적 정부 -기술로 가능 • 영국 연결: 디지털 전략	주요 초점: 인터넷 액세스, 학교 ICT, 지역행정 디지털화, 인터넷 안전 및 보안, 행정 디지털화, 시민 중심 공공서비스, 공유 서비스 사용시 디지털 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사무실의 eGov 장치; • CIO위원회; 고객 그룹 이사; 서비스 전환위원회; GOV 웹 사이트를 중앙 포털로 전송
2009년 ~ 2011년 • 최전선의 최우선: 스마트 정부 (활동 계획)	주요 초점: 공공 서비스 개선과 동시에 공공지출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 데이터; Datagov.uk. • 서비스 데이터 출판; 공유 서비스 센터의 확장; • 영국 디지털 챔피언 임명; Martha Lane Fox 검토;
2011년 ~ 2013년 • 정부 ICT 전략	주요 초점: ICT에 대한 개방적 접근, 개방형 표준관리, 오픈 소스 채택 재조정 및 정부 ICT 계약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V.UK의 프로토타입 출시; 1500개의 정부 웹사이트 폐쇄 • 디지털 직책의 전무이사 창설; 중앙정부 디지털 서비스.
2013년 ~ 2015년 • 정부 디지털 전략	주요 초점: 기본적으로 디지털, 부서별 리더십 향상, 주요 거래 서비스 재설계, 플랫폼 중앙집중화, 인식 구축,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공동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재설계; 연간 10000건 이상의 거래; • 부서별 디지털 리더; 디지털 어시스턴트. • 기본 서비스 표준에 따른 디지털;
2017년 ~ 2020년 • 영국 디지털 전략 2017, 정부 혁신 전략	주요 초점: 정부 전체 및 가입 서비스 제공, 다채널 접근 및 사전 서비스 제공(GOV 거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 있는 커뮤니티(네트워크 전문가와 함께 변환); • 변형 동료 그룹(고위 지도자); • 플랫폼: 구성요소 및 비즈니스 기능; • GOV.UK 확인, 통지, 지불; API 표준; 민첩; • 고객중심 조달지침.

자료: Ozols & Meyerhoff Nielsen(2018).

- 이 전략의 목표는 시민과 국가 간의 관계를 변화시켜 시민의 손에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고 그들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다섯 가지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변화시킴
 - 올바른 사람, 기술 및 문화를 키움
 - 더 나은 직장 도구, 프로세스 및 거버넌스 구축
 - 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
 - 변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공유 플랫폼 생성
- (이 전략은 5 가지 목표 각각에 대해 2020년까지 명확한 우선순위를 명시했으며 2020년 이후 정부에 대한 기대도 포함하고 있음)

○ 이 전략은 정부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보장하는 정부 디지털 서비스청 (GDS)에 의해 지원되며, GDS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정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절한 도전적인 표준을 설정하고 식별하여 선별하여 정부의 디지털 기능 향상을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함
- 정부 전체의 디지털, 데이터 및 기술 커뮤니티를 강화해 전문표준을 설정하고 채용, 유지, 급여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접근방식을 표준화함
- 새로운 아이디어 탐색 및 프로토타입 개발을 포함하여 디지털 전문 지식의 중심으로 활동하고 이 전문지식을 효과적으로 배포함
- 다른 정부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축, 지속적으로 개선 및 운영함
-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목표로 하는 디지털, 데이터 및 기술 전문지식(GDS, 부서 또는 외부소스에서)을 다른 정부기관에 제공함
- 지출 통제, 서비스 평가 및 IPA(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프로젝트를 보장함

○ 2017년 3월, 영국 디지털 전략 2017은 디지털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 부서에서 시작하여 전개됨

- 이 전략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경제를 구축하고 부와 기회가 전국에 퍼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며 세계에서 크고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함
- 디지털 전략은 영국 전체를 위한 것이며 7개의 줄기로 구성됨
- 연결성 : 영국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디지털 기술 및 포용성 :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제공함
- 디지털 부문 : 영국을 디지털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최고의 장소로 만듦

- 더 넓은 경제 : 모든 영국 비즈니스가 디지털 비즈니스가 되도록 지원
- 안전한 사이버 공간 :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온라인 거주 및 작업 공간을 제공함
- 디지털 정부 : 영국 시민을 온라인으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리더로 유지함
- 데이터 : 영국 경제에서 데이터의 힘을 활용하고 사용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향상시킴

2) 전자정부지원사업 거버넌스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거버넌스는 국가 수준의 정책 주도자, 사업의 조정, 집행, 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관련행위자들의 지배구조로서 아래와 같음 (European Commission, 2019b)

□ 국가의 정책

- 내각 사무처(Cabinet Office)는 정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총체적 목표로 정부의 효율성과 개혁 의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짐
 - 전자정부는 내각 사무처 장관의 정치적 책임하에 내각 사무처 사무실에서 주관하며, 내각 사무처의 집행장관은 전자정부를 담당함
- 정부 디지털 서비스청(Government Digital Service)은 모든 디지털 채널에서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관리하는 내각 사무처의 중심조직인 Martha Lane Fox의 보고서 ‘Directgov 2010 이상: 진화가 아닌 혁명’에 대한 응답으로 설립되었으며, GDS의 책임은 다음과 같음
 - GOV.UK 웹사이트 운영 : 정부 서비스 및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
 - 공공 서비스를 단순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
 - GOV.UK Verify와 같은 정부 간 플랫폼 구축 :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 정부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이며 모든 사람이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함
 - 부처가 기술을 구매해야 할 때보다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

- 부처가 직원에게 도움을 제공할 때 장벽이 아닌 더 나은 가치 기술을 제공하도록 지원함

□ 사업의 조정

- NHSX(a new unit driving forward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DHSC), NHS(National Health Service) England 및 NHS Improvement의 디지털, 데이터 및 기술 협력체로서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 및 전달을 추진해야 함
 - GDS와 유사하며 처음으로 건강에 대한 정책, 구현 및 변경의 모든 수단을 제공함
 - NHSX는 GDS 및 기타 중앙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그들이 한 일을 배우고 정부의 디지털, 데이터 및 기술전문직과 지속적으로 연계됨
 - GDS는 NHSX가 Digital Service Standard 및 Technology Code of Practice에 따라 지침 및 표준을 개발하고 공통 플랫폼 및 구성요소(예: Pay and Notify), 기능 및 기술, 새로운 기술, 지출통제 및 조달 등을 함

□ 사업의 집행

- 2013년 10월 기술 리더 네트워크(Technology Leaders Network)가 설립되어 정부가 기술을 주도하여 훌륭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올바른 기술을 갖추게 됨
 - 이 네트워크는 정부 디지털 서비스청에 의해 운영되며 각 주요 정부부처의 부처 기술 리더와 각 Devolved Administrations의 기술 리더로 구성됨
 - 기술 리더와 디지털 리더는 긴밀히 협력해야 함
- 디지털 리더 네트워크(Digital Leaders Network)는 2012년 초에 설립되어 정부 전체의 디지털 안전을 추진함
 - 네트워크는 정부 디지털 서비스청에 의해 운영되며 각 주요 정부부처의 부처별 디지털 리더와 각 Devolved Administration의 디지털 리더로 구성됨
 - 기술 리더와 디지털 리더는 긴밀히 협력해야 함

- 데이터 리더 네트워크(Data Leaders Network)는 2015년에 설립되어 데이터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부서의 접근방식이 정부 정책 및 운영목표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 리더 네트워크는 매월 모임을 가짐

□ 사업의 감사

- 국가감사실(National Audit Office)
 - NAO는 의회를 대신하여 공공지출을 면밀히 조사하는 독립기관으로, 모든 정부부처 및 기관의 계정과 다양한 기타 공공기관의 회계를 감사하고, 정부기관이 공공자금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효율성 및 효과에 대해 의회에 보고함
 - 지난 몇 년간 NAO는 전자정부 또는 부처별 ICT 프로젝트와 관련된 몇 가지 보고서를 발표함
 - 전자정부를 포함한 정부지출도 하원의 공공회계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 PAC)에서 검사하며, NAO와 마찬가지로 PAC는 최근 전자정부 또는 특정 IT 프로젝트와 관련된 몇 가지 보고서를 발표함
- 예산책임실(Office of Budget Responsibility)
 - 예산책임실은 2010년 5월 각 예산에 대해 공공재정과 경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 경제와 공공재정에 대한 예측
 - 정부의 재정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 판단
 - 공공 재정의 장기 지속 가능성 평가
 - 재무부의 예산측정 비용의 면밀히 조사

3)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조정 권한

□ 영국 내각 사무처

- 처의 임무와 책임
 - 내각 사무처는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목표와 함께 정부의 효율성과 개혁 의제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전자정부 정책의 조정은 내각 사무처 장관의 정치적 책임하에

내각 사무처에 속함(European Commission, 2018d).

□ 정부 디지털 서비스청(Government Digital Service: GDS)

○ 청의 임무와 책임

- 모든 디지털 채널에서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어하기 위해 내각 사무처의 중앙조직(팀)으로 설립되었음
- 디지털 변환 전략의 이행을 책임지고 위임하고 참조하는 기관으로 간주되며,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의 다양한 디지털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보장함
- 이를 통해 GDS는 정부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표준설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작업을 감독하며 모범사례를 식별, 관리 및 공유하고, 전문표준을 설정하고 디지털 전문지식의 중심으로 활동함
- 다른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다른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디지털, 데이터 및 기술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승인된 표준, 지출, 적시 시행, 예상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준수함
- GDS 책임에는 gov.uk 포털 운영, 더 간단하고 더 나은 공공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정부 간 전략조정, 정부 간 플랫폼 구축(예: gov.uk의 전자식별 방법; 부서의 기술구매지원) 등이 있음
- GDS는 정부 디지털 기술에 관한 각료 그룹과 중앙정부 부처 및 전담 관리를 담당하는 디지털, 데이터 및 기술 리더와 함께 운영됨(HM Government 's Digital Service, 2018).
- GDS는 GDS Advisory Board, Data Steering Group 및 Privacy and Consumer Advisory Group의 지침을 받음

○ 집행단계에서는 기술 및 디지털 리더네트워크(TDLN)와 데이터 리더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주요 조정 네트워크가 관련됨

- TDLN은 정부 간 디지털 및 기술 의사결정의 통합을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혁신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전에 구분된 두 개의 디지털 리더 및 기술 리더 네트워크를 합병하여 설립되었음
- 이 네트워크는 GDS가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주요 정부부처의 디지털 및 기술 리더와 각 해당 정부기관의 리더로 구성되어 있음(HM Government 's Digital Service, 2018).
- GDS Transformation Peer Group뿐만 아니라 공동 인프라 및 프로젝트 기관이 주요 정부 변환 프로젝트를 조정함(Meggs and Infrastructure

- and Projects Authority, 2018).
- 지역 및 지방 전자정부 정책의 조정은 주택, 공동체 및 지방정부부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의 책임에 속함
- 이행 수준에서 지역협의회는 해당 역량의 틀 안에서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
- Devolved Administrations에서는 스코틀랜드의 “고객 우선” 프로그램, 웨일즈의 공공 서비스 리더십 그룹, 북아일랜드의 배달 및 혁신부서와 같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설계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성함
- 영국은 현재 중앙 정부 역량, 역량 및 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 이를 통해 특히 디지털 기능을 포함한 특정문제를 해결하는 10가지 기업기능을 통해 핵심 정부기능의 역량을 구축하고 있음(HM Government 's Cabinet Office, 2015).
 - 이를 통해 전문기술을 한 데 모으고 정부정책 및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기관의 운영방식에 대한 교차절단 및 전체 정부 접근방식을 취하며, 이 접근방식은 프로세스에서 GDS의 역할을 더욱 강화함
- 요약하자면, 영국은 정부의 중심에 주요 권한을 부여하고 강력한 권한, 여러 분야의 역량 및 역량을 갖추어 정부 전체의 접근방식을 관리함
- 이러한 노력에는 정부부문과 수준에서 보다 일관된 지식공유 및 조정을 위해 GDS에 의해 조정된 모든 디지털 기능과 조정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것이 포함됨
 - 부처는 여전히 자체 디지털 전략을 정의하고 구현하지만 표준은 중앙에 설정되며 중앙정부의 주요 또는 고위험 전환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중앙에서 안내, 지원 및 면밀히 검토됨
 - 현재의 조정 모델은 지역 및 도시 수준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유 서비스 및 정보통합에 대한 지역수준의 밀접한 통합이 현재 탐구되고 있음(HM Government 's Cabinet Office and Government Digital Service, 2017a).
- 정부 디지털 서비스청(GDS)은 공무원 디지털기능을 주도하며, GDS는 정

부의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 활성화 및 보장하고, GDS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정부 디지털기술에 대해 적절하게 도전적인 표준을 설정하고 모범사례를 식별, 관리 및 공유함으로써 정부의 디지털기능 향상을 지원함
- 정부 전체의 디지털, 데이터 및 기술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전문표준을 설정하고 채용, 유지, 급여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접근법을 표준화함
- 새로운 아이디어 탐색 및 프로토타입 개발을 포함하여 디지털 전문지식의 중심으로 활동하고 이 전문지식이 효과적으로 배포되도록 함
- 나머지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축, 지속적으로 개선 및 운영함
-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목표로 하는 디지털, 데이터 및 기술 전문지식(GDS, 부서 또는 외부소스에서)을 다른 정부기관에 제공함
- 지출통제, 서비스 평가 및 IPA(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프로젝트를 보장함

○ GDS의 미래 역할은 지난 GDS의 성숙도 향상과 부처별 역량향상을 반영하고, 정부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계속 적응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음

- 부처가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함
- 부처가 디지털 서비스를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
- 부처를 지원하고 부처가 올바른 방식으로 변화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미래의 역할을 분명히 밝힘

○ 모든 IT관련 사업 발주에 대해 GDS가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 IT관련 사업 진행여부를 검토할 경우 4대 발주 정책(사이버 위협 대비, 세분화/전문화 장려, 개방 표준 준수, 클라우드 우선)을 고려하여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배문식·한상진, 2018)
- GDS는 IT사업 발주 시 준수항목을 14단계로 제시한 기술지침(Technology Code of Practice)을 준수해야만 비용을 승인함

○ IT사업 발주 시 Red Line 심사제를 통해 요구사항 세분화 및 전문화, 명확한 목표와 비용절감 제시,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통제 강화

- 20014년 1월 도입하여 무분별한 비용 투입, IT요구사항 전문성, 세분화 수준을 사전검토 및 통제하고 있음(배문식·한상진, 2018)
- ‘요구사항 세분화 및 전문화’는 해당 분야의 전문 공급업체와 계약하는지를 검토하며, 100만 파운드(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Red Line 상세 검토를 거쳐야 함
- ‘명확한 목표와 비용절감 제시’ 요구는 계약 종료일에 대한 상세 계획을 요구하며 오픈 소스, 플랫폼, 시스템 통합 등 비용절감을 독려하고, 시스템 개발 범위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결과물 정의를 요구함
-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은 장기계약(2년 이상)을 불가능하도록 하고, Open 시스템을 통한 계약의 투명성을 요구함

3. 호주의 전자정부지원사업

1) 전자정부 및 지원 전략

□ 1997년 「성장을 위한 투자(Investing For Growth)」

- 하워드 총리의 산업정책 발표에서 호주 전자정부 전략의 추진이 시작됨
 - 2001년까지 인터넷에서 모든 적절한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함(한세 역, 2019)
 - 정부 서비스에 관한 정보에 대한 주요 접근지점으로서 정부 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주와 협의하여 호주의 정부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단일 창구 접근(single window access)” 을 개발함
 - 2000년까지 일반적인 지불수단으로 전자지불을 설정함
 - 안전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정부 차원의 인트라넷을 구축함

□ 2000년 4월 「Government Online」

- 연방정부는 보다 자세한 전자정부 전략인 Government Online을 발표함
 -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 및 예술부(DCITA) 내 기관인 정부 온라인실 (Office of Government Online: OGO)을 통해 모니터링됨(Burgess & Houghton, 2015)
 - 우선순위에는 기관들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품질의 저렴한 저비용의 사용하기 쉽고 액세스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포함
 - 정부 사업을 온라인으로 전환; 호주 지역의 온라인 서비스 향상; 기관 간 서비스 개발을 촉진
 - 전제는 사용자가 정부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임
 - OGO는 온라인 정보 서비스 의무 준수를 포함하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모범사례를 문서화해야 할 책임을 지며 Australian Government Locator Service를 위해 개발된 메타데이터와 웹사이트를 사용해야 함

□ 2002년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정부(Better Services, Better Government) 전략」

- 2002년 11월에 발표된 Better Services, Better Government 전략은 정부 정보 및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둔 정보제공에서 정보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한 보다 통합적인 시스템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자정부를 향한 다음 단계를 제시함
 - 전략의 제목은 “더 나은 서비스“가 “더 나은 정부“와 같다는 정부의 견해를 반영함
 - 주로 내부 프로세스의 변화와 ICT 투자로부터 “유형적인 수익” 달성 및 시연에 중점을 두었으며(예: 효율성 향상 및 고객에게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비용절감 및 전체 정부 접근방식 강조), 개별 기관의 개별 계획에 대응하고 정부 서비스 및 정보에 대한 보다 나은 접근을 보장함
 -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2003년에 발표된 호주 정부를 위한 상호 운용성 기술 프레임워크는 호주 정부기관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기술표준을 설정함

- 「정보화를 위한 기회와 도전에 관한 호주의 전략적 틀(Australia’s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formation Economy 2004-2006)」
 - 개정된 전략적 틀이 2004년에 발표되었는데, 1998년 정책의 광범위한 우선순위를 16개에서 4개로 간소화함
 - ①모든 국민이 정보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네트워크 및 도구를 갖도록 보장함
 - ②호주 정보 인프라의 보안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지원함
 - ③생산성 향상 및 산업혁신을 위한 플랫폼으로 호주의 혁신 시스템을 개발함
 - ④정보, 지식 및 ICT의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 호주 공공부문의 생산성, 협업 및 접근성을 높임

- 2006년 3월 「2006 e-Government Strategy」
 - 여기서 <Vision for 2010>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사용자의 요구충족

- ②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원활한 연계
- ③정부효율성 제고를 통한 비용절감
- ④공공부문의 IT 역량 강화

□ 「호주 공공서비스 정보통신기술 전략(Australian Public Servi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trategy 2012~2015)」

○ ‘ICT 활용을 통한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라는 비전 아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정부 운영효율성 향상’, ‘열린 참여’ 의 3대 전략과 전략별 추진과제를 제시함(김희연, 2012)

-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 을 위해 호주 정부는 공공서비스 내 ICT 지식, 기술, 능력을 향상하는 ‘역량 구축’ 프로그램과 정부가 개인 및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단순화하고,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 개선’ 을 추진함
- ‘정부 운영효율성 향상’ 을 위해 자원과 서비스를 공유하고, ICT 투자를 적절히 선정, 조정하는 ‘투자 최적화’ 를 추진하며, 기술이 가능하게 하는 진보를 계속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와 신기술의 잠재역량을 최대한 이용하는 ‘혁신 장려’ 를 추진함
- ‘열린 참여’ 를 위해 정보의 효과적 생산, 공유, 관리, 이용을 통해 의사결정을 향상시키고, 지역 요구에 맞는 서비스와 정책을 추동시킬 수 있도록 ‘지식창출’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알리기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및 파트너십 창출을 골자로 하는 ‘효과적 협업’ 을 추진함

□ 「디지털 변혁 전략(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2025)」

○ 호주는 2018년 11월 로드맵을 제시한 디지털 전환 전략 2025를 추진 중이며, 그 주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①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책수립
- ②정부 주도가 아닌 국민 요구와 편리성에 초점을 맞춘 공공서비스 제공
- ③개인과 기업 등 디지털 기술과 역량을 향상시키고 혁신적인 조직과 파트너 관계 구축

2)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조정 권한

□ 국가정보경제실(National Office for the Information Economy: NOIE)

○ 실의 임무와 책임

- 1990년대 말, 전자정부 조정의 중심적인 역할은 정보통신기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Arts)에서 수행하였는데, 인터넷 부서와 관련하여 정부에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온라인청(Office for Government Online)과 국가정보경제실(NOIE) 등 두 부서가 부처 내에 만들어짐
- NOIE는 국가 차원에서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을 수립, 총괄하고 이의 실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함
- 실제로 NOIE 산하에는 정부기관 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OC(Online Council)와 MCIE(Ministerial Council for the Information Economy), 그리고 감독기구인 IMSC(Information Management Strategy Committee)가 있었음
- 전자정부 계획수립 시 NOIE는 사전에 충분히 이해당사자 간 자율적인 조정을 유도하되,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조정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해소하였음

□ 호주 정부 정보관리실(Australian Government Information Management Office: AGIMO)

○ 실의 임무와 책임

- 2004년 4월에 재정탈규제부(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소속으로 호주 정부 정보관리실(AGIMO)이 설립됨
- NOIE의 기능은 호주 정부 정보관리실(AGIMO)에 흡수되어 AGIMO에서 전자정부 및 ICT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함
- 호주의 전자정부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 정보관리실이 중심이 돼 서비스 수요조사, 사업기획, 시스템 운영 및 사후평가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며, 정보관리전략위원회(IMSC: Information Management Strategy Committee)가 중심이 돼 기술적 부분의 지침 설정 등을 담당함
- AGIMO는 2006년 3월 「2006 e-Government Strategy」에서 <Vision for 2010>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제시하여 집행함

- <Vision for 2010>의 내용은 ①사용자의 요구충족, ②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원활한 연계, ③정부효율성 제고를 통한 비용절감, ④공공부문의 IT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둠

□ 디지털 전환실(Digital Transformation Office: DTO)

○ 실의 임무와 책임

- 2015년 7월 통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소속의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으로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정부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실(DTO)이 설립됨
- 2015년 9월 DTO는 도시 및 디지털 전환부 차관이 감독하는 총리 및 내각 무임소장관실로 이전됨
- DTO는 모든 호주인이 필요한 정부 서비스 및 정보에 보다 쉽게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를 보다 간단하고 명확하며 빠르게 만드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정부 전체 접근방식을 이끌고 있음
- DTO의 역할은 파트너와 협력하여 이 변화 프로세스에 대한 시스템 및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것으로, 서비스나 콘텐츠를 소유하지는 않음
- DTO는 정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내에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는 동안 협업과 정부 전체의 접근을 촉진함

□ 디지털 전환청(Digital Transformation Agency: DTA)

○ 청의 임무와 책임

- 2016년 10월 디지털 전환실(Digital Transformation Office)의 역할과 기능을 흡수하여 도시 및 디지털 전환부 차관이 감독하는 총리 및 내각 무임소장관실 소속으로 디지털 전환청(Digital Transformation Agency: DTA)이 설립됨
- DTA의 사명은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정부 서비스를 전환하여 사용자 요구를 보다 잘 충족시키는 것임
- DTA는 또한 정부의 ICT 및 디지털 투자의 이점, 비용 및 위험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임무를 수행함
- DTA는 정책 리더십, 제품 제공, 프로그램 관리 및 구축 기능을 통해

정부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며, 이것은 정해진 순서에 의해 지시되고 프로그램 결과에 의해 인도됨

- 소싱 및 역량 개발을 포함하여 정부 전체 및 공유 ICT 및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리더십을 제공함
- 정부 전체 및 공유 ICT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표준 및 플랫폼을 제공함
- ICT 및 디지털 투자 제안에 대해 대행사 및 정부에 조언을 제공함
- 중요한 ICT 및 디지털 투자, 보증정책 및 프레임워크 및 정부 전체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감독함

○ 정의 기능

- 전 정부에 대한 전략 및 정책 리더십 제공 및 공유된 ICT 조달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
-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 전체 전략을 개발하고 정부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 이해 및 사용을 보다 쉽게 함
- 전 정부 ICT 전략 및 디지털 혁신 로드맵 개발
- 모든 주요 기내 ICT 및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모니터링하고 복리후생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높은 이니셔티브에 관여
- 기관 및 정부 전체를 지원하기 위한 건물 인프라 및 전문지식, 디지털 혁신 노력과 대량 서비스 제공
- 정부 및 공동 ICT 및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 정부 전체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사업체에 대한 정부 계약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알리며, 정부의 디지털 및 기술 서비스를 조달
- 제안된 새로운 ICT 및 디지털 이니셔티브에 대해 정부에 조언을 제공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및 교육 이니셔티브 구현하고, 디지털 혁신을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
- 호주 정부 기관, 주 및 지방정부와의 교류, 생산적인 업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 정부와 산업에 관여
- ICT 및 디지털 혁신을 정부 내외에서 옹호

○ 성과 및 투자 모니터링

- DTA는 2016년 10월 확장된 송금의 일환으로 정부가 돈을 위해 최고의 가치를 얻고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자에

대한 대규모의 새로운 제안을 검토해야 함

- 2016년 11월, DTA 내에 디지털 투자관리실(Digital Investment Management Office)이 설립되어 이 기능을 수행하고 디지털 투자 검토를 수행함
- 이를 통해 처음으로 천만 달러가 넘는 모든 연방정부 ICT 프로젝트의 비용, 진행 상황, 혜택 및 잠재적 위험을 조사했음

○ 디지털 서비스 표준

- 디지털 서비스 표준은 2016년 5월에 시작되었는데, 이 서비스는 호주 공공서비스청(Australian Public Service: APS)의 디지털팀이 모든 사용자에게 간단하고 명확하며 빠른 정부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사례 프레임워크임
- DTA는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에이전시와 협력하여 직원을 향상시키고 사내에서 서비스를 개발 및 재설계할 수 있는 디지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 교육 및 조언을 제공함

○ ICT 조달

- 정부의 조직 변경에 따라 DTA는 ICT 제품 및 서비스 조달에 대한 책임이 확대되었으며, 2016년 12월 정부 전체의 ICT 정책 및 전략 기능에 대한 책임이 재무부에서 DTA로 이전
- 2017년 2월 ICT 조달 태스크 포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총리 및 내각부에서 DTA로 이전되었으며, 2017년 5월 18일부터 정부 전체 ICT 조정 조달기능도 재무부에서 DTA로 통합되었음
- 이로 인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하여 정부 전반의 조달 프로세스 및 정부 패널 배치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

○ 전략적 파트너십

- DTA는 계속 협력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하면서 여러 기관과 전략적으로 중요한 배달 프로젝트에 대한 파트너십을 수행함
- 이러한 파트너십은 중복을 피하고 디지털 기능 향상을 개선하며 비용 효율성을 높이며 정부 전체의 서비스 통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디지털 로드맵

- 디지털 로드맵은 정부의 디지털 이니셔티브가 정부 서비스에 보다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액세스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 목표는 개별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해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정부 전체와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DTA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준비한 디지털 혁신 비전 및 로드맵은 2016년 12월에 발표되었는데, 로드맵은 18개월 동안 정부의 변화 의제에 대한 비전, 사용자 경험 변화, 주요 작업 및 일정을 제시함
- 이 작업은 정부 기관의 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임

○ 정부 전체 플랫폼

- DTA는 기관들과 협력하여 정부 전체의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공통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은 기관이 개별 시스템을 다시 발명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며, 공유 플랫폼은 유지관리 및 지원비용도 줄임
- 2016년 6월에서 12월 사이에 정부 전체 디지털 플랫폼 태스크 포스는 4개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전략과 개념을 개발함
- 태스크 포스는 거버넌스, 자금 조달 및 전달을 포함한 정부 간 협력의 장벽을 완화시키는 전략을 확인했으며, 또한 DTA는 설계 솔루션을 개발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작업을 시작하면서 4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함
- 2017년 3월 DTA는 26개의 다른 기관, 산업 및 주요 정책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안전한 클라우드 전략을 위한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시작함
- 이 전략을 완료하면 대행사가 클라우드 기술을 보다 쉽게 사용하고 소프트웨어 릴리스에 대한 모범사례를 채택하며 보안 인증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음

○ 정부 전체 콘텐츠 전략

- DTA는 정부 전체 콘텐츠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비용효율적인 접근방식에 대해 기관들과 광범위한 협의를 수행함
- GOV.AU 프로젝트를 통한 연구와 학습을 바탕으로 DTA는 정부 웹사이트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과 협력하고 있음
- 2017년 3월 DTA가 콘텐츠 전략 워킹그룹을 설립하며 실무그룹은 연방, 주 및 지방정부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보다 간단하고 명확하며 사용하기 쉬운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공통의 관심이 있는 기관들로부터 회원을 추천받음

4. 해외사례의 비교 및 시사점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각국 정부의 여러 부처와 연계 또는 통합되어 운영되는 전자정부 구축 및 운영, 공통기반을 제공하는 전자정부사업을 의미함

- 해외 국가들의 경우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다부처 연계 또는 통합사업과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산재하고 있음
 - 선진국들은 이러한 사업들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조정 및 성과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덴마크의 경우 재무부 소속의 디지털화청과 정부 IT 서비스청이 다부처 연계 및 공통기반사업을 담당함
 - 영국의 경우 내각 사무처 소속의 정부 디지털 서비스청이 다부처 연계 및 공통기반사업을 담당함
 - 호주의 경우 총리 및 내각 무임소장관실 소속 디지털 전환청이 다부처 연계 및 공통기반사업을 담당함

- 해외 국가들의 경우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조정기능은 대부분 전자정부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이 그 기능을 수행함
 - 덴마크의 경우 디지털화청과 정부간 협력운영위원회(STS)가 사업의 조정 기능을 담당함
 - 영국의 경우 정부 디지털 서비스청이 사업의 조정 기능을 담당함
 - 호주의 경우 디지털 전환청이 사업의 조정 기능을 담당함

- 해외 국가들의 경우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및 자원할당 기능은 대부분 전자정부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조직과는 다른 조직이 그 기능을 수행함
 - 덴마크의 경우 전자정부 전략조정위원회(DSTG)가 예산 및 자원할당 기능을 담당함
 - 영국의 경우 내각 사무처가 예산 및 자원할당 기능을 담당함
 - 호주의 경우 내각 무임소장관실이 예산 및 자원할당 기능을 담당함

주요 선진국 전자정부지원사업 조직 및 기능 비교

기능	덴마크	영국	호주
전자정부지원사업	디지털화청, 정부 IT 서비스청	정부 디지털 서비스청(GDS)	디지털 전환청
사업 조정	디지털화청, 정부간 협력운영위원회(STS)	정부 디지털 서비스청(GDS)	디지털 전환청
예산 및 자원할당	전자정부 전략조정위원회(DSTG)	내각 사무처	내각 무임소장관실
성과 감사	국가감사실	국가감사실, 예산책임실	국가감사실

- 해외 국가들의 경우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감사는 대부분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이 그 기능을 수행함
 - 덴마크의 경우 국가감사실이 성과 감사 기능을 담당함
 - 영국의 경우 국가감사실과 예산책임실이 성과 감사 기능을 담당함
 - 호주의 경우 국가감사실이 성과 감사 기능을 담당함

□ 주요 선진국의 사례는 우리나라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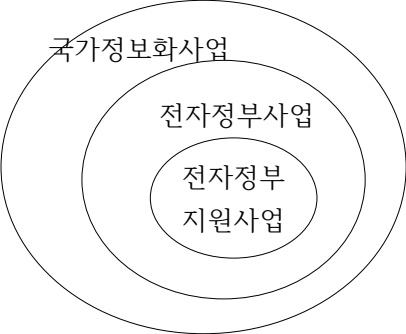
- 주요 선진국의 전자정부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재무부 소속이거나 총리실 소속임
 - 선진국들 중 덴마크는 재무부 소속의 디지털화청과 정부 IT 서비스청이며, 영국은 내각사무처 소속의 정부 디지털 서비스청이고, 호주는 총리 및 내각 무임소장관실 소속 디지털 전환청임
- 주요 선진국의 사업의 조정 기능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에서 주도하며 재무부 소속이거나 총리실 소속임
 - 선진국 중 덴마크는 재무부 소속의 디지털화청 및 여러 부처의 협의체인 정부간 협력운영위원회(STS)를 통해 사업의 조정이 이루어짐
 - 영국은 내각사무처 소속의 정부 디지털 서비스청이고, 호주는 총리 및 내각 무임소장관실 소속 디지털 전환청이 사업의 조정을 담당함
- 주요 선진국의 예산 및 자원할당 기능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의 상급 기관이 주도함
 - 선진국 중 영국과 호주는 각각 내각 사무처와 내각 무임소장관실에서 예산 및 자원할당을 주도함

- 주요 선진국의 성과 감사 기능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조직과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 주도함
 - 선진국 중 덴마크와 호주는 국가감사실이 주도하며, 영국은 국가감사실과 예산책임실이 성과 감사를 담당함

부록 10 전자정부지원사업 심층평가 인터뷰 결과 (NIA, 행안부, 선정위원회, 사업자, 주관기관)

(정) NIA, (행) 행안부, (선) 선정위원회, (사) 사업자, (주) 주관기관(환경부, 법무부, 권익위)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사업계획의 적절성 (계획)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전자정부지원사업과 정보화사업의 관계 혹은 상관성에 대해 이야기 해주신다면?	<p>(정)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자정부사업 중에서 범정부 공통 인프라 구축, 다부처 연계·통합 등 범정부적으로 공통 추진되어야 하거나 개별 부처가 수행하기 어려운 전자정부사업을 추진</p> <p>(정) 전자정부지원사업도 큰 맥락에서는 정보화사업 그 중 일부 특수한 사업</p> <p>(정) 전자정부사업 중에서 국정과제 및 전자정부 핵심 과제 추진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자정부 11대 과제(2001~2002), 전자정부 31대 과제 로드맵(2003~2007), 5개* 지원대상 사업(2008~2017), 7개** 지원대상 사업 등으로 발전하여 왔음 * 여러 부처 연계 및 정보 공동활용, 공통인프라 구축, 행정업무 효율화(공공 부문 업무혁신), 대국민서비스 개선(공공부문 업무 혁신), 정보화 우선순위 및 파급효과가 크나 추진여건 등이 마련되지 않아 지원 ** 범정부 공통인프라 조성, 첨단기술 도입 및 적용확산, 다수시스템 용·복합, 범정부 정책 추진(다수 시스템 일시 지원), 국정과제 추진, 정보보호, 사회현안 해결 지원 <p>(사) 지원사업이 수행하기 쉽지 않음; 절차나 요건이 매우 까다로움, 경쟁도 심함</p> <p>(사)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정보화사업의 표준 모델임 (표준이 잘 갖추어져있음)</p> <p>(사) 부처의 정보화사업과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차별성: 부처 정보화사업은 그 부처가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부처에서 하되 타 부처/다수 부처가 연계되어 있을 경우 타 부처의 data를 가져와 활용해서 또 다른 부처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p> <p>(사) 절차, 업무 추진 과정, 범정부 형식의 다부처 사업에 중점을 둔 것은 매우 모범적</p> <p>(사)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공통 기반, IT 산업에서 하도급과 관련된 계약 기준 등 이런 것들이 전자정부지원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것 즉, 선도한 역</p>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할은 분명히 있음</p> <p><참고사항> (정) 사업범위 : 국가정보화사업 > 전자정부사업 > 전자정부지원사업</p>  <p>(정) 전자정부지원사업과 부처 정보화사업 비교(사업관리매뉴얼 참고)</p> <table border="1" data-bbox="1099 783 2074 999"> <thead> <tr> <th>구 분</th> <th>예산 확보</th> <th>사업 내용</th> <th>사업 난이도</th> <th>전문기술지원</th> </tr> </thead> <tbody> <tr> <td>전자정부 지원사업</td> <td>행정안전부</td> <td>공통 인프라 구축, 다부처 연계/통합 중심</td> <td>높음</td> <td>한국정보화진흥원 기술지원</td> </tr> <tr> <td>부처 정보화사업</td> <td>각 부처</td> <td>부처 고유업무</td> <td>낮음~중간</td> <td>자체 역량에 의존</td> </tr> </tbody> </table>	구 분	예산 확보	사업 내용	사업 난이도	전문기술지원	전자정부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공통 인프라 구축, 다부처 연계/통합 중심	높음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술지원	부처 정보화사업	각 부처	부처 고유업무	낮음~중간	자체 역량에 의존
구 분	예산 확보	사업 내용	사업 난이도	전문기술지원														
전자정부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공통 인프라 구축, 다부처 연계/통합 중심	높음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술지원														
부처 정보화사업	각 부처	부처 고유업무	낮음~중간	자체 역량에 의존														
		<p>전자정부지원사업과 정보화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문서화 된 기준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정)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전자정부관리지침 (2020.1.13., 행정안전부 예규 제101호)에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지원사업’이란 전자정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화사업 중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NIA)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사업 ② 첨단기술을 시범도입하거나 적용을 확산하는 사업 ③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④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수 시스템에 일시 지원을 하는 사업 ⑤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⑦ 사회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총 예산은 지원사업 예산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음 (행) 본 관리지침과 성격이 맞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행안부에 예산 신청 (행) 예산이 많은 기관은 신청하지 않음 (절차 복잡, 사업에 대한 관리 부담) - 이런 점들이 일반 정보화사업과는 차별화된 점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계획, 운영, 성과운영 및 환류의 전 과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정) 국정과제 및 전자정부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연도별 전자정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과제별 사업계획서 수립 및 확정, 입찰 및 계약 체결, 시스템 구축, 성과운영 등을 통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함 (행) 행안부 지원사업 관리지침 + 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지침 (행) 사업관리방안 지침서 + 사업을 할 때 정보화와 관련해서 따라야하는 법령집을 기관에게 배포하고 기관들은 그것에 맞춰 준비 및 작업 (행) 관리지침을 바탕으로 작업 + 기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어느 정도 계약 할 때쯤) (행) 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제로 사업을 하는 것 (행) 관리지침은 계속 개정됨 (1년 1회 또는 2년 1회 정도)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어느 정도로 보조를 맞춰야 하는지?	(정) 국정과제에 반영된 전자정부 과제/사업 이행을 지원하는 핵심수단(enabler) 역할 수행 - 문재인정부(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등), 박근혜정부(정부3.0), 이명박 정부(경제활성화, 서비스 통합 등), 노무현정부(전자정부 31대 과제 로드맵), 김대중정부(전자정부 11대 과제) (정) 국정과제, 전자정부기본계획, 전자정부정책, 신규과제 발굴(IT, 사회현안 등), 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예산확보, 사업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성과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추진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사항) Top-down 및 Bottom 과제 모두 주관기관에서 매년 11월에 실시되는 중기재정계획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함(계속과제, 신규과제 포함) - (Top-down 방식) 국정과제 반영/업데이트 반영과제, 전자정부기본계획 반영/업데이트 반영 과제, 신규과제 발굴(IT환경 변화, 사회현안해결 등을 반영하여 NIA에서 발굴)을 통해 대상 과제 선정 - (Bottom-up 방식) 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 과제 선정 <p>(행) 국정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정과제를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주요 국정과제와는 나란히 감</p> <p>(행) 사회 문제의 신속한 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2>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추진체계 참고 ※ <붙임3> 전자정부지원사업 전체 사업관리절차 참고 ※ <붙임4> 전자정부기본계획과 전자정부지원사업 과제 선정·추진 참고
		<p>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부처별 수요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수요의 적절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p>	<p>(정) 매년 Top-down 방식(국정과제 반영/업데이트, 전자정부기본계획 반영/업데이트, 신규과제 발굴(NIA,연중))과 Bottop-up 방식의 기관 수요조사를 매년 11월에 실시하고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선정 시 NIA 및 행안부에서는 유사/중복성, 전자정부지원사업 적합성, 예산 타당성, 사업필요성, 실현가능성, 추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과제를 선정함 <p>(행) 공문으로 수요 파악</p> <p>(행) 기관들이 수요 제출 공문으로 제출하고 나면 수요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 절차 및 기준을 정해서 수요 조사 그 이후, 정보화진흥원에서 먼저 검토를 하면 행안부에서 같이 검토한 다음 적합여부 판단 (①~⑦을 기준으로)</p> <p>(행) 다른 정보화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의 타당, 효율, 실현 가능, 파급효과, 규</p>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모, 국정과제/신기술 이런 것을 고려한 우선 추진 필요성을 가지고 검토한 후 순위를 매기고 부(전자정부국장님이 최종 결정)에서 최종적으로 선별을 하는 과정을 거침</p>
		<p>전자정부지원사업의 지침에 나온 7가지 분류(가.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사업 나. 첨단기술을 시범도입하거나 적용을 확산하는 사업 다.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라.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수 시스템에 일시 지원을 하는 사업 마,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바.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사. 사회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첨단기술, 정보보호나 국정과제 등은 개별 부처의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p>	<p>(주) 7가지 분류인줄 몰랐음 (주) 행안부에서는 늘 얼마나 다부처와 관련이 있느냐를 강조 (주) 첨단기술 관련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전자정부지원사업인 이유는 첨단기술을 활용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부처 즉, 어디와 관련이 있느냐가 중심 (주)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조금 모호했음 (주) 전체적인 틀에서는 선정기준 7가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주) 개별 부처 정보화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함 (주) 동등한 부처나 지방 단체 조율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정보화사업은 어느 정도 주도를 해야 하겠지만 다부처 사업 같은 경우 특정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일 때는 행안부나 과기부의 관여 없이 단독적으로 추진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 (주) 사업관리, 사업 수행에 있어 해당 부처에서 추진해왔었고 노하우도 있음 (주)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는 전문기관이 있다는 것 (주) 따라서 행안부가 없어도 전문기관이 지원해준다고 하면 해당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함 (주) 다수 부처/다수 시스템을 범정부적으로 융·복합하는 것 (주) 첨단기술 시범 도입할 때, 행안부나 전보화진흥원에서 검토를 많이 해줌 (주)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행안부나 정보화진흥원에서 같이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됨 (주) 첨단기술도 분류로 들어가는 것이 좋음</p>
		<p>부처에서는 정보화사업 예산이 별도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주) 정보화사업이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어서 지원 사업을 신청함 (주) 법무부에도 정보화사업 예산이 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이유는 법무부 사업은 특수함 (주) 법무부는 부처 예산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인데, 기재부에서 심의하던 당시</p>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에 법무부의 예산 실링 자체가 (지출 한도가) 작아서 큰 사업을 넣기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업 성격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함</p> <p>(주) 위원회와 같이 작은 기관에서는 정보화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할 경우 예산에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많음</p> <p>(주) 따라서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전자정부사업으로 함</p>
		전자정부사업이나 정보화사업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근 연도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 중심으로 3~4개만 언급 부탁드립니다.	<p>(주)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다부처 협업 사업인 정보화사업이라고 실질적으로 느낌</p> <p>(주) 일반적인 정보화사업이랑 전자정부지원사업이랑 큰 구분은 얼마나 다른 부처와 관련이 있느냐, 국정과제, 범부처 합동 대책으로 나왔다거나 이런 후속 조치이면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편성되는 것이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일반 정보화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체감함</p>
		정보화사업, 전자정부사업,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정의 및 구분방식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주) 다부처와 협업하여 플랫폼 같은 것을 같이 만드는 것이 전자정부지원사업이라고 이해함</p> <p>(주) 정보화사업은 알고 있었지만 전자정부사업과 전자정부지원사업이 다른 것인 줄은 몰랐음</p> <p>(주) 선정 기준과 같음</p> <p>(주) 다부처 사업, 다부처 연계, 대국민 서비스, 사업에 대한 중복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p> <p>(주) 자체 정보화사업은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해당 부처나 기관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p> <p>(주) 전자정부지원사업 사례: 차세대 이민 행정 시스템 (내부 행정 시스템에 대한 구축 사업이지만 법무부 아래에 있는 출입국 기록을 타 부처나 기관에서 공동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활용 차원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선정됨)</p>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효율성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고 사업내용이 사업목적 달성에 부합하는가?	<p>(정)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국정과제, 전자정부기본계획 및 전자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핵심수단(enabler)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p> <p>(정) 다수기관/시스템 융·복합, 범정부 공동인프라 구현 및 확산 중심으로 개별</p>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어 기관 자체 추진 정보화사업과 명확하게 차별화됨</p> <p>(행) ①~⑦의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목적이 명확하고 사업내용이 사업 목적 달성에 부합할 수밖에 없음</p> <p>(행) 이미 지원을 신청할 때 ①~⑦ 중 스스로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서술하면서 제출함</p> <p>(선) ‘문서를 덜 만듭니다. 종이 값을 아깁니다.’ 등의 극히 일부분인 이유 이외에 부처에서 시스템을 어떤 효과가 있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더 심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p>
	절차적 합리성	<p>사업의 중복성 문제는 어느 정도인가? 혹시 사업 시행과정이나 이후에 사업의 중복성이 크게 문제된 경우는 없는가? 사업 중복성에 대한 사후평가 절차 도입 필요성은 없는가?</p> <p>사업제안 심사 시 사업의 중복성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수행하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p>	<p>(정) 사업의 연계/중복성 검토는 차년도의 과제 선정 단계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집중 수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사업간 연계/중복성을 중점 검토하는 사전협의 담당자인 행안부 성과관리과(연계/중복성 검토), NIA 도메인 전문가, 외부 IT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정보화사업간 연계/중복성을 검토함 - 사업간 연계 가능성 및 중복성, 범정부 공동자원 활용 검토 등을 집중 검토함 <p>(정) 시스템 구축 후의 사후단계에서는 운영성과 점검시 계획 및 구축내용대로 잘 진행되었는지를 검토함</p> <p>(행) 모든 사업들에 대해 사업별로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음</p> <p>(행) 시스템을 만들려고 결제도 받고 다 했는데 비슷한 사업이 존재할 수 있음 이런 경우에 중복이 걸려져야함</p> <p>(행) 성과관리과에서 하는 업무</p> <p>(행)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전자정부 법적 근거, 예를 들어 기존의 시스템 있는데 노후하거나 낡았을 경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져다 쓰는 것을 제안하는 등 검토 의견을 주는 과정</p> <p>(행) 스마트서비스과도 성과관리과에 신청을 해서 검토 의견을 받고 있음</p> <p>(행) 사전협의 총괄: 행안부, 정보화사업, 성과관리과</p>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행) 사업 중복성에 대한 사후평가 절차 필요성: 지원사업끼리 일 확률은 희박함 (1년에 20개 정도밖에 안됨), 병행되고 있는 것들끼리 문제가 될 수 있음</p> <p>(행) 이럴 경우 관장하는 기관의 불륨이 어떤지에 따라 판단</p> <p>(행) 지원사업하고 개별 기관에 있는 어떤 사업하고 중복이 생긴다면 보통 지원 사업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지원사업쪽으로 진행을 할 확률이 큰데 만약 개별 기관의 사업의 규모가 더 클 경우 다음 사업을 하면서 연계를 하거나 한쪽을 버리고 조정을 하는 방법을 택함 (내용을 기준으로 중복한 부분을 제거하고 서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함)</p> <p>(행) 중복성 문제는 지원사업보다는 성과관리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성과관리과에서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걸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p> <p>(선) 대상 중복이 있을 수 있음</p> <p>(선) 중복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용성이 편리한 시스템들은 그렇게까지 중복성을 안 따져도 될 듯</p> <p>(선) 중복성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음</p> <p>(선) 만들어지고 이용률이 저조한 불필요한 시스템들을 없애는 것이 중복성을 따지는 것보다 나음</p>
		<p>SW분리발주의 문제는 무엇인가? 상호 연계나 차별화가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는 것인가?</p>	<p>(정) SW분리발주 제도는 SW제값주기 및 SW산업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전자정부지원사업에서는 수발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통합 발주보다는 복잡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정착되어 있으며, 기관 자체의 정보화사업에서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절차 및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적용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지원사업 과제의 사업계획서 수립 단계에서 SW분리발주 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수발주에 적용하고 있음 - 분리발주SW는 조달쇼핑몰에 등록된 SW를 주관기관에서 선택하거나, BMT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 적정 SW를 선정함 <p>(정) 본 사업(통합사업)과 분리발주SW와의 상호 연계 및 적절한 관리를 위해 사</p>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업자 선정 시기 동일화, 착수 단계의 협약서 작성, SW설치 시 통합사업자의 협업, 본 사업과의 동일한 사업종료 시기 적용 및 검수 등을 통해 통합사업 발주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관리/추진하고 있음</p> <p>(행) 다른 정보화사업과 다른 점은 없음</p> <p>(행)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솔루션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입찰하는 어떤 SI 사업자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영역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p> <p>(행) 발주기관 입장에서 불편함. 과정상의 불편함은 있지만 희생을 하여 업체들의 포션을 확보해주는 것</p> <p>(행) 분리발주가 어려운 몸통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통합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함 (승인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p> <p>(사) 분리발주를 통해 상용 소프트웨어가 제값 받는 것에는 상당히 기여를 함</p> <p>(사) 하지만 통합발주 사업자는 죽어남</p> <p>(사) (예를 들어) 전자증명서 사업 당시 18억 7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었는데 개발 fp(Financial Planner)로 뽑음. fp를 제외한 pm(Program Management), 사업관리, 품질관리, 홍보비, 임대료,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디자이너 등의 비용은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됨</p> <p>(사) 중견/중소 SI업체들이 다 죽음</p>
		<p>다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별 연계나 차별화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p>	<p>(정)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선정된 과제는 대부분 다년도 과제로 추진 중이며, 과제 선정시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시에도 사업간 연계/중복성 및 차별화에 대한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선정 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적합성 뿐만 사업의 연계/중복성 부분을 집중 검토 -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검토시 주요 항목의 하나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ISP 결과의 검증 및 매년 과제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시에도 집중적으로 검토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행) ISP 결과를 가지고 몇 년도 플랜이 다 나와 있음 (행) 다년도 계획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 맞춰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행) 따라서 계획에 없던 사업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없음 (행)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는 있을 수 있음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기획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내용과 절차는 어떤가?	(정)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과제 선정 및 예산편성, 사업계획 확정, 사업계약, 사업관리, 사후관리 등으로 추진됨 (행) 관리지침과 운영지침 참고 (행) 2021년 수요 조사를 다 마친 상태이지만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준비 중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할까 생각 중 (행) 이렇듯 사회상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하기 위해 수요를 받아보고 카테고리 분류를 해서 비슷한 계획들끼리 조정을 함 (행) 과기부는 민간에서, 행안부는 공공기관 내에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음 (주) 절차적으로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주) 전문가도 같이 부르고 하는 등 행안부와 기재부가 같이 했으면 좋겠음 (주) 초반에 시간 지체가 상당함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부처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요?	(주) 부처 의견도 적당히 반영이 됨 (주) 전문가의 의견이 많으니까 부처 입장에서는 통과되려면 부처 의지보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더 중요 (주) 위원회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내, 사업의 완결성이 더 좋아진 경우가 있었음 (주) 간혹 위원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집착해서 대응이 힘들었던 경험도 있음 (주) 사전 심의할 경우 권익위 의견도 많이 반영되고 더 좋은 의견도 많이 줌 (주) ‘부처들 간의 협의를 더 했으면 좋겠다’처럼 컨설팅 기능을 함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사업추진의 효율성 (관리/집행)</p>	<p>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p>	<p>부처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그러한 장점이 잘 달성된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p>	<p>(정)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개별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범정부 공통인프라 구현 및 확대적용, 다수부처/시스템 연계·통합 등을 중점 추진하여 국정과제, 전자정부기본계획, 전자정부정책 등의 이행하고 있으며, 기관 자체 정보화사업 보다 사업난이도와 복잡도가 높아 전문기관(NIA)의 집중 검토가 추진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 부처/시스템이 연계·통합된 과제는 참여 부처별 예산 배분/추진 시 상호 협력이 쉽지 않거나 동시 추진이 어려워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어지거나 사업 결과물이 좋지 않을 수 있음 - 범정부 공통인프라 구현 과제는 전자정부 정책에 따라 구현하거나 범정부 공통 인프라를 구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진행하므로, 단일 부처가 구현 후 타 부처가 이행하거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정책 적용 속도가 빠르고 정보화사업 효과도 매우 뛰어남 <p>(행) 행안부, 진흥원, 중앙기관, 사업자 간의 역할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고 있음</p> <p>(행) 행안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p> <p>(사) 지원사업은 부처와 분리시켰으면 좋겠음, 부처에서 할 수준이 아님</p> <p>(정)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장점이 잘 반영된 과제는 정부24, 행정정보공동이용,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 등의 우수사례가 많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24는 정부서비스 및 정책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단일창구 역할을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는 정부/지자체/공공 기관의 행정정보를 연계/유통/활용하는 허브 역할을 하며,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은 법무부/검찰/경찰/대법원 등 형사사업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보를 유통하고 있는 등 전자정부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사업은 대부분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되어 활용되고 있음 - 범정부 전자정부 공통인프라 구현·확대적용 및 다수부처가 관련된 대국민서비스 및 행정을 혁신하는 과제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백서(~2017)에 명시되어 있음 <p>※ 전자정부지원사업 백서-전자정부지원사업 대표사례 15선 참조</p>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사) (실패사례) V-World(국토부), 주민생활 라이프 (없어짐), 재난안전 또는 소방 분야 (비효율적)</p> <p>(사) 우리나라 data가 엉망임 예를 들어,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data를 받았는데 30%가 오류임</p> <p>(사) 국세(지방세도 다 중앙에서 함), 복지, 교육은 다 중앙에서 함 따라서 IT 업체들도 다 중앙에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IT 업체들이 다 죽음</p> <p>(사) data에 대한 정확성도 높이고 지방의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data 그 자체를 중앙에서 모으는 것과 지방에서 data를 생산하는 것을 구분해야 할 필요 있음; 지방 분권에 힘을 실어주면서 자치단체에서 data를 생산하는 업무들과 시스템을 자치단체가 구축하고 운영하게끔 해줘야 함 (중앙에서는 data만 모으고) 분권 필요</p> <p>(정)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정보화사업 수발주 제도 측면에서 각종 수발주 양식과 절차를 선도적/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타 기관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선도 및 모범사례로 작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및 사업관리매뉴얼에서 제공되는 각종 사업관리 양식/절차는 타 기관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Best Practices(바이블)로 활용되고 있음. 하나의 예로 상세 RFP 적용 수준은 타 기관 정보화사업에 비교해서 매우 구체적임 - 또한,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사업자 대상 사업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관리 역량 강화 및 사업품질 확보 추진
		<p>추진체계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행안부가 전자정부의 기술적 부분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행안부는 관련부처 간 업무중복 및 충돌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p>	<p>(정) 전자정부지원사업 목적 달성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전문기관(NIA), 주관기관, 사업자, 산학연 외부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및 적절한 역할 배분 -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정책 수립 및 과제 선정 등의 총괄 주무부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총괄부처로서 전자정부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총괄적 조정기능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가? 총괄조정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가?</p>	<p>조직이 있으며, 전자정부기본계획 수립, 성과관리, 제반 제도, 기획, 유사중복성 검토 등의 전자정부 정책 수립 및 집행하고 있으므로 전문성이 뛰어나며, 전자정부 지원사업이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 전 과정의 전문적 기술 지원은 NIA(전문기관)가 수행 및 지원하고 있음 - 신규 지원과제 선정 시 행안부 및 NIA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행안부 관련 과가 참여하는 사업조정위원회 및 과제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중복 여부 점검 및 총괄 조정 등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음 <p>(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적인 측면으로 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쪽 그렇다고 볼 수 없음</p> <p>(행) 빨리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추세를 얼마나 반영하고 이해를 하면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p> <p>(행)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기관을 통해 자료 연구 및 스터디를 시키거나 외부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음</p> <p>(행) 따라서 관리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p> <p>(행) 적절한 기술을 아는 사람을 활용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역할이지 기술자가 직접 될 필요는 없음</p> <p>(행) 물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기술적인 지식을 공부해야 함</p> <p>(행) 과기부는 경제부처, 행안부 사회부처</p> <p>(행) 과기부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다른 해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행안부는 사회부처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한 후에는 지자체도 관련되고 운영 및 관리도 해야 하는 등 뒷감당을 해야 함</p> <p>(선) data 통합으로 인한 부처 간 충돌이 있을 수 있음</p>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선) 협업하려고 하는데 국세청, 대법원과 같은 경우 data를 독점하고 공유를 잘하려고 하지 않음</p> <p>(선) 하나의 부처가 총괄권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p> <p>(선) 국무조정실은 갈등 조정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전자정부지원사업을 격상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음</p> <p>(선)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조정보다는 전자정부 콘텐츠 자체가 더 중요 즉, 조정보다는 유지 및 관리가 더 중요</p> <p>(선) 행안부는 전체적인 흐름을 봄</p> <p>(선)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가 계속 바뀌어 사업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p> <p>(선)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불편하다고 안 쓰는 경우가 있음</p> <p>(선) 관리 감독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안부가 필요</p> <p>(선) 전체 그림을 보고 부처 간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산하기관만으로는 부족함</p> <p>(선) 행안부가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전자정부를 키워야함</p> <p>(선) 행안부의 관리하는 역할을 키울 필요 있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술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더 중요</p> <p>(사) 다부처 사업이지만 행안부가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하는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음</p> <p>(사) 전자정부는 국제적으로 큰 상품이기 때문에 행안부보다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나 총리실로 수준을 격상시켜 전 부서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p> <p>(사) 국가를 컨설팅 할 수 있는 수출 상품이 필요</p> <p>(주) 기재부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주면 반영된 이후에 위원회를 계속 열어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를 계속 하는데 (사업선정위원회), 보지 못하는 측면을 말해줘서 좋은데 꼭 행안부여야 한다는 것은 아님</p> <p>(주) 해당 사업의 타당성은 기재부가 예산을 주기 이전에 이러한 위원회를 (ex.</p>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과기부 R&D 사업) 여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p> <p>(주) 기재부 심의가 다 끝난 후에 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니까 시간 지연이 되고 절차 중복이 생김</p> <p>(주) 다부처 사업이라고 해서 특정한 한 부처가 주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부처들이 모여서 직접 협업을 하는 형태</p> <p>(주) 따라서 부처 입장에서는 관계된 부처가 많을수록 힘들기 때문에 만약 전문기관(NIA)이 지원을 해준다면 오히려 한 곳에서 주도하는 것이 더 편함</p>
		<p>전문기관이 추진단계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전문기관의 역할이 각 단계별로 적절한지, 전문기관이 대부분 사업추진 단계를 담당한다면 행안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이런 방식의 사업추진체계를 갖는 다른 정부 사업이 있는지요?</p>	<p>(선) NIA는 손발 역할을 하는 정부 산하기관이고 행안부는 머리 역할</p> <p>(선) 행안부가 직접 감시를 한다면 더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산하기관이 있어야 함</p> <p>(선) NIA의 딜레마: 과기부 산하기관인데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하면서 행안부의 산하기관 역할도 하고 있음. 행안부 산하기관은 지역정보개발원인데 이 기관은 자자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NIA는 전자정부 구축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노하우가 있고 전문성도 높음</p> <p>(사) 정보화진흥원에서 실질적인 일을 다 함</p> <p>(사) 전자정부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행안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일이 비효율적임</p> <p>(사) 세계 1위 상품인 만큼 행안부의 역할을 빼고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p> <p>(사) 방사청의 사업이 전자정부지원사업과 유사</p> <p>(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NIA의 역할과 유사, NIA가 훨씬 전문성이 높음</p> <p>(주) NIA에는 큰 도움을 받음</p> <p>(주) 기술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NIA에서 객관적으로 봐주는 면이 있음</p> <p>(주) NIA가 개선해야 할 점은 담당자 변경이 잦음 (2년 사업을 하면서 담당자가 3번 바뀜)</p>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주) 전문적 기술력, 사업관리 능력, 행안부와 같은 주관기관과 조율하는 능력은 크게 지원을 많이 받음</p> <p>(주)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음</p> <p>(주)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해당 사업이 전자정부지원사업에 해당이 되는 사업인지, 만약 맞다면 예산을 투입할 만큼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하는 역할</p> <p>(주) 부처 간의 조율이 안 돼서 행안부가 나서서 조율을 해주는 역할은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함</p> <p>(주) 사업을 준비하기 전에 행안부와 가장 많이 연락하고 컨펌 이후에는 행안부의 역할이 크게 없음</p> <p>(주) 전자정부지원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행안부의 역할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큰 역할이 없음</p> <p>(주) NIA에서는 전자정부사업 사업관리와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음</p> <p>(주) 하지만 해당 기술 관련해서 깊게 들어갈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음</p> <p>(주) 전문기술에 있어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p> <p>(주) 행안부가 없다면 많이 불편함</p> <p>(주) 부처들끼리 간의 이견이 있어서 융·복합, 연계, 또는 협업을 해야 할 때, 해당 부처에서 반대를 할 경우 행안부가 중재 역할을 함</p> <p>(주) 지자체와 협업 시, 행안부가 도움을 많이 줌</p>
		<p>사업선정위원회 구성의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선정위원회는 어떠한 원칙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가?</p>	<p>(정)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전자정부 및 전자정부지원사업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 전자정부 정책,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이행하는 수단으로 활용</p> <p>(정) 사업선정위원회는 행안부 전자정부국장 및 국내 과장으로 구성하여 행안부의 과제 선정 역할을 수행</p>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관(NIA) 및 과제조정위원회(행안부/NIA, 산학연 외부전문가 참여)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지원 대상과제를 최종 선정 (정) 참고로 과제를 수행할 사업자는 조달청 발주 과정을 통해 선정함 (행) 사업자 선정은 발주하고 나서 조달청에서 정해지는 일 (행) 행안부는 대상 사업 및 과제를 정하는 일을 함 (선) 사업조정 역할 (선) 사업조정위원회는 전자정부지원사업만 함 (선) 사업조정위원회는 제안서를 보고 고려할 사항 및 문제점 등을 알려주고 다시 수정해서 재심의를 받는 2단계에 걸쳐 심층적으로 심의함 (선) 가급적이면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주로 조건부로 많이 심의함, 탈락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음 (선) 급하게 사업을 진행할 때 우려되는 점들을 주로 얘기해줌 (선) 연말에 심의가 많이 몰림 (선) 담당자에 따라 다른 심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 (선) 구체적으로 몇 회에 걸쳐 만났는지를 파악한 후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는지 확인한 후에 시스템을 구축함 (선) (예를 들어) 부동산계약거래 사업을 할 경우 부동산협회와 협의를 했는지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작하려고 함 (선) 갈등 조정에 대한 매뉴얼은 없음 (선) 사전 검토도 중요하지만 중간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함 (사) 정보화진흥원에, 행안부 스마트서비스과에서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필요 (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엄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 비효율적임 (사) 전문성 있는 심의 필요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직간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별히 문제가 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 사업추진과정에서 행안부, NIA, 주관기관, 유관/연계 기관,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부분이나 사례가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선정부터 예산확보, 사업계획서 수립, 입찰 및 계약체결, 시스템 구축, 검수 및 마무리, 성과관리 등 각 단계별로 이해관계자와의 역할이 명시되어 추진중에 있음 - 기획재정부, 조달청, 감리업체 등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 <p>(행)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음</p> <p>(행)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미리 파악하려고 함</p> <p>(행) 사업 중간쯤 한번 체크를 함 (진도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그랬을 때, 뭔가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 것처럼 보이면 원인 분석 후 문제를 해결함</p> <p>(행) 또는 기관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일 경우 사업 중간쯤에 관련자들을 다 모아 회의를 진행해 조정</p> <p>(행) 진흥원을 통해 관리 및 통제를 하게끔 함</p> <p>(행) 예산, 결산, 후속조치 등의 업무들을 행안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미리 파악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은 빨리 버리는 것이 현명함</p> <p>(사) NIA와 행안부 관계는 원활하고 규정이 확실함</p> <p>※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및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매뉴얼 참조</p> <p>(주) 협조를 할 때, 일방적으로 플랫폼을 제공해달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의 정보도 같이 공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음</p>
		<p>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추진 기관들과 각 부처별 정보화담당자들과의 협력 및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p>	<p>(정) 전자정부지원사업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시, 각 부처 정보화담당관실과의 협력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담당관실을 통해 각 부처 및 산하기관(공공기관 포함)의 수요를 통합 접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부처 정보화사업과 전자정부지원사업과의 조정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p>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유인 구조는 적절한가?</p>	<p>(정)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유인체계는 전자정부정책 이행, 과제 선정, 사업 추진 등에서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지원사업 과제 선정 시 국정과제, 전자정부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추진하고 있어, 해당기관은 이러한 성격에 맞는 과제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전자정부 정책 이행 수단 역할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은 전자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신규 과제로 발굴하여 제안하여 선정되면 안정적으로 다년간 추진/지원이 가능 - 실제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전문기관(NIA)의 기술적, 정책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사업 이슈 해결 및 품질제고가 가능하고 시스템 구축 후 성과관리까지 진행 가능 <p>(행) 평가 후 상위 몇 %에 들어가면 예산을 더 없어준다는 등의 말은 있지만 실상 기재부에서 더 없애주지는 않음</p> <p>(행) 평가 후 하위 몇 %에 들어가면 예산을 깎을 거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깎음</p> <p>(행) 기관들은 자체 실링이 부족한데 그러한 부족함 때문에 행안부에 없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유인 구조</p> <p>(주) 예산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기술적인 검토도 같이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음 (사전에 심의를 해서 적절하다고 하면 그때 기재부에서 예산을 검토를 하고 주면 후년에는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p> <p>(주) 현재 사업 예산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그 사업을 심의를 해서 끝나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림</p> <p>(주) 주최는 사실 행안부가 아니어도 되고 누가 주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음, 프로세스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음</p>
		전자정부 관련위원회(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자정부추진위원회 등)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효과적인 추진주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p>(정) 전자정부 관련위원회(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자정부추진위원회)와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위원회에서는 전자정부 정책, 전자정부 이슈/쟁점,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을 주로 상정하고 조정함 <p>(행)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전혀 관계없음</p> <p>(행)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현재까지 법정 위원회가 아님, 전자정부법 개정안에</p>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올리려고 하고 있음</p> <p>(행) 전자정부추진위원회가 추진 주체 그 자체가 되기에는 높은 급임</p> <p>(행) 행안부에서 행하는 사업에서는 실무선에서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레벨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함</p> <p>(행) 대신 상임위원회나 전문위원회와 같은 하위에 있는 위원회로 그 역할을 할 수는 있음 (주로 정부활동을 하시거나 정부 연구 과제를 하신 교수들로 구성) 이럴 경우 다른 부처와 연결하기 쉽지 않은데 세부 설명을 잘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됨</p> <p>(정) 전자정부지원사업은 행안부, NIA, 주관기관, 사업자, 사업조정위원회, 과제 선정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음</p> <p>- 다만, 전자정부 관련 위원회 보고된 과제 중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과제는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므로 상호 연계 및 협력할 수 있고, 이러한 이행수단으로 활용 가능</p>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기관들 중에서 현재의 담당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곳이 있는가? 가장 시급히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기관 및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는가?	<p>(정) 전자정부지원사업은 행안부, NIA, 주관기관, 사업자, 사업조정위원회, 과제 선정위원회 등 추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p> <p>- 다만, 기재부에서 정보화예산 심의 시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기관 제안 과제는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한 상호 협력/협조 체계 마련 필요</p> <p>(행)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바로 조정하는 편</p> <p>(행) 조정에 따른 세부 매뉴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아른아른 정해져 있음</p> <p>(행) 제3자이기 때문에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고 넘어가려는 부담은 없음</p> <p>(행) 상황 판단만 정확하게해서 정리하면 됨</p>
		전문기관은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p>(정)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문기관인 NIA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초창기부터 사업 추진 전 과정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등 정책/기술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p>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 대상과제 선정/예산 확보 단계부터 행안부, 주관기관, 사업자 등에 대한 기술·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업 완료 후 3년간 성과관리를 시행하는 등 지원사업 전체 및 전 과정의 전문성을 확보 (행)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듭 (행) 과거에는(20년 전) 공무원의 수준에 비해 당시 전문기관 직원들이 다 석박사들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스테디가 있었기 때문에 수준이 높았음 (행) 현재 특히 진흥원이 대구로 이전한 다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사 졸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짐 (행) 전문기관보다는 7급 신규 공무원을 만나는 느낌을 받음 (행) 현재 많은 산하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 (행) 하지만 이러한 직원들이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에서 어느 정도 부족함이 있다는 것, 특히 전문기관은 다른 기관을 도와주면서 가이드를 하면서 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럴 힘이 없다는 것 (정) AI 등 발전하는 신기술 융·복합, 디지털 정부혁신 등의 전자정부 패러다임 변화를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단계별로 해당 기관의 참여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참여 추진 (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함; 매주 수요일 진도 체크(온라인), 분기 또는 6개월 단위로 실제로 그 시스템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도 측정 (사) 업무 전문성은 해당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NIA는 업무 전문성에는 관여를 안함, 절차 관리, 사업 이행 관리 (사업 관리; 예산을 확보하고 공고 띄우고 평가하고 사업을 구축하고 나서 잘 가고 있는지 관리)를 담당함 (사) 이런 업무로는 다른 부처가 와서 배워갈 정도로 NIA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기관
		<p>현재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방식을 볼 때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바람직한 추진체계는 어떤 방식이라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 집권과 분권이 조화롭게 연계되어 역할 분담이 명확한 현행 체계가 좋다고 봄 - 주무부처 : 행안부, 전문기관 : NIA, 주관기관, 사업자 참여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생각하는가?(집권, 분권,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연 전문가 및 행안부/NIA가 참여하는 과제조정위원회, 행안부 전자정부 국장과 담당 과장들이 참여하는 과제선정위원회 등 (행) 현재는 집권 방식 (행) 각 기관별로 정보화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잘하는 기관들을 굳이 다 끌어올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음 (행) 그들이 다 할 수 있는 역할을 끌어오자는 취지가 아니고 여러 기관이 걸려 있기 때문에 누구 예산에 딱 넣기가 어려운 상황 (행) 여러 기관이 관여하는 경우 특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복적 기능이 있어서 그런 경우 이렇게 담는 것이 효과성이 있다고 봄 (행) 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원사업이 할 몫을 다 했으니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음 (행) 분권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p>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내용(예산, 주요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자주 존재하는가? 이 때, 사업의 변경과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 대부분의 사업은 기재부의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수행하며, 극히 일부 사업은 추진여건 변화 등의 이유로 조정 또는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 - 사업추진 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의 과제의 조정(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 행안부/NIA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조정하고 행안부가 확정하는 형태로 진행 - 과제 발주 이후의 시스템 구축 단계의 과제 변경은 사업변경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됨. 사업변경 사안에 따라서 주관기관, NIA,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음
<p>재원조달 및 배분합리성</p>		<p>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집행잔액이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 기재부 예산 심의·편성된 예산 내에서 집행 및 관리됨 (정) 당해연도에 긴급 현안 해결 등 시급히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과제발굴 및 수요조사 등의 과제선정 절차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기재부 및 국회 협의를 거쳐 추가 과제를 추진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3개 과제(3,848백만원), '18년 2개 과제(3,764백만원) (행) 과거에는 집행 잔액을 써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 반납하고 있음 (행) 잔액 쓰는 것이 어려워졌고 노출이 많이 되고 국회에도 신고를 해서 질문에 다 답변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음 ※ 집행잔액의 사용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제3항 및 전자정부지원사업 제20조의2(집행잔액의 사용)에 근거 마련 (선) 시스템은 영구적인 것이 아님. 기존 시스템을 계속 보수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수명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등의 기준이 필요 (선) 시스템은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 말고 새로운 시각에서 예산을 볼 필요가 있음 (사) 운영 관리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 (사) 정권/조직이 바뀔 때마다 시스템이 합쳐지거나 흩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동일 기능은 배제하고 개별 기능으로만 시스템을 재편할 필요 있음 (사) V-World: 망한 사업인데도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가는 예산이 있음 (사) 사용 빈도가 없는 것은 냉철한 진단이 필요. 부처와 기관의 역할이 변경돼서 시스템의 기능을 합쳐도 되는 것은 통합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사) (제안) Data Cluster를 만들어서 data 정리, 슬림화, 품질 관리까지 data를 주제 영역별로 cluster을 만들어서 깨끗한 data를 구축해놓고 부처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쓰게 해놓으면 data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슬림화될 것 (Data Express) (사) 정보화사업 예산의 60%가 운영 유지 관리, 거시적인 진단 필요 (사) 사용률이 저조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이 나와 대체 가능한 시스템들은 진단을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해서 슬림화시킬 필요가 있음</p> <p>(사) 예산에 현장의 현실이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예산 구성이 필요 (예를 들어) 전자증명서 사업 당시 18억 7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었는데 개발 fp로 뽑음 fp를 제외한 pm, 사업관리, 품질관리, 홍보비, 임대료, pmo, 디자이너 등의 비용은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됨</p>
		부처별 정보화사업과의 유사중복을 고려할 때, 예산배분은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가? 실제 예산배분의 행태는 포괄적인가? 사업별로 배분되고 있는가?	<p>(정) 기재부의 예산 심의·편성 과정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 지원대상 과제의 적합성 및 부처 정보화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예산이 아닌 각 사업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관리</p> <p>(정) 범정부 공통인프라 구현, 다수 기관/시스템 연계 및 통합 중심의 과제로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전자정부 정책 수립 및 범정부 공통시스템 구축 수요가 많은 행정안전부 과제가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는 전자정부 인프라, 디지털원패스, 온나라, 정부24 등 전자정부 공통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어 타 부처에 비해 지원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음 <p>(행) 초기에는 통예산이었지만 현재는 사업별로 배분 중</p> <p>(행) 조금 과하다는 생각함</p> <p>(행) 일반 정보화사업과 차별성이 더 없어지는 부분, 예산 세부내역을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지가 너무 없어 기관 입장에서는 너무 통제 중심으로 느껴짐</p> <p>(행) 전에는 구체적인 예산을 가져올 때 행안부에 얘기만 하면 됐는데 현재는 행안부, 기재부에 가서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층층 시야가 너무 많음</p> <p>(행) 통예산으로 가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함. 그래야 기재부도 다음 년도가 해당 년도가 됐을 때 방향에 맞는 사업을 담고 사회현상을 더 반영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음</p> <p>(행) 다 똑같이 묶여 있으면 비효율적임</p>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실질적으로 부처에 대한 예산배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p>(주) 예산 편성 이후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음, 그럴 때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산이 남으면 안되니까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냄</p> <p>(주) 기재부에서 예산을 줄 때, 세부적으로 내역별로 타당성을 따져서 반영이 됨,</p>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하지만 본 사업 경우 그냥 통으로 금액이 내려와서 당황스러웠음</p> <p>(주) 따라서 기재부에서 정리해서 내려오는 것이 나음</p> <p>(주) 예산 편성 요청은 행안부에서 하고 편성에 대한 심의는 기재부가 하고 기재부 심의 결과를 기반으로 행안부가 예산을 받으면 다시 수요조사를 해 예산을 편성함</p> <p>(주)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는 기재부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행안부에 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듯</p> <p>(주) ISP 받고 1년 뒤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ISP가 끝난다고 하면 1년 뒤에 시작할 수 있음</p> <p>(주) 부처 예산은 이월이나 계속 연장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당일 연도에 끝나라고 함</p> <p>(주) 최대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는 추진하지 않고 당일 연도에 끝나거나 길어지면 진흥원과 행안부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어서 그 다음 연도에 하긴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음</p> <p>(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행안부나 진흥원 쪽에서 심각하게 판단을 해서 그 사업 기간을 보장해줬으면 좋겠음</p> <p>(주) 사례: 00부 '000 00 행정 시스템' (현재는 잘 끝났지만, 초반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업자가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음)</p> <p>(주) 국가정보화 큰 틀 안에 행정 정보화가 있음, 행정 정보화를 전반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행안부밖에 없다고 생각함</p> <p>(주) 기재부에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현재로서는 지방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행안부밖에 없음</p> <p>(주) 000은 전산 인력이 10%도 안됨 (14명밖에 안됨) 따라서 행안부의 역할에 의존</p>
	<p>일정관리 및 모니터링</p>	<p>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p>	<p>(정) 사업계획서 수립 및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신호등)을 통해 일정 및 이슈를 관리하고, 발견된 사업 이슈/쟁점은 NIA의 품</p>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적절성	<p>해결하였는가?</p> <p>사업추진과정에서 대국민 홍보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p>	<p>질관리조직과 해당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해결</p> <p>(정) 행안부 및 NIA에서 매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공통적 성과, 사업계획 수립, 전자정부지원사업 성과점검 등 주요 단계별로 언론기사를 통해 홍보</p> <p>(정) 개별 사업별 홍보는 주로 주관기관에서 사업추진 전후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p> <p>(행)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발주할 때 한번, 서비스가 시작될 때 한번 홍보</p> <p>(행) 언론 보도 자료로 1년에 1회 지원사업을 한 번에 묶어서 이런 걸로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는지 홍보</p> <p>(사) 홍보비는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없는 예산에서 짜서 쓰고 있음</p> <p>(사) 홍보비는 직접 경비라고 다 기각됨</p>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성과/환류)	성과결과 환류의 적절성	성과분석 및 환류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p>(정) 성과분석은 과제 선정 단계의 사업효과성, 사업계획서 수립 단계의 성과계획서, 구축 완료 후 사업의 성과 및 운영현황 점검 등을 통해 각 단계별로 추진</p> <p>(정) 구축 완료 후 사업의 성과 및 운영현황 점검 결과는 기재부 및 국회에 제출되며,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과제선정 및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되는 등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있음.</p> <p>- 다만,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다년도 마지막 연도에 해당되는 사업은 환류체계 적용이 쉽지 않음</p> <p>(행) 환류 쪽으로는 되어 있지만 조직 인사에 반영은 안됨</p> <p>(행) 실제로 피드백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지만 새로 생긴 사업들은 결과를 측정되는 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예산에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피드백이 어려움</p> <p>(행)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잡기도 어려움</p> <p>(행) 3년이 지나고 나면 지원사업에서 나가기 때문에 끝난 사업들에 대한 관리, 통제가 고민임</p> <p>(행) 행안부가 측정 및 평가했던 것을 기재부에게 연동을 해서 기재부가 해당 부처에 그 예산을 쓰는 방식을 건의</p>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주) 전자정부지원사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행안부에서는 시스템적 성과가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정책이 목표하는 바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를 보고 싶어함</p> <p>(주) 당장 성과를 보여 달라고 하는데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주지 실질적으로 힘들</p> <p>(주) 성과지표가 있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3, 4년만 봐서는 그 사업의 성과를 알기 힘들</p> <p>(주) 행안부에서 정책적 목표에 맞춰서 성과를 보고하라고 방향만 제시</p> <p>(주) 성과관리에 대한 기준은 부처가 임의대로 수정할 수가 없고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으므로 성과를 판단하고 판단이 확정되면 진흥원에서 성과에 대한 실제 성과관리, 환류에 대한 계획 및 결과를 총체적으로 관리</p> <p>(주) NIA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처에 있는 어떤 관리보다 타이트하게 하는 듯</p> <p>(주) 정보화진흥원에서는 성과는 확실하게 함</p> <p>(주) 행안부에서는 다년도 사업에 대해 계속 성과를 분석하고 심의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는 듯</p>
		성과관리 결과를 실제로 조직, 인사, 예산 등에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가? 성과관리 결과를 활용하여 실제 사업내용을 어떻게 수정하고 있는가?	<p>(정) 성과관리 결과는 차년도 과제선정 및 예산 심의과정에 주로 반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업의 경우 사업 완료가 가능하도록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미흡사업의 경우 예산 조정 및 사업계획에 반영함
		중간점검 및 자체평가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어 사업의 성과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p>(정) 자체 점검 실적의 결과가 월등히 향상된 경우(혹은 이미 달성된 경우) 차년도 성과계획에 지표별 목표치 등을 상향 반영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제고하도록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흡한 경우도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여 당초 계획된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과제선정 및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있음
		사업의 성과관리는 사업완료 후 어느 기간까지 이루어지는가? 성과보고서의 작성 시점이 사업완료 직후까지인지? 아니면	<p>(정) 전자정부지원사업 과제의 구축 시점부터 최종 완료 이후 3년간 성과 관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 : 시스템 구축시점(1차년도 종료) 후 차년도부터 최종 완료 이후 3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일정 기간(연도) 동안 지속적으로 성과를 측정하는지? 만약, 사업완료 시 한번의 성과측정으로 그치고 있다면 지속적인 사업의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p>	<p>년차까지 수행 - 성과보고서 작성 : 구축 후 차년도 하반기에 작성하여 제출 (정) 3년 이후의 과제는 전자정부사업 성과관리로 이관되어 관리되며, 전자정부지원사업 우수사례 선정 및 백서 발간 및 사업효과 산정에 지속적으로 사용됨 (행) 지금 잘 안되기 때문에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음</p>
	<p>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치 적절성</p>	<p>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간 연계와 우선순위 결정은 목표설정에 적합한가?</p>	<p>(정) 사업계획 수립 시 전문가 검토와 사업조정위원회에서 사업목표에 적합한 성과 지표(지표 정의 및 목표치 등)인지 그 타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 3년간 성과를 관리함</p>
		<p>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방향성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p>	<p>(주) (개인적인 의견) 다른 부처에서도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심의는 기재부에서 하고 사업에 대한 선정도 기재부에서 된다면 예산 자체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에 별도로 산정해주는 방안도 괜찮다고 생각함 (주) 현재 행안부가 중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의 역할이 커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행안부가 없어도 해당 부처 또는 기관에 예산을 산정해도 충분히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주) 물론 해당 부처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 다부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하지 못하므로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맞음 (주) 중요한 의사 결정 사항을 행안부가 과기부를 통해서 하는데, 사안이 급한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음 (주) 따라서 의사 결정권을 위임하거나 통일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주) NIA에 재량권을 더 줘서 결과 책임을 지게 만들더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함 (주)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예산이 90% (주) 행안부만 확실히 통과되면 기재부에서도 예산을 산정해주는 등 행안부와 기재부 중 한곳에서 통과를 하면 예산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함</p>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주) 프로세스를 조금 더 일원화시키면 좋겠음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과지표 작성 및 모니터링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정) 사업의 ISP 단계에서는 거시적인 효과성을 도출하나, 실제 사업별 성과관리시에는 사업성격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함 (행) 종료 사업에 대한 관리가 안됨 (행) 기재부와 협업 필요
	성과목표 달성도	전자정부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사회적 가치 구현에 기여하였는가? 전자정부지원사업 모델이 4차산업혁명(빅데이터, AI 등)이후 현재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	(정)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실질적으로 구현함 - 대국민서비스 혁신, 행정 효율화, 범정부 공동인프라 확대 등 전자정부 공통 목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 확대, 부패방지, 공유경제 구현 등의 다양한 사회현안 해결 및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음 (정) 4차산업혁명 신기술(빅데이터, AI 등)을 전자정부서비스에 도입하여 서비스를 혁신하는 초기단계로 볼 수 있고,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이행을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므로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음 (행) 별도로 활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에 녹여서 진행 (행) 전자정부서비스 실태에 관한 국민 만족도 조사 진행하고 있음 (만족도 높음) (행) 종수를 늘리기 보다는 잘하는 우량 사업을 위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더 좋음 (행) 전자정부지원사업 모델은 4차산업혁명이 아닌 다른 상황이라도 이 모델이 유효하다고 생각함 (행)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 (행) AI 경우 지속적으로 다년간 투자를 해서 학습을 시켜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원사업은 그렇게 기다릴 수 없음 (행) 기존에 있는 사업에 AI로 이름만 바꾸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행) AI를 어떻게 학습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저 악세사리 수준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은 못됨 (장기간의 노력 및 투자 필요)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행) 민간서비스와 많은 비교를 받지만 네이버, 카카오는 광고를 가지고 돈을 다 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각각한테는 돈을 받지 않는 무료 서비스이지만 실상은 선물하기, 이모티콘 등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p> <p>(행) 민간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고 느끼고 정부 서비스는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 쓰고 있다고 생각함, 이 갭차이가 커서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개방적인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음</p> <p>(행) 예전에는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그 선택된 하나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는 위험 요인 때문에 정부만의 것을 구축하자고 했지만 현재는 개방적으로 바뀜</p> <p>(행) 현재는 행정추세가 민간 활용으로 바뀜</p> <p>(행)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서비스가 중요</p> <p>(선) 인공지능 시스템을 반영하되 기술면에서 어느 정도 안전한지 측정해야 함 (블록체인 기술이 안전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음)</p> <p>(선) Data 기반의 전자정부가 실현되어야 함</p> <p>(사) 앞으로 Data process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p> <p>(사) AI가 중요하긴 하지만 전자정부사업에서 AI 기반의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음</p> <p>(사) 전자정부지원사업에서 AI 개발하는 것은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듯</p> <p>(사) AI 개발은 순수 R&D영역 지원으로 해야 함</p> <p>(사) AI가 대국민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접목하면 됨</p>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에 따른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그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p>(정)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국정과제, 전자정부기본계획, 전자정부 공통 정책, 디지털 정부혁신 등의 범정부 정부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수단 역할 수행</p> <p>- 전자정부 관점에서 전자정부 50년사 및 전자정부 핵심 성과 창출 시 제시된 우수사례 및 과제들이 대부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된 과제들이 많이</p>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성과와 가치 실현을 추진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지원사업 개별 사업 위주로 성과관리가 진행 하였으며,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핵심 성과를 거시적 관점 및 분야(대국민서비스, 행정혁신, 범정부 공동인프라, 산업육성, 글로벌 협력 등)별 관점으로 성과관리를 확대할 계획 <p>(선) 사업 심의만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종료했다는 얘기를 못 들음</p> <p>(선) 시스템의 실질적인 이용률 등 사업의 결과를 구두로라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p> <p>(선) 이렇게 하면 향후 모니터링도 해드릴 수 있음</p>
	전자정부지원사업 발전방향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성격/범위를 디지털정부(디지털 정부혁신, 디지털전환 등), 포스트코로나 등 전자정부지원사업 환경변화에 맞게 재조명하려는 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 보다는 디지털정부가 되면서 사업범위 및 추진방식의 변화 필요 -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수립 지원,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으로 변경('20.4월말에 전자정부국에서 디지털정부국으로 명칭 및 기능 변경) 등의 정책 및 조직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 - 범정부 디지털정부 기본계획(추진과제 포함)이 수립되면 디지털정부 이행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역할을 정립 및 강화, 또한 범정부 계획 수립 시 과제 선정은 기존 지원사업 과제 선정 절차와 별도로 상위 추진체계에서 지원사업 대상 과제 선정, 매년 시행계획(혹은 실행계획)이 만들어지면 시행계획의 과제 중 지원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과제는 지원사업으로 추진 등 절차/방식 변화 필요 등 ② 긴급한 사회현안 해결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범정부 공동 전자정부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과제(예산) 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한계) 차년도 사업 발굴/선정, ISP 수립, ISP 결과에 따른 다년간 사업 추진 등으로 진행되어 당해연도 긴급히 발생하는 범정부 공통 수요에 적극 대체 미흡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시급하게 발생하는 정부 정책 이행(디지털 정부혁신 등), 긴급한 사회 현안(COVID-19 등) 해결 지원(긴급생계자금지원, 역학 추적/조사/관리, POST COVID-19 과제 등), 사회혁신 촉진 및 범정부 공통기반 마련 등을 위한 당해연도 추진 과제/예산 확보 필요 ③ 애자일 기법 적용, 민간주도 서비스 혁신, 민관합동 선도/혁신 프로젝트 추진 등 IT패러다임 변화를 급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제 확보 필요 - (현재의 한계) 사업계획 수립, 입찰 및 계약체결, 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전통적 추진 방식의 적용으로 시스템 구축 후의 서비스 효과를 얻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긴급한 현안의 경우 적정 대응 미흡 - 당해연도 긴급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공모 방식 도입, 상시 과제 도출 및 추진, 다양한 민간 투자 및 협력 방식 적용(BTO 등) 등을 위한 예산/과제 확보 필요 (선) 투명성 강화 (선) 속도(빠른 지원과 전달) 개선 (선) 문제해결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선) 기술직과 일반 행정직이 서로 견제도 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역할인데 서로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면 뒤로 물러섬 (선) 기술직의 처우 보장 (선) 전자정부국에서 조직 자체가 커졌으면 좋겠음 (선) 관리를 잘해나가는 것이 중요 (선)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이어받는 것도 중요 (선) 학문적 연계 필요 (선)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에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자체에 먼저 시범 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중앙정부에 시행하는 방법이 바람직해 보임 (선)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제도가 막고 있어서 활용

평가목표	평가항목	질문내용	답변 요지
			<p>하지 못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많음</p> <p>(선) 전자정부가 없을 때와 비교해서 행정 업무의 속도 및 체계가 상당히 향상됨</p> <p>(선)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가 강국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전자정부의 역할이 컸음</p> <p>(선) 시스템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p> <p>(사) (IT 분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안) 전자정부지원사업이 시작되면 경쟁 입찰을 함, 경쟁을 해서 더 높은 사업이 선정돼서 수출함 그때 남는 낙찰차액을 반납하지 말고 IT 인력의 월급을 주고 그 사업 이후에 그 사업의 업체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면 예산을 추가로 잡을 필요도 없고 인력 양성 가능</p> <p>(사)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자랑스러운 사업이기 때문에 BH나 총리실로 격상된 기관에서 전문성 있는 관리 필요</p> <p>(사) 그 기관에서는 부처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진단 및 전자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분담도 해야 하고 해외국가컨설팅을 하는 전문 조직도 만들어줘야 함</p> <p>(사) data cleansing 필요</p>